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414-01



■ 정책보고서 2014-54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및 사·도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김승권 · 김유경 · 이연희 · 강지원 · 신정훈 · 류진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2014년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정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지역균형발전의 강조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지 어언 8년이 되었다. 이 복지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1기와 제2기의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제3기 복지계획이 추진된다.

제3기 복지계획은 2014년 말에 제출되며, 이에 따라 지역차원의 복지4개년계획이 2015년부터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복지계획은 이전과 달리 추진된 점이 다소 있다. 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의 조사내용을 통일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제출 일정을 3개월 지연시켰다.

이는 복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 개념에 의한 복지접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도 제3기 복지계획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에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군·구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시된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지역사회보장 개념에서 통계 분석과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시·도의 지원요구 사항이 시·도 복지계획과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시·도 지원요구 사항이 타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제3기 복지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제4기 복지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통합 및 분석을 염두에 복지욕구조사의 필요성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당원의 김승권 박사의 주도 아래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

집필에서 연구진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및 분석 (김유경·이연희·신정훈)

제3장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 (김승권·류진아)

제4장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김승권·강지원·신정훈)

제5장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김승권·류진아)

제6장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김승권·강지원)

제7장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과 결론 (김승권)

짧은 연구기간과 적은 연구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효과성 증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4년 후의 제4기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목 차

요 약 .....	1
<b>제1장 서론 .....</b>	<b>39</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2
<b>제2장 사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및 분석 .....</b>	<b>47</b>
제1절 사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	49
제2절 복지욕구조사 가구 분석 .....	59
제3절 복지욕구조사 개인 분석 .....	93
제4절 복지대상 규모 추정 .....	117
제5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	142
<b>제3장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 .....</b>	<b>147</b>
제1절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 정보 .....	149
제2절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 .....	153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수와 지표체계 .....	175
제4절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유형과 산출 방법 .....	183
제5절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결과 .....	192
<b>제4장 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b>	<b>207</b>
제1절 복지계획 내용의 주요 특성 .....	209
제2절 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	222
제3절 복지계획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345

---

<b>제5장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b>	<b>347</b>
제1절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349
제2절 사도 지원요구 사항과 복지계획 내용의 부합성 분석	370
제3절 부합성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98
 <b>제6장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b>	 <b>401</b>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기준	403
제2절 타당성 분석	413
제3절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468
 <b>제7장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과 결론</b>	 <b>469</b>
제1절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	471
제2절 결론	475
 <b>참고문헌</b>	 <b>481</b>
 <b>부록 : 가구조사 분석 통계</b>	 <b>483</b>

## 표 목차

〈표 2- 1〉 오차한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신뢰수준=0.95) .....	50
〈표 2- 2〉 시군구 가구 현황(2013. 12) .....	50
〈표 2- 3〉 조사항목과 문항 .....	51
〈표 2- 4〉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1차 취합 결과 .....	52
〈표 2- 5〉 데이터 통합을 위한 조사항목과 문항 .....	53
〈표 2- 6〉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제외 사유 .....	54
〈표 2- 7〉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통합 결과 .....	55
〈표 2- 8〉 1차 cleaning 결과 및 2차 cleaning 결과 .....	56
〈표 2- 9〉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 .....	60
〈표 2-10〉 시도별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1) .....	61
〈표 2-11〉 시도별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2) .....	62
〈표 2-12〉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	63
〈표 2-13〉 시도별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1) .....	64
〈표 2-14〉 시도별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2) .....	65
〈표 2-15〉 현 주거의 유형 .....	67
〈표 2-16〉 시도별 현 주거의 유형 .....	68
〈표 2-17〉 현 주거의 점유형태 .....	69
〈표 2-18〉 시도별 현 주거의 점유형태 .....	70
〈표 2-19〉 가구주의 고용상태 .....	71
〈표 2-20〉 시도별 가구주의 고용상태 .....	72
〈표 2-21〉 가구의 소득 구성(1) .....	73
〈표 2-22〉 시도별 가구의 소득 구성(1) .....	74
〈표 2-23〉 가구의 소득 구성(2) .....	75
〈표 2-24〉 시도별 가구의 소득 구성(2) .....	77
〈표 2-25〉 가구의 평균 자산 .....	78
〈표 2-26〉 시도별 가구의 평균 자산 .....	79
〈표 2-27〉 가구의 생활여건 .....	80
〈표 2-28〉 시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운 정도 .....	81
〈표 2-29〉 7가지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 .....	81

〈표 2-30〉 가구주 특성별 영역별 결핍수준 .....	83
〈표 2-31〉 시도별 영역별 결핍수준 .....	84
〈표 2-32〉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분포 .....	85
〈표 2-33〉 시도별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분포 .....	86
〈표 2-34〉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	87
〈표 2-35〉 시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	88
〈표 2-36〉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 .....	89
〈표 2-37〉 시도별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 .....	90
〈표 2-38〉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91
〈표 2-39〉 시도별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93
〈표 2-40〉 여성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94
〈표 2-41〉 시도별 여성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94
〈표 2-42〉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96
〈표 2-43〉 시도별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97
〈표 2-44〉 미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98
〈표 2-45〉 시도별 미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99
〈표 2-46〉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0
〈표 2-47〉 시도별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1
〈표 2-48〉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102
〈표 2-49〉 시도별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102
〈표 2-50〉 취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3
〈표 2-51〉 시도별 취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4
〈표 2-52〉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105
〈표 2-53〉 시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	106
〈표 2-54〉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7
〈표 2-55〉 시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8
〈표 2-56〉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1) .....	109
〈표 2-57〉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2) .....	110
〈표 2-58〉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	111
〈표 2-59〉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	111
〈표 2-60〉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112



〈표 2-61〉 사·도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113
〈표 2-6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	114
〈표 2-63〉 사·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	115
〈표 2-64〉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	116
〈표 2-65〉 사·도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	117
〈표 2-66〉 사·도별 경제 및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18
〈표 2-67〉 경제적 생활지원 정책대상가구 규모 추정 .....	119
〈표 2-68〉 부채상환 지원 정책대상가구 규모 추정 .....	119
〈표 2-69〉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0
〈표 2-70〉 사·도별 돌봄 및 양육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1
〈표 2-71〉 돌봄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2
〈표 2-72〉 전국 양육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2
〈표 2-73〉 사·도별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3
〈표 2-74〉 소득계층별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비율 .....	124
〈표 2-75〉 전국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4
〈표 2-76〉 사·도별 보건 의료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5
〈표 2-77〉 사·도별 여성 및 취약전 아동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6
〈표 2-78〉 사·도별 초·중·고등학생 및 중·고생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7
〈표 2-79〉 사·도별 어르신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8
〈표 2-80〉 사·도별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128
〈표 2-81〉 사·도별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	129
〈표 2-82〉 소득계층별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1
〈표 2-83〉 사·도별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	131
〈표 2-84〉 소득계층별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2
〈표 2-85〉 사·도별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	133
〈표 2-86〉 소득계층별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4
〈표 2-87〉 사·도별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5
〈표 2-88〉 소득계층별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6
〈표 2-89〉 사·도별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7
〈표 2-90〉 소득계층별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8
〈표 2-91〉 사·도별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8

〈표 2-92〉 소득계층별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139
〈표 2-93〉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	140
〈표 2-94〉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2) .....	140
〈표 2-95〉 소득계층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	141
〈표 2-96〉 소득계층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2) .....	142
〈표 3- 1〉 지표 정의 및 기본 정보 .....	149
〈표 3- 2〉 사회복지환경의 인구 분야 .....	154
〈표 3- 3〉 사회복지환경-경제, 재정, 사회 분야 .....	157
〈표 3- 4〉 사회복지노력-소득, 건강, 교육, 주거 .....	166
〈표 3- 5〉 사회복지성과-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 .....	172
〈표 3- 6〉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	181
〈표 3- 7〉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 .....	187
〈표 3- 8〉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값의 처리 및 가중치 계산 결과 .....	191
〈표 3- 9〉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산출 결과 .....	192
〈표 3-10〉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산출 결과 .....	194
〈표 3-11〉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산출 결과 .....	197
〈표 3-12〉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의 산출 결과 .....	200
〈표 4- 1〉 시도 복지계획의 구조 .....	209
〈표 4- 2〉 복지계획 분석결과 요약 .....	345
〈표 5- 1〉 시도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	349
〈표 5- 2〉 타·시도와 차등지원 국고보조사업 및 서울시 추가부담 현황 .....	351
〈표 5- 3〉 분권교부시설(지자체 지원)과 국비지원시설의 직위별 평균 보수월액 .....	354
〈표 5- 4〉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및 변경(안) 도 단위 계획 통합(안) .....	370
〈표 5- 5〉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의 부합성 분석결과 요약 .....	399
〈표 6-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	407
〈표 6-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	408
〈표 6- 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	408
〈표 6- 4〉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409
〈표 6-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410
〈표 6- 6〉 타당성 분석 기준 .....	413
〈표 7- 1〉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결과 요약 .....	472

## 그림 목차

[그림 3- 1] 주민 1인당 복지예산 .....	160
[그림 3- 2] 인구 당 보건예산 .....	161
[그림 3- 3]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인력 .....	162
[그림 3- 4] 학생 1인당 교육예산 .....	164
[그림 3- 5] 학생 100명당 교원 수 .....	164
[그림 3- 6] 주택전세가격 지수 .....	165
[그림 3- 7]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167
[그림 3- 8] 시도별 평균 가구소득 .....	168
[그림 3- 9] 연령표준화 사망률 .....	168
[그림 3-10] 주관적 건강수준의 ' 좋음' 백분율 .....	169
[그림 3-11] 지역별 고등학교 학업중단률 .....	170
[그림 3-12] 주택보급률 .....	171
[그림 3-13] 여성고용률 .....	172
[그림 3-14] 출산율 .....	173
[그림 3-15] 자살률 .....	174
[그림 3-16] 2010~13년 기간 평균 지역별 자살률 .....	175
[그림 3-17] 지역사회 복지수준 지수의 지표체계 .....	179
[그림 3-18] 요인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도출 과정 .....	190
[그림 3-19] 클러스터별 사회보장지수 분석결과 .....	203
[그림 3-20] 시도별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의 비율 .....	204
[그림 4-1] 제3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전 특성 .....	210
[그림 6-1]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	41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연구의 필요성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 시 시·군·구 단위의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시·군·구에서 수집된 조사·통계 자료를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통합·분석함으로써 정책 자료로 활용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시·군·구, 시·도 및 전국 단위로 주민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간 비교 분석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절성 분석
  - 통합·구축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주민 복지욕구 반영 등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절성을 분석·점검
  - 시·도의 지원 요구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향 설정

#### □ 연구의 목적

- 첫째, 지역단위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통합 DB 구축 및 분석
- 둘째,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표 산출
-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타당성 판단
- 넷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시·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타당한

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을 설정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연구의 내용

-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자료 통합 및 분석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자료 통합
  - 통합·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군·구, 시·도, 전국 차원의 지역주민 복지욕구 현황 및 특징, 복지욕구의 지자체간 비교
- 지역사회복지통계 취합 및 분석, 통계 DB 구축
  - 시·군·구 및 시·도별 지역사회복지통계 수집, 분류 및 정리
  - 지역사회복지통계의 영역, 항목, 지표 및 통계산출 적절성 검토
  - 지역사회복지통계 DB 구축
- 지역사회복지 수준 측정을 위한 지수 산출
  - 지역사회복지통계 및 지역별 복지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설정
  - 지표 중요도를 토대로 지표를 결합하여 지수(index) 산출 방식을 결정
  - 결정된 지수산출 방식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수를 계산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절성, 시·군·구 및 광역 시·도의 지원 요구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분석
  -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지역사회복지통계의 분석 결과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정합성 분석
-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 시·도의 지원요구 사항을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 기준에 따라 타당성 분석
- 중앙정부의 지원방향 설정 및 결론

-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을 설정
-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 □ 연구방법

- 시·군·구 복지욕구조사 결과의 신뢰성 검증 및 자료 통합
  - 시·군·구별 조사구 설계 등 조사계획 및 표본추출의 표준화,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한 신뢰성 검증
  - 데이터 입력 오류 보정을 위한 data cleaning, 결측치(missing value) 처리 등을 통하여 Big data 구축
  -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데이터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가중치 부여
- 시도, 전국단위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분석
  - 지역별, 복지대상별, 경제수준별 주민의 생활실태 분석
  - 생활실태 분석에 따른 객관적 복지욕구와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주관적 복지욕구의 비교 분석
- 지역사회복지통계를 취합하여 지역사회보장지수를 도출
  -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통계자료 수집 및 분류
  - 개별지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설정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중치 부여
  - 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및 분석
- 전문가 그룹 회의

## 제2장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및 분석

### 1.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개요

##### ○ 조사의 기본 방향

- 개인 단위의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가구단위 조사로 전환
- 가구구성,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등 복지제도의 급여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욕구 및 서비스 수요 파악의 객관성 확보
- 욕구조사의 대상기간과 기준 시점을 설정
  - 조사 대상기간 : 2013.1.1.~12.31
  - 기준 시점 : 2013.12.31.
- 사·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시된 공통항목을 활용
- 시·군·구의 가구 수에 따른 조사 표본 수 결정
  - 가구구성원 중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출현율을 고려하면, 조사완료 가구 수는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로 설정

##### ○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구는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설정
- 시·군·구 당 조사구는 13~15개로 설정
- 조사구 내에서 가급적 상가지역은 피하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 □ 조사 데이터 수집 및 자료 통합

##### ○ 시·군·구는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2014년 6~9월)

- 제출자료 : 시·군·구별 설문지, 코딩북, 데이터파일
- 수집된 코딩파일을 점검하여 미제출 지자체에 제출을 요구하고, 데이터 파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작성을 요구



- 데이터는 111,793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시·도별로 경기도가 16,849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411가구로 가장 적음.
- 시·군·구별로 평균 488 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남.

#### ○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점검

- 시·군·구별 설문지의 항목과 내용을 검토하여 공통문항을 추출하여, 데이터 통합에 입력할 변수를 선정
- 시·군·구 데이터의 입력 현황 점검
  - 시·군·구별로 데이터 코딩 방식, 자료입력 방법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통합 데이터에 포함 여부를 결정
  - 검토 결과 서울시 종로구, 중구, 구로구, 동작구, 충북 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순천시, 보성군, 경북 안동시, 고령군, 울릉군, 경남 합천군 등 총 15개 시·군·구 데이터를 제외

#### ○ 데이터 통합

-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코딩을 동일한 수치로 재조정, 변수(문항)의 입력 순서 변경, 변수명 일치 등의 작업을 거쳐 데이터를 시·도별로 정리하고 전국단위 파일로 통합
- 213개 시·군·구의 97,973 가구의 결과를 통합(시·군·구 당 평균 460 가구)

#### ○ 데이터 오류수정(cleaning) : 2단계 실시

- 조사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오류수정은 '논리적 검증'과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의 제거' 등의 2가지 방법으로 진행
  - 논리적 오류 검증과 수정
  -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기술통계치를 계산하여 결과의 이상 유무 검토
  - 1차 클리닝 이후 94,353 가구의 결과를, 2차 클리닝 이후 최종적으로 83,407 가구의 데이터를 확정(시·군·구 당 평균 393 가구)

#### ○ 통합 데이터의 한계

- 세종특별자치시는 분석표본의 부족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오차 범위를 벗어남.

## 6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및 사·도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데이터 통합과 클리닝 결과 총 17개 시·군·구의 데이터가 제외되었고, 일부 시·군·구의 경우 표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 경우 시·군·구별 분석에 문제는 있으나, 시·도별 분석은 가중치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음.

### □ 통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처리

#### ○ 변수 계산 및 변수 생성

- 자료 분석을 위해 가구소득을 소득 원천별 데이터를 합산하여 시장소득(경제활동소득), 공적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가구 총소득 그리고 가구 균등화 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변수(4개)를 생성
- 가구원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 특성을 구분하는 변수 생성
  - 가구소득에 따른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
  - 소득계층 구분은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빈곤계층의 구분을 위해 추가로 최저생계비를 고려

#### ○ 가구 소득에 따른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

- 소득계층 구분은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빈곤계층의 구분을 위해 추가로 최저생계비를 고려
  - 빈곤 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
  - 취약 계층(상대빈곤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의 50% 이하
  - 중하위 소득 계층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frac{1}{2}$  ~ 중위소득 이하
  - 중상위 소득 계층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 중위소득의 2배 이하
  - 고소득 계층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배를 넘는 계층

#### ○ 가중치 설정

- 기본가중치 산정
  - 조사구 추출확률과 조사구 내 가구추출확률의 역수로 산정
-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 산정

- 시·군·구별 조사의 기준 시점인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 집계 결과( $K_h$ )를 이용
- 전국 단위의 추정
  - 지역별, 가구규모별 소득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분산 추정을 위한 계산식을 제시
  - 소득 등 주요변수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본추출과정을 고려하여 계산

## 2. 복지욕구조사 가구 분석

### □ 가구일반사항

- 전국 20,456,588가구의 가구원 규모는 3~4인 가구가 45.6%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는 25.4%이었으며, 1인 가구 18.8%, 5인 이상 가구 10.2%로 평균 가구원수는 2.87명
- 가구의 월 소득분포는 300만원 미만이 59.7%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40.3%이었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307.8만원
- 월 평균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월 가구균등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7.1%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은 32.9%이었으며, 평균 가구균등소득은 178.8만원으로 가구소득의 58% 수준
- 장애인가구 비율은 15.0%이었고, 3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24.6%
- 전국 20,456,588가구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4,182,351가구로 20.4% 분포를 보였고, 세종시까지 포함한 7대 광역시는 5,114,032가구로 25.0%, 9대 도지역은 11,160,205가구로 54.6%
- 가구원 규모는 제주도가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2.53명으로 가장 적은 수준

- 월 평균 가구소득은 울산(457.47만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238.89만원)이 가장 적은 수준
- 사·도별 가구균등화 소득은 울산(261.31만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143.38만원)이 가장 적은 수준
- 장애인가구비율은 세종시가 25.0%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6.9%로 가장 낮은 분포
- 만성질환가구비율은 전북(40.5%)이 가장 높았고, 제주도(10.9%) 가장 낮은 분포
- 국민기초수급 가구의 비율은 광주(20.1%)가 가장 높았고, 경남(1.0%)이 가장 낮은 분포
-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가구주가 76.1%, 여성가구주가 23.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음.
- 가구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63.2%로 많았고, 그 중 노인층이 1/3에 근접하였으며, 40대 이하 가구주는 36.9%이었고, 전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1세
-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71.3%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사별인 가구는 23.9%이었으며, 미혼인 가구는 4.8%
- 가구주의 취업상태는 취업중 73.2%, 비취업 26.8%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67.2%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은 32.8%
- 남성가구주 비율은 울산(81.9%)이, 여성가구주 비율은 대구(35.1%)가 가장 높음.
- 가구주 평균 연령은 충남지역이 61.07세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50.69세로 가장 적음.
-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비율은 울산(83.6%)이, 이혼·별거·사별은 전북(32.5%), 미혼비율은 광주(7.4%)가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취업비율은 제주도(89.2%)가 가장 높았고, 전북(62.7%)이 가장 낮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비율은 전북(81.4%)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이상인 비율은 제주도(46.0%)가 가장 높음.

#### □ 가구의 주거상황

- 전국 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형태가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 아파트가 33.9%이었으며, 그 외의 형태는 2.3~9%로 미미
- 시·도별 주거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은 전남(73.5%)이 전국평균보다 2배 많았고, 일반아파트는 울산(49.9%)이 전국평균보다 16%p 높았으며, 이 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은 서울이 가장 많음.
- 전국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 65.3%로 가장 많았고, 전·월세 비율은 31.1%
- 시·도별로 주거의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비율은 경남(83.6%)이 전국보다 18.3%p 높았고, 전·월세 비율은 서울(47.9%)이 절반에 근접하여 전국보다 16.8%p 높은 분포

#### □ 가구의 고용상태와 가구소득

- 전국 가구주의 고용상태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영자가 31.7%이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약 12%의 분포
-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시·도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경기도(57.8%)가 전국평균보다 13.7%p 많았고, 자영자는 충남(51.2%)이, 임시·일용근로자는 광주(16.5%)가, 무급가족종사자가사육아·학생·기타 등은 세종시(20.7%)가 전국평균보다 많음.
- 전국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3,199만원으로 그 중 근로소득자가 2,1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자 856만원, 농림·축산업 경영주 179만원이었으며, 어업 경영주가 19만원으로 가장 적음.
- 가구의 연간소득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5,077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878만원이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2,064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135만원이 적어 두 지역 간 차이는 2.5배로 나타남.

- 가구의 주된 소득원 외에 기타 소득원별 연간 평균 소득은 전체 합계가 446만원이었고, 그 중 재산소득(106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회보험(94만원), 기타 소득(92만원), 정부보조금(8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63만원), 민간보험(11만원) 순
- 사·도별로 기타 연간소득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전북(1,463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3.3배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경남(284만원)으로 전국평균의 64% 수준

#### □ 가구의 자산 및 부채

-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6,381만원, 평균 부채는 2,463만원으로 부채규모는 자산의 38.6% 수준
- 사·도별로 평균 자산은 제주도(10,992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대전(3,160만원)으로 두 지역 간에는 3.5배까지 차이

#### □ 가구의 생활여건

- 전국 가구의 생활여건을 보면 ‘대체로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를 합친 비율은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3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채 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20.5%
- 사·도별로는 저소득·과다지출과 실직·재취업·퇴직 등의 어려움은 광주(25.2~42.3%)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부채청산과 성인 및 환자·장애인 돌봄 등의 어려움은 전북(20.9~25.8%)이, 자녀양육 및 교육은 대전(30.7%)이, 가정 내 불화단절은 서울(13.0%)이 가장 많음.
- 전국 가구의 7가지 영역을 포함한 평균 결핍비율은 12.7%이었고, 그중에서 저축영역이 2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15.6%), 사회적 지지(14.8%), 의료 및 건강(12.7%), 자녀교육(10.7%), 식생활(7.9%), 주택 및 주거환경(6.2%) 순
- 사·도별로 7가지 영역을 포함한 평균 결핍비율은 세종(16.8%)이 가장 높았고,

대전(8.7%)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인천, 광주, 충청도, 전라도, 경남이 13.1~15.8%로 높음.

#### □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 전국가구의 지역사회만족도는 중간수준이 60.1%로 가장 높았고, 낮은 편은 30.7%, 높은 편은 9.3%
- 시도별로 지역사회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29.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5.0%)
- 전국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로 ‘대체로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를 합친 비율을 보면 의료시설 부족(3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빈부격차 문제(29.7%), 복지시설 부족(26.9%), 주택·주거환경 열악·재개발(26.2%), 쓰레기·매연 등 환경오염문제(23.9%) 순
-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부족 문제의 심각한 비율은 세종(60.8~66.4%)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는 인천(34.9%)이, 범죄, 학교 폭력 및 치안문제는 광주(26.5%)가, 주택·주거 환경 열악, 재개발과 차별문제는 대구(27.6~36.3%)가, 빈부격차문제는 대전(41.7%)이, 이웃과의 관계 문제는 경기(26.8%)가 심각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전국가구의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 부족(2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중교통 등 접근 이용 상의 불편(23.0%), 이용자의 시간부족(21.3%), 프로그램 부족(9.8%), 이용시간대의 제한(4.7%), 시설불편 및 낙후(3.56%) 순
- 시도별로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으로는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의 불편은 경남(30.2%)이 가장 많았고, 환경의 불결은 대구(10.7%)가, 정보제공 부족은 대전(81.4%)이, 프로그램 부족과 이용시간대 제한은 제주도(8.9~13.0%), 시간부족은 경남(26.6%)이 많음.
- 전국 가구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28.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여성을 위한 서비스(16.9%),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16.2%)가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시·도별로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여성과 초등학생서비스는 울산(14.1~29.0%)이 가장 많았고, 취학 전 아동서비스는 서울(8.6%)이, 중고생서비스는 세종(11.4%), 어르신 서비스는 충남(40.5%), 장애인서비스는 전북(13.4%), 저소득층 서비스는 대전(40.1%)에서 높은 필요도

### 3. 복지욕구조사 개인 분석

#### □ 여성이 있는 가구

- 여성이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 부족'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이 24.2%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도는 지역에 위치한 여성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이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으로 나타났다으나, 이들 6개 시·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모두 '정보제공 부족'이 가장 불편
-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가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25.9%, '건강(체육) 및 의료서비스' 21.1%의 순
- 시·도별로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대전은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의 욕구가 51.9%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제주(47.1%)와 세종(42.5%)은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의 욕구가 상당히 높음.

####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위치한 미취학 아동 대상의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0%를 차지한 '정보제공 부족'



- 시·도별로 지역에 있는 취학 전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정보제공 부족’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전체의 36.5%를 차지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었으며, 그 다음은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이 22.1%
- 시·도별로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대전, 경기 2개 시·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음.

#### □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위치한 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보제공 부족’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20.5%,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20.1%의 순
- 시·도별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은 인천, 세종, 충북, 전북 4개 시·도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도는 ‘정보제공 부족’의 불편한 점이 가장 많음.
- 초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방과 후 학습지도’가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체험학습활동’ 22.2%
- 시·도별로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제주 등 6개 시·도는 ‘체험학습활동’에서, 대구는 ‘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는 ‘방과 후 학습지도’에서, 세종, 경기 2개 시·도는 ‘취미 특기교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

□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있는 가구

- 지역의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24.7%을 차지한 ‘정보제공 부족’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11개 사·도는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관련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정보제공 부족’
-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진로 상담’이 2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26.9%
- 사·도별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9개 사·도는 ‘진로상담’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북 등 7개 사·도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을, 충남은 ‘문화취미활동’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

□ 어르신이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어르신의 건강이 더 나빠져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이 전체의 48.5%
- 가구에 계신 노인의 건강이 더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사·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의 비율이 가장 높음.
-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 24.7%로 가장 많았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이 24.3%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사·도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외 사·도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을 가장 어려운 점
-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에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방문 간호 서비스’로 16.4%

- 시·도별로 노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의 욕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10개 시·도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비율을 가장 높음.

#### □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22.0%를 차지한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었고, 다음은 ‘거동이 불편함’ 21.4%,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20.9%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을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 가장 높은 비율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고용지원 서비스’ 16.3%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등 5개 시·도는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4. 복지대상 규모 추정

#### □ 경제 및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6,505,195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07,944가구로 가장 많이 추정되었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 1,388,451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16,515가구
- 부채상환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4,193,601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1,050,848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이 936,847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9,208가구
- 취업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3,702,642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별로는 서울이 903,38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가 829,369가구로 추정되었으

며, 세종시는 9,208가구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2,353,408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1,791,942가구, 취약계층은 561,466가구로 추정
- 부채상환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1,010,676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757,061가구, 취약계층은 253,615가구로 추정
- 취업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1,332,520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1,007,099가구, 취약계층은 325,421가구로 추정

□ 돌봄 및 양육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2,577,530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별로는 서울이 618,988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532,493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는 6,105가구
-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4,050,404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947,17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이 945,211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11,560가구
- 돌봄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925,595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691,078가구, 취약계층은 234,517가구로 추정
- 양육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803,355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576,477가구, 취약계층은 226,878가구로 추정

□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8,509,941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서울이 2,107,905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도가 1,833,094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22,370가구
- 심리 및 정서적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1,800,757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1,267,555가구, 취약계층은 533,202가구로 추정

□ 보건의료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2,597,987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92,712가구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 447,512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는 8,858가구

□ 대상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가구조사 기준

- 여성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3,477,620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48,218가구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 648,264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는 6,706가구로 가장 적음.
- 취학 전 아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391,048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632,8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이 359,682가구로 많았고, 세종시는 3,753가구
- 초등학생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227,395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311,0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울이 288,582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5,105가구
- 중고생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779,723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504,21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이 380,594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5,705가구
- 어르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5,789,214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1,371,28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서울이 886,658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13,212가구
- 장애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841,093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452,38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이 372,229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13,212가구
-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3,313,967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819,94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585,529가구로 많았고, 세종시는 8,858가구

□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전국적으로 19~64세 여성이 있는 가구는 약 1,422.6만 가구이며, ‘문화,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를 4,553,889가구에서 필요
  - 사·도별로 여성에게 필요한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를 보면, 서울이 985,230가구이며, 이것은 전체 ‘문화, 여가활동 관련서비스’ 욕구를 가진 가구의 21.6%
  - 특히, 세종은 여성에게 필요한 타 서비스와 비교하여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필요 가구(14,119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계층별로 여성이 있는 가구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중하위 소득계층이하 가구는 여성의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함.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24만가구로서, 그 중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 공간’이며,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구는 817,090가구로 추정
- 소득계층별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과 취약 계층에 대해 살펴보면,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이하 계층가구 중 34.1%인 50,501가구, 취약 계층가구 중 32.1%인 7,230가구로 추정

□ 초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340만가구이며, 이 가구에서 취학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779,477가구
- 최저생계비이하 계층가구 중 30.4%인 70,478가구, 취약 계층가구 중 39.9%인 26,779가구, 중하위소득 계층가구 중 27.6%인 239,925가구는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가 필요

#### □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있는 전국 약 384만가구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 ‘진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032,890가구로 추정
- 취약계층 가구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45.0%인 49,867가구이고, 최저생계비이하계층 가구는 41.3%인 116,773가구로 추정

#### □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전국적으로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약 757만가구인데, 택에 있는 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때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3,670,982가구로 가장 많음.
- 가구의 노인이 건강악화로 수발이 필요한 서비스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규모는 3,670,982가구로 추정
-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조사된 ‘가사지원 서비스’는 1,345,973가구에서 필요한 것으로 추정

#### □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315만가구인데, ‘복지정보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519,390가구,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512,643가구, ‘개인별 맞춤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425,563가구로 추정
  - 대전은 ‘고용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 규모는 22,395가구였고, 강원(16,478가구)과 제주(8,604가구) 등 2개 시도 역시 ‘고용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음.
  -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음.
  - 최저생계비이하계층의 경우, ‘개인별 맞춤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29,843가구이고, '복지정보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29,211가  
구로 추정

## 5. 분석결과와 시사점

### □ 가구부문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 광주 및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취업 및 경제적 지원, 가족돌봄과 자녀양육의 지  
원이 필요
- 가정내 불화로 인한 단절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서울과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
- 사·도별로 지역사회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서울, 경남 및 제주도로 나타나서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부족이 심각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복지와 의료시설 공급  
이 확충
- 학교폭력 및 치안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광주를 대상으로 학교 및 시민을 대  
상으로 하는 안전강화 정책이 필요
- 주택·주거환경 및 재개발이 열악한 대구는 주거정책 등이 필요하여 지역별로  
정책우선순위가 차별화될 필요
-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 불편하다고 지정한 8대 도지역(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을 대상으로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
- 시설의 정보제공 부족을 응답한 5개지역(서울, 광주, 대전, 경남, 제주도)을 대  
상으로 정보접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 부족을 지정한 서울, 부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  
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요구



#### □ 대상별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성의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것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지리적 위치 또는 교통수단의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보였음은 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 육아와 일의 성공적 양립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아이와 정서적 공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나 지역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등 취학 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
-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
- 아동기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취미·특기 계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낮은 소득계층의 청소년에게는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1:1 맞춤형 학습지도 등 학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
- 지역에 건립된 사회복지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필요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내 대상에 따라 차별적, 선별적, 개인별 맞춤형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

□ 정책대상규모 추정 분석결과와 시사점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가장 많은 2,353, 408가구이었으며, 다음은 심리 및 정서적 지원 필요가구 1,800,757가구, 취업지원이 필요한 가구 1,332,520가구, 부채상환지원이 필요한 가구 1,010,676가구
- 가족돌봄 지원 필요 가구 925,595가구, 자녀양육지원 필요가구 803,355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욕구
- 생활지원, 취업지원, 부채상환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
- 가구가 당면한 생활비 및 부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단기정책과 함께 취업지원에 의한 자립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이 병행되어 추진
- 가구원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돌봄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정책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 제3장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

### 1.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정보

□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의의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보장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사회보장의 단위로 등장
- 지역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 통계 및 관련 지표를 지역별로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인지, 혹은 지역에 대한 고려를 감안한 맞춤형(tailor-made) 통계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역사회보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친화적(policy-friendly) 지역사회보장 통계 및 지표를 생성할 필요

- 사회보장에 대한 투입, 산출, 성과 등 세 가지 차원 외에 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표가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 2.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

- 사회복지 환경(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경제활성화, 고용률, 재정자주도, 복지예산 비중, 범죄율, 외국인 거주비율, 조이혼율)
  - 유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0~14세 유년인구의 비율을 의미
  -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을 의미
  - 사업체수 증가는 전년 대비 증가한 사업체의 규모를 통해 확인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이용
  -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중에서 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복지예산 비중은 예산 중 사회복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 범죄율은 인구 1천명 당 범죄발생 건수로 측정
  - 외국인 거주 비율은 인구 1천명당 외국인 수로 측정
  - 이혼율은 인구 1천명 당 이혼율을 의미하는 조 이혼율로 측정
- 사회복지 노력(소득, 건강, 교육, 주거)
  - 사회복지 노력에서 소득 분야는 지역주민 1인당 복지예산, 빈곤/차상위가구 1인당 복지예산 2가지 지표로 측정
  - 사회복지 노력의 건강 분야는 지역 주민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인구 당 보건예산, 인구 10만명 당 보건소 인력)
  - 사회복지노력의 교육 분야는 교육예산(학생1인 당 교육예산)과 학생당 교원 수(학생100명 당 교원 수)로 측정
  - 사회복지노력의 주거 분야는 주거 환경의 적절성에 주목(취약계층 1인당 주거

복지예산과 주택전세가격의 상승 고려)

□ 사회복지 성과(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

- 사회복지 성과의 소득 분야는 빈곤 또는 차상위 계층의 규모에 주목(전체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이용한 빈곤율, 차상위 계층 비중을 이용)
- 지역의 사회복지 성과 중 건강 분야는 사망률과 주관적 건강 수준으로 파악
- 사회복지의 교육 분야 성과는 학업중단율과 교육만족도를 이용
- 사회복지성과의 주거 분야는 주택보급률과 주거만족도로 측정
- 사회복지 성과의 고용 분야는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공률 등 고용활성화 성과로 측정
- 이 외에도 여성고용률도 사회복지 성과로 간주

□ 지역복지(출산율과 자살률)

- 지역복지의 질적 측면을 대리하는 또 다른 지표

### 3. 지역사회보장지수와 지표체계

□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의미

- 지역사회보장지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준을 척도화 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표현하는 지표(indicator)를 종합하여 수치로 환산한 결과

□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체계

- 지수는 개별지표를 통합한 결과치라는 점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 보장 지표를 수집·분류하고, 지수 산출을 위해 활용할 지표의 종류를 결정하는 지표체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표 또한 맥락지표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통계들을 중심으로 구성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표는 지역주민의 복지 또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표는 지역사회보장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지역의 사회보장 ‘현황’을 의미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표는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최종적 산물로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
- 사회보장 환경지표로는 인구 지표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경제지표는 고용률, 재정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회지표는 범위를 포함
- 사회보장 노력지표는 소득영역의 복지예산, 건강영역의 보건예산과 보건소 의료인력, 교육영역의 교육예산과 교원 수, 주거영역의 주거복지예산과 주택 가격 변동, 돌봄영역의 돌봄예산, 그리고 고용영역의 재정투입에 의해서 공급되는 일자리 등
- 사회보장 성과지표로는 소득영역의 절대빈곤(최저생계비 이하) 및 상대빈곤 계층의 규모, 건강영역의 연령별 사망률과 만족도, 교육영역의 학업중단율과 만족도, 주거영역의 주택보급율과 만족도, 돌봄영역의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와 만족도, 고용영역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 등을 활용
- 사회보장 결과지표는 객관적 지표로 출산율과 자살률을, 그리고 주관적 지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

#### 4.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유형과 산출 방법

##### □ 산출 지수의 유형과 지표의 활용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표에 의해서 산출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는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토대로 산출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는 사회보장정책의 지역단위 산출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황'을 의미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 노력과 성과의 최종 결과물로서, 지수 산출을 위해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를 동시에 활용

□ 지수산출을 위한 지표값의 처리와 가중치 설정

-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의 첫 번째는 단계는 영역별로 분류된 지표의 값을 동일한 척도로 일치시키고, 척도에 따라 표준화된 값으로 전환
- 따라서 척도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분포를 표준화하여 각 지표의 값을 표준화된 상대값으로 전환
- 각 영역이나 개별지표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임의로 부과하는 주관적 방식으로 는 델파이의 유형으로 AHP 기법(Aczel & Satty, 1983)이 있음.
- 수리적 방식 중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한 가중치 설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
-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활용하는 수리적 방식으로 가중치를 설정

## 5.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결과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는 지역사회보장의 맥락 또는 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산 결과 인천이 67.1로 가장 높고, 제주가 5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등 6개 영역으로 표준화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의 산출 결과 전북이 6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다음으로 광주(55.1), 충북(55.0), 강원(54.4), 대구(52.2), 인천(5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등 6개 분야의 표준화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는 울산이 5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반면에 광주가 4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

- 결과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9.7)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46.8)임.
  - 결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을 포함하여 제주, 전남(56.2), 서울(56.1), 대전(56.0)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 외에 충남(50.9), 부산(51.9), 충북(52.0) 등임.

#### □ 지역사회보장지수 비교

- 개발된 지수를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동일하게 구축하고 측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복지정책의 방향성이나 동향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
-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성과가 높거나 전국적인 표준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경우, 혹은 중앙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을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사회서비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가 더 중요
-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

## 제4장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 1. 복지계획 내용의 주요 특성

#### □ 복지계획의 구조적 특성

- 비전은 전체 시·도가 1개 설정
- 전략목표는 전체 60개가 설정되었으며, 시·도당 평균 3.8개 설정
  - 전략목표는 최저 2개(울산), 최고 5개(광주, 세종, 전북) 설정
- 핵심과제는 전체 151개가 설정되었으며, 시·도당 평균 9.4개 설정
  - 핵심과제는 최저 4개(울산), 최고 16개(대구) 설정
- 세부사업은 전체 540개가 설정되었으며, 시·도당 평균 33.8개 설정
  - 세부사업은 최저 14개(경남), 최고 56개(대전) 설정

#### □ 비전의 특성

- 제3기 광역지자체의 복지계획 비전의 특성은 ‘행복’, ‘따뜻한’, ‘함께, 더불어, 상생, 여민(與民)’, ‘삶/삶의 질’을 강조

#### □ 전략목표의 특성

- ‘전달체계’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고용복지(일자리)’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복지공동체 및 민관협력’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생애주기 맞춤형복지’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지역 맞춤형복지’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안전’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복지권(리)’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핵심과제의 특성

- ‘전달체계’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고용복지(일자리)’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복지공동체 및 민관협력’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지역 맞춤형복지’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안전’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복지권(리)’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노인 및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여성 및 가족’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보건의료 및 건강’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2. 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의 틀

- 복지욕구조사 결과 및 지역통계와의 정합성
-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
-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
-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

### 3. 복지계획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적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6개 항목이 적절로 나타난 경기, 충남, 전북이었고, 보통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6개 항목이 보통으로 나타난 강원도로 나타남.

□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주민욕구에 근거하지 않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제시된 사업이 있을 여지가 있음이 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함.

□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비전 및 전략, 지역특성의 연계성,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설정은 시·도마다 대체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에 있어서 시·도 및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여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자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정부정책에 맞게 국가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사부터 계획수립까지 우수 시·도의 사례를 타 시·도에 전파하는 컨설팅 제도를 고려할 필요 있음 시사함.

## 제5장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 1.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 13개 시·도 지원요구사항

○ 서울특별시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외 2개 사항

- 부산광역시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외 3개 사항
- 대구광역시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외 2개 사항
- 인천광역시
  - 미제출
- 광주광역시
  - 해당사항 없음
- 대전광역시
  - 우수 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외 3개 사항
- 울산광역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치 재정지원 외 9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 해당사항 없음
- 경기도
  - 해당사항 없음
- 강원도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외 1개 사항
- 충청북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외 3개 사항
- 충청남도
  -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외 8개 사항
- 전라북도
  - 해당사항 없음

○ 전라남도

-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외 1개 사항

○ 경상북도

-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외 22개 사항

○ 경상남도

- 진주시 다문화중도 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외 6개 사항

○ 제주특별자치시

-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외 1개 사항

## 2. 시·도 지원요구 사항과 복지계획 내용의 부합성 분석

### □ 부합성 분석의 기준

- 시·도의 지원요구 사항이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원 요구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
-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거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
- 일부 시·도의 경우 시·군구의 지원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시·도 요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요구

## 3. 부합성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 분석결과 요약

- 복지계획에 부합하는 지원요구 사항은 49개

○ 복지계획에 일부만 부합하는 지원요구 사항은 10개

○ 복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요구 사항은 14개

#### □ 부합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시·도의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이 반드시 복지계획에 부합해야 함에도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약 20%에 해당하고 있어 향후 복지계획 수립시 수정되어야 함.

○ 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이 정확히 작성되고, 매뉴얼에 따라 복지계획이 수립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를 위해서는 복지계획 작성 기간에 단계별로 중앙정부 관계자와 시·도 관계자가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제6장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 1. 타당성 분석의 기준

#### □ 분석의 기준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의 합리성 기준

○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 기준

○ 셋째, 지방자치단체 지원 적절성 기준

○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기준

□ 중앙정부에서 시·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4단계 분석기준을 설정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따라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책무성,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의 4단계

를 거쳐 시·도 지원요구의 타당성을 분석함.

- 대부분의 지원요구사항은 1단계(지방자치단체 사무 합리성)와 2단계(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의 기준을 충족함. 3단계(지방자치단체 지원 적절성)와 4단계(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지원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스크리닝될 것으로 기대됨.

## 2.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중앙정부 요구사항을 시·도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고 종합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제3기 계획수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은 없어 계획수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음을 시사함.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특히 인프라 확충이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 지원요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시사함.

# 제7장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과 결론

## 1.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

- 부합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의 요약
  - 부합성이 ‘○’ 또는 ‘△’이고, 타당성의 형평성이 ‘○’ 또는 ‘△’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 이는 요구사항이 복지계획과 부합되면서 동시에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임.
  - 전체 73개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 중 10개만이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부 타당한 지원요구 사항은 5개로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의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경상북도의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확대)
  -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경상북도의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 일부 타당한 지원요구 사항은 5개로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의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울산광역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충청북도의 음성 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경상북도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설치확대 지원(5개소)
  -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 보조 지원(김천시만 해당)

#### □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방향

#####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검토 및 보완

-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하므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특히,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

##### ○ 사회복지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중앙정부의 정기적 교육 실시

- 복지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실시 필요

##### ○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지시설 운영 매뉴얼을 중앙정부에서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

##### ○ 복지인프라 확충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국비지원

- 우선지원 대상(5), 차선지원대상(5)
-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고려한 정보공유가 필요
-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
  - 도 단위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행정시의 개별 협의체를 도 단위에서 연 계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2. 결론

- 제3기 복지계획 실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지역별 복지욕구가 상이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지원이 요구
  - 대상별 복지욕구가 상이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지원이 요구
  - 복지계획의 부합성 및 타당성 분석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 요구
  - 제3기 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시·도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제4기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 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군·구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의 시·군·구 및 시·도 복지계획 제출일자를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
  - 시·군·구 및 시·도의 복지계획 수립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사



항을 그대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그 책무가 있었음은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의미

- 반대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유사한 서비스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의 작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매뉴얼에 상세하게 명시될 필요
-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이 국고보조사업인지, 지자체 자체사업인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 시 시·군·구 단위의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통계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도 및 복지부에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
- 따라서 시·군·구에서 수집된 조사·통계 자료를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통합·분석함으로써 정책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시·군·구, 시·도 및 전국 단위로 주민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간 비교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통계를 검토·보완하여 시·군·구 및 시·도와 전국 단위 통계 DB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 수준 측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절성 분석
- 통합·구축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주민 복지욕구 반영 등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절성을 분석·점검하고,
- 시·도의 지원 요구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지역단위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통합 DB 구축 및 분석임.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의 DataBase와 Micro-data를 구축하고, 소득 및 생활실태, 지역사회 만족도, 복지욕구 및 필요 서비스의 우선 순위 확인 등을 분석함.
- 둘째,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표 산출임.
  - 이는 시·군·구 및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타당성 판단임.
  - 지역주민 복지욕구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계성을 판단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와 복지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간 일관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넷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시·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을 설정함.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자료 통합 및 분석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자료 통합
  - 개별 시·군·구 조사의 조사구(조사지역) 설계 및 표본추출(sampling) 방법을 고려하여 자료통합 방법을 결정
  - 시·군·구 단위의 결과 자료를 시·도 및 전국 단위로 통합 : 입력형식 통일

- 통합 자료의 data cleaning
- 통합 자료의 가중치 설정 및 부여
- 시·도 및 전국 차원의 빅 데이터(micro-data set) 구축
- 통합·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군·구, 시·도, 전국 차원의 지역주민 복지욕구 현황 및 특징, 복지욕구의 지자체간 비교
  - 인구 및 가구 구성, 소득수준, 장애·질병 상태, 경제활동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서비스별 대상 집단(target group)의 규모 산출
  -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분석과 의견조사 결과를 통합한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시·도별 결과 정리
- 지역사회복지통계 취합 및 분석, 통계 DB 구축
  - 시·군·구 및 시·도별 지역사회복지통계 수집, 분류 및 정리
  - 지역사회복지통계의 영역, 항목, 지표 및 통계산출 적절성 검토
  - 지역사회복지통계 DB 구축
- 지역사회복지 수준 측정을 위한 지수 산출
  - 지역사회복지통계 및 지역별 복지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설정
  - 지표 중요도를 토대로 지표를 결합하여 지수(index) 산출 방식을 결정
  - 결정된 지수산출 방식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수를 계산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절성, 시·군·구 및 광역 시·도의 지원 요구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분석
  -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지역사회복지통계의 분석 결과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정합성 분석
    - 주민 복지욕구와 계획의 방향성·우선순위 설정의 연계성 검토

#### 4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및 사·도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사·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전략-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 분석
- 시·군·구 및 사·도의 지원요구 사항과 계획 내용의 부합성 분석·평가

##### □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 사·도의 지원요구 사항을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 기준에 따라 타당성 분석

##### □ 중앙정부의 지원방향 설정 및 결론

-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을 설정함.
-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 2. 연구방법

##### □ 시·군·구 복지욕구조사 결과의 신뢰성 검증 및 자료 통합

- 시·군·구별 조사구 설계 등 조사계획 및 표본추출의 표준화,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한 신뢰성 검증
  - 신뢰성 검증은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소득 결과와 통계청의 전국가구조사의 비교, 그리고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와 행정 데이터(급여자료)의 수급자 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
- 데이터 입력 오류 보정을 위한 data cleaning, 결측치(missing value) 처리 등을 통하여 Big data 구축
-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데이터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가중치 부여
  - 사·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자료 통합을 위한 가중치 설계
  -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하여 가중치 계산



□ 시·도, 전국단위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분석

- 지역별, 복지대상별, 경제수준별 주민의 생활실태 분석
  - 가구 구성, 경제활동 및 가구 소득, 필요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도,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필요 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 생활실태 분석에 따른 객관적 복지욕구와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주관적 복지욕구의 비교 분석
  - 통계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별, 경제수준별, 가구유형별, 대상별 복지욕구 결과를 도출

□ 지역사회복지통계를 취합하여 지역사회보장지수를 도출

-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통계자료 수집 및 분류
- 개별지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설정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중치 부여
- 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및 분석

□ 전문가 그룹 회의

- 분석방법 및 결과도출에 대한 자문





## 제2장

###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 자료 통합 및 분석

제1절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제2절 복지욕구조사 가구 분석

제3절 복지욕구조사 개인 분석

제4절 복지대상 규모 추정

제5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 2

## 사·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 통합 및 분석

### 제1절 사·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 1.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개요

##### □ 조사의 기본 방향

- 개인 단위의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가구단위 조사로 전환
- 가구구성,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등 복지제도의 급여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욕구 및 서비스 수요 파악의 객관성 확보
- 욕구조사의 대상기간과 기준 시점을 설정
  - 조사 대상기간 : 2013.1.1.~12.31
  - 기준 시점 : 2013.12.31.
- 시·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시된 공통항목을 활용

##### □ 욕구조사의 대상 가구 수(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모집단(N)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단순임의추출하여 모비율을 추정하는 경우를 가정
  - 모비율(p)=0.5, 신뢰수준=0.95, 오차한계(d)=0.05 인 경우 필요 표본크기 (n)는 350~390<sup>1)</sup>

---

1)  $n = \frac{Nz^2p(1-p)}{Nd^2 + z^2p(1-p)}$ , p=0.5인 경우에 분산이 가장 커서, 이때의 표본크기를 구하면 모비율이 다른 값을 가진 경우도 적용 가능

〈표 2-1〉 오차한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신뢰수준=0.95)

모집단(가구) 크기(N)	표본크기(신뢰수준(p)=95%)		
	오차한계=10%	오차한계=5%	오차한계=1%
1,000	88	<b>278</b>	906
5,000	94	<b>357</b>	3,288
10,000	95	<b>370</b>	4,899
100,000	96	<b>383</b>	8,762
1,000,000	96	<b>384</b>	9,513

○ 시·군·구의 가구 수에 따른 조사 표본 수 결정

- 기초자치단체의 가구 수(모집단)의 평균은 90,047가구이며, 시와 자치구는 약 12만 가구이고, 군은 2.4만 가구
- 시·군·구의 가구 수를 감안하면 욕구조사의 응답 완료가구(표본 수)는 최소 370~ 390가구가 필요
- 가구구성원 중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출현율을 고려하면, 조사완료 가구 수는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로 설정

〈표 2-2〉 사·군·구 가구 현황(2013. 12)

구분	가구 수		
	평균	중위수	비고
시	119,581	89,360	
군	24,110	21,430	
자치구	122,987	112,604	
전체	90,047	73,762	최소: 5,322, 최대: 416,036

□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구는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설정

○ 조사구 설정 방법

- 시·군·구 당 조사구는 13~15개로 설정
  -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 이상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구 당 30가구 이상을 조사한다고 가정하면, 조사구는 최소 13개 이상이 필요

- ※ (읍·면·동이 16개 이상) 1~2개 읍·면·동 → 1개 조사구
- ※ (읍·면·동이 13~15개) 1개 읍·면·동 → 1개 조사구
- ※ (읍·면·동이 12개 이하) 1개 읍·면·동 → 1개 이상의 조사구
- 시·군·구의 인구와 읍·면·동의 수가 많아 욕구조사 가구 수를 4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조사구 설정 가능

○ 조사구 내에서 가급적 상가지역은 피하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 □ 조사항목 및 문항 구성

○ 욕구조사의 문항은 대분류(영역)와 소분류(해당문항)로 구성

〈표 2-3〉 조사항목과 문항

대분류 (조사항목)	소분류 (조사문항)	
	문항번호	내용
I. 가구일반사항	1	• 가구원 수
	2~13	• 각 가구원에 대한 사항
II. 가구주거 상황	1~3	• 주거 상황
III. 가구(가구주) 소득	1	• 가구주의 소득에 관한 일반 상황
	2	• 근로소득자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3	• 자영자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4	• 가구주가 농림, 축산업 경영주인 경우의 소득
	5	• 가구주가 어업경영주인 경우의 소득
	6~11	• 가구의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IV. 자산	1~3	• 가구의 전체 자산
V. 부채	1	• 가구의 부채
VI. 생활여건	1~8	• 개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혹은 만족도
	9~49	• <b>(박탈지수)</b> 생활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
VII.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1~10	•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와 만족도
	11~16	• 지역에 따라 복지시설을 <b>추가 기입</b> 하여 활용 가능
	17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18	•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VIII. 여성	1~9	• 지역에 따라 대상별 복지시설을 <b>추가 기입</b> 하여 활용 가능 • (VIII~XI) 각 영역의 마지막 두 문항: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IX. 미취학 아동		
X. 초등학생		
XI. 중·고등학생		
XII. 노인	1~18	• 일상생활의 일의 수행정도(건강 상태)
	19~24	• 보유질병의 종류
	25	• 향후 필요한 수발 관련 서비스
	26~42	•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b>추가 기입</b> 하여 활용 가능
	43~44	•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운 점 • 지역에서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대분류 (조사항목)	소분류 (조사문항)	
	문항번호	내용
XⅢ. 장애인	1~11	• 장애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12~20	• 지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b>추가 기입</b> 하여 활용
	21~22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지역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2. 조사 데이터 수집 및 자료 통합

### □ 데이터 수집

#### ○ 시·군·구는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2014년 6~9월)

- 제출자료 : 시·군·구별 설문지, 코딩북, 데이터파일
- 수집된 코딩파일을 점검하여 미제출 지자체에 제출을 요구하고, 데이터 파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작성을 요구

#### ○ 전국 229개 시·군·구 조사데이터 취합 완료(2014.11.)

- 데이터는 111,793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시·도별로 경기도가 16,849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411가구로 가장 적음
- 시·군·구별로 평균 488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1차 취합 결과

시·도	조사 가구	시·군·구 수	시·군·구당 조사 가구
서울특별시	11,901	25	476
부산광역시	7,329	16	458
대구광역시	5,550	8	694
인천광역시	4,744	10	474
광주광역시	2,106	5	421
대전광역시	6,463	5	1,293
울산광역시	2,136	5	427
세종특별자치시	411	1	411
경기도	16,849	31	544
강원도	8,060	18	448
충청북도	4,867	11	442
충청남도	6,716	15	448
전라북도	5,919	14	423
전라남도	9,276	22	422



사도	조사 가구	사군구 수	사군구당 조사 가구
경상북도	10,526	23	458
경상남도	8,087	18	449
제주특별자치도	853	2	427
합계	111,793	229	488

#### □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점검

○ 사·군·구별 설문지의 항목과 내용을 검토하여 공통문항을 추출하여, 데이터 통합에 입력할 변수를 선정

- 설문지 항목 중 사·도 또는 사·군·구에서 추가변경이 가능한 Ⅶ 항목의 일부와 Ⅷ ~ Ⅺ 항목을 제외하고, 228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통합

〈표 2-5〉 데이터 통합을 위한 조사항목과 문항

대분류 (조사항목)	소분류 (조사문항)	
	문항 수	내용
Ⅰ. 가구일반사항	1	• 가구원 수
	108	• 각 가구원에 대한 사항
Ⅱ. 가구주거 상황	3	• 주거 상황
Ⅲ. 가구(가구주) 소득	1	• 가구주의 소득에 관한 일반 상황
	1	• 근로소득자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1	• 자영자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1	• 가구주가 농림, 축산업 경영주인 경우의 소득
	1	• 가구주가 어업경영주인 경우의 소득
	5	• 가구의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Ⅳ. 자산	3	• 가구의 전체 자산
Ⅴ. 부채	1	• 가구의 부채
Ⅵ. 생활여건	8	• 개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혹은 만족도
	41	• <b>(박탈지수)</b> 생활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
Ⅶ.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10	•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와 만족도
	17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18	•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Ⅷ ~ Ⅺ. 대상별 욕구	8	• 지역의 해당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 각 영역별로 마지막 두 개 문항)
합계	228	

#### ○ 사·군·구 데이터의 입력 현황 점검

- 사·군·구별로 데이터 코딩 방식, 자료입력 방법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통합

데이터에 포함 여부를 결정

- 검토 결과 서울시 종로구, 중구, 구로구, 동작구, 충북 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순천시, 보성군, 경북 안동시, 고령군, 울릉군, 경남 합천군 등 총 15개 시·군·구 데이터를 제외
- 각 시·군·구 데이터의 제외 이유를 아래 표와 같음.

〈표 2-6〉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제외 사유

지역	조사 가구	제외 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데이터 미제출
	중구	가구원 정보 누락
	구로구	가구원 정보 매칭 불가능
	동작구	가구원 수, 가구원 정보 누락
충북	괴산군	가구원 정보 누락
충남	홍성군	가구원정보 입력 오류
전북	익산시	가구원 정보, 가구 일반사항 누락, 설문지 변경
	정읍시	가구원 정보 누락
	김제시	노인, 장애인 데이터 누락
		가구일반사항 설문지 변경, 노인, 장애인 데이터 누락
전남	순천시	가구원정보와 가구 매칭 불가능
	보성군	설문지 변경
경북	안동시	1) 행정코드 없음
	고령군	2) 가구 구분 불가능, 가구원 수 누락
	울릉군	3) 여성, 노인, 장애인 문항 각각의 시트로 구성 되어 있으나 아이디가 없어 가구정보와 매칭 불가능
경남	합천군	설문지 변경, 가구원 정보 누락

### ○ 데이터 통합

-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코딩을 동일한 수치로 재조정, 변수(문항)의 입력 순서 변경, 변수명 일치 등의 작업을 거쳐 데이터를 시·도별로 그리고 전국단위 파일로 통합
- 213개 시·군·구의 97,973 가구의 결과를 통합 (시·군·구 당 평균 460 가구)

〈표 2-7〉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통합 결과

사·도	조사 가구	사군구당 조사 가구
서울특별시	10,182	485
부산광역시	7,329	458
대구광역시	3,996	500
인천광역시	4,148	415
광주광역시	2,122	424
대전광역시	2,100	420
울산광역시	2,115	423
세종특별자치시	411	411
경기도	15,727	507
강원도	7,918	440
충청북도	4,393	439
충청남도	6,280	449
전라북도	4,605	419
전라남도	8,816	441
경상북도	9,379	469
경상남도	7,599	475
제주특별자치도	853	427
합계	97,973	460

#### □ 데이터 오류수정(cleaning) : 2단계 실시

○ 조사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오류수정은 ‘논리적 검증’과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의 제거’ 등의 2가지 방법으로 진행

##### - 논리적 오류 검증과 수정

-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배우자의 성별이 여성이어야 하며, 가구주의 나이가 가구주의 부모보다 적어야 하며, 가구원 수가 3명이면 가구원 정보가 3명에 해당하는 가구원 정보가 있어야 하는 등의 논리적 오류 검증
- 문항의 응답이 5번까지 있는데 6 보다 큰 값이 있는 경우, 소득이 지나치게 크거나 음수인 경우 등 입력 오류 수정

##### - 사·도 또는 사·군·구 단위로 기술통계치를 계산하여 결과의 이상 유무 검토

- 결과치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등의 이상이 있거나, 조사 결과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체계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선정

- 오류를 수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외 :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가구원 정보가 오류가 심하고, 가구소득의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제외
- 1차 클리닝 이후 94,353 가구의 결과를, 2차 클리닝 이후 최종적으로 83,407 가구의 데이터를 확정(시·군·구 당 평균 393 가구)

〈표 2-8〉 1차 cleaning 결과 및 2차 cleaning 결과

사도	1차 cleaning 결과	2차 cleaning 결과	
		사도 당 가구 수	시·군·구당 가구 수
서울특별시	9,728	8,500	425
부산광역시	6,646	6,014	376
대구광역시	3,883	3,585	448
인천광역시	4,120	3,808	381
광주광역시	2,080	1,765	353
대전광역시	2,098	1,715	343
울산광역시	2,088	1,719	344
세종특별자치시	350	256	256
경기도	15,028	12,008	387
강원도	7,680	7,008	389
충청북도	3,920	3,622	362
충청남도	6,048	5,521	394
전라북도	4,460	4,203	382
전라남도	8,645	7,818	391
경상북도	9,240	8,542	427
경상남도	7,495	6,507	407
제주특별자치도	844	816	408
합계	94,353	83,407	393

#### □ 통합 데이터의 한계

- 세종특별자치시는 분석표본의 부족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오차 범위를 벗어남.
- 대전광역시의 경우 Ⅶ 항목(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의 2개 변수, 그리고 Ⅷ ~ Ⅺ 항목(대상별 욕구)의 변수들은 조사표의 문항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데이터 통합과 클리닝 결과 총 17개 시·군·구의 데이터가 제외되었고, 일부 시·군·구의 경우 표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시·군·구별 분석에 문제는 있으나, 시도별 분석은 가중치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음.

### 3. 통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처리

#### □ 변수 계산 및 변수 생성

- 자료 분석을 위해 가구소득을 소득 원천별 데이터를 합산하여 시장소득(경제 활동소득), 공적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가구 총소득 그리고 가구 균등화 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변수(4개)를 생성
- 가구원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 특성을 구분하는 변수 생성
  - 노인가구 : 독거노인, 노인세대가구, 노인동거가구를 구분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구 : 영·유아(보육), 초·중·고생 가구 구분
  - 장애인 가구 구분
  - 경제활동이 가능한(19세 ~ 64세) 여성이 있는 가구 구분
  - ※ 여성가구주인 경우는 곧바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변수를 생성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의료급여 대상 가구 구분

#### □ 가구소득에 따른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

- 소득계층 구분은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빈곤계층의 구분을 위해 추가로 최저생계비를 고려
  - 빈곤 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
  - 취약 계층(상대빈곤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의 50% 이하
  - 중하위 소득 계층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 ~ 중위소득 이하
  - 중상위 소득 계층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 중위소득의 2배 이하
  - 고소득 계층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배를 넘는 계층

#### □ 가중치 설정

- 기본가중치 산정
  - 조사구 추출확률과 조사구 내 가구추출확률의 역수로 산정

$$W_{hij} = \frac{M_h}{m_h} \times \frac{N_{hi}}{n_{hi}}$$

- $W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값
-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 $M_{hi}$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모집단 가구 수
- $n_h$ 는  $h$ 층의 표본 조사구 수
- $m_{hi}$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표본가구 수

※ 시·군·구를 하나의 조사구로 가정하여 가중치를 산정함.

#### ○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 산정

- 시·군·구별 조사의 기준 시점인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가구 집계 결과( $K_h$ )를 이용

$$W_2 = K_h \cdot \frac{W_{hij}}{\sum_{i=1}^{n_h} W_{hij}}$$

#### ○ 전국 단위의 추정

- 지역별, 가구규모별 소득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분산 추정을 위한 계산식을 제시
- 소득 등 주요변수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본추출과정을 고려하여 계산

$$\hat{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dots}$$

- $h$ 는 전국 17개 광역시 및 시·도를 나타내며,  $i$ 는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써  $i = 1, 2, \dots, n_h$ 이며,  $j$ 는 표본 조사구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j = 1 \dots, m_{hi}$  임.
- $W_{hij}$ 는  $h$ 층의  $i$ 번째 표본조사구내의  $j$ 번째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의미함.

$$W_{\dots} = \sum_h \sum_i \sum_j W_{hij}$$

-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j = 1 \dots, m_{hi}$  임
- $W_{hij}$ 는  $h$ 층의  $i$ 번째 표본조사구내의  $j$ 번째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의미함.

$$W_{\dots} = \sum_h \sum_i \sum_j W_{hij}$$

## 제2절 복지욕구조사 가구 분석<sup>2)</sup>

### 1. 가구일반사항

- 전국 20,456,588가구의 가구원 규모는 3~4인 가구가 45.6%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는 25.4%이었으며, 1인 가구 18.8%, 5인 이상 가구 10.2%로 평균 가구원수는 2.87명이었는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전국 가구원 규모와는 다소 상이한 것임.
- 가구의 월 소득분포는 300만원 미만이 59.7%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40.3%이었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307.8만원으로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전국 가구의 월소득과는 차이를 보임.
  - 월 평균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월 가구균등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7.1%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은 32.9%이었으며, 평균 가구균등소득은 178.8만원으로 가구소득의 58% 수준이었음.
- 장애인가구 비율은 15.0%이었고, 3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24.6%이었으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비율과 차이를 보였음.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7%로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여 실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율과는 차이를 보였음.

2) 가구분석은 230개 사군구의 조사데이터를 통합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사군구의 가구표본은 통계적으로 대표적인 표본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부는 유의표집에 의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복지대상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을 과표집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가구분석 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표 2-9〉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구원 수		
1명	3,853,470	18.8
2명	5,190,333	25.4
3명~4명	9,334,535	45.6
5명 이상	2,078,250	10.2
평균가구원수(명)	2.87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03,969	28.4
100~200만원미만	3,182,881	15.6
200~300만원미만	3,210,560	15.7
300~400만원미만	2,538,147	12.4
400~500만원미만	1,951,412	9.5
500만원 이상	3,765,316	18.4
평균가구소득(만원)	307.77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4,578,880	22.4
50~100만원미만	3,210,770	15.7
100~150만원미만	3,185,429	15.6
150~200만원미만	2,749,170	13.4
200~300만원미만	3,915,773	19.1
300만원이상	2,814,211	13.8
평균가구균등소득(만원)	178.76	
장애인가구여부		
장애인가구	3,067,911	15.0
비장애인가구	17,388,677	85.0
만성질환가구여부 <sup>1)</sup>		
만성질환가구	4,662,139	24.6
비만성질환가구	14,298,974	75.4
국민기초수급가구여부		
수급가구	1,361,672	6.7
비수급가구	19,094,916	93.3
계	20,456,588	100.0

주: 1) 만성질환가구여부는 총 20,456,588가구 중에서 무응답인 1,495,475 가구가 제외된 것임.

□ 전국 20,456,588가구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4,182,351가구로 20.4% 분포를 보였고, 세종시까지 포함한 7대 광역시는 5,114,032가구로 25.0%, 9대 도지역은 11,160,205가구로 54.6%의 분포를 보였음.

○ 가구원 규모는 제주도가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2.5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사·도별 분포와는 다소 상이함.



- 1~2인 가구 비율은 부산, 강원, 충청도 및 전라도, 경상도 등이 전국보다 높았으며, 3~4인 가구는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와 제주도 등이 높은 분포를 보였음.

○ 월 평균 가구소득은 울산(457.47만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238.89만원)이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시·도별 분포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 300만원 미만 비율은 4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이 전국보다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은 서울시와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및 제주도 등이 높게 나타났음.

〈표 2-10〉 시도별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1)

(단위: 명, %)

구분	가구원 수					월 가구소득						
	1명	2명	3~4명	5명 이상	평균 가구원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가구소득
전국	18.8	25.4	45.6	10.2	2.87	28.4	15.6	15.7	12.4	9.5	18.4	307.77
서울	16.4	21.5	53.4	8.7	2.95	23.0	14.1	14.3	14.0	11.4	23.2	343.54
부산	21.3	27.8	44.1	6.8	2.68	27.0	16.3	18.0	13.4	9.4	15.8	291.73
대구	18.1	21.3	49.7	10.8	2.96	29.0	18.8	16.4	12.0	9.5	14.4	265.35
인천	16.9	23.5	49.5	10.1	2.94	27.2	15.3	17.9	15.3	10.0	14.3	271.93
광주	23.1	18.9	45.9	12.1	2.91	37.9	14.8	11.1	8.9	7.0	20.3	355.44
대전	15.4	22.7	50.2	11.7	3.03	25.1	13.2	16.5	14.09	11.4	19.0	300.70
울산	10.8	18.7	57.8	12.8	3.28	18.0	10.1	12.9	9.1	11.1	38.6	457.47
세종	19.5	23.4	44.9	12.1	2.86	32.0	16.8	9.8	10.2	12.1	19.1	305.32
경기	16.7	22.4	49.1	11.8	3.02	26.0	104.5	15.4	13.2	10.2	20.7	333.68
강원	21.7	32.5	35.9	9.9	2.66	38.6	17.0	14.9	9.7	7.3	12.3	243.19
충북	24.5	31.2	32.9	11.5	2.66	39.0	15.2	13.8	10.2	7.5	14.2	260.73
충남	23.5	36.0	32.2	8.4	2.53	38.8	17.1	13.7	9.6	8.6	12.2	238.89
전북	28.0	31.0	30.5	10.6	2.55	37.8	17.9	13.4	8.9	5.3	16.7	316.06
전남	22.1	31.85	32.0	14.0	2.76	36.7	18.7	15.6	8.7	6.9	13.4	248.96
경북	23.1	30.5	37.5	8.9	2.67	37.6	16.9	13.9	8.7	7.9	14.9	271.28
경남	19.8	33.3	41.4	5.5	2.60	23.4	17.8	24.5	14.6	8.5	11.4	266.20
제주	8.1	15.4	49.3	27.2	3.65	13.6	18.9	16.7	13.3	12.4	25.2	370.86

○ 시·도별 가구균등화 소득은 울산(261.31만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143.38만원)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가구소득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음.

- 서울, 광주, 대전 및 울산, 세종과 경기, 전북, 제주도의 소득은 143.38~261.3만원으로 전국보다 많았음.

- 장애인가구비율은 세종시가 25.0%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6.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사·도별 분포와는 차이를 보였음.
  - 서울, 대구, 인천, 세종 및 강원, 충북, 전라도, 경북, 제주도 등은 15.2~25.0%로 전국평균보다 장애인 가구비율이 높았음.
- 만성질환가구비율은 전북(40.5%)이 가장 높았고, 제주도(10.9%)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사·도별 분포와 상이하였음.
  - 인천과 세종시,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및 경북 등은 25.6~40.5%로 전국보다 높았음.

〈표 2-11〉 사·도별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2)

구분	월 가구균등소득							장애인가구여부		만성질환 가구여부		국민기초수급 가구여부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가구 소득	장애인 가구	비장애 인가구	만성질환 가구	비만성질환 가구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전국	22.4	15.7	15.6	13.4	19.1	13.8	178.76	15.0	85.0	24.6	75.4	6.7	93.3
서울	17.4	14.4	14.1	13.8	23.2	17.0	195.53	15.7	84.3	21.2	78.8	7.3	92.7
부산	20.5	15.6	16.9	14.6	20.2	12.2	176.02	12.0	88.0	21.2	78.8	5.7	94.3
대구	21.8	21.0	16.8	13.6	17.0	9.7	149.79	15.4	84.6	22.3	77.7	9.8	90.2
인천	20.3	16.3	17.6	17.3	19.1	9.4	154.79	19.3	80.7	26.5	73.5	4.3	95.7
광주	31.2	17.9	11.4	9.9	14.8	14.9	196.72	14.1	85.9	21.0	79.0	20.1	79.9
대전	23.3	11.4	14.0	12.1	20.9	18.4	191.97	12.0	88.0	20.7	79.3	2.0	98.0
울산	15.7	10.1	11.3	9.7	22.8	30.4	261.31	13.0	87.0	12.3	87.7	5.2	94.8
세종	28.1	16.8	10.9	10.5	19.1	14.5	189.69	25.0	75.0	28.9	71.1	12.1	87.9
경기	20.6	14.7	15.7	14.1	20.3	14.5	187.84	14.9	85.1	25.6	74.4	6.7	93.3
강원	31.7	17.7	15.4	11.4	14.8	9.2	146.95	15.5	84.5	27.8	72.2	5.7	94.3
충북	32.9	16.1	13.8	11.0	15.9	10.3	153.93	18.6	81.4	35.1	64.9	6.5	93.5
충남	29.9	18.6	14.8	11.4	15.5	10.3	143.38	13.7	86.3	37.7	62.3	4.3	95.7
전북	29.9	19.4	13.9	9.9	11.5	15.3	199.57	21.3	78.7	40.5	59.5	10.2	89.8
전남	29.4	19.0	16.4	11.1	13.4	10.8	147.31	15.3	84.7	25.7	74.3	7.1	92.9
경북	31.7	16.4	14.6	10.6	15.5	11.3	163.41	17.7	821.3	30.6	69.4	8.1	91.9
경남	17.0	13.7	22.0	17.9	19.5	9.9	163.58	6.9	93.1	15.0	85.0	1.0	99.0
제주	11.3	16.9	18.6	14.8	20.5	17.9	205.32	15.2	84.8	10.9	89.1	3.4	96.6

- 국민기초수급 가구의 비율은 광주(20.1%)가 가장 높았고, 경남(1.0%)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사·도별 분포와 차이를 보였음.
  - 서울, 대구, 광주, 세종시 및 전라도, 경북지역은 7.1~20.1% 비율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가구균등화 소득대비 국민기초수급 가구비율을 비교할 때 인천, 강원, 충청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전국 가구의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 가구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 가구의 성별은 남성가가구가 76.1%, 여성가가구가 23.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63.2%로 많았고, 그 중 노인층이 1/3에 근접하였으며, 40대 이하 가구는 36.9%이었고, 전체 가구의 평균 연령은 56.1세이었음.

〈표 2-12〉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구 성		
남성	15,395,499	76.1
여성	4,839,798	23.9
가구 연령		
15~39세	2,588,995	12.9
40~49세	4,828,515	24.0
50~64세	6,573,321	32.6
65세 이상	6,155,616	30.6
가구 평균연령(세)	56.07	
가구 혼인상태		
유배우	14,245,058	71.3
이혼·별거·사별	4,776,057	23.9
미혼	965,938	4.8
가구 취업상태		
취업	14,652,352	73.2
비취업	5,370,634	26.8
가구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6598546	33.0
고등학교	6827180	34.2
대학교이상	6562493	32.8
계	20,235,296	100.0

○ 가구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71.3%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사별인 가구는 23.9%이었으며, 미혼인 가구는 4.8%이었음.

○ 가구의 취업상태는 취업중 73.2%, 비취업 26.8%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약 3배 많았음.

○ 가구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67.2%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은 32.8%이었음.

□ 사·도별로 가구의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 및 교육수준별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 사·도별 분포와는 차이를 보임.

○ 남성가구주 비율은 울산(81.9%)이, 여성가구주 비율은 대구(35.1%)가 가장 높았음.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및 제주도는 전국보다 남성가구주 비율이 높았던 반면, 대구 및 세종시, 전북지역은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13〉 사·도별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1)

(단위: 명, %)

구분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주 평균 연령
	남성	여성	15~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국	76.1	23.9	12.9	24.0	32.6	30.6	56.07
서울	78.4	21.6	17.1	24.3	32.8	25.7	53.84
부산	74.0	26.0	12.3	19.1	37.6	31.0	56.63
대구	64.9	35.1	9.7	29.3	37.6	23.5	54.66
인천	79.0	21.0	18.4	25.1	26.9	29.6	54.37
광주	71.7	28.3	13.0	29.7	31.8	25.5	54.10
대전	78.9	21.1	13.2	26.9	34.2	25.7	54.54
울산	81.9	18.1	16.2	33.8	36.0	14.0	50.69
세종	69.8	30.2	18.3	28.2	25.0	28.6	53.80
경기	78.7	21.3	12.5	26.5	33.0	58.0	55.53
강원	76.5	23.5	10.5	23.1	33.4	33.0	57.10
충북	71.5	28.5	9.0	19.3	27.3	44.4	60.72
충남	75.0	25.0	8.8	15.6	31.5	44.1	61.07
전북	67.3	32.7	9.4	19.7	26.7	44.3	60.41
전남	75.2	24.8	10.7	22.5	30.8	36.1	57.94
경북	73.6	26.4	10.0	22.7	30.5	36.8	58.05
경남	76.0	24.0	8.5	17.1	33.9	40.6	60.00
제주	79.8	20.2	13.1	36.2	38.4	12.3	51.05

- 가구주 평균 연령은 충남지역이 61.07세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50.69세로 가장 적었음.
- 40대 이하 비율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전국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은 부산,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및 경상도 등이 높았음.
-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비율은 울산(83.6%)이, 이혼·별거·사별은 전북(32.5%), 미혼비율은 광주(7.4%)가 높게 나타났음.
- 유배우와 미혼 비율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및 경기지역에서 전국보다 높았고, 이혼·별거·사별은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및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서 높았음.
- 가구주의 취업비율은 제주도(89.2%)가 가장 높았고, 전북(62.7%)이 가장 낮았음.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와 제주는 전국보다 높았는데 비해, 부산, 광주, 세종, 충북, 전북과 경북 등은 낮은 분포를 보였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비율은 전북(81.4%)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이상인 비율은 제주도(46.0%)가 가장 높았음.
- 고등학교 이하 비율은 부산, 인천, 강원, 충청도, 전라도 및 경상도 등이 전국보다 높았고, 대학 이상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및 제주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2-14〉 시도별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주 취업상태		가구주 교육수준		
	유배우	이혼·별거·사별	미혼	취업	비취업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전국	71.3	23.9	4.8	73.2	26.8	33.0	34.2	32.8
서울	73.2	21.1	5.6	74.0	26.0	24.1	33.4	42.5
부산	68.6	25.4	6.0	68.3	31.7	32.7	35.7	31.7
대구	69.6	25.8	4.6	75.0	25.0	26.9	39.6	33.5
인천	72.7	22.2	5.1	75.9	24.1	30.4	39.2	30.4
광주	61.9	30.6	7.4	66.1	33.9	28.2	33.3	38.5
대전	75.2	19.8	5.0	74.6	25.4	25.9	32.7	41.5
울산	83.6	11.8	4.6	86.2	13.8	19.6	45.4	35.0
세종	68.8	27.1	4.0	63.8	36.2	31.9	26.6	41.5
경기	72.9	22.0	5.1	77.9	22.1	27.6	34.3	38.1
강원	70.5	25.3	4.1	71.4	28.6	43.0	34.2	22.9

구분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주 취업상태		가구주 교육수준		
	유배우	이혼·별가사 별	미혼	취업	비취업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충북	69.4	27.8	2.8	66.3	33.7	50.4	28.3	21.3
충남	68.6	27.6	3.8	70.1	29.9	50.8	29.6	19.6
전북	63.1	32.5	4.5	62.7	37.3	53.9	27.5	18.6
전남	70.9	25.8	3.3	70.5	29.5	48.6	31.8	19.6
경북	66.8	28.4	4.9	64.4	35.6	47.0	29.5	23.5
경남	70.6	27.2	2.2	72.1	27.9	42.4	38.5	19.1
제주	79.9	16.0	4.1	89.2	10.8	16.0	38.0	46.0

## 2. 가구의 주거상황

- 전국 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형태가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 아파트가 33.9%이었으며, 그 외의 형태는 2.3~9%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표본조사결과가 실제 전국의 주거유형 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음.
- 가구주 성별로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남성가구주는 전체보다 일반아파트에, 여성가구주는 단독주택에 거주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영구 및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는 여성가구주가 남성보다 약 2배 많았음.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비해, 50대 이상은 단독주택이 높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은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거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단독주택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음.

〈표 2-15〉 현 주거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일반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기타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계(수)
전체	36.0	5.8	6.0	9.0	33.9	2.8	2.3	4.2	100.0(20,031,371)
가구주 성									
남성	34.8	5.3	5.4	9.1	37.5	2.0	1.8	4.0	100.0(15,247,351)
여성	39.9	7.5	7.8	8.8	22.4	5.1	3.6	4.9	100.0( 4,784,020)
가구주 연령									
15~39세	15.2	6.3	9.6	12.1	47.2	2.0	3.1	4.5	100.0(2,570,649)
40~49세	22.2	5.4	6.1	10.6	47.2	2.1	2.9	3.6	100.0(4,787,341)
50~64세	36.8	5.3	5.3	8.9	33.7	2.8	1.7	5.4	100.0(6,481,875)
65세 이상	54.9	6.3	5.1	6.7	18.1	3.6	2.0	3.4	100.0(6,104,087)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6	6.6	6.8	7.2	15.8	5.7	3.0	4.4	100.0(5,742,689)
100~200만원미만	41.8	7.5	6.8	10.0	21.7	3.4	3.1	5.6	100.0(3,143,400)
200~300만원미만	35.0	6.4	6.7	10.7	32.0	1.9	2.6	4.7	100.0(3,183,689)
300~400만원미만	26.8	5.7	6.9	11.1	42.5	1.2	2.1	3.7	100.0(2,515,017)
400~500만원미만	24.9	3.9	4.5	10.0	51.5	0.8	1.0	3.3	100.0(1,935,410)
500만원 이상	21.9	3.6	3.4	7.6	59.0	0.4	0.8	3.2	100.0(3,722,470)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51.0	6.3	6.5	7.4	16.7	5.0	2.8	4.2	100.0(4,530,980)
50~100만원미만	43.2	7.2	6.9	9.3	19.0	5.7	3.6	5.2	100.0(3,173,016)
100~150만원미만	36.9	6.5	6.0	10.3	30.9	2.3	2.7	4.6	100.0(3,156,041)
150~200만원미만	30.9	5.9	6.2	10.9	38.7	1.3	2.1	4.0	100.0(2,721,909)
200~300만원미만	24.5	4.6	6.0	9.8	49.6	0.8	1.2	3.6	100.0(3,882,401)
300만원이상	23.9	4.0	3.6	7.0	56.2	0.5	0.8	4.0	100.0(2,780,277)

주: 기타에는 복합용도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가건물 등 포함.

□ 시·도별 주거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은 전남(73.5%)이 전국평균보다 2배 많았고, 일반아파트는 울산(49.9%)이 전국평균보다 16%p 높았으며, 이 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은 서울이 가장 많았음,

○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는 세종시가 18.1%로 전국평균보다 3.5배 많았으며, 복합용도주택은 경북이 가장 많았음.

〈표 2-16〉 사·도별 현 주거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일반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기타점포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계(수)
전국	36.1	5.8	6.0	9.0	33.9	2.8	2.3	4.2	100.0(20,246,979)
서울	16.4	10.7	11.4	14.6	36.2	5.4	1.9	3.4	100.0(4,165,621)
부산	29.8	8.1	6.5	11.5	34.7	3.1	1.2	5.1	100.0(1,396,021)
대구	29.9	9.2	8.0	8.7	32.8	3.3	2.7	5.3	100.0( 819,106)
인천	25.6	3.4	5.8	14.4	46.1	1.1	0.9	2.7	100.0(1,116,932)
광주	29.4	3.5	2.9	4.5	47.4	6.0	2.6	3.7	100.0( 562,961)
대전	26.7	3.3	6.4	7.2	44.1	2.63	2.2	7.5	100.0( 584,536)
울산	24.6	4.6	4.2	11.3	49.9	1.1	1.1	3.4	100.0( 429,083)
세종	36.5	0.4	3.9	3.1	33.7	6.3	11.8	4.3	100.0( 498,49)
경기	25.6	5.0	6.1	9.2	43.9	2.6	3.8	3.8	100.0(4,699,767)
강원	57.5	1.9	2.9	4.6	24.0	1.9	1.8	5.4	100.0( 660,928)
충북	57.4	1.7	1.8	6.4	22.8	2.7	2.8	4.4	100.0( 641,927)
충남	61.1	2.2	1.9	4.2	23.4	0.7	1.4	5.0	100.0( 853,348)
전북	67.2	0.9	1.3	3.3	16.6	1.6	3.5	5.7	100.0( 763780)
전남	73.5	0.9	1.1	2.8	15.1	0.9	1.4	4.3	100.0( 808,361)
경북	61.2	1.8	1.7	5.1	21.3	1.2	1.5	6.0	100.0(1,137,119)
경남	62.8	8.9	3.4	2.2	17.8	0.2	0.5	4.1	100.0(1,319,467)
제주	50.8	3.6	6.5	13.0	19.9	1.7	2.5	2.1	100.0( 238,173)

주: 기타에는 복합용도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가건물 등 포함.

□ 전국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 65.3%로 가장 많았고, 전·월세 비율은 31.1%이었으며, 그 외의 형태는 5% 이하로 미미하여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 전국 및 가구주 특성별 주거 점유형태와는 차이를 보였음.

○ 남성가구주는 자가비율이 69.0%로 여성가구주보다 15.7%p 높았고, 여성가구는 전·월세 비율이 남성가구주보다 13.1%p 높아 여성 가구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줌.

○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높았고, 전·월세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음.

- 특히 30대 이하는 전·월세가 52.9%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가구소득별로는 자가비율은 57.6~78.4%로 고소득층에서 높았고, 전·월세비율은 20.2~36.3%로 저소득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음.



〈표 2-17〉 현 주거의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포함)	기타 (관사, 사택 등)	계(수)
전체	65.3	17.1	9.8	4.2	3.5	100.0(19952798)
가구주 성						
남성	69.0	16.9	7.9	3.3	2.9	100.0(151,97,357)
여성	53.3	17.9	15.9	7.4	5.5	100.0(4,755,441)
가구주 연령						
15~39세미만	41.5	34.9	13.1	4.9	5.5	100.0(2,564,453)
40~49세미만	60.4	21.2	10.8	4.0	3.7	100.0(4,765,032)
50~64세미만	72.3	12.6	9.1	3.9	2.2	100.0(6,457,308)
65세이상	71.6	11.3	8.6	4.5	4.0	100.0(6,080,278)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7.6	13.8	14.4	8.1	6.1	100.0(5,708,314)
100~200만원미만	59.8	15.7	14.3	5.9	4.3	100.0(3,133,757)
200~300만원미만	64.1	19.5	10.3	3.2	2.9	100.0(3,171,121)
300~400만원미만	67.0	21.8	6.9	2.0	2.3	100.0(2,509,796)
400~500만원미만	72.2	20.1	4.7	1.4	1.6	100.0(1,932,026)
500만원 이상	78.4	16.3	3.0	0.9	1.4	100.0(3,706,937)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59.1	13.8	13.1	7.8	6.1	100.0(4,504,208)
50~100만원미만	55.7	15.1	16.8	7.1	5.3	100.0(3,161,392)
100~150만원미만	65.2	17.9	10.3	3.5	3.1	100.0(3,142,137)
150~200만원미만	67.4	19.9	7.6	2.7	2.4	100.0(2,716,647)
200~300만원미만	71.0	19.8	5.7	1.6	1.9	100.0(3,871,266)
300만원이상	76.8	16.9	3.7	1.3	1.4	100.0(2,768,246)

□ 시도별로 주거의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비율은 경남(83.6%)이 전국보다 18.3%p 높았고, 전·월세 비율은 서울(47.9%)이 절반에 근접하여 전국보다 16.8%p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하였음.

○ 특히, 전세비율은 서울이 전국평균보다 약 2배 많았고, 월세(보증부월세와 월세 포함)는 세종시(27.0%)가 전국평균보다 13.0%p 높았음.

〈표 2-18〉 사·도별 현 주거의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포함)	기타 (관사, 사택 등)	계(수)
전국	65.3	17.1	9.8	4.2	3.5	100.0(20,166,252)
서울	49.7	31.5	13.0	3.4	2.4	100.0(4,144,956)
부산	65.4	15.2	12.2	4.3	2.9	100.0(1,390,416)
대구	58.4	15.5	14.1	8.2	3.8	100.0( 817,497)
인천	68.6	18.7	7.6	2.1	3.0	100.0(1,112,523)
광주	58.2	13.9	9.8	14.5	3.5	100.0( 560,406)
대전	68.0	13.1	13.3	3.9	1.8	100.0( 584,194)
울산	70.3	11.3	10.0	5.6	2.8	100.0( 427,327)
세종	58.5	10.4	17.0	10.0	4.1	100.0( 47,113)
경기	61.6	19.4	12.1	3.6	3.3	100.0(4,684,853)
강원	74.6	8.1	7.0	4.2	6.0	100.0( 657,322)
충북	77.6	6.9	5.8	5.1	4.7	100.0( 639,616)
충남	79.4	8.2	4.6	3.7	4.1	100.0( 852,417)
전북	74.2	6.3	7.7	4.0	7.8	100.0( 762,503)
전남	82.1	6.3	3.4	2.7	5.5	100.0( 798,657)
경북	78.4	5.5	4.6	6.1	5.5	100.0(1,133,918)
경남	83.6	9.7	3.2	1.4	2.1	100.0(1,318,452)
제주	67.5	6.1	7.1	13.0	6.2	100.0( 234,082)

### 3. 가구주의 고용상태와 가구소득

□ 전국 가구주의 고용상태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영자가 31.7%이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약 12%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러한 표본조사결과는 실제와는 차이를 보였음.

○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상용근로자와 자영자의 비율이 1.7배 높았고, 여성가구주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2배 높았으며, 이 외에 여성가구주는 무급가족종사자, 가정주부, 학생 및 기타 등이 약 1/3이었음.

○ 가구주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비해 고연령층에서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 외에 임시·일용근로자의 분포도 높았음.

○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비해, 저소득층

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간 소득층에서는 자영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표 2-19〉 가구주의 고용상태

(단위: %,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정주부·학생·기타	(분석대상수)
전체	44.2	11.6	31.7	12.5	(15,886,319)
가구주 성					
남성	48.4	9.8	34.2	7.6	(12,765,750)
여성	27.1	19.0	21.5	32.5	( 3,120,569)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48.8	8.8	34.8	7.5	(12,176,610)
이혼·별거·사별	22.2	22.8	22.8	32.3	( 2,698,210)
미혼	48.0	16.1	15.9	20.0	( 828,725)
가구주 연령					
15~39세	70.0	8.6	14.2	7.2	(2,515,511)
40~49세	56.4	10.0	26.2	7.4	(4,683,681)
50~64세	35.7	12.7	37.8	13.7	(6,121,380)
65세 이상	16.2	14.6	44.9	24.3	(25,09,251)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8.8	18.3	26.7	36.3	(2,825,362)
100~200만원미만	26.8	23.3	35.0	14.8	(2,586,831)
200~300만원미만	45.5	12.1	34.3	8.1	(2,871,022)
300~400만원미만	54.9	8.6	30.6	6.0	(2,336,000)
400~500만원미만	59.5	4.4	31.8	4.3	(1,846,234)
500만원 이상	60.4	2.9	31.4	5.2	(3,584,718)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21.5	16.7	25.0	36.8	(2,063,460)
50~100만원미만	22.8	22.8	32.3	22.0	(2,385,493)
100~150만원미만	40.5	15.3	34.8	9.4	(2,792,872)
150~200만원미만	51.9	9.4	32.7	6.0	(2,505,691)
200~300만원미만	58.2	5.7	30.9	5.2	(3,670,229)
300만원이상	57.7	3.5	32.7	6.0	(2,633,977)

□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경기도(57.8%)가 전국평균보다 13.7%p 많았고, 자영자는 충남(51.2%)이, 임시·일용근로자는 광주(16.5%)가, 무급가족종사자가사육아·학생·기타 등은 세종시(20.7%)가 전국평균보다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와 다소 상이한 것임.

○ 상용근로자는 서울, 대전, 울산, 세종시, 경기, 제주도 등이 전국평균보다 많았

고, 자영자는 대구와 울산 외에 8대 도지역(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 많았음.

-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사·육아 등은 4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와 강원, 전북에서 많았음.

〈표 2-20〉 사·도별 가구주의 고용상태

(단위: 개월 수,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자사·육아·학생·기타	(분석대상수)
전국	44.1	11.5	31.6	12.8	(16,053,570)
서울	48.3	13.5	25.5	12.7	(3,316,851)
부산	42.7	13.9	29.0	14.4	(1,042,870)
대구	35.6	14.4	32.8	17.2	( 768,480)
인천	43.8	13.4	29.3	13.5	( 905,358)
광주	42.1	16.5	21.6	19.8	( 409,049)
대전	48.8	11.7	31.3	8.3	( 462,445)
울산	47.4	8.2	37.5	6.8	( 389,917)
세종	51.4	11.7	16.2	20.7	( 34,992)
경기	57.8	8.9	24.1	9.2	(3,872,127)
강원	30.9	13.6	39.3	16.2	( 518,989)
충북	29.4	9.8	40.9	19.9	( 466,065)
충남	29.3	10.6	51.2	8.9	( 631,662)
전북	25.4	12.4	41.7	20.5	( 548,346)
전남	28.3	10.3	43.7	17.7	( 634,523)
경북	32.9	9.5	38.9	18.7	( 838,867)
경남	34.6	10.2	46.6	8.6	( 991,223)
제주	46.5	12.4	34.8	6.3	( 221,806)

□ 전국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3,199만원으로 그 중 근로소득자가 2,1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자 856만원, 농림·축산업 경영주 179만원이었으며, 어업 경영주가 19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국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의 평균 연간소득은 표본조사결과로 실제와는 차이를 보임.

○ 남성가구주의 연간소득은 여성가구주보다 2.4배 많았으며, 소득원은 남성가구주가 여성보다 모든 소득원에서 2~4배 많았음.

○ 유배우 가구주는 연간소득이 3,986만원으로 이혼·별거·사별 가구주보다 3.7배 많았음.

- 소득원도 유배우가구주가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사별 가구주는 농림·축산

업경영주에서만 미혼보다 많았으며, 나머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40대 연령층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연간소득이 많았다가 50대부터 감소하여 65세 이상에서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소득원은 40대 이하 연령층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40~50대는 자영자, 50대는 농림·축산업과 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았음.

○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은 최저소득층보다 50~80배까지 연간소득이 많았으며, 소득원은 고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자영업, 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았음.

〈표 2-21〉 가구의 소득 구성(1)

(단위: 만원, 명)

구분	합계	근로소득	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	(분석대상수)
전체	3199.43	2146.46	855.75	178.53	18.69	(20,456,121)
가구주 성						
남성	3710.27	2480.82	993.75	212.81	22.89	(153,925,265)
여성	1541.54	1056.59	413.52	66.21	5.22	(4,839,564)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3985.58	2661.58	1083.45	217.35	23.20	(14,244,825)
이혼·별거·사별	1065.52	698.76	273.19	87.42	6.15	(4,776,057)
미혼	2100.86	1614.94	420.12	55.73	10.07	(965,938)
가구주 연령						
15~39세	3981.25	3305.21	609.96	52.57	13.51	(2,588,995)
40~49세	4486.65	3181.33	1179.64	107.87	17.81	(4,828,515)
50~59세	4001.15	2442.59	1254.18	272.66	31.72	(6,572,854)
65세이상	987.25	510.70	284.93	183.84	7.78	(6,155,616)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4.63	101.80	29.48	42.43	.92	(5,803,969)
100~200만원미만	1312.26	812.97	312.92	180.56	5.81	(3,182,881)
200~300만원미만	2602.81	1684.57	684.89	224.05	9.30	(3,210,560)
300~400만원미만	3740.1	2623.89	918.40	188.42	9.39	(2,538,147)
400~500만원미만	4912.06	3415.53	1251.54	231.16	13.83	(1,951,412)
500만원 이상	8694.22	5819.06	2487.32	314.04	73.80	(3,764,849)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117.05	71.13	19.23	26.06	.62	(4,578,880)
50~100만원미만	947.96	607.96	210.00	126.03	3.98	(3,210,770)
100~150만원미만	2,262.79	1,461.91	588.53	205.87	6.48	(3,185,429)
150~200만원미만	3,382.92	2,306.21	858.21	208.19	10.30	(2,749,170)
200~300만원미만	4,891.54	3,447.53	1,237.18	194.63	12.20	(3,915,773)
300만원이상	9,315.99	6,086.13	2,723.53	404.40	95.95	(2,814,029)

□ 가구의 연간소득을 사·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5,077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878만원이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2,064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135만원이 적어 두 지역 간 차이는 2.5배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표본조사의 한계로 볼 수 있으며, 실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임.

○ 근로소득은 울산(3,801만원)이 가장 많았고, 전북(1,127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은 3.4배까지 차이를 보였음.

○ 자영업자소득은 광주(1,049만원)이 가장 많았고, 세종시(472만원)가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2배로 나타났음.

○ 농림·축산업소득은 제주도(636만원)가 가장 많았고, 서울(2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사·도 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였음.

○ 어업소득원은 울산(253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구, 대전 및 세종시는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표 2-22〉 사·도별 가구의 소득 구성(1)

(단위: 만원, 명)

구분	합계	근로소득	자영업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	(분석대상수)
전국	3199.43	2146.46	855.75	178.53	18.69	(20,456,121)
서울	3631.73	2672.50	955.17	2.06	2.00	( 4,182,351)
부산	3053.91	2041.95	941.22	38.80	31.94	(14,041,096)
대구	2822.52	1733.70	1047.74	41.08	-	( 960,265)
인천	2949.8	2047.42	869.84	26.97	5.57	( 1,118,988)
광주	3617.9	2550.57	1049.08	18.22	.03	( 563,599)
대전	3213.42	2346.51	854.20	12.71	-	( 584,877)
울산	5076.61	3801.21	825.40	196.89	253.11	( 431,595)
세종	3021.54	2363.53	472.27	185.74	-	( 50,045)
경기	3533.54	2466.91	924.70	137.42	4.51	( 4,712,324)
강원	2511.02	1444.69	793.47	255.92	16.94	( 664,913)
충북	2723.07	1559.09	778.02	384.91	1.05	( 644,062)
충남	2425.5	1414.07	559.58	415.61	36.24	( 857,699)
전북	2064.29	1127.37	655.45	255.30	26.17	( 766,699)
전남	2638.76	1421.53	644.15	490.44	82.64	( 815,769)
경북	2625.05	1466.71	710.46	431.61	16.27	( 1,139,387)
경남	2910.03	1680.28	639.35	564.89	25.51	( 1,320,887)
제주	4081.95	2606.65	798.88	635.98	40.44	( 238,465)

- 가구의 주된 소득원 외에 기타 소득원별 연간 평균 소득은 전체 합계가 446만원 이었고, 그 중 재산소득(106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회보험(94만원), 기타 소득(92만원), 정부보조금(8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63만원), 민간보험 (11만원) 순이었음.
- 기타 연간소득은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34만원 더 많았고, 소득원은 남성의 경우 재산소득과 사회보험 등이 많은 것에 비해, 여성은 민간보험, 정부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 소득 등이 많았음.
- 미혼가구주는 타 가구주보다 기타 소득이 약 7배 많았으며, 소득원은 유배우 가구주가 재산소득과 사회보험이 많았으며, 이혼·별거·사별 가구주는 정부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타 소득이, 미혼가구주는 민간보험이 많았음.
- 65세 이상 노인가구주는 연간 기타 소득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소득원의 경우 15~39세 연령층은 정부보조금이 가장 많았으며, 50~64세는 재산 소득과 민간보험이, 65세 이상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타 소득 등이 많았음.
- 소득별로는 기타 연소득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원은 대체로 재산소득과 민간보험, 사회보험은 고소득층에서, 정부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저소득층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음.

〈표 2-23〉 가구의 소득 구성(2)

(단위: 만원, 명)

구분	합계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금 (사회복지 급여등)	국민기초 생활 보장급여	기타소득	(분석대상수)
전체	446.30	106.17	93.57	10.52	80.91	63.28	91.85	(20,233,997)
가구주 성								
남성	455.33	116.11	102.16	10.37	80.52	54.98	91.19	(15,394,200)
여성	420.56	74.53	66.81	11.13	83.35	91.26	93.48	(4,839,798)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46.57	125.51	105.16	11.25	79.93	45.89	92.83	(14,243,759)
이혼·별거·사별	427.1	57.82	65.75	7.01	91.24	110.45	94.83	(4,776,057)
미혼	324.19	43.83	59.29	16.13	55.60	95.19	54.15	(965,938)
가구주 연령								
15~39세	292.57	45.47	24.57	10.65	133.29	28.01	50.58	(2,588,995)
40~49세	304.06	94.54	27.26	7.25	65.92	44.33	64.76	(4,828,515)
50~64세	423.1	136.86	96.05	12.46	39.37	62.71	75.65	(6,572,363)

구분	합계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금 (사회복지 급여등)	국민기초 생활 보장급여	기타소득	(분석대상수)
65세이상	648.32	108.32	171.83	10.97	115.34	94.91	146.95	(6,155,275)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20.69	22.46	45.30	2.64	102.00	88.61	59.68	(5,803,969)
100~200만원미만	414.35	60.33	113.67	8.56	86.42	66.41	78.96	(3,182,881)
200~300만원미만	317.49	49.47	118.12	10.59	68.68	17.35	53.28	(3,210,560)
300~400만원미만	340.85	73.21	121.31	7.30	82.80	10.92	45.31	(2,538,147)
400~500만원미만	298.22	78.38	82.49	11.51	69.55	10.53	45.76	(1,951,412)
500만원 이상	922.16	357.35	116.62	25.35	58.81	123.56	240.47	(3,764,070)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272.71	16.44	38.00	2.23	101.28	74.18	40.58	(4,578,880)
50~100만원미만	432.92	47.09	79.38	5.39	100.97	110.29	89.80	(3,210,770)
100~150만원미만	321.26	46.16	106.33	7.68	78.17	20.77	62.16	(3,185,429)
150~200만원미만	307.10	56.54	101.71	10.04	80.22	9.21	49.38	(2,749,170)
200~300만원미만	324.81	86.83	107.57	10.77	60.79	7.13	51.72	(3,915,773)
300만원이상	1,177.16	461.29	157.87	32.43	56.64	171.22	308.51	(2,814,029)

□ 사·도별로 기타 연간소득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전북(1,463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3.3배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경남(284만원)으로 전국평균의 64% 수준이었으며, 이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함.

○ 재산소득은 세종시(244만원)가 가장 많았고, 전남(51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은 4.8배까지 차이를 보였음.

○ 사회보험은 세종시(189만원)가 가장 많았고, 경남(49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약 4배로 나타났음.

○ 민간보험은 울산(32만원)가 가장 많았고, 경남(3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은 10배까지 차이를 보였음.

○ 정부보조금은 인천(118만원)이 가장 많았고, 광주(44만원)가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 차이는 약 3배를 보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전북(652만원)이 가장 많았고, 경남(6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음.

○ 기타 소득은 전북(530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전(21만원)이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은 25배까지 차이를 보였음.



〈표 2-24〉 시도별 가구의 소득 구성(2)

(단위: 만원, 명)

구분	합계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 금 (사회복지 급여등)	국민기초 생활 보장급여	기타소득	(분석대상수)
전국	446.30	106.17	93.57	10.52	80.91	63.28	91.85	(20,454,970)
서울	485.17	145.78	108.56	15.16	83.66	51.58	80.43	(4,182,351)
부산	399.98	97.88	103.08	-	72.05	42.11	84.86	(1,404,663)
대구	360.38	83.48	76.54	5.86	71.24	70.14	53.12	(960,265)
인천	312.88	53.27	56.96	7.23	118.17	29.15	48.10	(1,118,988)
광주	495.15	113.29	107.91	22.84	43.71	112.94	94.46	(562,322)
대전	388.05	88.81	164.64	8.42	76.87	28.69	20.62	(584,536)
울산	302.69	106.94	50.31	32.01	54.22	11.99	47.22	(431,595)
세종	641.55	243.63	189.42	16.25	65.16	76.76	50.33	(50,045)
경기	444.07	133.37	95.09	10.79	79.03	39.84	85.95	(4,712,324)
강원	334.51	83.10	109.89	8.26	62.24	27.58	43.44	(664,913)
충북	405.34	87.92	107.52	11.95	93.56	37.00	67.39	(644,062)
충남	422.89	82.75	117.91	8.28	96.11	21.24	96.60	(857,699)
전북	1462.64	62.46	94.76	7.36	116.09	651.60	530.37	(766,699)
전남	335.84	50.87	57.09	16.19	88.64	35.24	87.81	(815,769)
경북	333.49	66.10	88.71	8.67	84.37	38.31	47.33	(1,139,387)
경남	284.28	85.15	48.76	2.81	53.46	5.98	88.12	(1,320,887)
제주	363.2	93.47	56.85	8.88	94.55	19.59	89.86	(238,465)

#### 4. 가구의 자산 및 부채

□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6,381만원, 평균 부채는 2,463만원으로 부채규모는 자산의 38.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의 평균자산 및 부채규모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와는 차이를 보임.

○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평균자산과 부채 모두 2배 많았으며, 유배우 가구주가 이혼·별거·사별 및 미혼 가구주에 비해 평균 자산과 부채 모두 약 3배 많았음.

○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자산이 높다가 65세 이상에 와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부채도 비슷한 특성을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이 높아지면서 부채가 늘어나다가 65세 이상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산과 부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음.

〈표 2-25〉 가구의 평균 자산

(단위: 만원, 명)

	평균 자산	평균 부채	(분석대상 수)
전체	6381.28	2462.60	(20,453,981)
가구주 성			
남성	7340.36	2799.45	(15,392,021)
여성	3331.10	1391.08	(4,839,798)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7783.68	3015.80	(14,242,292)
이혼·별거·사별	2879.45	1091.90	(4,775,738)
미혼	2677.17	1125.84	(965,938)
가구주 연령			
15~39세	3592.66	2527.72	(2,588,995)
40~49세	5859.20	3269.79	(4,828,195)
50~59세	8705.91	3110.49	(6,570,554)
65세이상	5521.13	1129.08	(6,155,224)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1.80	29.48	(5,803,969)
100~200만원미만	812.97	312.92	(3,182,881)
200~300만원미만	1684.57	684.89	(3,210,560)
300~400만원미만	2623.89	918.40	(2,538,147)
400~500만원미만	3415.53	1251.54	(1,951,412)
500만원이상	5819.06	2487.32	(3,765,316)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2,483.81	990.52	(4,578,487)
50~100만원미만	3,679.19	1,770.09	(3,210,770)
100~150만원미만	4,631.60	2,202.41	(3,185,429)
150~200만원미만	5,251.65	2,559.57	(2,749,170)
200~300만원미만	7,440.85	3,142.50	(3,914,210)
300만원이상	17,438.28	4,912.26	(2,812,688)
국민기초수급가구여부			
수급가구	311.75	728.04	(1,361,672)
비수급가구	6827.59	2588.10	(19,091,437)

□ 시·도별로 평균 자산은 제주도(10,992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대전(3,160만원)으로 두 지역 간에는 3.5배까지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함.

○ 평균부채는 제주도가 3,9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은 1,6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두 지역 차이는 2.5배이었으며, 시·도별 평균부채 규모는 표본조사결과로 실제와는 차이를 보임.

〈표 2-26〉 시도별 가구의 평균 자산

(단위: 만원, 명)

	평균자산	평균부채	(분석대상 수)
전국	6393.79	2464.28	(20,453,110)
서울	6820.23	2644.71	(4,181,859)
부산	4767.29	1615.56	(1,404,663)
대구	3652.40	1811.40	(960,265)
인천	3398.90	2296.18	(1,118,988)
광주	6153.86	1950.51	(562,960)
대전	3159.95	2428.69	(584,877)
울산	4643.36	2058.86	(431,595)
세종	8554.00	2767.34	(50,045)
경기	8638.19	3625.33	(4,710,362)
강원	6307.89	2223.86	(664,913)
충북	6547.32	1600.19	(644,062)
충남	8509.58	1745.99	(857,699)
전북	4264.84	1578.69	(766,517)
전남	4170.05	1778.88	(815,769)
경북	5138.84	1554.97	(1,139,387)
경남	6779.83	2085.22	(1,320,684)
제주	10992.00	3923.79	(238,465)

## 5. 가구의 생활여건

□ 전국 가구의 생활여건을 보면 ‘대체로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를 합친 비율은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3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채 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20.5%로 나타났다.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과 실직·재취업·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은 18.1~19.8%로 많은 편이었고 정신건강과 성인돌봄, 환자 및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도 약 13%로 적지 않았음.

〈표 2-27〉 가구의 생활여건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18.1	14.7	29.8	21.3	10.5	5.5	100.0(20,456,588)	2.91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등	34.4	14.7	22.0	13.5	7.0	8.5	100.0(20,456,588)	2.39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등	34.7	15.6	20.8	11.9	6.2	10.7	100.0(20,456,588)	2.32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 (직업포기, 스트레스등)	43.4	13.1	16.6	7.7	4.9	14.3	100.0(20,456,588)	2.04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	35.7	12.8	21.0	13.6	6.2	10.8	100.0(20,456,588)	2.35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 (이혼·별거사별 등)	47.5	15.6	16.1	6.0	3.2	11.5	100.0(20,456,588)	1.89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등)	40.4	16.4	20.5	9.1	4.0	9.6	100.0(20,456,588)	2.11

□ 사·도별로는 저소득·과다지출과 실직·재취업·퇴직 등의 어려움은 광주(25.2~42.3%)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부채청산과 성인 및 환자·장애인 돌봄 등의 어려움은 전북(20.9~25.8%)이, 자녀양육 및 교육은 대전(30.7%)이, 가정 내 불화단절은 서울(13.0%)이 가장 많았음.

○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정도는 서울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도가 32.0~42.3%로 전국평균보다 많았음.

○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제주도가 21.7~25.8%로 높았음.

○ 실직, 재취업 및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정도는 서울시와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전북이 18.4~25.2%로 전국평균보다 많았음.

○ 성인 및 환자,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북이 13.6~20.9%로 높았음.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심각한 정도는 서울과 5대 광역시(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제주도가 19.9~30.7%로 많았음.

○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남이 9.5~12.2%로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심각한 정도는 서울과 5대 광역시(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도가 33.9~48.6%로 많았음.

〈표 2-28〉 시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저(무)소득 , 과다지출	부채청산	실직, 재취업, 퇴직	성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가정 내 불화단절	정신건강	(분석수)
전국	31.8	20.5	18.1	12.6	19.8	9.2	32.4	100.0(20,456,588)
서울	33.2	22.4	21.6	14.8	22.6	13.0	37.4	100.0(4,142,988)
부산	33.1	16.8	19.1	11.6	16.0	8.7	27.6	100.0(1,373,131)
대구	35.7	20.2	19.8	12.2	21.7	9.5	33.9	100.0(948,211)
인천	34.4	21.7	20.2	13.6	20.9	9.5	34.5	100.0(1,116,930)
광주	42.3	23.9	25.2	14.0	28.8	12.2	42.8	100.0(560,086)
대전	36.8	17.3	12.7	17.9	30.7	4.8	48.6	100.0(584,877)
울산	19.3	14.8	19.3	16.9	19.9	10.0	36.8	100.0(343,469)
세종	33.0	18.4	18.4	12.2	23.1	9.4	35.3	100.0(49,850)
경기	32.0	22.3	17.6	11.3	20.1	7.5	31.4	100.0(4,689,956)
강원	30.7	19.8	14.3	10.4	18.0	6.7	28.4	100.0(652,293)
충북	26.1	16.7	13.4	10.5	16.6	6.7	27.1	100.0(629,303)
충남	28.5	17.4	12.7	9.0	12.9	7.0	21.9	100.0(848,067)
전북	37.5	25.8	21.9	20.9	22.3	10.9	43.2	100.0(761,409)
전남	28.9	17.1	15.3	11.7	18.0	6.9	29.7	100.0(807,942)
경북	29.5	15.5	14.4	11.0	16.3	7.6	27.3	100.0(1,124,448)
경남	24.0	19.0	14.1	8.0	12.1	10.4	20.1	100.0(1,264,658)
제주	25.8	22.5	16.5	11.7	27.0	9.1	38.7	100.0(237,004)

□ 가구의 결핍수준 측정은 필요여부와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함에도 갖고 있지 못한 비율을 결핍수준으로 도출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영역은 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 등 7가지분야로 각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29〉 7가지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

영역	항목
식생활	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②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③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 것
주택 및 주거환경	① 가스나 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② 가족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③ 걸어서 10분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④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며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영역	항목
의료 및 건강	①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②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③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④ 의사에게서 처방 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① 1년에 한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를 다녀오는 것
	② 3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③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④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사회적 지지	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②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③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저축	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②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③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④ 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녀교육	①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② 자녀에게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③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④ 일년에 한번 이상 자녀의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
	⑤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 전국 가구의 7가지 영역을 포함한 평균 결핍비율은 12.7%이었고, 그중에서 저축 영역이 2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15.6%), 사회적 지지(14.8%), 의료 및 건강(12.7%), 자녀교육(10.7%), 식생활(7.9%), 주택 및 주거환경(6.2%) 순으로 높았음.

○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전체 및 모든 영역에서 결핍비율이 낮는데 비해, 여성은 남성보다 결핍비율이 3~12%p 높았음.

○ 의료 및 건강영역을 제외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및 6가지 영역(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에서 결핍비율이 약 8~30%로 높았음.

○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전체 및 모든 영역에서 결핍비율이 약 2~6배까지 높게 나타났음.

〈표 2-30〉 가구주 특성별 영역별 결핍수준

(단위: %, 명)

구분	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	전체	(분석대상 수)
전체	7.9	6.2	12.7	15.6	14.8	21.2	10.7	12.7	(14,178,320)
가구주 성									
남성	6.3	5.5	11.7	14.5	13.6	18.4	9.1	11.3	(11,129,066)
여성	12.6	8.4	15.5	18.9	18.8	29.9	17.9	17.4	(3,049,254)
가구주 연령									
15~39세	5.0	5.3	12.5	12.3	11.1	16.1	11.1	10.5	(2,133,806)
40~49세	5.8	5.6	12.6	14.0	12.8	17.3	8.7	11.0	(3,823,880)
50~59세	6.9	5.8	12.1	16.2	14.7	18.3	10.5	12.1	(4,885,488)
65세이상	11.7	7.6	13.4	17.3	18.2	29.5	18.6	16.6	(3,831,274)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8	9.3	16.5	19.6	21.0	34.5	21.6	19.6	(2,664,227)
100~200만원미만	9.7	7.5	15.3	20.9	18.3	27.3	18.0	16.7	(2,164,137)
200~300만원미만	5.8	5.6	11.9	16.6	14.0	19.3	11.0	12.0	(2,407,748)
300~400만원미만	3.8	4.7	10.6	13.1	12.1	14.4	7.4	9.4	(2,152,810)
400~500만원미만	3.2	3.9	9.8	10.4	9.5	10.7	6.5	7.7	(3,114,680)
500만원이상	2.6	3.1	8.2	8.3	7.8	7.1	5.3	6.1	(2,277,555)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15.0	9.4	16.6	19.6	21.1	34.7	20.7	19.6	(2,664,227)
50~100만원미만	11.8	8.6	16.5	21.4	20.1	31.8	19.3	18.5	(2,164,137)
100~150만원미만	6.6	6.1	12.6	17.5	14.9	21.2	10.7	12.8	(2,407,748)
150~200만원미만	4.5	4.8	11.1	14.1	12.8	15.7	7.6	10.1	(2,152,810)
200~300만원미만	3.2	3.8	9.3	10.5	9.6	10.6	5.9	7.5	(3,114,680)
300만원이상	3.1	3.2	8.3	8.6	8.0	7.4	6.3	6.4	(2,277,555)

□ 시·도별로 7가지 영역을 포함한 평균 결핍비율은 세종(16.8%)이 가장 높았고, 대전(8.7%)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인천, 광주, 충청도, 전라도, 경남이 13.1~15.8%로 높았음.

○ 식생활영역의 결핍비율은 광주(11.5%)가 가장 높았고, 경남(3.7%)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인천, 울산, 세종, 6대 도지역(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높게 나타났음.

○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의 결핍비율은 세종(11.2%)이 가장 높았고, 대전(2.8%)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높았음.

○ 의료 및 건강영역의 결핍비율은 세종(17.7%)이 가장 높았고, 경남(7.1%)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광주, 8대 도지역(경기, 강원, 충남,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이 높았음.

○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영역의 결핍비율은 전남(23.0%)이 가장 높았고, 울산(11.2%)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인천, 광주, 세종, 7대 도지역(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이 높았음.

○ 사회적 지지 영역의 결핍비율은 세종(18.7%)이 가장 높았고, 대전(9.1%)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라도, 경상도가 높았음.

〈표 2-31〉 사·도별 영역별 결핍수준

(단위: %, 명)

구분	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	전체	(분석대상 수)
전국	7.9	6.2	12.7	15.6	14.8	21.2	10.6	12.7	(15,242,854)
서울	7.1	4.6	10.7	14.1	14.2	20.5	12.2	11.9	(3,213,030)
부산	7.6	6.5	11.9	14.4	13.6	21.1	9.0	12.0	(962,523)
대구	9.2	6.6	13.8	15.1	16.7	19.9	11.7	13.3	(690,534)
인천	8.2	4.4	12.0	16.3	17.5	23.9	9.3	13.1	(849,232)
광주	11.5	7.3	13.5	15.8	17.1	30.7	12.5	15.5	(431,401)
대전	5.5	2.8	8.3	11.9	9.1	16.8	6.5	8.7	(430,728)
울산	10.0	6.4	10.7	11.2	10.8	12.7	7.7	9.9	(321,123)
세종	11.0	11.2	17.7	22.6	18.7	25.1	11.8	16.8	(38,316)
경기	7.0	5.7	14.7	14.1	14.7	20.6	9.3	12.3	(3,434,172)
강원	7.3	7.1	13.8	14.5	12.7	19.3	9.8	12.1	(461,587)
충북	10.2	8.7	12.7	16.9	14.3	21.3	8.5	13.2	(456,996)
충남	9.1	7.3	15.1	18.5	16.3	24.7	10.5	14.5	(661,179)
전북	11.3	7.7	15.7	16.2	16.7	24.7	16.6	15.5	(531,564)
전남	10.9	9.0	15.2	23.0	17.8	22.0	13.0	15.8	(642,660)
경북	10.3	9.6	14.3	17.6	15.3	21.7	11.5	14.3	(804,987)
경남	3.7	7.3	7.1	19.5	15.2	20.9	10.3	12.0	(1,120,531)
제주	5.6	6.9	14.0	17.6	11.4	16.2	8.4	11.4	(192,291)

○ 저축영역의 결핍비율은 광주(30.7%)이 가장 높았고, 울산(12.7%)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인천, 광주, 충청도, 전라도, 경북이 높았음.

○ 자녀교육 영역의 결핍비율은 전북(16.6%)이 가장 높았고, 대전(6.5%)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충청도, 전라도, 경북이 높았음.

## 6.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 전국가구의 지역사회만족도는 중간수준이 60.1%로 가장 높았고, 낮은 편은



30.7%, 높은 편은 9.3%로 10% 미만이었음.

○ 가구주 성별로는 지역사회만족도의 중간과 높음을 합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9.3%와 69.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혼인상태별로 지역사회만족도가 중간 이상인 비율은 68.7~73%로 미혼 가구주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이혼·별거·사별, 유배우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지역사회만족도가 중간 이상인 비율은 67.5~71.7%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지역사회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음.

○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만족도는 높은 특성을 보여서 소득과 지역사회만족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2〉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분포

(단위: %, 명, 점)

	높음	중간	낮음	계(수)
전체	9.3	60.1	30.7	100.0(19,680,303)
가구주 성				
남성	9.2	60.1	30.7	100.0(15,004,064)
여성	9.6	59.9	30.4	100.0(4,676,239)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9.0	59.7	31.3	100.0(13,879,099)
이혼·별거·사별	9.6	60.8	29.6	100.0(4,645,812)
미혼	10.4	62.6	27.0	100.0(926,244)
가구주 연령				
15~39세	9.3	62.4	28.3	100.0(2,515,813)
40~49세	9.9	60.7	29.3	100.0(4,686,257)
50~59세	9.6	59.4	31.0	100.0(6,394,224)
65세이상	8.3	59.2	32.4	100.0(6,003,825)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3	59.4	30.3	100.0(5,620,498)
100~200만원미만	10.4	62.9	26.7	100.0(3,088,031)
200~300만원미만	9.4	63.6	27.0	100.0(3,126,102)
300~400만원미만	8.6	60.8	30.6	100.0(2,478,508)
400~500만원미만	8.3	59.7	32.0	100.0(1,905,091)
500만원이상	7.9	55.1	37.0	100.0(3,666,428)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10.5	58.9	30.6	100.0(4,437,053)
50~100만원미만	10.6	62.3	27.1	100.0(3,113,298)
100~150만원미만	10.1	62.9	27.1	100.0(3,098,618)
150~200만원미만	8.4	62.0	29.6	100.0(2,683,477)
200~300만원미만	7.7	59.9	32.5	100.0(3,820,258)
300만원이상	8.2	54.3	37.5	100.0(2,733,898)

주: 낮음은 1~3점까지, 중간은 4~7점, 높음은 8~10점까지를 포함.

□ 사·도별로 지역사회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29.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5.0%)이었음.

○ 지역사회만족도가 전국보다 높은 지역은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7대 도지역(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북)이었으며, 전국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경남, 제주도로 나타남.

〈표 2-33〉 사·도별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분포

(단위: %, 명, 점)

	높음	중간	낮음	계(수)
전국	9.3	60.0	30.7	100.0
서울	5.4	58.3	36.3	100.0
부산	11.0	62.3	26.7	100.0
대구	10.4	61.8	27.9	100.0
인천	9.3	66.6	24.1	100.0
광주	10.7	61.4	28.0	100.0
대전	10.7	68.9	20.5	100.0
울산	29.1	42.5	28.4	100.0
세종	15.3	58.4	26.3	100.0
경기	9.6	56.3	34.1	100.0
강원	12.1	60.4	27.5	100.0
충북	13.9	56.2	29.9	100.0
충남	9.7	54.6	35.6	100.0
전북	9.6	64.1	26.2	100.0
전남	10.7	60.8	28.5	100.0
경북	10.8	62.0	27.2	100.0
경남	5.0	73.2	21.8	100.0
제주	7.0	52.7	40.3	100.0

주: 낮음은 1~3점까지, 중간은 4~7점, 높음은 8~10점까지를 포함.

□ 전국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로 ‘대체로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를 합친 비율을 보면 의료시설 부족(3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빈부격차 문제(29.7%), 복지시설 부족(26.9%), 주택·주거환경 열악·재개발(26.2%), 쓰레기·매연 등 환경오염문제(23.9%) 순으로 심각도가 높았음.

○ 이 외에 범죄·학교폭력·치안문제(19.1%)와 차별문제(18.8%)는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다소 낮았음.

〈표 2-34〉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복지시설 부족	10.1	15.8	35.1	19.9	7.0	12.2	100.0(20,456,588)
•의료시설 부족	12.9	19.0	31.3	21.6	9.7	5.5	100.0(20,456,588)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	14.1	22.0	34.5	16.8	7.1	5.5	100.0(20,456,588)
•범죄, 학교폭력,치안문제	13.4	21.7	36.4	14.6	4.5	9.3	100.0(20,456,588)
•주택·주거환경 열악,재개발 등	12.2	19.0	35.9	18.7	7.5	6.8	100.0(20,456,588)
•빈부격차 문제	9.5	15.9	36.4	21.1	8.6	8.6	100.0(20,456,588)
•차별의 문제	12.8	19.0	38.5	14.0	4.8	10.8	100.0(20,456,588)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20.7	25.0	36.4	8.5	2.8	6.6	100.0(20,456,588)

□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부족 문제의 심각한 비율은 세종(60.8~66.4%)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는 인천(34.9%)이, 범죄, 학교폭력 및 치안문제는 광주(26.5%)가, 주택·주거 환경 열악, 재개발과 차별문제는 대구(27.6~36.3%)가, 빈부격차문제는 대전(41.7%)이, 이웃과의 관계 문제는 경기(26.8%)가 심각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복지시설 부족이 심각한 비율은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이 27.2~60.8%로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 의료시설 부족이 심각한 비율은 인천, 울산, 세종 외에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지역(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31.7~66.4%로 높았음.

○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비율은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이 24.4~34.9%로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가 심각한 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과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20.9~26.5%로 높았음.

○ 주택·주거 환경 열악, 재개발문제가 심각한 비율은 서울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이 29.6~36.3%로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 빈부격차문제가 심각한 비율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이 32.7~41.7%로 높았음.

○ 차별문제가 심각한 비율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이

20.2~27.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심각한 비율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이 13.0~26.8%로 높았음.

〈표 2-35〉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단위: %, 명)

구분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주택·주거 환경 열악, 재개발 등	빈부 격차문제	차별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분석수)
전국	26.9	31.3	23.9	19.1	26.2	29.7	18.8	11.3	(20,456,588)
서울	22.0	21.0	27.6	22.1	29.6	36.7	21.9	13.0	(4,142,988)
부산	24.6	20.1	25.9	20.9	34.1	28.9	18.3	10.8	(1,373,131)
대구	25.3	18.2	28.2	26.4	36.3	37.1	27.6	15.2	(948,211)
인천	34.0	33.5	34.9	22.8	32.8	25.5	16.6	11.4	(1,116,930)
광주	27.2	19.9	31.7	26.5	32.0	36.3	25.2	17.1	(560,086)
대전	27.2	30.5	25.4	17.6	29.7	41.7	9.2	5.2	(584,877)
울산	19.9	35.6	32.1	24.8	24.2	28.4	23.5	15.4	(343,469)
세종	60.8	66.4	27.4	13.3	30.2	32.9	25.1	14.9	(49,850)
경기	29.6	35.7	23.3	20.9	26.0	28.5	18.3	26.8	(4,689,956)
강원	43.0	56.6	17.0	12.2	22.8	26.4	17.7	8.4	(652,293)
충북	26.4	44.9	24.4	17.4	20.7	28.1	20.2	9.3	(629,303)
충남	27.98	37.2	17.8	12.4	16.9	20.9	14.6	10.1	(848,067)
전북	29.5	37.6	21.1	16.5	23.5	32.7	26.7	17.2	(761,409)
전남	26.6	35.4	18.1	12.3	20.0	27.3	17.4	6.7	(807,942)
경북	33.4	42.7	18.1	11.9	19.6	24.6	16.0	8.8	(1,124,448)
경남	15.2	31.7	10.1	10.2	12.7	14.9	8.9	4.8	(1,264,658)
제주	24.6	28.8	20.0	16.7	18.2	24.3	17.2	10.2	(237,004)

- 전국가구의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 부족(2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중교통 등 접근 이용 상의 불편(23.0%), 이용자의 시간부족(21.3%), 프로그램 부족(9.8%), 이용시간대의 제한(4.7%), 시설불편 및 낙후(3.56%) 순으로 나타났다.

-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시간부족 등을 응답한 비율(10.5~24.8%)이 높았고, 여성가구주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상의 불편(27.2%)이 남성보다 많았음.

〈표 2-36〉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대중교통 접근 불편	시설불 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	행정 의불 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 그램 부족	이용 시간대 제한	낮은 서비스 질	복지사등 직원 불친절	비용 부담	시간 부족	기타	계(수)
전체	23.0	3.6	1.7	1.5	24.1	9.8	4.7	1.7	0.8	2.4	21.3	5.3	100.0(19,652,734)
가구주 성													
남성	21.7	3.7	1.5	1.5	24.8	10.5	4.8	1.8	0.7	2.0	22.2	4.7	100.0(14,976,045)
여성	27.2	3.2	2.3	1.5	21.8	7.8	4.2	1.4	0.9	3.9	18.5	7.2	100.0(4,676,689)
가구주 연령													
15~39세	18.6	3.9	2.0	1.6	27.9	12.5	5.6	2.1	0.7	1.6	19.7	3.8	100.0(2,530,853)
40~49세	17.7	4.0	1.9	1.8	26.2	12.0	6.5	2.0	0.9	1.8	22.3	3.1	100.0(4,704,088)
50~59세	19.5	3.7	2.0	1.5	22.8	9.7	5.1	1.8	0.9	1.9	26.5	4.6	100.0(6,394,614)
65세이상	32.8	3.0	1.1	1.4	22.2	7.1	2.4	1.4	0.7	3.9	15.7	8.4	100.0(5,937,496)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5	3.0	1.4	1.5	23.2	6.9	2.6	1.4	1.1	4.4	14.3	8.6	100.0(5,607,547)
100~200만원 미만	22.7	3.6	1.5	1.4	23.9	8.9	4.3	1.5	0.8	3.0	23.4	5.1	100.0(3,088,914)
200~300만원 미만	20.5	3.7	1.7	1.5	24.0	10.5	5.3	1.9	0.6	1.8	24.3	4.2	100.0(3,112,291)
300~400만원 미만	19.5	3.7	2.1	1.7	25.0	12.0	5.5	2.2	0.6	1.4	23.2	3.1	100.0(2,468,125)
400~500만원 미만	18.1	4.3	2.3	1.4	26.0	11.4	6.0	1.9	0.6	1.2	24.1	2.7	100.0(1,912,570)
500만원이상	17.2	4.1	1.6	1.8	24.0	12.2	6.4	2.0	0.6	0.9	25.3	3.9	100.0(3,671,219)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31.8	3.0	1.3	1.5	23.4	6.8	2.5	1.3	1.1	4.8	13.6	9.0	100.0(4,410,866)
50~100만원미만	25.5	3.4	1.5	1.4	23.5	8.3	4.0	1.6	0.9	3.3	20.4	6.2	100.0(3,131,312)
100~150만원미만	21.7	3.5	1.9	1.6	24.1	10.2	4.9	1.7	0.7	2.3	23.2	4.3	100.0(3,097,755)
150~200만원미만	19.9	4.0	1.9	1.4	24.9	11.6	5.5	2.0	0.6	1.3	23.5	3.4	100.0(2,670,222)
200~300만원미만	18.5	4.0	1.9	1.6	24.6	12.2	5.8	1.9	0.5	1.1	24.9	3.1	100.0(3,820,352)
300만원이상	16.7	4.0	1.8	1.9	24.3	11.1	6.4	2.1	0.7	1.0	26.0	4.1	100.0(2,732,105)

○ 15~39세 연령층은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부족(12.5~27.9%)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40~49세는 시설불편 및 낙후와 이용시간대 제한(4.0~6.5%)을, 50~64세 연령층은 시간부족(26.5%)을,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의 불편(32.8%)을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음.

○ 저소득층은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중간 이상 소득층은 시설불편 및 낙후,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부족과 이용시간대 제한을 많이 응답하였고, 이 외에 모든 소득층에서 시간부족을 응답하였음.

□ 시·도별로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으로는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의 불편은 경남(30.2%)이 가장 많았고, 환경의 불결은 대

구(10.7%)가, 정보제공 부족은 대전(81.4%)이, 프로그램 부족과 이용시간대 제한은 제주도(8.9~13.0%), 시간부족은 경남(26.6%)이 많았음.

- 미미하나 시설불편 및 낙후는 인천(5.9%)이 가장 많았고, 행정의 불편은 울산(6.8%), 낮은 서비스의 질은 인천(2.9%), 직원의 불친절은 광주(5.7%), 비용부담은 부산과 경기(3.1%)가 많았음.

〈표 2-37〉 사·도별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 불편	시설불 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	행정 의불 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 그램 부족	이용 시간대 제한	낮은 서비스 질	복지사 직원불 친절	비용 부담	시간 부족	기타	계(수)
전국	23.0	3.6	1.7	1.5	24.1	9.8	4.7	1.7	0.8	2.4	21.4	5.3	100.0(19,864,972)
서울	17.2	3.9	1.2	1.4	25.6	10.4	5.4	2.1	0.6	2.8	22.8	6.6	100.0(4,111,005)
부산	22.1	3.7	2.1	1.8	21.5	11.0	4.9	1.9	0.7	3.1	22.4	4.8	100.0(1,375,935)
대구	16.8	5.6	10.7	3.3	20.5	8.7	4.4	1.0	0.4	2.8	21.7	4.1	100.0(933,211)
인천	24.8	5.9	1.7	1.5	23.0	12.4	4.7	2.9	0.3	2.5	16.0	4.3	100.0(1,110,172)
광주	16.7	2.7	1.3	1.1	33.2	7.8	4.6	1.7	5.7	-	19.1	6.1	100.0(552,743)
대전	0.7	0.1	-	0.1	81.4	4.7	0.4	0.1	0.1	0.4	11.8	0.1	100.0(457,328)
울산	22.6	4.1	10.5	6.8	19.8	9.3	4.4	1.4	0.7	1.4	16.4	2.8	100.0(389,669)
세종	28.1	4.3	-	0.8	21.5	8.2	6.3	2.3	-	2.3	14.1	12.1	100.0(50,045)
경기	26.5	3.6	1.0	1.6	21.8	9.4	5.1	1.7	0.6	3.1	19.7	6.0	100.0(4,653,459)
강원	25.7	4.2	0.7	1.7	17.1	10.6	5.1	2.0	0.5	2.1	25.5	4.7	100.0(654,761)
충북	26.6	3.0	0.6	1.0	22.2	8.5	5.0	1.6	0.9	2.1	21.8	6.7	100.0(632,149)
충남	26.2	5.6	1.1	1.3	20.3	12.8	3.0	2.9	0.6	1.8	19.8	4.7	100.0(839,058)
전북	28.7	2.0	0.3	1.3	21.0	7.3	4.1	1.7	0.6	2.8	24.7	5.5	100.0(759,950)
전남	27.4	4.0	0.7	1.1	19.7	10.7	4.8	1.6	2.5	0.2	24.3	3.0	100.0(801,059)
경북	26.8	2.6	0.9	1.4	20.9	10.1	4.0	1.4	0.4	2.8	22.4	6.2	100.0(1,071,226)
경남	30.2	1.1	0.5	0.6	24.2	8.0	3.2	0.5	0.3	1.9	26.6	2.9	100.0(1,237,659)
제주	16.4	2.6	0.9	1.4	28.8	13.0	8.9	0.6	0.6	0.7	22.1	4.0	100.0(235,543)

-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의 불편은 인천, 세종과 제주도를 제외한 8대 도지역(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24.8~30.2%로 전국보다 높았음.
- 정보제공의 부족은 서울, 광주, 대전, 경남, 제주도가 24.2~81.4%로 지역 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도가 10.1~13.0%로 높았음.
- 이용자의 시간부족 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7대 도지역(강원도, 충북,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이 21.7~26.6%로 전국보다 높았음.

□ 전국 가구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28.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여성을 위한 서비스(16.9%),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16.2%)가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여성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음.

○ 15~39세 연령층은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40~49세 연령층은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를, 50~64세 이하는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65세 이상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음.

○ 저소득층 가구는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중간이상 소득층은 여성,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및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음.

〈표 2-38〉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여성을 위한 서비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기타	계(수)
전체	16.9	6.7	6.0	8.7	28.3	9.0	16.2	8.2	100.0(18,853,058)
가구주 성									
남성	17.4	7.9	6.7	9.5	25.7	9.2	15.1	8.5	100.0(14,284,318)
여성	15.4	2.9	3.6	5.8	36.9	8.3	19.7	7.2	100.0(4,370,722)
가구주 연령									
15~39세	18.8	26.3	14.6	5.5	9.0	5.9	11.2	8.7	100.0(2,400,974)
40~49세	19.9	7.4	11.5	21.0	12.4	7.5	12.9	7.3	100.0(4,489,054)
50~64세	23.6	3.1	2.5	7.2	24.1	11.2	19.0	9.3	100.0(5,995,926)
65세이상	6.7	1.8	1.6	1.9	53.4	9.0	18.0	7.5	100.0(5,691,829)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3	2.2	2.4	3.6	44.7	10.9	20.9	7.1	100.0(5,319,912)
100~200만원미만	16.0	4.5	4.8	7.3	28.8	10.3	19.5	8.8	100.0(2,928,096)
200~300만원미만	18.6	8.7	7.1	9.7	22.6	8.5	16.5	8.3	100.0(2,943,788)
300~400만원미만	20.2	11.3	9.0	11.0	19.9	7.5	12.8	8.4	100.0(2,349,851)
400~500만원미만	23.2	10.3	8.9	13.6	18.4	6.9	11.0	7.6	100.0(1,813,822)
500만원이상	24.1	9.0	8.0	12.7	18.5	7.4	10.9	9.4	100.0(3,496,033)
월 가구균등소득									
50만원미만	7.9	2.4	2.6	3.8	46.0	9.9	20.3	7.2	100.0(4,194,650)
50~100만원미만	13.1	4.3	5.1	7.6	30.1	11.6	20.7	7.6	100.0(2,965,696)

구분	여성을 위한 서비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기타	계(수)
100~150만원미만	17.8	7.8	6.8	9.5	24.3	8.9	16.8	8.0	100.0(2,933,735)
150~200만원미만	19.7	10.0	8.3	10.5	22.1	7.9	13.2	8.3	100.0(2,539,784)
200~300만원미만	23.0	9.4	7.8	12.0	19.6	7.2	12.3	8.7	100.0(3,625,071)
300만원이상	24.0	8.5	6.8	10.4	20.3	8.0	12.0	9.9	100.0(2,594,122)

□ 사·도별로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여성과 초등학생서비스는 울산(14.1~29.0%)이 가장 많았고, 취학 전 아동서비스는 서울(8.6%)이, 중·고생 서비스는 세종(11.4%), 어르신 서비스는 충남(40.5%), 장애인서비스는 전북(13.4%), 저소득층 서비스는 대전(40.1%)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였음.

○ 여성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도가 17.5~29.0%로 전국보다 높았음.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울산, 세종, 경기, 제주도가 7.2~8.6%로 높았음.

○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울산, 세종, 제주도가 6.6~14.1%로 전국보다 높았음.

○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8.2~11.4%로 높았음.

○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청도가 29.1~40.5%로 전국보다 높았음.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가 9.4~13.4%로 높았음.

○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필요비율은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이 16.5~40.1%로 전국보다 높았음.



〈표 2-39〉 시도별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여성을 위한 서비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기타	계(수)
전국	17.0	6.8	6.0	8.7	28.3	9.0	16.2	8.2	100.0(18,855,410)
서울	15.5	8.6	6.9	9.1	21.2	8.9	14.0	15.9	100.0(4,083,942)
부산	19.0	5.4	5.0	7.4	33.3	6.9	14.9	8.2	100.0(1,285,544)
대구	20.4	7.2	5.6	10.6	25.5	7.9	14.9	8.1	100.0(766,873)
인천	17.5	8.1	8.2	9.2	30.6	9.4	11.8	5.3	100.0(1,052,283)
광주	16.2	4.7	5.5	9.4	20.9	7.1	19.4	16.8	100.0(552,422)
대전	7.0	6.8	-	11.1	12.3	-	40.1	22.7	100.0(436,527)
울산	29.0	7.4	14.1	8.2	14.8	8.3	10.0	8.1	100.0(420,045)
세종	13.4	7.5	10.2	11.4	26.4	8.7	17.7	4.7	100.0(49,655)
경기	18.0	7.7	6.6	10.7	29.1	9.6	17.4	0.8	100.0(4,123,283)
강원	17.9	4.6	4.5	8.1	31.6	7.1	17.9	8.2	100.0(638,727)
충북	12.7	5.8	4.7	7.6	32.5	12.6	16.5	7.6	100.0(595,694)
충남	14.7	4.8	4.2	5.3	40.5	8.4	15.0	7.0	100.0(808,453)
전북	13.9	5.4	4.3	6.1	32.9	13.4	15.0	9.0	100.0(735,323)
전남	19.0	5.4	5.5	8.1	35.8	7.5	11.8	6.8	100.0(779,039)
경북	19.7	5.1	5.0	8.7	35.1	7.9	12.65	5.8	100.0(1,104,040)
경남	14.1	4.1	4.1	4.2	31.6	12.1	25.0	4.8	100.0(1,195,031)
제주	18.3	7.7	7.7	8.6	28.4	11.4	12.0	6.0	100.0(228,529)

### 제3절 복지욕구조사 개인 분석

#### 1. 여성이 있는 가구

□ 여성이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 부족’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이 24.2%로 나타났다.

○ 가구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정보제공 부족’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파악됨. 한편, 가구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과 ‘비용부담’에 대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불편한 점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비용부담에 있어서 수급가구(3.1%)가 비수급가구(1.6%)보다 약간 높았음.

〈표 2-40〉 여성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 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 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체	16.9	3.1	1.2	1.5	28.0	12.0	6.0	1.7	0.8	1.8	24.2	3.0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4	2.6	1.2	1.2	28.7	8.6	4.3	1.3	1.3	3.3	21.5	5.5	100.0
100~200만원미만	18.1	2.9	1.0	1.6	27.9	9.6	5.3	1.3	1.0	2.6	24.7	4.1	100.0
200~300만원미만	17.3	3.5	1.3	1.5	27.5	12.0	5.8	1.5	0.7	2.1	24.2	2.6	100.0
300~400만원미만	16.6	3.0	1.3	1.9	27.3	13.9	6.5	1.9	0.6	1.2	23.8	2.1	100.0
400~500만원미만	16.5	3.1	1.5	1.3	27.9	13.3	7.0	1.8	0.7	1.2	23.9	2.0	100.0
500만원이상	14.5	3.4	1.0	1.2	28.4	13.1	6.8	1.9	0.6	0.9	25.6	2.7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17.1	3.1	1.2	1.3	28.3	11.4	5.4	1.4	1.2	3.1	21.7	4.8	100.0
비수급	16.9	3.1	1.2	1.5	27.9	12.0	6.1	1.7	0.7	1.6	24.5	2.8	100.0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도는 지역에 위치한 여성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이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6개 사·도를 제외한 타 사·도는 모두 ‘정보제공 부족’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는 타 사·도와 비교하여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21.9%)’이 높았고, 광주는 ‘정보제공 부족’의 비율이, 울산과 경남은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에 대한 비율이 타 사·도보다 다소 높았음.

〈표 2-41〉 사·도별 여성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 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 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국	16.9	3.1	1.2	1.5	28.0	12.0	6.0	1.7	0.8	1.8	24.2	3.0	100.0
서울	13.6	3.4	1.0	1.1	31.3	11.2	5.2	1.7	0.6	2.1	25.7	3.2	100.0
부산	14.5	2.7	1.4	1.7	27.8	12.6	5.2	1.7	0.5	2.1	25.6	4.1	100.0
대구	18.1	2.6	1.6	3.3	28.3	8.7	7.5	1.2	0.3	2.3	22.3	3.7	100.0
인천	17.6	3.9	1.7	2.6	28.7	12.9	7.5	2.2	0.2	1.0	19.3	2.6	100.0
광주	12.3	2.4	1.4	0.8	37.7	9.8	5.1	1.2	3.5	0.0	22.0	3.9	100.0
대전	-	-	-	-	-	-	-	-	-	-	-	-	-
울산	26.2	5.3	0.6	1.0	28.0	10.1	4.0	0.9	0.6	1.5	18.7	3.1	100.0
세종	21.7	3.3	0.0	0.7	28.3	11.2	5.9	0.7	0.7	2.0	17.1	8.6	100.0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 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경기	18.9	3.4	0.8	1.2	27.4	21.9	9.1	2.9	0.6	4.4	9.1	0.3	100.0
강원	19.6	4.0	0.4	1.5	20.3	13.1	7.6	1.1	0.3	1.7	27.8	2.5	100.0
충북	16.4	3.1	0.7	1.2	24.2	10.7	8.6	0.8	0.7	1.7	29.0	2.8	100.0
충남	18.9	4.5	1.0	1.1	24.5	12.8	4.2	1.3	0.4	1.5	27.3	2.5	100.0
전북	17.5	2.7	1.9	0.7	23.9	7.9	5.3	3.0	3.2	2.0	28.4	3.4	100.0
전남	17.6	2.6	0.8	1.4	22.5	12.7	6.3	1.1	2.7	0.3	29.6	2.5	100.0
경북	18.7	2.1	1.1	1.6	23.1	12.2	6.0	1.6	0.3	1.4	27.5	4.4	100.0
경남	24.1	1.8	1.6	1.7	26.0	10.5	5.3	1.5	0.1	0.8	24.7	1.8	100.0
제주	12.3	1.4	0.9	0.6	33.3	11.6	9.6	1.0	0.4	0.6	23.7	4.7	100.0

□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가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25.9%, ‘건강(체육) 및 의료서비스’ 21.1%의 순위로 나타났음.

○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30.3%,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26.4%의 순으로 많았으나, 남성 가구주의 경우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이 33.1%로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는 25.0%로 2순위를 나타냄.

○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서비스’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음.

○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건강(체육)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31.7%로 가장 많았음.

○ 가구의 소득에 따라 여성관련 필요 서비스의 욕구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만원미만의 가구는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소득수준에서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2-42〉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건강(체육) 및 의료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	기타	계
전체	25.9	32.0	21.1	5.8	6.3	4.2	2.6	2.1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30.8	26.4	21.0	5.6	5.0	4.9	3.3	2.8	100.0
비가구주	25.0	33.1	21.1	5.9	6.6	4.0	2.4	2.0	100.0
가구주 성									
남성	25.0	33.3	21.0	5.9	6.6	3.9	2.4	1.9	100.0
여성	30.3	26.2	21.6	5.6	5.1	5.1	3.2	2.9	100.0
가구주 연령									
15~29세	25.3	35.7	14.2	7.8	4.5	6.3	3.5	2.7	100.0
30~39세	25.7	34.8	14.0	6.4	10.4	4.2	2.4	2.0	100.0
40~49세	29.6	33.0	16.0	6.3	6.6	4.2	2.6	1.6	100.0
50~59세	25.2	31.7	23.8	5.4	5.0	4.0	2.8	2.1	100.0
60세 이상	21.3	28.0	31.7	5.0	4.8	4.1	2.2	2.9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3	23.7	28.4	4.0	4.1	4.1	2.2	3.1	100.0
100~200만원미만	30.4	26.5	23.2	4.9	5.3	4.7	2.7	2.3	100.0
200~300만원미만	26.8	30.2	20.5	6.7	6.7	4.4	2.6	2.0	100.0
300~400만원미만	26.8	32.2	19.2	6.2	7.3	4.1	2.6	1.5	100.0
400~500만원미만	23.9	35.9	18.2	6.3	7.6	4.0	2.3	1.7	100.0
500만원이상	20.8	38.9	19.1	6.1	6.5	3.7	2.8	2.1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29.0	24.9	26.7	4.6	4.9	5.0	2.8	2.1	100.0
비수급	25.6	32.8	20.4	6.0	6.5	4.1	2.5	2.1	100.0

□ 시도별로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대전은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의 욕구가 51.9%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제주(47.1%)와 세종(42.5%)은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았음.

○ 여성과 관련된 지역의 필요 서비스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4개 지역은 ‘문화, 여가활동 관련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높았고, 대전은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경기도는 ‘자원봉사연계 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강하였음.

〈표 2-43〉 시도별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건강(체육) 및 의료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센터	기타	계
전국	25.9	32.0	21.1	5.8	6.3	4.2	2.6	2.1	100.0
서울	26.9	31.5	24.2	5.4	3.7	3.4	2.4	2.4	100.0
부산	25.2	32.9	23.7	5.6	3.6	4.0	2.5	2.5	100.0
대구	26.5	31.8	20.5	6.1	4.8	4.4	3.7	2.2	100.0
인천	26.6	35.0	19.4	4.2	5.3	3.3	2.1	4.1	100.0
광주	31.3	32.2	20.8	5.1	3.6	3.2	2.6	1.3	100.0
대전	51.9	27.1	12.2	2.2	1.3	0.6	2.1	2.7	100.0
울산	26.9	31.2	15.9	6.0	6.1	3.9	6.4	3.6	100.0
세종	22.2	42.5	18.3	5.2	4.6	3.3	3.3	0.7	100.0
경기 <sup>1)</sup>	23.9	12.3	2.9	9.9	39.4	11.3	0.1	0.3	100.0
강원	23.7	36.2	26.0	4.6	2.5	2.3	3.0	1.8	100.0
충북	20.9	38.1	23.0	4.9	4.1	4.5	3.3	1.1	100.0
충남	19.5	41.0	23.1	4.5	5.5	2.4	2.3	1.7	100.0
전북	22.3	32.6	26.7	4.1	4.1	3.8	4.6	1.7	100.0
전남	26.1	33.5	23.0	5.1	4.0	3.4	3.4	1.4	100.0
경북	21.7	39.3	23.3	5.2	3.2	2.8	2.5	1.9	100.0
경남	22.2	30.9	23.1	10.9	2.4	6.9	2.2	1.3	100.0
제주	15.6	47.1	18.7	5.7	3.9	3.6	3.1	2.3	100.0

주: 1) 경기도는 여성이 있는 가구(3,395,714가구)중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응답한 비율이 22.8%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음.

## 2.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위치한 미취학 아동 대상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0%를 차지한 ‘정보제공 부족’이었음.

○ 가구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 소득계층에서 ‘정보제공 부족’이 1순 위였으나, 2순위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을, 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2순위로 꼽았음.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인 경우,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에 대한 비율이 비수급 가구에 비해 높았음.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미취학 아동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가장 불편한 점을 ‘정보제공 부족’ 22.9%,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21.8%,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13.8% 등으로 꼽았음.

〈표 2-44〉 미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체	18.0	5.1	1.0	1.6	28.0	18.2	7.4	3.2	1.2	3.6	8.7	3.9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8.8	5.3	0.2	0.9	31.0	11.9	6.8	0.8	2.3	4.5	9.5	8.1	100.0
100~200만원미만	23.0	2.9	1.2	1.7	27.3	14.8	6.4	2.3	2.2	7.2	6.8	4.2	100.0
200~300만원미만	18.3	4.7	1.2	2.2	29.6	18.0	6.4	3.3	0.8	3.8	8.1	3.7	100.0
300~400만원미만	17.9	6.3	0.8	1.7	28.6	20.1	6.4	3.2	0.9	2.8	8.4	2.9	100.0
400~500만원미만	16.5	5.2	1.3	1.5	26.3	20.5	8.4	3.3	1.0	3.3	9.3	3.4	100.0
500만원이상	16.2	5.2	1.1	1.3	26.6	18.9	9.4	4.0	1.0	2.4	9.9	4.0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21.8	4.5	1.1	1.4	22.9	13.8	8.2	3.0	3.5	5.0	8.1	6.7	100.0
비수급	17.6	5.1	1.0	1.6	28.4	18.6	7.4	3.2	1.0	3.5	8.8	3.7	100.0

- 사·도별로 지역에 있는 취학 전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타 사·도는 ‘정보제공 부족’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가장 많았음.

- 서울은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과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이 2순위로 동일한 비율(17.1%)을 차지하였음.

- 미취학 아동 대상의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보면, 충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은 경기도, 그리고 세종, 강원, 전북에서도 20%이상의 비율을 보였음.

〈표 2-45〉 시도별 미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 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국	18.0	5.1	1.0	1.6	28.0	18.2	7.4	3.2	1.2	3.6	8.7	3.9	100.0
서울	17.1	5.9	0.7	2.2	28.5	17.1	6.8	3.7	0.9	4.0	8.5	4.7	100.0
부산	14.2	6.7	2.0	2.0	27.8	18.0	6.2	3.5	0.5	3.2	8.8	7.0	100.0
대구	16.1	5.2	1.6	1.0	35.7	9.8	6.2	3.3	0.3	6.2	10.8	3.6	100.0
인천	18.0	7.2	0.6	1.2	25.3	21.4	7.4	2.6	0.0	7.2	6.4	2.6	100.0
광주	12.5	1.3	2.0	0.7	30.9	16.4	8.6	4.6	13.8	0.0	5.3	3.9	100.0
대전	-	-	-	-	-	-	-	-	-	-	-	-	-
울산	13.6	3.1	1.2	1.2	37.7	13.0	5.6	0.6	1.2	3.1	11.7	8.0	100.0
세종	21.6	2.7	2.7	0.0	27.0	18.9	5.4	2.7	0.0	2.7	5.4	10.8	100.0
경기	28.2	2.9	0.3	0.9	25.1	22.2	11.5	1.4	0.6	0.3	6.6	0.0	100.0
강원	20.5	6.0	0.4	1.8	23.8	20.7	6.7	3.6	0.7	3.5	7.5	4.7	100.0
충북	15.1	3.0	0.7	1.5	26.9	18.4	7.0	4.1	1.5	4.4	12.9	4.4	100.0
충남	16.7	5.9	1.5	0.8	26.7	24.4	5.1	3.6	0.5	4.4	5.4	4.9	100.0
전북	20.2	5.0	1.5	0.6	27.5	13.7	8.8	3.5	0.6	1.5	11.7	5.6	100.0
전남	18.8	4.0	1.6	1.3	26.6	20.6	6.5	3.4	4.3	0.9	8.7	3.6	100.0
경북	17.5	3.7	1.5	2.7	26.6	17.8	8.4	1.9	0.4	4.8	11.1	3.4	100.0
경남	18.5	4.5	1.5	2.1	29.1	20.0	5.5	2.8	0.0	2.3	11.9	1.9	100.0
제주	11.2	4.1	1.0	0.0	26.5	19.4	17.3	4.1	0.0	4.1	10.2	2.0	100.0

□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전체의 36.5%를 차지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었으며, 그 다음은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이 22.1%로 나타났다.

○ 취학 전 자녀양육관련 지역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의 비율이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보다 약 7.2%p 더 높았음.

○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필요서비스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의 필요성 비율은 증가하였음.

○ 가구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 욕구가 3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계층에서 10%이상의 비율을 나타냄.

〈표 2-46〉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	휴일보육(휴 가, 경조사 등과 관련)	장애아 전담 보육	영유아 전용 도서관 확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문화공간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	기타	계
전체	22.1	11.9	3.4	13.4	36.5	9.2	3.5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	-	-	-	-	-	-	-
비가구주	22.1	11.9	3.4	13.4	36.5	9.2	3.5	100.0
가구주 성								
남성	21.5	11.9	3.5	13.6	36.9	9.1	3.4	100.0
여성	28.7	12.2	2.2	10.7	31.7	10.0	4.5	100.0
가구주 연령								
15~29세	16.5	17.1	1.0	12.3	37.8	11.3	4.0	100.0
30~39세	21.1	12.6	3.1	14.4	37.7	8.0	3.0	100.0
40~49세	22.1	10.1	4.6	12.9	36.0	10.3	4.1	100.0
50~59세	28.4	10.2	3.6	10.2	28.7	13.8	5.2	100.0
60세이상	29.8	13.0	1.3	9.3	33.4	9.6	3.6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3.7	9.9	1.8	14.8	34.6	10.9	4.3	100.0
100~200만원미만	25.7	10.8	2.7	9.3	34.6	12.4	4.6	100.0
200~300만원미만	23.7	12.8	2.4	11.8	35.5	10.4	3.5	100.0
300~400만원미만	20.9	11.8	4.0	12.7	35.4	10.7	4.5	100.0
400~500만원미만	20.5	11.6	3.6	15.9	38.9	7.2	2.3	100.0
500만원이상	20.7	12.8	4.6	15.0	38.3	5.9	2.7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25.1	12.8	4.3	10.4	32.5	11.9	3.1	100.0
비수급	21.9	11.9	3.4	13.6	36.8	9.0	3.5	100.0

□ 사·도별로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대전, 경기 2개 사·도를 제외한 타 사·도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음.

○ 대전은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의 비율(59.5%)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의 욕구(24.2%)가 가장 높았음.

○ ‘장애아 전담 보육’의 필요성에 있어서 경기도는 21.3%의 비율로 타 사·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표 2-47〉 시도별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	휴일보육(휴가, 경조사 등과 관련)	장애아 전담 보육	영유아 전용 도서관 확대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	기타	계
전국	22.1	11.9	3.4	13.4	36.5	9.2	3.5	100.0
서울	17.9	9.2	1.4	16.6	43.7	8.2	2.9	100.0
부산	20.1	12.1	2.8	13.8	38.7	9.8	2.8	100.0
대구	21.2	8.3	2.2	12.6	45.3	7.6	2.9	100.0
인천	19.4	11.6	1.4	18.6	41.4	6.2	1.4	100.0
광주	18.5	19.9	3.3	13.9	35.1	6.6	2.6	100.0
대전	59.5	17.0	2.0	13.0	6.5	2.0	0.0	100.0
울산	24.2	16.9	3.9	9.0	36.5	5.6	3.9	100.0
세종	32.0	4.0	4.0	8.0	52.0	0.0	0.0	100.0
경기 <sup>1)</sup>	20.2	13.8	21.3	5.6	6.4	24.2	8.5	100.0
강원	20.7	10.5	1.1	9.8	49.4	7.1	1.5	100.0
충북	18.2	6.9	0.4	8.1	42.1	6.1	18.2	100.0
충남	24.4	14.8	1.5	13.0	37.1	6.6	2.5	100.0
전북	21.5	13.9	1.2	7.3	44.1	8.5	3.6	100.0
전남	23.3	11.1	1.4	8.2	44.2	9.9	1.8	100.0
경북	28.6	13.1	0.9	12.8	33.6	7.9	3.2	100.0
경남	19.5	15.0	2.5	17.1	30.2	12.3	3.4	100.0
제주	33.7	18.4	0.0	6.1	37.8	3.1	1.0	100.0

주: 1) 경기도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3,395,714가구)중 본 조사항목을 응답한 비율이 29.8%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음.

### 3.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위치한 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보제공 부족’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20.5%,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20.1%의 순으로 파악되었음.

○ ‘비용 부담’에 대한 불편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약 2.4%포인트 더 높았음.

〈표 2-48〉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기관 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체	20.5	4.0	0.8	1.1	26.5	20.1	8.4	2.8	0.8	2.4	10.0	2.5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3.4	3.0	0.7	1.0	25.6	16.3	7.6	2.6	2.2	4.8	8.5	4.6	100.0
100~200만원미만	21.1	3.7	0.6	0.9	27.4	18.3	6.6	2.4	0.7	5.2	8.4	4.7	100.0
200~300만원미만	19.8	3.9	0.8	1.3	28.2	20.8	8.2	3.1	0.9	2.6	8.0	2.4	100.0
300~400만원미만	21.8	4.6	1.3	1.1	24.1	21.9	8.2	2.6	0.7	2.0	10.8	1.1	100.0
400~500만원미만	19.3	3.5	0.7	1.2	28.1	20.9	8.1	3.2	0.6	1.3	10.9	2.4	100.0
500만원이상	19.4	4.7	0.9	1.2	26.0	20.3	9.9	2.9	0.5	0.8	11.7	1.8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21.9	3.5	1.1	1.4	25.6	19.7	6.9	2.0	1.6	4.5	7.3	4.4	100.0
비수급	20.3	4.1	0.8	1.1	26.6	20.2	8.5	2.9	0.7	2.1	10.3	2.3	100.0

□ 사·도별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기관 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은 인천, 세종, 충북, 전북 4개 사·도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사·도는 ‘정보제공 부족’의 불편한 점이 가장 많았음.

○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은 세종이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 부족’은 경남,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은 경남, ‘이용시간대의 제한’은 강원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은 경기도가 가장 높았음.

〈표 2-49〉 사·도별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기관 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국	20.5	4.0	0.8	1.1	26.5	20.1	8.4	2.8	0.8	2.4	10.0	2.5	100.0
서울	21.6	4.0	0.8	1.4	28.3	17.2	9.7	2.6	0.6	3.0	8.7	2.2	100.0
부산	19.9	3.5	0.6	0.7	32.0	19.5	5.5	2.4	0.9	3.3	8.8	2.8	100.0
대구	19.4	2.2	0.9	1.1	27.4	17.9	9.7	2.8	0.4	3.7	10.3	4.3	100.0
인천	23.9	8.1	0.8	0.6	19.1	22.5	10.1	4.0	0.5	2.0	7.0	1.5	100.0
광주	15.7	5.2	2.2	1.5	29.6	22.5	4.1	3.4	4.9	0.0	8.6	2.2	100.0
대전	-	-	-	-	-	-	-	-	-	-	-	-	-
울산	17.3	6.1	0.4	1.8	28.1	23.0	7.9	1.4	0.0	2.2	8.3	3.6	100.0
세종	31.2	0.0	0.0	1.6	19.7	24.6	8.2	1.6	0.0	0.0	4.9	8.2	100.0
경기	18.2	2.9	0.7	0.7	25.3	20.6	9.0	1.9	0.5	2.9	16.6	0.5	100.0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시간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강원	21.6	3.4	0.7	1.8	23.2	21.6	10.2	3.8	0.4	1.8	7.9	3.6	100.0
충북	24.5	4.6	0.5	1.2	19.9	23.7	4.8	2.4	0.2	5.5	9.6	3.1	100.0
충남	19.9	4.7	0.9	2.1	25.3	24.4	5.6	4.5	1.3	0.7	7.3	3.2	100.0
전북	23.5	3.9	1.0	0.7	22.5	16.4	8.8	3.9	0.2	1.7	12.0	5.1	100.0
전남	22.5	3.4	1.6	0.7	23.9	21.4	8.4	2.5	2.5	0.4	9.8	3.0	100.0
경북	21.8	2.7	0.9	1.2	27.0	20.0	6.5	2.6	0.4	1.9	11.3	3.6	100.0
경남	14.8	1.8	1.1	1.1	32.8	26.0	5.4	2.8	0.6	1.8	11.4	0.4	100.0
제주	13.5	5.4	0.0	0.5	30.8	17.3	12.4	3.2	0.5	0.5	11.9	3.8	100.0

□ 초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방과 후 학습지도’가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체험학습활동’ 22.2%로 나타났음.

○ 초등학생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는 ‘방과 후 학습지도’ 42.9%,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26.4%,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19.7%의 순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가구는 ‘방과 후 학습지도’ 22.9%, ‘체험학습 활동’ 22.2%, ‘취미·특기교실’ 20.1% 순으로 나타났음.

○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는 ‘방과 후 학습지도’ 29.3%, ‘자녀 교육비 지원’ 23.5% 순이었으나,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는 ‘체험학습활동’ 23.2%, ‘방과 후 학습지도’ 22.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월 가구소득이 낮으면 ‘방과 후 학습지도’나 ‘자녀교육비지원’ 등의 욕구가 높았고, 반면에 소득이 높으면 ‘취미·특기교실’이나 ‘체험학습 활동’ 등의 욕구가 높았음.

〈표 2-50〉 취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방과 후 학습지도	취미·특기교실	체험학습 활동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기타	계
전체	22.9	20.1	22.2	8.0	3.5	16.7	5.5	1.1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42.9	0.0	11.0	19.7	0.0	0.0	26.4	0.0	100.0
비가구주	22.9	20.1	22.2	8.0	3.5	16.8	5.4	1.1	100.0
가구주 성									
남성	22.0	20.8	23.2	8.1	3.6	15.7	5.3	1.2	100.0
여성	29.3	14.9	15.2	7.4	2.5	23.5	6.3	0.8	100.0

구분	방과 후 학습지도	취미·특 기교실	체험학습 활동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 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기타	계
가구주 연령									
15~29세	32.0	20.5	20.3	0.9	1.8	14.1	4.0	6.4	100.0
30~39세	22.9	19.7	24.1	6.6	3.2	16.5	5.9	1.0	100.0
40~49세	21.3	21.0	22.6	8.9	3.8	16.4	4.9	1.1	100.0
50~59세	25.1	19.0	18.2	8.2	2.6	18.9	6.9	1.0	100.0
60세이상	36.3	14.1	15.0	5.1	2.7	18.1	7.7	0.9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5	13.1	17.8	5.4	3.2	22.1	4.7	2.2	100.0
100~200만원미만	29.7	15.8	15.7	4.3	2.1	25.5	5.8	1.1	100.0
200~300만원미만	24.5	19.3	19.7	7.8	3.5	19.3	5.0	0.9	100.0
300~400만원미만	22.7	19.7	22.3	9.4	4.0	14.5	6.5	0.9	100.0
400~500만원미만	18.7	21.9	27.5	10.1	3.6	12.9	4.9	0.5	100.0
500만원이상	17.9	24.5	25.5	8.8	3.9	12.4	5.6	1.4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28.4	15.8	16.8	6.4	2.5	22.5	5.9	1.8	100.0
비수급	22.3	20.6	22.8	8.2	3.6	16.1	5.4	1.0	100.0

□ 사·도별로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제주 등 6개 시·도는 ‘체험학습활동’에서, 대구는 ‘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는 ‘방과 후 학습지도’에서, 세종, 경기 2개 시·도는 ‘취미특기교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특히, 경기도는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2-51〉 사·도별 취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방과 후 학습지도	취미·특 기교실	체험학 습활동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기타	계
전국	22.9	20.1	22.2	8.0	3.5	16.7	5.5	1.1	100.0
서울	19.3	21.6	25.2	6.4	3.6	16.4	6.5	1.1	100.0
부산	20.4	17.1	27.6	3.9	3.9	21.9	3.7	1.7	100.0
대구	25.0	16.3	19.5	4.8	3.9	26.1	4.1	0.2	100.0
인천	22.0	18.8	27.5	6.9	2.4	16.3	5.2	0.9	100.0
광주	26.7	19.6	19.6	7.4	2.6	17.8	5.2	1.1	100.0
대전	47.3	24.2	16.7	4.2	1.5	3.8	2.3	0.0	100.0
울산	15.8	11.8	30.3	6.9	6.9	18.4	4.6	5.3	100.0

구분	방과 후 학습지도	취미·특기교실	체험학습활동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기타	계
세종	17.8	28.9	20.0	4.4	6.7	22.2	0.0	0.0	100.0
경기	25.9	29.4	11.1	21.6	3.5	7.9	0.2	0.3	100.0
강원	19.0	19.1	26.0	5.1	3.8	20.0	6.0	1.1	100.0
충북	23.1	13.6	19.3	5.2	7.1	20.7	8.6	2.4	100.0
충남	25.8	19.9	19.7	6.4	3.2	17.2	7.1	0.7	100.0
전북	27.9	15.9	16.2	6.6	2.9	20.3	7.6	2.5	100.0
전남	26.1	17.1	19.4	8.0	4.0	16.2	8.1	1.2	100.0
경북	22.6	16.8	22.4	6.4	3.3	20.1	7.8	0.6	100.0
경남	17.5	17.1	22.7	10.0	2.8	19.9	8.7	1.3	100.0
제주	18.4	22.7	29.7	5.9	1.1	16.2	5.4	0.5	100.0

#### 4.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있는 가구

□ 지역의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24.7%를 차지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나타났다.

○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보제공 부족’이나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이나 ‘이용시간대의 제한’,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표 2-52〉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시간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체	18.8	3.5	0.8	1.0	24.7	17.2	10.2	2.0	0.7	1.9	17.3	1.9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3	2.8	0.9	1.2	26.5	12.2	7.7	2.1	1.9	4.8	15.9	3.6	100.0
100~200만원미만	20.3	3.1	0.6	0.9	26.3	15.9	8.9	2.3	0.4	3.6	15.8	2.0	100.0
200~300만원미만	18.6	3.7	1.4	0.8	24.0	17.1	10.2	2.4	0.8	2.4	16.7	1.8	100.0
300~400만원미만	19.4	3.9	1.1	1.2	25.6	16.6	10.1	2.0	0.5	0.8	17.1	1.8	100.0
400~500만원미만	17.7	3.5	0.9	0.9	24.6	19.6	10.6	2.1	0.6	1.2	17.2	1.2	100.0
500만원이상	17.8	3.5	0.5	0.9	23.4	18.8	11.7	1.4	0.4	0.6	19.2	1.8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18.2	2.8	1.2	0.8	28.7	13.2	9.2	2.7	1.7	4.7	14.0	2.8	100.0
비수급	18.9	3.6	0.8	1.0	24.2	17.8	10.4	1.9	0.5	1.5	17.8	1.8	10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는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관련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정보제공 부족’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인천, 전남, 경북 등 3개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에서, 세종, 충북 등 2개 지역은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에서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광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표 2-53〉 시·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시설 불편, 낙후됨	환경의 불결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이용 시간 대의 제한	낮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계
전국	18.8	3.5	0.8	1.0	24.7	17.2	10.2	2.0	0.7	1.9	17.3	1.9	100.0
서울	15.0	3.8	0.8	0.8	25.0	15.1	13.8	2.3	0.5	2.0	19.3	1.7	100.0
부산	14.6	5.0	1.2	0.8	28.5	16.8	7.8	2.5	0.4	2.3	18.3	1.8	100.0
대구	16.5	1.6	0.2	0.8	28.6	12.6	11.0	1.9	0.0	2.1	20.6	4.0	100.0
인천	21.9	7.2	2.0	1.1	20.2	15.2	9.1	3.3	0.0	2.7	15.3	2.0	100.0
광주	13.7	2.5	1.0	0.7	30.9	14.7	11.5	2.0	4.7	0.0	16.0	2.2	100.0
대전	-	-	-	-	-	-	-	-	-	-	-	-	-
울산	16.0	2.7	0.3	0.9	31.1	15.4	7.7	0.9	0.6	1.2	21.3	2.1	100.0
세종	20.0	0.0	0.0	0.0	13.3	30.0	3.3	0.0	0.0	0.0	20.0	13.3	100.0
경기	21.7	3.0	0.6	1.0	23.6	18.5	9.4	1.7	0.5	2.6	16.9	0.5	100.0
강원	20.8	3.4	1.0	0.9	21.7	19.4	11.8	2.1	0.7	1.3	14.4	2.6	100.0
충북	20.0	6.5	1.1	2.5	18.5	24.4	10.1	1.9	0.6	0.0	12.2	2.3	100.0
충남	21.2	3.3	0.8	0.8	22.8	20.5	9.1	1.3	0.5	0.5	15.6	3.5	100.0
전북	21.1	3.1	0.7	0.7	27.0	14.0	11.1	1.6	0.4	2.7	14.9	2.6	100.0
전남	22.1	3.0	0.8	0.6	21.8	18.3	9.1	1.8	1.8	0.2	16.7	3.8	100.0
경북	23.4	2.5	1.2	1.2	21.7	17.4	8.8	1.6	0.5	1.2	16.2	4.2	100.0
경남	15.6	2.5	1.5	1.2	26.7	20.4	8.0	2.1	0.0	1.8	18.7	1.5	100.0
제주	15.1	3.0	0.0	0.4	31.5	22.4	7.3	0.9	0.9	0.9	15.5	2.2	100.0

□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진로 상담’이 2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26.9%이었음.

○ 청소년이 가구주인 가구에서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이 40.2%, ‘진로 상담’ 29.4%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이 33.5%로 가장 많은 반면에,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진로상담’이 29.1%로 가장 많았음.
- 가구주의 연령계층별로 필요 서비스를 보면, 60세 이상인 가구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29세미만의 가구에서는 ‘진로상담’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진로상담’과 ‘문화취미활동’의 비율이 높아졌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과 ‘아르바이트 연계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졌음.

〈표 2-54〉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진로 상담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	문화· 취미활동	문제행동(음주, 흡연, 비행 등) 개선프로그램	자원봉 사활동	아르바이 트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계
전체	26.9	28.6	11.9	19.8	4.5	4.9	2.0	1.3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40.2	29.4	13.4	5.8	0.0	2.7	5.2	3.3	100.0
비가구주	26.9	28.6	11.9	19.8	4.5	4.9	2.0	1.3	100.0
가구주 성									
남성	25.7	29.1	12.0	20.6	4.4	5.1	1.9	1.3	100.0
여성	33.5	26.1	11.5	15.2	5.2	4.1	2.8	1.7	100.0
가구주 연령									
15~29세	33.3	32.3	18.7	4.4	0.8	2.0	4.7	3.7	100.0
30~39세	34.7	24.1	12.4	18.5	3.5	3.6	2.1	1.2	100.0
40~49세	25.3	28.7	12.1	21.0	4.3	5.4	1.7	1.4	100.0
50~59세	27.0	29.1	11.9	18.7	5.2	4.6	2.4	1.1	100.0
60세이상	38.9	27.6	9.0	12.9	4.2	2.8	3.8	0.8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0.1	25.4	9.4	13.9	2.9	3.0	3.6	1.8	100.0
100~200만원미만	34.4	25.9	11.0	15.3	4.8	4.1	3.0	1.5	100.0
200~300만원미만	30.8	26.8	12.4	17.5	5.6	3.8	2.2	1.0	100.0
300~400만원미만	25.6	28.1	12.1	20.8	4.3	5.9	1.7	1.4	100.0
400~500만원미만	21.0	31.3	13.5	22.2	4.6	4.8	1.2	1.3	100.0
500만원이상	19.6	31.2	12.1	23.8	4.3	6.2	1.5	1.2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36.4	24.2	12.0	14.1	3.9	4.0	3.5	1.9	100.0
비수급	25.6	29.2	11.9	20.6	4.6	5.1	1.8	1.2	100.0

□ 사·도별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9개 사·도는 '진로상담'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북 등 7개 사·도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을, 충남은 '문화·취미활동'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음.

○ 특히,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에 있어서 대전(60.6%)과 세종(46.7%)은 타 사·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을 위한 '문제행동(음주, 흡연, 비행 등) 개선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경남(11.4%)과 세종(10.0%)이 타 사·도보다 높았음.

〈표 2-55〉 사·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진로 상담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	문화· 취미활동	문제행동(음주, 흡연,비행 등) 개선프로그램	자원봉 사활동	아르바이트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계
전국	26.9	28.6	11.9	19.8	4.5	4.9	2.0	1.3	100.0
서울	24.9	30.2	11.5	19.3	4.7	4.6	3.3	1.5	100.0
부산	28.1	26.8	13.5	17.5	3.7	5.5	2.6	2.2	100.0
대구	34.6	24.5	12.1	16.5	6.0	4.1	2.1	0.0	100.0
인천	23.6	30.6	12.0	19.1	3.6	4.2	2.8	4.1	100.0
광주	23.6	30.7	12.2	20.8	3.8	4.3	2.3	2.3	100.0
대전	60.6	32.4	3.2	2.6	0.3	0.6	0.0	0.3	100.0
울산	16.4	28.8	15.3	20.7	5.4	9.7	2.4	1.3	100.0
세종	46.7	20.0	6.7	13.3	10.0	0.0	0.0	3.3	100.0
경기	24.8	29.6	12.3	21.9	4.0	6.6	0.3	0.5	100.0
강원	22.5	30.6	10.8	23.7	3.9	5.2	2.0	1.3	100.0
충북	28.4	21.9	10.8	24.0	6.4	4.0	2.1	2.3	100.0
충남	25.5	23.8	10.9	27.8	4.1	4.9	2.1	0.8	100.0
전북	29.7	26.8	12.9	17.5	4.6	3.5	3.3	1.8	100.0
전남	29.2	30.1	11.0	19.1	3.7	3.1	2.1	1.7	100.0
경북	31.0	27.0	11.6	20.6	2.6	3.9	1.7	1.6	100.0
경남	18.2	27.6	15.1	17.5	11.4	4.0	5.5	0.7	100.0
제주	24.1	20.3	14.7	27.2	6.0	4.7	2.2	0.9	100.0

## 5. 어르신이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어르신의 건강이 더 나빠져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이 전체의



48.5%로 가장 많았음.

○ 다음은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25.6%이고,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것’은 10.6%에 불과하였음.

○ 가구주가 노인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가구주가 노인이 아닐 때 약 4.4% 더 높았음.

○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주의 성별, 연령계층별로 가구의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음.

〈표 2-56〉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1)

(단위: %)

구분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	인근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보내는 것	단기보호센터와 집 오가며 보내는 것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것	기타	계
전체	48.5	7.2	5.6	25.6	10.6	2.4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49.6	6.9	5.6	25.6	9.8	2.5	100.0
비가구주	43.5	8.8	5.8	25.7	14.2	2.0	100.0
가구주 성							
남성	47.5	7.7	5.9	25.6	11.1	2.3	100.0
여성	50.5	6.4	5.1	25.6	9.6	2.7	100.0
가구주 연령							
15~29세	54.1	9.0	2.9	15.8	15.8	2.3	100.0
30~39세	48.8	8.9	5.1	23.4	12.5	1.3	100.0
40~49세	43.7	9.2	5.9	27.1	12.1	2.1	100.0
50~59세	42.7	8.9	5.4	24.9	16.3	1.8	100.0
60세이상	49.3	6.9	5.7	25.7	9.9	2.5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2	6.3	5.2	25.5	9.9	2.9	100.0
100~200만원미만	48.0	7.6	7.0	25.5	10.1	1.9	100.0
200~300만원미만	45.4	9.8	5.8	26.6	11.0	1.5	100.0
300~400만원미만	46.6	8.5	6.4	23.9	12.6	2.0	100.0
400~500만원미만	45.3	8.5	6.1	25.8	11.6	2.7	100.0
500만원이상	44.9	7.9	5.0	26.6	13.8	1.7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52.2	5.2	4.5	29.2	6.5	2.4	100.0
비수급	47.8	7.6	5.9	24.9	11.4	2.4	100.0

□ 가구에 계신 노인의 건강이 더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사·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의 비

율이 가장 높았음.

- 경남 지역의 경우, ‘인근 주간보호센터에서 낮을 보내는 것’을 선택한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2-57〉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2)

(단위: %)

구분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	인근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보내는 것	단기보호센터와 집 오가며 보내는 것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것	기타	계
전국	48.5	7.2	5.6	25.6	10.6	2.4	100.0
서울	51.5	7.4	3.9	26.0	8.8	2.4	100.0
부산	46.2	9.2	6.2	29.0	7.8	1.7	100.0
대구	41.7	8.9	8.9	26.6	10.3	3.6	100.0
인천	48.4	4.9	3.5	25.5	14.6	3.2	100.0
광주	47.5	8.4	4.9	26.8	9.3	3.2	100.0
대전	53.2	6.5	4.2	29.8	5.5	0.8	100.0
울산	43.0	6.5	4.5	32.0	9.3	4.8	100.0
세종	51.9	6.2	6.2	17.3	14.8	3.7	100.0
경기	43.6	7.6	7.6	26.1	12.1	2.9	100.0
강원	54.2	5.0	3.8	21.3	12.3	3.4	100.0
충북	46.0	5.3	3.5	27.4	12.6	5.3	100.0
충남	53.9	4.6	4.3	25.0	11.1	1.1	100.0
전북	51.9	3.0	4.3	27.3	11.5	1.9	100.0
전남	49.8	5.9	5.1	25.4	11.8	1.9	100.0
경북	55.5	3.6	4.2	22.2	12.8	1.7	100.0
경남	46.7	16.0	9.6	20.9	5.7	1.1	100.0
제주	44.4	9.4	6.9	26.2	12.5	0.6	100.0

- 노인이 있는 가구의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 24.7%로 가장 많았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이 24.3%로 그 다음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의 비율이 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약간 높았음.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비수급가구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2-58〉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움	거동이 불편함	서비스의 질이 낮음	이용방법을 잘 모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비용이 부담됨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기타	계
전체	13.4	16.4	3.5	24.7	24.3	5.7	8.4	3.6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1	18.8	3.0	24.5	25.6	6.4	7.4	4.2	100.0
100~200만원미만	19.1	13.6	3.8	23.4	23.6	4.8	8.6	3.2	100.0
200~300만원미만	18.6	12.0	4.4	25.2	22.6	5.3	8.9	3.0	100.0
300~400만원미만	13.1	14.4	4.2	27.1	23.0	4.6	11.1	2.4	100.0
400~500만원미만	19.3	13.4	5.4	26.4	20.1	3.9	9.8	1.7	100.0
500만원이상	15.9	13.5	4.1	25.9	21.6	4.3	11.5	3.2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7.9	23.7	2.9	26.7	19.5	7.5	6.7	5.2	100.0
비수급	14.6	14.9	3.6	24.3	25.2	5.3	8.8	3.3	100.0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외 시·도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음.

○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은 서울이 타 시·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울산, 충남도 10%이상의 비율을 보였음.

〈표 2-59〉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움	거동이 불편함	서비스의 질이 낮음	이용방법을 잘 모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비용이 부담됨	필요한 서비스 없음	기타	계
전국	13.4	16.4	3.5	24.7	24.3	5.7	8.4	3.6	100.0
서울	11.7	15.1	3.6	22.5	15.2	7.3	17.7	6.9	100.0
부산	9.5	17.4	4.2	31.0	19.2	5.1	9.5	4.0	100.0
대구	11.6	13.5	2.9	29.9	21.2	7.5	8.2	5.3	100.0
인천	11.6	17.8	6.7	21.5	20.3	9.8	9.7	2.5	100.0
광주	10.2	18.9	3.6	31.1	15.7	5.3	8.7	6.6	100.0
대전	-	-	-	-	-	-	-	-	-
울산	12.5	16.7	3.0	26.9	15.9	3.0	14.4	7.6	100.0
세종	8.7	21.2	5.0	28.8	17.5	2.5	3.7	12.5	100.0
경기	16.0	19.3	2.5	26.4	29.1	6.5	0.2	0.0	100.0
강원	10.4	13.9	2.4	26.2	29.3	3.7	9.4	4.7	100.0
충북	13.5	16.3	1.0	25.9	26.4	3.6	7.2	6.2	100.0
충남	15.7	20.5	3.9	18.7	23.1	3.4	10.9	3.7	100.0
전북	17.6	16.6	1.8	19.0	29.9	4.0	7.3	3.8	100.0
전남	15.6	14.8	2.3	26.0	29.5	2.4	6.5	2.8	100.0
경북	11.6	14.7	2.1	23.2	32.8	5.0	7.1	3.5	100.0

구분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움	거동이 불편함	서비스의 질이 낮음	이용방법을 잘 모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비용이 부담됨	필요한 서비스 없음	기타	계
경남	13.9	10.1	7.8	24.6	29.2	4.3	7.8	2.2	100.0
제주	17.2	16.6	4.3	28.8	12.9	6.7	7.4	6.1	100.0

□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에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방문 간호 서비스’로 16.4%를 나타냄.

○ 가구주가 노인이면 ‘가사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가구주가 노인이 아니면 ‘방문 간호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함.

○ 가구주의 연령이 29세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가구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았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의 비율이 높았음.

〈표 2-60〉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보호 서비스(주·간 및 단·보호)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주거 환경의 개선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기타	계
전체	10.6	10.4	14.2	17.8	12.2	16.4	4.4	11.8	2.2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9.9	11.3	14.2	18.6	11.8	15.9	4.8	11.3	2.2	100.0
비가구주	13.5	6.4	14.2	14.2	14.0	18.4	2.9	14.4	2.1	100.0
가구주 성										
남성	10.7	10.9	15.1	16.2	13.1	15.7	4.0	12.2	2.1	100.0
여성	10.2	9.3	12.7	21.0	10.5	17.6	5.3	11.1	2.4	100.0
가구주 연령										
15~29세	11.3	3.9	14.3	18.0	14.2	15.2	7.6	15.5	0.0	100.0
30~39세	11.2	9.3	17.9	12.3	12.6	14.8	3.4	15.2	3.4	100.0
40~49세	11.4	7.3	14.6	14.1	15.4	16.9	3.0	15.2	2.3	100.0
50~59세	16.1	5.3	13.8	14.4	12.4	20.7	2.1	13.6	1.6	100.0
60세이상	10.0	11.1	14.2	18.5	11.9	16.0	4.8	11.4	2.2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4	10.4	12.9	20.7	10.0	17.9	5.3	10.8	2.6	100.0
100~200만원미만	10.3	10.9	15.7	17.1	13.1	15.1	4.3	11.8	1.8	100.0
200~300만원미만	11.3	11.7	17.2	14.2	14.8	14.2	3.1	12.2	1.4	100.0
300~400만원미만	13.1	10.8	16.3	13.1	15.2	14.0	3.2	13.0	1.2	100.0
400~500만원미만	12.9	9.1	14.8	13.4	14.1	15.2	2.8	15.9	1.8	100.0
500만원이상	14.8	7.5	14.1	10.3	18.4	14.4	2.4	15.8	2.3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9.4	6.6	13.8	21.9	9.0	17.4	7.0	12.1	2.9	100.0
비수급	10.8	11.1	14.3	17.0	12.8	16.2	3.9	11.8	2.1	100.0

○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낮으면 ‘가사지원 서비스’나 ‘방문 간호 서비스’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으면 ‘보호서비스(주간 보호, 단기 보호)’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율이 높았음.

□ 시·도별로 노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의 욕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10개 시·도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비율을 가장 높았음.

○ 그러나 대전, 세종 등 2개 시·도는 ‘보호 서비스(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욕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은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이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는 ‘방문 간호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세종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2-61〉 시·도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보호 서비스(주간 및 단기 보호)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주거 환경의 개선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기타	계
전국	10.6	10.4	14.2	17.8	12.2	16.4	4.4	11.8	2.2	100.0
서울	7.5	10.6	13.2	16.3	14.3	12.8	4.7	15.5	5.1	100.0
부산	10.4	10.5	18.2	16.3	12.5	13.0	4.5	12.1	2.4	100.0
대구	7.7	10.3	13.5	17.3	14.0	11.4	5.7	16.0	4.1	100.0
인천	9.7	16.0	12.9	18.8	11.5	16.0	4.8	10.3	0.0	100.0
광주	9.1	9.5	16.0	17.5	15.4	11.8	6.3	12.4	1.9	100.0
대전	25.9	18.6	20.1	21.2	4.5	7.4	1.7	0.6	0.0	100.0
울산	6.4	11.4	15.1	12.1	16.1	14.1	4.4	14.8	5.7	100.0
세종	19.2	2.6	10.3	12.8	11.5	11.5	14.1	16.7	1.3	100.0
경기	12.4	9.5	14.9	15.5	12.0	19.8	4.2	11.4	0.3	100.0
강원	9.1	8.6	14.3	16.0	13.1	20.1	4.9	13.3	0.6	100.0
충북	9.0	7.6	9.8	22.3	14.2	18.6	4.6	10.0	3.9	100.0
충남	9.3	6.4	12.1	19.3	12.6	22.4	5.9	8.5	3.5	100.0
전북	10.3	6.9	12.6	21.7	10.0	19.5	3.8	13.6	1.6	100.0
전남	10.9	5.5	14.7	21.2	10.8	19.0	4.5	13.4	0.0	100.0
경북	8.6	5.8	12.8	21.1	12.1	21.6	5.2	8.5	4.3	100.0
경남	13.6	20.3	16.3	17.6	9.1	9.5	2.3	10.3	1.0	100.0
제주	14.1	4.3	9.2	17.8	12.9	24.5	2.5	13.5	1.2	100.0

## 6.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22.0%를 차지한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었고, 다음은 ‘거동이 불편함’ 21.4%,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낮으면 ‘거동의 불편함’ 비율이 높아졌고, 소득이 높으면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이나 또한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움’의 비율이 높아졌음.

○ 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거동이 불편함’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 비수급가구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남.

〈표 2-6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알아 모름	거동불편	낮은 서비스질	이용방법 모름	교통불편	비용부담	필요서비스 없음	기타	계
전체	10.2	21.4	4.6	22.0	20.9	5.2	11.3	4.3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2	25.9	3.2	22.9	22.3	5.6	9.5	4.4	100.0
100~200만원미만	12.5	18.9	4.8	24.5	20.4	4.5	10.0	4.4	100.0
200~300만원미만	13.7	17.8	6.3	18.8	20.9	6.0	12.4	4.2	100.0
300~400만원미만	12.6	17.8	8.2	20.4	16.3	5.3	15.2	4.2	100.0
400~500만원미만	18.0	16.1	3.8	15.4	24.0	2.8	16.3	3.6	100.0
500만원이상	17.3	12.3	7.0	20.0	16.8	4.4	17.6	4.6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5.3	26.0	4.4	24.1	21.4	5.8	7.9	5.1	100.0
비수급	12.6	19.2	4.7	21.0	20.7	4.9	13.0	4.0	100.0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을 사·도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제주 등 7개 사·도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울산은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움’이,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함’이,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사·도는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2-63〉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일야비빔	거동불편	낮은 서비스질	이용방법 모름	교통불편	비용부담	해당서비스 없음	기타	계
전국	10.2	21.4	4.6	22.0	20.9	5.2	11.3	4.3	100.0
서울	8.1	23.7	5.3	19.8	16.3	4.9	18.0	3.9	100.0
부산	9.5	17.4	8.5	26.7	13.1	4.4	14.4	6.2	100.0
대구	6.3	14.0	3.0	32.3	19.5	5.8	12.6	6.6	100.0
인천	6.9	21.9	8.2	17.2	22.9	4.2	17.2	1.5	100.0
광주	8.2	16.9	5.1	34.9	9.2	6.7	11.8	7.2	100.0
대전	-	-	-	-	-	-	-	-	-
울산	18.0	15.1	6.8	15.6	17.6	3.9	8.8	14.1	100.0
세종	16.7	23.8	7.1	26.2	11.9	4.8	7.1	2.4	100.0
경기	11.5	28.2	4.4	24.7	23.4	7.3	0.5	0.0	100.0
강원	9.5	18.1	2.3	23.1	24.8	4.9	12.6	4.7	100.0
충북	13.2	19.7	2.8	20.3	21.3	3.3	10.4	9.1	100.0
충남	11.0	17.4	2.7	19.5	16.0	2.7	11.4	19.3	100.0
전북	12.3	21.5	2.5	19.3	24.9	4.9	10.1	4.6	100.0
전남	13.6	17.1	3.0	22.8	26.9	1.9	11.6	3.0	100.0
경북	10.9	14.2	2.3	17.9	35.1	5.2	10.7	3.8	100.0
경남	12.5	20.4	3.9	20.1	22.7	4.9	11.8	3.6	100.0
제주	17.9	10.4	1.9	26.4	21.7	9.4	7.5	4.7	100.0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고용지원 서비스’ 16.3%로 나타났다.

○ 가구주가 장애인이면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을 가장 필요로 했고, 가구주가 비장애인이면 ‘고용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음.

○ 가구주가 남성이면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이, 여성이면 “일상생활 지원(가사활동, 외출, 목욕 등)”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이, 비수급가구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4〉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재· 난· 영· 유· 아· 서비스	고· 용· 지· 원	복· 지· 정· 보· 상· 담	재· 활· 훈· 련	문· 화· 활· 동· 지· 원	이· 성· 교· 제· 결· 혼· 지· 원	주· 거· 환· 경· 개· 선	방· 과· 후· 활· 동· 지· 도	개· 인· 별· 맞· 춤· 상· 담	일· 상· 생· 활· 지· 원	장· 애· 인· 모· 임· 지· 원	기· 타	계
전체	5.7	16.3	16.5	11.0	7.6	1.8	6.6	2.7	13.5	13.3	0.9	4.1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5.0	16.7	17.2	10.6	7.5	1.6	7.9	1.4	13.2	13.6	0.9	4.5	100.0
비가구주	7.1	15.4	15.1	12.0	7.8	2.0	4.2	5.2	14.0	12.8	0.9	3.4	100.0
가구주 성													
남성	5.9	16.8	17.1	10.9	7.7	1.9	6.2	2.8	13.4	12.2	0.8	4.1	100.0
여성	5.1	14.8	14.7	11.3	7.0	1.4	7.6	2.4	13.9	16.6	1.2	4.0	100.0
가구주 연령													
15~29세	5.7	24.3	14.8	6.7	11.1	3.9	5.0	4.8	4.7	12.0	4.8	2.2	100.0
30~39세	13.7	16.5	13.3	12.1	9.2	1.9	4.5	5.8	11.3	5.8	2.2	3.6	100.0
40~49세	11.6	15.8	13.6	11.0	8.3	2.3	5.5	5.9	13.6	7.9	1.0	3.4	100.0
50~59세	6.2	19.1	16.8	10.7	7.6	2.6	6.5	2.8	13.0	9.9	0.7	4.1	100.0
60세이상	2.9	15.0	17.5	11.2	7.1	1.2	7.3	1.4	14.0	17.2	0.8	4.4	100.0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2	14.1	16.6	10.9	6.6	1.9	8.3	1.6	14.3	16.1	1.0	4.6	100.0
100~200만원미만	7.3	16.8	16.9	10.4	6.5	2.0	6.0	3.2	13.2	11.9	1.0	4.7	100.0
200~300만원미만	7.1	19.8	15.5	11.5	7.7	1.5	5.8	3.3	13.0	9.9	1.0	3.8	100.0
300~400만원미만	6.7	19.8	18.4	10.0	8.0	0.8	4.9	5.8	12.3	9.8	1.0	2.6	100.0
400~500만원미만	8.6	16.6	15.6	12.6	11.5	0.3	4.1	3.2	13.4	10.3	1.3	2.5	100.0
500만원이상	6.2	18.8	15.1	12.5	12.3	2.7	3.2	3.8	11.8	10.6	0.2	2.7	100.0
국민기초수급여부													
수급	6.5	12.2	15.6	11.8	6.8	2.3	8.4	2.3	14.2	14.0	1.3	4.6	100.0
비수급	5.3	18.2	16.9	10.7	7.9	1.5	5.8	2.9	13.2	13.0	0.7	3.9	100.0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등 5개 시·도는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고, 그 외 시·도들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세종은 ‘복지정보 상담 및 지원’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서비스 모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파악됨. 한편, 세종은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았음.

○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4개 시·도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광주, 전남 등 2곳은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이,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4개 시·도는 ‘일상생활지원(가사활동, 외출, 목욕 등)’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5〉 시도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재녀 양육 서비스	고용 지원	복지 정보 상담	재활 훈련	문화 활동 지원	이성교제 결혼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과후 활동 지도	개인별 맞춤 상담	일상 생활 지원	장애인 모임 지원	기타	계
전국	5.7	16.3	16.5	11.0	7.6	1.8	6.6	2.7	13.5	13.3	0.9	4.1	100.0
서울	4.6	15.2	16.7	10.9	6.9	1.3	5.5	1.1	16.7	12.1	0.9	8.2	100.0
부산	5.3	14.8	18.7	12.0	12.3	2.2	7.2	2.8	11.7	9.7	0.8	2.5	100.0
대구	7.1	14.6	15.6	12.2	6.1	2.2	6.1	3.2	13.4	12.2	0.7	6.6	100.0
인천	4.7	24.0	14.4	12.0	7.5	1.8	8.7	7.8	6.8	8.0	0.0	4.2	100.0
광주	8.3	16.1	12.5	13.5	11.5	2.1	7.3	3.1	20.3	0.0	1.0	4.2	100.0
대전	18.2	33.3	22.4	9.9	3.1	1.0	3.6	2.6	2.1	3.6	0.0	0.0	100.0
울산	4.9	20.0	20.5	7.3	8.3	1.5	5.4	2.9	10.7	13.2	1.0	4.4	100.0
세종	6.7	15.6	20.0	11.1	2.2	2.2	15.6	0.0	20.0	4.4	2.2	0.0	100.0
경기	5.1	16.6	17.5	10.1	8.1	1.6	7.3	2.4	12.4	17.1	1.4	0.5	100.0
강원	4.6	16.2	15.3	8.1	10.2	1.2	4.5	8.1	9.9	15.7	0.5	5.7	100.0
충북	7.6	13.5	11.7	15.1	8.2	1.4	5.0	3.6	13.1	16.1	0.6	4.2	100.0
충남	4.5	12.6	15.1	11.8	7.6	1.6	8.3	1.4	12.6	19.8	1.4	3.3	100.0
전북	4.5	11.5	15.9	10.0	5.1	2.9	7.2	0.8	15.9	22.1	1.0	3.2	100.0
전남	6.7	12.9	18.5	9.6	6.3	3.1	6.3	2.7	30.5	0.4	0.6	2.5	100.0
경북	6.9	12.7	14.1	13.9	8.5	2.4	8.2	2.0	9.6	15.7	0.9	5.0	100.0
경남	4.6	11.8	19.0	11.1	7.2	1.6	7.5	2.0	11.8	20.3	1.0	2.3	100.0
제주	5.6	23.4	15.9	8.4	7.5	1.9	3.7	1.9	13.1	9.3	2.8	6.5	100.0

## 제4절 복지대상 규모 추정

### 1. 경제 및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경제적 생활지원 대상가구는 ‘저(무)소득, 과다 지출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정함.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6,505,195가구로 추정됨.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07,944가구로 가장 많이 추정되었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 1,388,451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16,515가구로 가장 적게 나타남.

□ 부채상환 지원 대상가구는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정함.

○ 부채상환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4,193,601가구로 추정됨. 시도 중 경기도가

1,050,848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이 936,847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9,208가구로 부채상환 지원 가구가 가장 적게 추정됨.

□ 취업지원 대상가구는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정함.

○ 취업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3,702,642가구로 추정됨. 사·도별로는 서울이 903,38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가 829,369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가 9,208가구로 가장 적었음.

〈표 2-66〉 사·도별 경제 및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 가구수)

구분	사·도별 가구수(A)	경제지원 대상가구				취업지원 대상 가구	
		경제적 생활 지원		부채상환 지원		실직· 재취업·퇴직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D)	대상가구 (A×D/100)
		생활상의 어려움이 심각한비율(B)	대상가구 (A×B/100)	부채청산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C)	대상가구 (A×C/100)		
전국	20,456,588	31.8	6,505,195	20.5	4,193,601	18.1	3,702,642
서울	4,182,351	33.2	1,388,541	22.4	936,847	21.6	903,388
부산	1,404,663	33.1	464,943	16.8	235,983	19.1	268,291
대구	960,265	35.7	342,815	20.2	193,974	19.8	190,132
인천	1,118,988	34.4	384,932	21.7	242,820	20.2	226,036
광주	563,599	42.3	238,402	23.9	134,700	25.2	142,027
대전	584,877	36.8	215,235	17.3	101,184	12.7	74,279
울산	431,595	19.3	83,298	14.8	63,876	19.3	83,298
세종	50,045	33.0	16,515	18.4	9,208	18.4	9,208
경기	4,712,324	32.0	1,507,944	22.3	1,050,848	17.6	829,369
강원	664,913	30.7	204,128	19.8	131,653	14.3	95,083
충북	644,062	26.1	168,100	16.7	107,558	13.4	86,304
충남	857,699	28.5	244,444	17.4	149,240	12.7	108,928
전북	766,699	37.5	287,512	25.8	197,808	21.9	167,907
전남	815,769	28.9	235,757	17.1	139,496	15.3	124,813
경북	1,139,387	29.5	336,119	15.5	176,605	14.4	164,072
경남	1,320,887	24.0	317,013	19.0	250,969	14.1	186,245
제주	238,465	25.8	61,524	22.5	53,655	16.5	39,347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저생계비 이하계층, (빈곤) 취약계층, 중하위소득계층, 중상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sup>3)</sup>으로

3) 가구균등화 소득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최저생계비 이하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중위소득 50~100%를 중하위 소득계층, 중위소득 100~200%는 중상위 소득계층, 중위소득 200% 이상을 상위 소득계층으로 구분함.

구분하여 ‘저(무)소득, 과다 지출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대상가구 추정은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의 비율을 각 계층의 대상가구에 적용하여 산출함.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2,353,408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1,791,942가구, 취약계층은 561,466가구로 추정됨.

〈표 2-67〉 경제적 생활지원 정책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가구수		경제적 생활지원 정책대상가구				
			소득계층별 생활상의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정책대상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A)	취약계층 가구(B)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C)	취약계층(D)	최저생계비 이하계층 (E=A×C/100)	취약계층 (F=B×D/100)	정책대상가구 (E+F)
전국	3,472,755	763,899	51.6	73.5	1,791,942	561,466	2,353,408

□ 부채상환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빈곤) 취약계층, 중하위소득계층, 중상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대상가구 추정은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의 비율을 각 계층의 대상가구에 적용하여 산출함.
- 부채상환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1,010,676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757,061가구, 취약계층은 253,615가구로 추정됨.

〈표 2-68〉 부채상환 지원 정책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가구수		부채상환 지원 정책대상가구				
			소득계층별 부채청산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정책대상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A)	취약계층 가구(B)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C)	취약계층(D)	최저생계비 이하계층 (E=A×C/100)	취약계층 (F=B×D/100)	정책대상가구 (E+F)
전국	3,472,755	763,899	21.8	33.2	757,061	253,615	1,010,676

- 취업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저생계비 이하계층, (빈곤) 취약계층, 중하위소득계층, 중상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대상가구 추정은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의 비율을 각 계층의 대상가구에 적용하여 산출함.
- 취업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1,332,520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1,007,099가구, 취약계층은 325,421가구로 추정됨.

〈표 2-69〉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가구수		취업지원 정책대상가구				
			실직·재취업·퇴직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정책대상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A)	취약계층 가구(B)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B)	취약 계층(C)	최저생계비 이하계층 (E=A×C/100)	취약계층 (F=B×D/100)	정책대상가구 (E+F)
전국	3,472,755	763,899	29.0	42.6	1,007,099	325,421	1,332,520

## 2. 돌봄 및 양육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돌봄지원 대상가구는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정함.
-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2,577,530가구로 추정됨. 사·도별로는 서울이 618,988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532,493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는 6,105가구로 가장 적었음.
- 양육지원 대상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정함.
-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4,050,404가구로 추정되었고, 사·도 중 경기도가 947,17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이 945,211가구로 많았으며, 세

중시는 11,560가구로 가장 적게 추정됨.

〈표 2-70〉 시도별 돌봄 및 양육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시도별 가구수(A)	돌봄지원 대상가구		양육지원 대상가구	
		돌봄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B)	대상가구 (A×B/100)	자녀양육 및 교육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C)	대상가구 (A×C/100)
전국	20,456,588	12.6	2,577,530	19.8	4,050,404
서울	4,182,351	14.8	618,988	22.6	945,211
부산	1,404,663	11.6	162,941	16.0	224,746
대구	960,265	12.2	117,152	21.7	208,378
인천	1,118,988	13.6	152,182	20.9	233,868
광주	563,599	14.0	78,904	28.8	162,317
대전	584,877	17.9	104,693	30.7	179,557
울산	431,595	16.9	72,940	19.9	85,887
세종	50,045	12.2	6,105	23.1	11,560
경기	4,712,324	11.3	532,493	20.1	947,177
강원	664,913	10.4	69,151	18.0	119,684
충북	644,062	10.5	67,627	16.6	106,914
충남	857,699	9.0	77,193	12.9	110,643
전북	766,699	20.9	160,240	22.3	170,974
전남	815,769	11.7	95,445	18.0	146,838
경북	1,139,387	11.0	125,333	16.3	185,720
경남	1,320,887	8.0	105,671	12.1	159,827
제주	238,465	11.7	27,900	27.0	64,386

□ 돌봄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저생계비 이하계층, (빈곤) 취약계층, 중하위소득계층, 중상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대상가구 추정은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의 비율을 각 계층의 대상가구에 적용하여 산출함.

○ 돌봄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925,595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691,078가구, 취약계층은 234,517가구로 추정됨.

〈표 2-71〉 돌봄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가구수		돌봄지원 정책대상가구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정책대상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A)	취약계층 가구(B)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C)	취약계층(D)	최저생계비 이하계층 (E=A×C/100)	취약계층 (F=B×D/100)	정책대상가구 (E+F)
전국	3,472,755	763,899	19.9	30.7	691,078	234,517	925,595

□ 양육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저생계비 이하계층, (빈곤) 취약계층, 중하위소득계층, 중상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과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대상가구 추정은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의 비율을 각 계층의 대상가구에 적용하여 산출함.

○ 양육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803,355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576,477가구, 취약계층은 226,878가구로 추정됨.

〈표 2-72〉 전국 양육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가구수		양육지원 정책대상가구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정책대상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A)	취약계층 가구(B)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C)	취약계층(D)	최저생계비 이하계층 (E=A×C/100)	취약계층 (F=B×D/100)	정책대상가구 (E+F)
전국	3,472,755	763,899	16.6	29.7	576,477	226,878	803,355

### 3.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심리 및 양육지원 대상가구는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추정된 가구와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추정된 가구를 합산하여 추정함.

-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8,509,941가구로 추정됨. 시도 중 서울이 2,107,905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도가 1,833,094가구로 많았으며, 세종시는 22,370가구로 가장 적게 나타남.

〈표 2-73〉 시도별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

구분	시도별 가구수(A)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 가구				
		가정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B)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C)	대상가구1 (A×B/100)	대상가구2 (A×C/100)	합계
전국	20,456,588	9.2	32.4	1,882,006	6,627,935	8,509,941
서울	4,182,351	13.0	37.4	543,706	1,564,199	2,107,905
부산	1,404,663	8.7	27.6	122,206	387,687	509,893
대구	960,265	9.5	33.9	91,225	325,530	416,755
인천	1,118,988	9.5	34.5	106,304	386,051	492,355
광주	563,599	12.2	42.8	68,759	241,220	309,979
대전	584,877	4.8	48.6	28,074	284,250	312,324
울산	431,595	10.0	36.8	43,160	158,827	201,986
세종	50,045	9.4	35.3	4,704	17,666	22,370
경기	4,712,324	7.5	31.4	353,424	1,479,670	1,833,094
강원	664,913	6.7	28.4	44,549	188,835	233,384
충북	644,062	6.7	27.1	43,152	174,541	217,693
충남	857,699	7.0	21.9	60,039	187,836	247,875
전북	766,699	10.9	43.2	83,570	331,214	414,784
전남	815,769	6.9	29.7	56,288	242,283	298,571
경북	1,139,387	7.6	27.3	86,593	311,053	397,646
경남	1,320,887	10.4	20.1	137,372	265,498	402,871
제주	238,465	9.1	38.7	21,700	92,286	113,986

□ 심리 및 정서적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저생계비 이하계층, (빈곤) 취약계층, 중하위소득계층, 중상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과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을 각각 산출하고, 이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대상가구 추정은 최저생계비 이하계층과 취약계층의 각 비율을 각 계층의 대상가구에 적용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함.

- 심리 및 정서적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가구는 총 1,800,757가구로 그중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은 1,267,555가구, 취약계층은 533,202가구로 추정됨.

〈표 2-74〉 소득계층별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비율

(단위: %)

구분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비율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심각한 비율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A)	취약계층(B)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C)	취약계층(D)
전국	13.7	27.0	22.8	42.8

〈표 2-75〉 전국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가구수		심리 및 정서적 지원 정책대상가구				
			가정 내 불화단절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가구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 가구		정책대상가구 (G+H+I+J)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E)	취약계층 가구(F)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G=E×A/100)	취약계층 (H=F×B/100)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I=E×C/100)	취약계층 (J=F×D/100)	
전국	3,472,755	763,899	475,767	206,253	791,788	326,949	1,800,757

#### 4. 보건의료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보건의료 지원 대상가구는 의료 및 건강 결핍비율<sup>4)</sup>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정함.

○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2,597,987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92,712가구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 447,512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는 8,858가구로 가장 적었음.

4) 의료 및 건강 결핍비율은 4개 항목①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것, ②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③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④ 의사에게서 처방 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대상으로 각 항목이 필요함에도 갖고 있지 못한 비율로 측정함.



〈표 2-76〉 시도별 보건의료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시도별 가구수(A)	보건의료 지원 대상 가구					대상가구(A×F /100)
		만성질환으로 정기적 진료 결핍율(B)	이가 아플 경우 치과진료 결핍율(C)	건강을 위해 보약·영양제·보 조식품 복용 결핍율(D)	처방 받은 의약품 및 필요한 의약품 구입 결핍율(E)	의료 및 건강 결핍비율 (F=B+C+D+E /4)	
전국	20,456,588	14.9	13.9	14.9	6.9	12.7	2,597,987
서울	4,182,351	12.7	11.7	13.6	4.9	10.7	447,512
부산	1,404,663	12.3	13.0	15.5	6.8	11.9	167,155
대구	960,265	13.2	15.8	15.6	10.7	13.8	132,517
인천	1,118,988	12.3	13.7	15.0	6.9	12.0	134,279
광주	563,599	15.3	14.0	14.9	9.6	13.5	76,086
대전	584,877	10.2	7.6	12.9	2.6	8.3	48,545
울산	431,595	14.9	9.6	8.4	9.8	10.7	46,181
세종	50,045	17.3	20.0	20.4	12.9	17.7	8,858
경기	4,712,324	18.8	16.9	15.3	7.7	14.7	692,712
강원	664,913	16.7	14.9	15.0	8.4	13.8	91,758
충북	644,062	15.2	10.2	17.0	8.2	12.7	81,796
충남	857,699	16.6	20.1	16.8	6.8	15.1	129,513
전북	766,699	16.3	15.7	22.5	8.1	15.7	120,372
전남	815,769	17.3	15.0	19.7	8.8	15.2	123,997
경북	1,139,387	17.5	14.2	17.3	8.2	14.3	162,932
경남	1,320,887	8.2	9.6	7.7	2.8	7.1	93,783
제주	238,465	19.9	14.5	13.0	8.6	14.0	33,385

## 5. 대상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가구조사 기준

□ 여성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여성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여성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여성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3,477,620가구로 추정됨.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48,218가구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 648,264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세종시는 6,706가구로 가장 적었음.

□ 취학 전 아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취학 전 아동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취학 전 아동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취학 전 아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391,048가구로 추정됨. 시도 중 경기도가 632,8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이 359,682가구로 많

았고, 세종시는 3,753가구로 가장 적게 나타남.

〈표 2-77〉 사·도별 여성 및 취학전 아동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사·도별 가구수(A)	여성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취학전 아동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여성서비스 필요율(B)	대상가구 (A×B/100)	취학전 아동서비스 필요율(C)	대상가구 (A×C/100)
전국	20,456,588	17.0	3,477,620	6.8	1,391,048
서울	4,182,351	15.5	648,264	8.6	359,682
부산	1,404,663	19.0	266,886	5.4	75,852
대구	960,265	20.4	195,894	7.2	69,139
인천	1,118,988	17.5	195,823	8.1	90,638
광주	563,599	16.2	91,303	4.7	26,489
대전	584,877	7.0	40,941	6.8	39,772
울산	431,595	29.0	125,163	7.4	31,938
세종	50,045	13.4	6,706	7.5	3,753
경기	4,712,324	18.0	848,218	7.7	362,849
강원	664,913	17.9	119,019	4.6	30,586
충북	644,062	12.7	81,796	5.8	37,356
충남	857,699	14.7	126,082	4.8	41,170
전북	766,699	13.9	106,571	5.4	41,402
전남	815,769	19.0	154,996	5.4	44,052
경북	1,139,387	19.7	224,459	5.1	58,109
경남	1,320,887	14.1	186,245	4.1	54,156
제주	238,465	18.3	43,639	7.7	18,362

□ 초·중학생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초·중학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초·중학생 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초·중학생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227,395가구로 추정됨. 사·도 중 경기도가 311,0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울이 288,582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5,105가구로 가장 적었음.

□ 중고생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중고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중고생 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중고생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779,723가구로 추정되었고, 사·도 중 경기도가 504,21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이 380,594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5,705가구로 가장 적게 나타남.

〈표 2-78〉 시도별 초·중고학생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사도별 가구수(A)	초·중고학생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중고생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초·중고학생서비스 필요율(D)	대상가구 (A×D/100)	중고생 서비스 필요율(E)	대상가구 (A×E/100)
전국	20,456,588	6.0	1,227,395	8.7	1,779,723
서울	4,182,351	6.9	288,582	9.1	380,594
부산	1,404,663	5.0	70,233	7.4	103,945
대구	960,265	5.6	53,775	10.6	101,788
인천	1,118,988	8.2	91,757	9.2	102,947
광주	563,599	5.5	30,998	9.4	52,978
대전	584,877	-	-	11.1	64,921
울산	431,595	14.1	60,855	8.2	35,391
세종	50,045	10.2	5,105	11.4	5,705
경기	4,712,324	6.6	311,013	10.7	504,219
강원	664,913	4.5	29,921	8.1	53,858
충북	644,062	4.7	30,271	7.6	48,949
충남	857,699	4.2	36,023	5.3	45,458
전북	766,699	4.3	32,968	6.1	46,769
전남	815,769	5.5	44,867	8.1	66,077
경북	1,139,387	5.0	56,969	8.7	99,127
경남	1,320,887	4.1	54,156	4.2	55,477
제주	238,465	7.7	18,362	8.6	20,508

□ 어르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어르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어르신 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어르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5,789,214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1,371,28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서울이 886,658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13,212가구로 가장 적었음.

□ 장애인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장애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장애인 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장애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1,841,093가구로 추정되었고, 시도 중 경기도가 452,38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이 372,229가구로 추정되었고, 세종시는 13,212가구로 가장 적게 나타남.

〈표 2-79〉 사·도별 어르신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사·도별 가구수(A)	어르신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장애인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어르신 서비스 필요율(F)	대상가구 (A×F/100)	장애인서비스 필요율(G)	대상가구 (A×G/100)
전국	20,456,588	28.3	5,789,214	9.0	1,841,093
서울	4,182,351	21.2	886,658	8.9	372,229
부산	1,404,663	33.3	467,753	6.9	96,922
대구	960,265	25.5	244,868	7.9	75,861
인천	1,118,988	30.6	342,410	9.4	105,185
광주	563,599	20.9	117,792	7.1	40,016
대전	584,877	12.3	71,940	-	-
울산	431,595	14.8	63,876	8.3	35,822
세종	50,045	26.4	13,212	8.7	4,354
경기	4,712,324	29.1	1,371,286	9.6	452,383
강원	664,913	31.6	210,113	7.1	47,209
충북	644,062	32.5	209,320	12.6	81,152
충남	857,699	40.5	347,368	8.4	72,047
전북	766,699	32.9	252,244	13.4	102,738
전남	815,769	35.8	292,045	7.5	61,183
경북	1,139,387	35.1	399,925	7.9	90,012
경남	1,320,887	31.6	417,400	12.1	159,827
제주	238,465	28.4	67,724	11.4	27,185

□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저소득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사·도별 가구를 적용하여 저소득층 지원 대상가구를 추정함.

○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총 3,313,967가구로 추정됨. 사·도 중 경기도가 819,94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585,529가구로 많았고, 세종시는 8,858가구로 가장 적었음.

〈표 2-80〉 사·도별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사·도별 가구수(A)	저소득층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저소득층 서비스 필요율(H)	대상가구 (A×H/100)
전국	20,456,588	16.2	3,313,967
서울	4,182,351	14.0	585,529
부산	1,404,663	14.9	209,295
대구	960,265	14.9	143,079
인천	1,118,988	11.8	132,041
광주	563,599	19.4	109,338
대전	584,877	40.1	234,536

구분	사도별 가구수(A)	저소득층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저소득층 서비스 필요율(H)	대상가구 (A×H/100)
울산	431,595	10.0	43,160
세종	50,045	17.7	8,858
경기	4,712,324	17.4	819,944
강원	664,913	17.9	119,019
충북	644,062	16.5	106,270
충남	857,699	15.0	128,655
전북	766,699	15.0	115,005
전남	815,769	11.8	96,261
경북	1,139,387	12.65	144,132
경남	1,320,887	25.0	330,222
제주	238,465	12.0	28,616

## 6.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전국적으로 19~64세 여성이 있는 가구는 약 1,422.6만 가구이며,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를 4,553,889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사·도별로 여성에게 필요한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를 보면, 서울이 985,230가구이며, 이것은 전체 ‘문화, 여가활동 관련서비스’ 욕구를 가진 가구의 21.6%로 가장 많았음.

- 특히, 세종은 여성에게 필요한 타 서비스와 비교하여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필요 가구(14,119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2순위는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이며, 대상가구 규모는 전국적으로 3,689,906가구로 추정됨.

〈표 2-81〉 사·도별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sup>1)</sup>

(단위: 가구)

구분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건강(체육) 및 의료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이 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	기타	계
전국	3,689,906	4,553,889	2,996,096	828,044	902,378	590,826	365,712	299,316	14,226,166
서울	840,660	985,230	757,315	169,779	114,214	107,527	74,600	75,629	3,124,954
부산	244,349	318,364	229,398	54,654	34,557	38,968	24,263	24,509	969,063
대구	187,000	224,092	144,500	43,273	33,614	30,910	25,886	15,454	704,730

구분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건강(체육) 및 의료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센터	기타	계
인천	209,895	276,195	153,023	32,992	42,105	26,080	16,339	32,364	788,992
광주	119,451	123,050	79,197	19,309	13,745	12,109	9,818	4,909	381,587
대전	230,900	120,439	54,161	9,977	5,702	2,494	9,265	12,115	445,052
울산	98,235	114,227	58,256	21,989	22,275	14,279	23,417	13,136	365,814
세종	7,386	14,119	6,082	1,738	1,520	1,086	1,086	217	33,233
경기 <sup>2)</sup>	-	-	-	-	-	-	-	-	-
강원	103,973	158,973	114,127	20,414	10,895	10,049	13,116	7,933	439,480
충북	77,291	141,104	85,217	18,232	15,260	16,846	12,287	4,162	370,398
충남	94,371	197,754	111,575	21,791	26,705	11,469	11,141	8,028	482,834
전북	95,939	140,584	114,936	17,858	17,858	16,528	19,948	7,219	430,869
전남	135,289	173,260	118,810	26,501	20,823	17,816	17,816	7,237	517,551
경북	157,277	284,521	168,885	37,869	23,359	20,457	17,847	14,073	724,288
경남	187,462	260,502	194,923	91,583	20,352	58,342	18,769	11,307	843,240
제주	32,446	98,229	38,994	11,906	8,037	7,442	6,548	4,763	208,365

주: 1) 각 시도별 19~64세 여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32>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2) 경기도는 여성이 있는 가구(3,395,714가구) 중 본 조사항목의 응답률(22.8%)이 낮아 규모추정에서 제외하였음.

□ 소득계층별로 여성이 있는 가구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중하위 소득계층이하 가구는 여성의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

○ 특히, 취약 계층 가구의 경우, 전체 268,442가구 가운데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86,498가구)의 비율(32.2%)은 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의 비율(30.8%)보다 더 많았음.

○ 중상위 소득계층이상 가구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82〉 소득계층별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건강(체육) 및 의료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이 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	기타	계
전국	3,689,906	4,553,889	2,996,096	828,044	902,378	590,826	365,712	299,316	14,226,166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337,505	274,005	296,678	42,916	45,056	42,164	23,341	33,595	1,095,261
취약 계층	86,498	44,750	80,266	11,058	14,155	16,689	6,017	9,010	268,442
중하위 소득계층	1,062,151	940,727	796,866	180,072	208,739	154,519	88,373	78,198	3,509,646
중상위 소득계층	1,464,135	1,865,793	1,116,572	373,169	404,578	235,635	138,929	100,311	5,699,122
상위 소득계층	743,365	1,422,789	709,896	219,375	228,432	142,005	108,955	78,879	3,653,696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7.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24만가구로서, 그 중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며,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구는 817,090가구로 추정됨.

○ 전국적으로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495,240가구이며, 대전은 40,989가구인데 다른 서비스에 비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음.

〈표 2-83〉 시도별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sup>1)</sup>

(단위: 가구)

구분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	휴일보육(휴 가, 경조사 등과 관련)	장애아 전담 보육	영유아 전용 도서관 확대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	기타	계
전국	495,240	267,105	76,629	299,116	817,090	205,400	78,442	2,239,020
서울	105,254	54,306	8,398	97,975	257,535	48,148	17,355	588,973
부산	26,760	16,056	3,679	18,398	51,514	13,046	3,679	133,132
대구	18,817	7,335	1,913	11,162	40,184	6,697	2,552	88,660
인천	36,884	22,054	2,662	35,363	78,711	11,787	2,662	190,122
광주	9,296	9,960	1,660	6,972	17,596	3,320	1,328	50,133
대전	40,989	11,711	1,378	8,956	4,477	1,378	0	68,889
울산	11,463	7,997	1,867	4,265	17,328	2,666	1,867	47,453
세종	2,378	296	296	595	3,864	0	0	7,429
경기 <sup>2)</sup>	-	-	-	-	-	-	-	-

구분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	휴일보육(휴 가, 경조사 등과 관련)	장애아 전담 보육	영유아 전용 도서관 확대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	기타	계
강원	13,192	6,712	694	6,248	31,475	4,513	926	63,759
충북	9,849	3,721	219	4,377	22,761	3,282	9,849	54,057
충남	15,445	9,331	965	8,205	23,489	4,183	1,609	63,228
전북	14,908	9,658	840	5,039	30,656	5,880	2,520	69,501
전남	19,544	9,295	1,191	6,912	37,061	8,342	1,549	83,893
경북	29,176	13,342	879	13,048	34,307	8,063	3,226	102,041
경남	19,900	15,357	2,596	17,520	30,930	12,545	3,461	102,309
제주	10,431	5,689	0	1,896	11,696	949	316	30,977

주: 1) 각 사·도별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36>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2) 경기도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494,464가구) 중 본 조사항목의 응답률(29.8%)이 낮아 규모추정에서 제외하였음.

□ 소득계층별로 최저생계비이하 계층과 취약 계층에 대해 살펴보면,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이하 계층가구 중 34.1%인 50,501가구, 취약 계층가구 중 32.1%인 7,230가구로 추정됨.

○ 반면에 ‘시간 연장형 교육’ 서비스 대상가구는 최저생계비이하 계층 중 22.1%인 32,719가구, 취약계층 중 23.0%인 5,335가구로 나타남.

○ 결국 취약계층은 부모의 취업에 따른 부모 부재시간동안 자녀의 돌봄 서비스 욕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84> 소득계층별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시간 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	휴일보육(휴 가, 경조사 등과 관련)	장애아 전담 보육	영유아 전용 도서관 확대	영유아와 부모 함께 하는 문화공간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	기타	계
전국	495,240	267,105	76,629	299,116	817,090	205,400	78,442	2,239,020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32,719	14,205	2,980	23,912	50,501	17,993	5,635	147,945
취약 계층	5,335	3,058	901	610	7,230	3,912	2,104	23,150
중하위 소득계층	137,927	58,213	12,496	49,397	168,562	55,501	20,333	502,430
중상위 소득계층	208,844	128,046	42,510	153,994	395,580	99,157	37,096	1,065,228
상위 소득계층	110,785	63,782	17,792	70,981	195,478	28,337	13,115	500,269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8. 초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340만가구이며, 이 가구에서 취학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779,477가구로 가장 많았음.

○ ‘부모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118,756가구 중에서 충북은 6,961가구로 타 사·도의 해당 서비스 욕구비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구는 취학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44,743가구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은 타 서비스 필요가구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85〉 사·도별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sup>1)</sup>

(단위: 가구)

구분	방과 후 학습지도	취미·특기 교실	체험학습 활동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기타	계
전국	779,477	682,018	752,509	271,857	118,756	568,901	185,492	38,013	3,397,022
서울	144,333	161,426	188,646	48,111	26,588	122,810	48,744	8,230	748,887
부산	32,312	27,073	43,665	6,113	6,113	34,640	5,822	2,620	158,357
대구	42,856	27,916	33,421	8,257	6,685	44,823	7,077	393	171,428
인천	51,618	44,090	64,521	16,130	5,736	38,354	12,187	2,151	234,788
광주	28,186	20,748	20,748	7,829	2,740	18,790	5,480	1,174	105,695
대전	49,574	25,381	17,450	4,362	1,586	3,965	2,379	0	104,698
울산	15,937	11,953	30,545	6,973	6,973	18,592	4,648	5,312	100,931
세종	2,468	4,010	2,776	617	925	3,085	0	0	13,880
경기 <sup>2)</sup>	-	-	-	-	-	-	-	-	-
강원	18,983	19,099	26,056	5,070	3,773	20,043	6,013	1,061	100,097
충북	22,505	13,225	18,793	5,104	6,961	20,185	8,352	2,320	97,445
충남	25,414	19,520	19,336	6,261	3,131	16,942	6,997	736	98,338
전북	28,186	16,071	16,319	6,675	2,967	20,522	7,665	2,472	100,877
전남	35,863	23,556	26,733	10,985	5,558	22,233	11,116	1,588	137,631
경북	40,966	30,436	40,637	11,517	5,923	36,359	14,149	1,152	181,139
경남	23,622	23,119	30,657	13,570	3,769	26,887	11,811	1,759	135,195
제주	11,601	14,331	18,767	3,754	682	10,236	3,412	341	63,123

주: 1) 각 사·도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40〉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2) 경기도의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884,514가구) 중 본 조사항목의 응답률(29.2%)이 낮아 규모추정에서 제외하였음.

□ 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계층별 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를 추정  
한 결과, 중하위 소득계층이하에 있는 가구는 ‘방과 후 학습지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음.

○ 최저생계비이하 계층가구 중 30.4%인 70,478가구, 취약 계층가구 중 39.9%  
인 26,779가구, 중하위소득 계층가구 중 27.6%인 239,925가구는 ‘방과 후  
학습지도’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반면에, 소득이 중상위 계층이상 가구는 ‘체험학습 활동’ 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강하였고, 그 규모는 중상위소득 계층 369,677가구(25.2%), 상위소득 계층  
185,920가구(22.2%)로 나타남.

〈표 2-86〉 소득계층별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방과 후 학습지도	취미·특기 교실	체험학습 활동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 램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외국인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기타	계
전국	779,477	682,018	752,509	271,857	118,756	568,901	185,492	38,013	3,397,022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70,478	33,005	45,597	12,081	7,876	47,114	9,297	6,252	231,699
취약 계층	26,779	4,628	7,538	3,807	2,082	17,070	4,666	626	67,195
중하위 소득계층	239,925	151,615	145,258	50,830	23,356	203,563	44,547	8,904	867,998
중상위 소득계층	313,808	308,402	369,677	139,568	55,917	209,733	85,057	11,008	1,493,170
상위 소득계층	126,809	185,550	185,920	66,106	29,755	89,492	42,015	11,312	736,960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9.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있는 전국 약 384만가구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 ‘진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032,890가구로 추정됨.

○ 부산(59,937가구), 대구(77,385가구), 대전(77,554가구), 세종(3,376가구),  
충북(29,898가구), 전북(33,796가구), 경북(64,816가구) 등 7개 사·도는 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규모가 가장 많았음.

○ 경기도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65,139 가구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가지는 가구(10,041가구)가 서울 다음으로 많았음.

〈표 2-87〉 시도별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진로 상담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	문화· 취미활동	문제행동(음 주, 흡연, 비 행 등) 개선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아르바이 트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계
전국	1,032,890	1,098,604	457,343	759,136	172,467	189,678	78,343	50,506	3,838,967
서울	186,967	226,854	86,005	144,589	35,523	34,277	24,929	11,218	750,363
부산	59,937	56,999	28,793	37,314	7,933	11,753	5,583	4,701	213,012
대구	77,385	54,753	27,011	36,867	13,506	9,125	4,745	0	223,392
인천	51,305	66,594	26,162	41,451	7,815	9,174	6,115	8,834	217,450
광주	36,028	46,876	18,595	31,766	5,811	6,585	3,487	3,487	152,635
대전	77,554	41,387	4,101	3,355	373	746	0	373	127,889
울산	17,415	30,548	16,273	21,984	5,709	10,278	2,570	1,427	106,204
세종	3,376	1,447	482	965	723	0	0	241	7,233
경기	245,229	293,605	122,136	216,491	39,754	65,139	2,874	5,269	990,498
강원	25,573	34,730	12,284	26,913	4,467	5,919	2,234	1,451	113,570
충북	29,898	22,981	11,379	25,213	6,694	4,240	2,231	2,454	105,091
충남	27,208	25,452	11,585	29,666	4,389	5,267	2,282	878	106,727
전북	33,796	30,478	14,721	19,904	5,183	3,939	3,733	2,073	113,828
전남	41,894	43,057	15,775	27,411	5,301	4,397	2,974	2,457	143,266
경북	64,816	56,447	24,191	42,906	5,326	8,216	3,500	3,348	208,750
경남	33,134	50,455	27,612	31,879	20,835	7,280	10,041	1,255	182,492
제주	18,481	15,511	11,221	20,792	4,620	3,631	1,650	660	76,566

주: 각 시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44〉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소득계층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하위소득계층이하 가구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서비스를, 중상위소득계층이상 가구는 ‘진로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음.

- 취약계층 가구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45.0%인 49,867가구이고, 최저생계비이하계층 가구는 41.3%인 116,773가구로 추정됨.

〈표 2-88〉 소득계층별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진로 상담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	문화· 취미활동	문제행동(음 주,흡연,비 행 등) 개선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아르바이 트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계
전국	1,032,890	1,098,604	457,343	759,136	172,467	189,678	78,343	50,506	3,838,967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116,773	71,303	23,993	42,475	7,567	7,052	8,742	4,889	282,795
취약 계층	49,867	21,335	13,668	12,254	3,463	2,669	6,109	1,519	110,885
중하위 소득계층	329,879	270,697	115,264	158,697	54,307	43,449	25,435	13,939	1,011,667
중상위 소득계층	372,733	449,211	193,367	324,620	69,056	74,637	25,714	19,015	1,528,354
상위 소득계층	169,486	284,298	110,117	218,496	37,769	60,956	12,880	11,263	905,266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10.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전국적으로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약 757만가구인데, 댁에 있는 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때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3,670,982가구로 가장 많았음.

- 한편, 그 다음으로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서비스에 대해 1,939,920가구의 수요가 추정됨.

- 인천의 경우,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바라는 가구(62,540가구)는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9〉 사도별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	인근 주간보호센터에 서 낮 보내는 것	단기보호센터 와 집 오가며 보내는 것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것	기타	계
전국	3,670,982	546,790	427,572	1,939,920	801,078	183,177	7,569,520
서울	687,102	98,074	52,540	347,346	117,338	31,524	1,333,924
부산	226,625	44,914	30,285	142,186	38,241	8,470	490,721
대구	116,631	24,751	24,751	74,251	28,819	10,172	279,374
인천	207,287	20,954	14,829	109,285	62,540	13,540	428,436
광주	78,213	13,905	7,995	44,147	15,295	5,214	164,769
대전	97,510	11,883	7,689	54,522	10,135	1,398	183,136
울산	36,992	5,622	3,847	27,523	7,990	4,143	86,118
세종	9,326	1,110	1,110	3,109	2,665	666	17,985
경기	741,289	129,885	129,885	443,919	205,510	49,135	1,699,623
강원	142,786	13,096	10,034	56,080	32,423	8,871	263,290
충북	149,362	17,058	11,233	88,827	40,774	17,266	324,520
충남	241,601	20,749	19,166	111,833	49,762	4,924	448,035
전북	201,271	11,623	16,853	105,963	44,748	7,361	387,819
전남	171,061	20,270	17,575	87,288	40,657	6,444	343,295
경북	268,591	17,516	20,144	107,728	62,185	8,028	484,193
경남	272,868	93,368	56,021	121,845	33,379	6,536	584,016
제주	22,305	4,713	3,456	13,194	6,283	314	50,265

주: 각 사도별 어르신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46〉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가구의 노인이 건강악화로 수발이 필요한 서비스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규모는 3,670,982가구로 추정됨.

○ 다음 순위는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규모는 1,939,920가구였음.

○ 취약계층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을 더 필요로 하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필요가구의 비율이 증가함.

〈표 2-90〉 소득계층별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	인근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보내는 것	단기보호센터와 집 오가며 보내는 것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	자녀들이 수발을 도와주는 것	기타	계
전국	3,670,982	546,790	427,572	1,939,920	801,078	183,177	7,569,520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1,292,590	167,353	132,674	641,858	271,934	80,099	2,586,507
취약 계층	217,528	18,998	13,891	127,904	17,793	8,942	405,057
중하위 소득계층	1,127,971	171,386	145,971	588,869	254,760	51,001	2,339,959
중상위 소득계층	693,546	137,957	98,246	393,331	167,696	27,212	1,517,988
상위 소득계층	335,443	53,001	37,676	188,199	90,672	15,018	720,008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조사된 ‘가사지원 서비스’는 1,345,973가구에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239,236 가구인데, 특히, 경기도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중 ‘방문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는 336,006가구로 추정됨.

○ 경남의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1순위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18,390가구임.

〈표 2-91〉 사도별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보호 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주거 환경의 개선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기타	계
전국	799,882	785,348	1,077,660	1,345,973	921,592	1,239,236	336,402	896,206	167,220	7,569,520
서울	100,102	140,842	176,344	217,664	190,894	171,105	62,273	207,189	67,511	1,333,924
부산	50,915	51,681	89,548	80,081	61,148	63,707	22,259	59,613	11,769	490,721
대구	21,443	28,795	37,678	48,400	39,211	31,858	15,930	44,724	11,335	279,374
인천	41,440	68,510	55,476	80,540	49,461	68,510	20,386	44,113	0	428,436
광주	14,948	15,642	26,418	28,852	25,375	19,466	10,429	20,509	3,129	164,769
대전	47,518	33,992	36,766	38,847	8,325	13,527	3,121	1,040	0	183,136
울산	5,490	9,825	13,004	10,404	13,872	12,138	3,757	12,715	4,913	86,118
세종	3,459	461	1,845	2,306	2,075	2,075	2,536	2,997	230	17,985
경기	210,302	162,028	253,796	263,833	203,133	336,006	72,172	193,096	5,258	1,699,623
강원	24,069	22,707	37,694	42,008	34,401	52,795	12,943	34,969	1,703	263,290
충북	29,295	24,551	31,771	72,414	46,007	60,448	15,061	32,390	12,585	324,520

구분	보호 서비스주 간 및 단기(보호)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제 공 및 상담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주거 환경의 개선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기타	계
충남	41,545	28,831	54,259	86,491	56,407	100,459	26,324	37,963	15,758	448,035
전북	40,059	26,706	48,961	83,988	38,898	75,474	14,708	52,637	6,386	387,819
전남	37,561	18,841	50,320	72,736	37,084	65,344	15,383	46,027	0	343,295
경북	41,441	28,013	61,996	102,110	58,680	104,762	25,362	41,109	20,720	484,193
경남	79,394	118,390	95,040	102,979	53,008	55,576	13,544	60,013	6,071	584,016
제주	7,092	2,159	4,626	8,943	6,476	12,335	1,234	6,784	616	50,265

주: 각 시도별 어르신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50>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소득계층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하위소득계층이하 가구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 중상위소득계층 가구는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상위소득계층 가구는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음.

<표 2-92> 소득계층별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보호 서비스주 간 및 단기(보호)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제 공 및 상담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주거 환경의 개선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기타	계
전국	799,882	785,348	1,077,660	1,345,973	921,592	1,239,236	336,402	896,206	167,220	7,569,520
최저생계 비 이하 계층	268,678	263,299	347,710	534,487	248,933	458,240	133,192	265,162	66,806	2,586,507
취약 계층	32,917	16,837	47,866	99,445	31,407	75,424	31,639	55,034	14,487	405,057
중하위 소득계층	213,582	278,187	335,445	409,956	288,868	392,484	103,481	267,724	50,232	2,339,959
중상위 소득계층	185,614	161,044	245,319	209,954	228,438	216,070	47,922	205,080	18,547	1,517,988
상위 소득계층	100,727	65,510	102,223	88,699	126,920	95,069	19,124	105,018	16,718	720,008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11.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315만가구인데, ‘복지정보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519,390가구, ‘고용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512,643가구, ‘개인별 맞춤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425,563가구로 추정됨.

○ 대전은 ‘고용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 규모는 22,395가구였고, 강원(16,478가구)과 제주(8,604가구) 등 2개 시도 역시 ‘고용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았음.

○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음.

〈표 2-93〉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단위: 가구)

구분	재·양육 서비스	고용 지원	복지정보 상담	재활 훈련	문화활동 지원	이성교제 결혼지원	주거환경 개선
전국	179,724	512,643	519,390	347,703	238,308	55,818	209,110
서울	29,691	98,971	108,249	70,517	44,537	8,660	35,876
부산	8,332	23,240	29,379	18,855	19,294	3,509	11,401
대구	10,420	21,559	22,997	17,966	8,982	3,234	8,982
인천	10,014	51,499	30,756	25,749	16,093	3,933	18,596
광주	6,147	11,910	9,221	9,988	8,452	1,536	5,378
대전	12,247	22,395	15,047	6,649	2,099	700	2,449
울산	6,578	26,965	27,623	9,865	11,180	1,972	7,235
세종	847	1,977	2,542	1,412	282	282	1,977
경기	35,241	114,799	121,206	69,948	56,064	11,213	50,192
강원	4,708	16,478	15,563	8,238	10,331	1,177	4,578
충북	14,132	25,290	21,942	28,264	15,249	2,604	9,297
충남	5,141	14,530	17,435	13,635	8,718	1,789	9,612
전북	7,157	18,340	25,274	15,881	8,052	4,697	11,407
전남	7,949	15,454	22,078	11,481	7,507	3,680	7,507
경북	13,672	25,098	27,908	27,533	16,857	4,683	16,107
경남	3,947	10,150	16,352	9,586	6,203	1,410	6,485
제주	2,064	8,604	5,850	3,097	2,753	688	1,377

주: 각 시도별 어르신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54〉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표 2-94〉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2)

(단위: 가구)

구분	방과후활동지도	개인별맞춤상담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모임지원	기타	계
전국	84,679	425,563	419,864	28,859	129,665	3,151,327
서울	7,422	108,249	78,558	5,567	53,197	649,495
부산	4,386	18,417	15,348	1,316	3,946	157,423
대구	4,671	19,762	17,966	1,079	9,701	147,321
인천	16,809	14,663	17,166	0	8,940	214,218
광주	2,305	14,983	0	769	3,074	73,763
대전	1,749	1,400	2,449	0	0	67,184
울산	3,945	14,470	17,758	1,315	5,920	134,826



구분	방과후활동지도	개인별맞춤상담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모임지원	기타	계
세종	0	2,542	565	282	0	12,707
경기	16,552	85,432	118,002	9,611	3,204	691,465
강원	8,238	10,070	15,955	524	5,755	101,616
충북	6,695	24,546	30,124	1,115	7,810	187,066
충남	1,564	14,530	22,800	1,564	3,800	115,116
전북	1,343	25,274	35,115	1,566	5,145	159,250
전남	3,239	36,355	442	736	2,944	119,371
경북	3,933	18,917	31,091	1,685	9,926	197,412
경남	1,692	10,150	17,480	846	1,974	86,273
제주	688	4,818	3,441	1,033	2,409	36,822

주: 각 시도별 어르신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2-54>의 개별 서비스 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소득계층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를 보면, 최저생계비이하계층 가구는 ‘개인별 맞춤상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취약계층과 중하위소득계층 가구는 ‘복지정보 상담’ 서비스를, 중상위소득계층 가구는 ‘고용지원’을, 상위소득계층 가구는 ‘개인별 맞춤상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함.

○ 최저생계비이하계층의 경우, ‘개인별 맞춤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29,843가구이고, ‘복지정보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129,211가구로 추정됨.

○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정보 상담’ 서비스 필요가구는 54,143가구, ‘개인별 맞춤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46,093가구로 추정됨.

<표 2-95> 소득계층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단위: 가구)

구분	자녀 양육 서비스	고용 지원	복지 정보 상담	재활 훈련	문화 활동 지원	이성교제 결혼지원	주거환경 개선
전국	179,724	512,643	519,390	347,703	238,308	55,818	209,110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36,999	118,113	129,211	93,336	50,940	13,014	64,567
취약 계층	15,194	32,990	54,143	30,829	21,414	6,043	34,307
중하위 소득계층	67,278	171,045	168,686	107,745	68,172	20,461	58,637
중상위 소득계층	38,617	131,512	112,336	72,899	59,238	8,482	35,356
상위 소득계층	21,850	63,255	54,271	44,420	41,673	7,666	12,950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표 2-96〉 소득계층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2)

(단위: 가구)

구분	방과후 활동 지도	개인별 맞춤 상담	일상 생활 지원	장애인 모임 지원	기타	계
전국	84,679	425,563	419,864	28,859	129,665	3,151,327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14,185	120,889	129,843	6,986	32,202	810,285
취약 계층	6,820	46,093	44,019	4,775	17,851	314,476
중하위 소득계층	26,796	131,186	135,959	7,862	48,327	1,012,153
중상위 소득계층	23,952	87,232	68,000	7,399	20,836	665,859
상위 소득계층	14,059	38,704	39,944	1,452	8,309	348,553

주: 소수점이 있는 표본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가구추정에 사용된 서비스별 합계는 전국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제5절 분석결과와 시사점

### 1. 가구부문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 복지욕구조사 가구분석 및 정책대상규모 추정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사·도별로 가구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움은 차이를 보임.

- 저소득 및 과다지출로 인한 경제생활, 부채청산 및 실직·재취업·퇴직 등의 어려움이 주로 나타난 광주 및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취업 및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 이와 함께 가족돌봄과 자녀양육 등의 서비스도 요구되었으며, 가정내 불화로 인한 단절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서울과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사·도별로 지역사회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서울, 경남 및 제주도로 나타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부족이 심각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복지와 의료 시설 공급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학교폭력 및 치안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광주를 대상으로 학교 및 시민을 위한 안전강화 정책이, 주택·주거환경 및 재개발이 열악한 대구는 주거정책 등이 필요하여 지역별로 정책우선순위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사·도별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욕구는 차이를 보임.

-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 불편하다고 지정한 8대 도지역(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을 대상으로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됨.
- 시설의 정보제공 부족을 응답한 5개지역(서울, 광주, 대전, 경남, 제주도)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 부족을 지정한 서울, 부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 2. 대상별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 대상별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복지관련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과 ‘비용부담’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이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정보제공 부족’이었음.
  -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이었는데, 특히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구도 증가하였고,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와 ‘건강(체육) 및 의료서비스’ 욕구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취학 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 제공 부족’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으나, 그 다음은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을,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특히, 충남은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의 부족'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렇듯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것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지리적 위치 또는 교통수단의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보였음은 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강하였고,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서비스의 욕구도 두 번째로 나타남.

- 따라서 육아와 일의 성공적 양립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아이와 정서적 공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나 지역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등 취학 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됨.

○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들 자녀양육을 위해 방과 후 학습지도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으며, 체험학습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방과 후 학습지도나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욕구가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높으면 취미·특기교실이나 체험학습 활동 등의 욕구가 높았음.
- 따라서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취미·특기 계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입시나 진로와 관련된 진로 상담을 필요로 했으며, 또한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욕구도 상당히 높았음.

-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진로상담과 문화취미활동의 욕구가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과 아르바이트 연계프로그램 서비스의 욕구가 높았음.
  - 따라서 낮은 소득계층의 청소년에게는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1:1 맞춤형 학습지도 등 학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어르신은 건강 악화로 수발이 필요할 경우 집에서 방문도우미가 수발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음.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 대상별 사회복지관련 시설(또는 프로그램)의 불편한 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나 프로그램 및 관련정보 제공의 미흡으로 인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조차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역주민들은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 결론적으로, 지역에 건립된 사회복지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내 대상에 따라 차별적, 선별적, 개인별 맞춤형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 3. 정책대상규모 추정 분석결과의 시사점

- 가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별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2천만 가구의 4~12%까지의 규모를 보였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른 정책대상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생활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가장 많은 2,353, 40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심리 및 정서적 지원 필요가구 1,800,757가구, 취업지원이 필요한 가구 1,332,520가구, 부채상환지원이 필요한 가구 1,010,676가구 등이었음.

- 이 외에도 가족돌봄 지원 필요 가구 925,595가구, 자녀양육지원 필요가구 803,355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부채상환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하며, 정서심리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소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대 등에 기인되는 양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하였음.
- 따라서 가구가 당면한 생활비 및 부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단기정책과 함께 취업지원에 의한 자립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가구원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돌봄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정책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제3장

#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

제1절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 정보

제2절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수와 지표체계

제4절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유형과 산출 방법

제5절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결과





# 3

##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

### 제1절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 정보

□ 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 정보

○ 복지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 정보는 다음 <표 3-1>과 같이 요약됨.

<표 3-1> 지표 정의 및 기본 정보

구분	중분류	지표	산식	자료출처	자료 생성 연도
사회복지환경	인구	유년부양비	$\frac{[(0\sim14\text{세 인구})/(15\sim64\text{세 인구})]\times 10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0~13 (세종 포함)
		노년부양비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64\text{세 인구})]\times 100}{}$		
		독거노인 비중	$\frac{(65\text{세 이상 1인 가구 가구원 수})}{(65\text{세 이상 가구원 수})}\times 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등록장애인 비율	$\frac{(\text{등록장애인 1~6급}/\text{주민등록인구})\times 100}{}$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0~13
	경제	사업체 증가율	전년도 대비 사업체수 증가 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011~13
		고용률	$\frac{(\text{취업자} / \text{15세 이상 인구})\times 100}{}$	(e-지방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13
	재정	재정자주도	$\frac{(\text{자체수입}+\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times 100}{}$	(e-지방지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13 (13 세종 제외)
		복지예산비중	사회복지 항목의 비중	(e-지방지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연감	2010~12 (세종 제외)
	사회	범죄율	인구 1천명 당 범죄발생건수	(e-지방지표) 경찰청, 범죄 통계	2010~12 (세종 포함)
		외국인거주비율	인구 1천명 당 외국인수	(e-지방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13 (12~ 세종 제외)
		조이혼율	인구 1천명 당 이혼율	(e-지방지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0~13 (12~ 세종 제외)
사회복지노력	소득	복지예산	1인당 복지예산(만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2013(세종 제외)
		빈곤/차상위가구당지자체자세관련복지예산			
	건강	보건예산	1인당 보건예산(만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2013(세종 제외)
		인구당 보건소인력	1인 10만명당 보건소인력	보건복지부, 보건소및보건지소 운용현황	2010~13 (세종 제외)
	교육	교육예산	학생(5~19세 학령 아동·청소년) 1인당 교육예산 (지자체 예산만 포함)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2013(세종 제외)
		학생당 교원수	학생 100인당 교원 수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2012

구분	종분류	지표	산식	자료출처	자료 생성 연도
	주거	취약계층1인당주거복지예산비중			
		주택전세가격지수	2012년 11월 대비 2013년 11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3(세종 제외)
	돌봄	노인/장애인1인당돌봄예산비중			
		1인영유아당돌봄예산비중			
	고용	노인일자리비율(노인 인구대비)			
		사회적기업고용율(고용인구대비)			
사회복지성과	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가구소득	가구소득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전체 주민 중 차상위계층 비중			
		빈곤률(4년마다)			
	건강	연령표준화사망률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0~1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13
	교육	학업중단율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2012
		교육만족도(4년마다)			
	주거	주택보급율	주택보급률	내고장알리미	2010~13
		주거만족도(4년마다)			
	돌봄	돌봄관련 서비스 대상자 비중			
		여성고용률	연도말 기준 여성고용률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0~13
		보육/성인돌봄만족도(4년마다)			
	고용	자활성공률+취업성공 패키지성공률			
		고용만족도(4년마다)			
지역복지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4년마다)			
	사회의 질	주관적사회의 질(사회적신뢰, 지역사회만족도등)(4년마다)			
	지역복지의 질	출산율	합계출산율	(e-지방지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0~13 (세종제외)
		자살율	(자살자수 / 연앙인구)*100,000	(e-지방지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0~13 (세종제외)

#### □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의의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보장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사회보장의 단위로 등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이 아닌 자자체가 복지의 핵심적 주체로 부상되고 있는 추세임.

○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장에 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지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를 넘어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떠한 성과와 결과를 창출하였는가,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함.
- 2013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사회보장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국가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통계 작성과 보고가 의무사항이 되었음((사회보장기본법 32조).
- 반면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지표와 지수의 개발과 활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현황과 연구수준은 매우 미약한 상황임.

○ 시·도를 기반으로 한 지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지만,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통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sup>5)</sup>

-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지역수준의 사회보장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함.
- 지역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이슈가 상이하므로 지역사회보장 통계 및 관련 지표를 지역별로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인지, 혹은 지역에 대한 고려를 감안한 맞춤형(tailor-made) 통계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5)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사회지표나 통계연보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에 관련된 지표들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대한 통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통계,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대한 통계,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지표는 행정에 필요한 통계인 반면,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나 복지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지성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통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표/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사회보장통계를 통한 지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연동된다면 통계 산출의 필요성이 극대화될 것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히 각 시·군·구 단위의 특성을 감안해서 진행시킬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지역사회보장 통계 및 지표 산출의 목적과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지역사회보장제도 현황이나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수준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의 투입에서 결과 전체를 체계(system)적 관점으로 포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안상훈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출이나 인력 등에 관한 투입요소, 정책의 현황에 대한 산출요소, 그리고 빈곤이나 주관적 만족감 등에 관한 성과요소가 혼재되어서 제시되는 사회보장통계 및 사회지표 연구가 많으며, 이런 경우 사회지표의 정책적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친화적(policy-friendly) 지역사회보장 통계 및 지표를 생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과 동일하게 단순히 정책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만을 보여줄 경우 정책에 대한 보고(reporting)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유추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임.

- 하지만, 성과만을 나타낼 경우 어떠한 요인이나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성과가 도출했는지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성과 외에 투입과 산출에 대한 요소 역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sup>6)</sup>

6)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일부 성과지표(빈곤율, 출산율, 자살율 등)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① 성과지표가 사회보장제도 노력이 미비하기 때문인지 사회보장 이외의 경제수준이나 문화적 요인 때문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② 또한 사회보장지수의 정책친화성(policy-friendly)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즉, 이러한 성과지표의 개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 사회보장에 대한 투입, 산출, 성과 세 가지 차원 외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회보장에 대한 성과는 제도의 노력만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구조, 노동시장, 경제상황 혹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의 맥락적/환경적 요인이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표가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절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

### 1. 사회복지 환경

#### □ 인구

- 사회복지환경의 인구 분야는 취약집단의 규모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이들 취약집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지역 사회복지 지출의 양이 결정됨.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소득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노인을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 있음. 이들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노인들에 대해서는 공적 소득보조가 이뤄지고 있음.
  - 물론 돌봄서비스나 노인에 대한 공적 부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복지환경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제한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인구 속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부재하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특히 집중해야 하며,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상 현금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유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0~14세 유년인구의 비율을 의

---

함의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차원적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함. 유년부양비는 유년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받음.

- 2010~2013년 기간 중에 모든 지역에서 유년부양비는 감소하고 있음.
- 계속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유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유년부양비와 유사한 형태로, 노년부양비도 노년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받음.
- 2010~2013년 기간 중에 모든 지역에서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해방 이후 인구 급증기에 출생한 세대가 노년인구에 포함되기 시작한 영향임.

〈표 3-2〉 사회복지환경의 인구 분야

	유년부양비 (기간 평균)	노년부양비 (기간 평균)	독거노인비중 (2010)	등록장애인비중 (기간 평균)	순위
서울특별시	17.48	13.86	13.11	4.00	2
부산광역시	16.91	16.24	17.31	4.83	2
대구광역시	19.96	14.42	16.57	4.67	6
인천광역시	20.56	12.20	14.55	4.71	1
광주광역시	24.08	13.19	17.35	4.68	8
대전광역시	22.36	12.41	14.79	4.70	6
울산광역시	21.74	9.62	16.40	4.29	4
경기도	23.00	12.47	13.23	4.20	5
강원도	20.67	22.08	17.83	6.55	10
충청북도	21.96	19.23	17.70	6.03	9
충청남도	22.79	21.97	17.45	6.19	13
전라북도	22.03	23.11	20.17	7.12	15
전라남도	21.69	28.42	22.55	7.64	16
경상북도	19.98	22.97	20.57	6.30	12
경상남도	22.16	17.18	20.74	5.45	10
제주특별자치도	24.86	18.31	18.95	5.56	14

주: 순위는 각 지표의 순위의 단순 합을 이용한 순위임.

- 독거노인 비중은 전체 65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며, 이들 1인 가구는 현 거주형태가 1인 가구이므로 동거하는 가족 또는 가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 이들이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임.

-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등록장애인 비중은 2010~2013년 기간 중에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노년으로 인한 신체 능력의 상실에 따라서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의 인구적 환경 순위를 종합하여 각각의 지표의 순위를 단순 합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의 순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음.
- 반대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순으로 열악한 결과를 보였음.

#### □ 경제

○ 사회복지환경의 경제적 여건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률을 통해서 확인함. 지역 내 사업체의 증가는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고 근로가능 연령 인구 유입으로 인구 조건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사업체 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체의 증가는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사업체수 증가는 전년 대비 증가한 사업체의 규모를 통해 확인함. 2010년에서 2013년 기간 중 사업체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충청남도로 기간 평균 4.37% 증가하였음.
  - 이 외에 제주도(3.95%), 경기도(3.89%), 전라북도(3.70%)가 사업체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부산광역시(1.50%), 서울특별시(2.40%), 전라남도(2.90%)는 사업체 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음.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2010~2013년 기간 중에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65.7%), 충청남도(61.4%), 인천광역시(61%) 지역의 고용률이 높고, 부산광역시(55.0%), 강원도(56.3%),

광주광역시(56.7%)는 고용률이 낮음.

#### □ 재정

- 사회복지환경의 재정적 여건은 지역의 재정자주도와 복지예산 비중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자체재원이 풍부하면 지역 내에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지역 예산 중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지역의 복지 여건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중에서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복지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풍부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각종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 많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높게 책정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지역 내 노인인구가 매우 많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출이 많을 수 있으며, 이는 복지예산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예산 중에서 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대규모 사업체와 인구 등 세원이 풍부한 지역이 높음.
    - 서울특별시가 90.1%로 가장 높고, 경기도 81.6%, 울산광역시가 80.2%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70% 대의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60% 대의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음.
  - 예산 중 사회복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2010~2012년 기간 중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은 대체로 유지되는 것에 비해서 사회복지 영역의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복지예산의 비중은 도 지역보다는 특·광역시 지역이 높음.



- 복지예산 비중은 광주광역시가 37.9%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 35.4%, 대전광역시 35.3%, 부산광역시 33.8%, 인천광역시가 30.9%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24.6%, 전라북도가 23.5%로 높은 편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2.7%로 가장 낮음.

#### □ 사회

○ 사회복지환경의 사회적 여건은 범죄율, 외국인 거주비율, 조이혼율을 통해서 확인함.

- 범죄 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여건의 악화 때문이거나, 사회적 가치의 훼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주 및 생활 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생활환경에 보다 집중하기 위할 때에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의 발생률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다음으로 외국인 거주가 높은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목적, 즉 취업 및 사업의 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마지막으로 이혼율은 취약가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야 함.

〈표 3-3〉 사회복지환경-경제, 재정, 사회 분야

구 분	사업체수 증가율 (기간 평균)	고용률 (기간 평균)	재정자주도 (기간 평균)	범죄율 (기간 평균)	외국인 거주비율 (기간 평균)	조이혼율 (기간 평균)
서울특별시	2.40	59.5	90.1	34.6	25.3	2.0
부산광역시	1.50	55.0	74.2	36.1	9.8	2.1
대구광역시	2.21	57.4	74.5	38.6	8.7	2.0
인천광역시	2.77	60.5	79.4	30.7	17.5	2.6
광주광역시	2.79	56.7	69.2	44.0	9.8	2.0
대전광역시	3.26	57.4	74.6	31.2	9.8	2.0
울산광역시	2.79	58.8	80.2	33.9	16.7	2.3
경기도	3.89	59.4	81.6	31.1	24.8	2.4
강원도	2.96	56.3	73.3	37.2	8.7	2.4

구 분	사업체수 증가율 (기간 평균)	고용률 (기간 평균)	재정자주도 (기간 평균)	범죄율 (기간 평균)	외국인 거주비율 (기간 평균)	조이혼율 (기간 평균)
충청북도	2.94	59.4	72.4	32.7	16.4	2.3
충청남도	4.37	61.4	71.4	31.9	22.7	2.3
전라북도	3.70	57.7	68.8	32.5	11.6	2.2
전라남도	2.90	62.1	66.2	34.5	12.3	2.2
경상북도	3.21	62.1	73.2	34.9	14.9	2.1
경상남도	3.38	59.7	73.9	36.4	19.4	2.3
제주특별자치도	3.95	65.7	66.2	44.1	14.0	2.5

- 범죄율은 인구 1천명 당 범죄발생 건수로 측정함. 2010~2012년 기간 중 평균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44.1건, 광주광역시가 44건으로 높은 편이며, 대전광역시 31.2건, 경기도 31.1건, 인천광역시는 30.7건으로 낮았음.
- 구성원들의 생활상 안전에 보다 주목하고자 할 경우에는 5대 범죄에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어느 경우든 범죄발생건수는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거주 비율은 인구 1천명당 외국인 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거주외국인을 모두 포괄함.
  - 체류 자격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의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며, 다문화 가족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결혼이민자의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1천명 당 25.3명을 보인 서울특별시로 나타남.
  - 그 외에도 경기도가 24.8명, 충청남도가 22.7명으로 높고, 경상남도가 19.4명으로 뒤를 잇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의 경우에는 인구 1천명 당 10명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혼율은 인구 1천명 당 이혼율을 의미하는 조이혼율로 측정하였음.
  - 인천이 1천명 당 2.6명, 제주가 1천명 당 2.5명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이 외에 경기도 2.4명, 강원도 2.4명, 경상남도 2.3명, 충청북도 2.3명,

충청남도 2.3명으로 높은 편임.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은 인구 1천명 당 2.0명으로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 사회복지 노력

### □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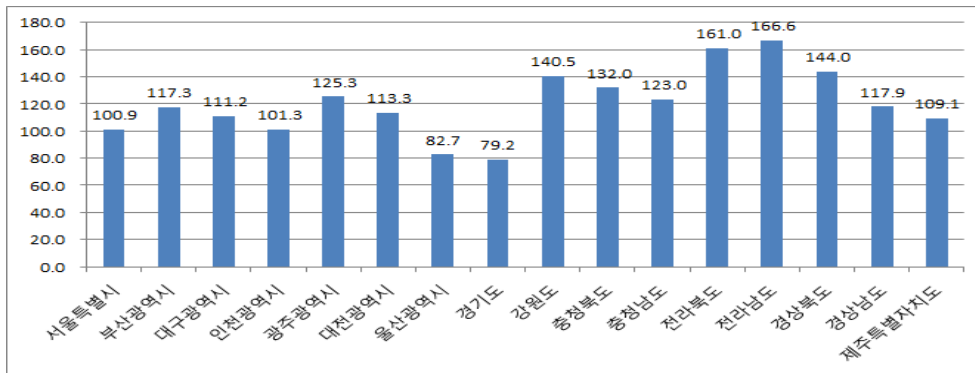
- 사회복지 노력의 소득 분야는 복지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 지표는 주민 1인당 복지 예산액임.
  - 그러나 복지예산은 소득보장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또한,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후적인 결과를 보정한다는 점에서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소득 분야의 노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음.
  - 복지예산 비중의 경우에는 지역의 예산 규모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지역의 예산 사업 규모 자체가 클 경우에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노력을 적게 하는 지역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가지게 됨.
  - 특히,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정 의무지출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중은 상대적 규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보면 법정 의무지출과 무관한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통한 지출 규모 등을 살펴보는 것이 지역의 복지 노력을 보다 적실하게 반영함. 이에 여기서는 인구 당 복지예산을 활용하고자 함.
- 사회복지 노력에서 소득 분야는 2가지 지표로 측정하고자 하였음.
  - 첫째는 지역주민 1인당 복지예산이며, 둘째는 빈곤/차상위가구 1인당 복지예산임.

- 전자는 복지사업을 모든 지역 주민 대상으로 펼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지역 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임.
- 후자는 복지사업이 대체로 빈곤/차상위가구에 한정된다는 관점에서 지역 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임.

○ 지자체별 예산 항목 중에서 사회복지 영역은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세분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여기서는 지역주민 1인당 복지예산으로 포괄적인 형태로 먼저 살펴봄.
  - 왜냐하면 지역에서의 취약계층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음으로는 예산 구분에서 이들 사업영역의 구분이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그 세부항목 별로 비교하는 것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그림 3-1] 주민 1인당 복지예산



- 2013년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은 전라남도가 166.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전라북도 161.0만원, 경상북도 144.0만원, 강원도 140.5만원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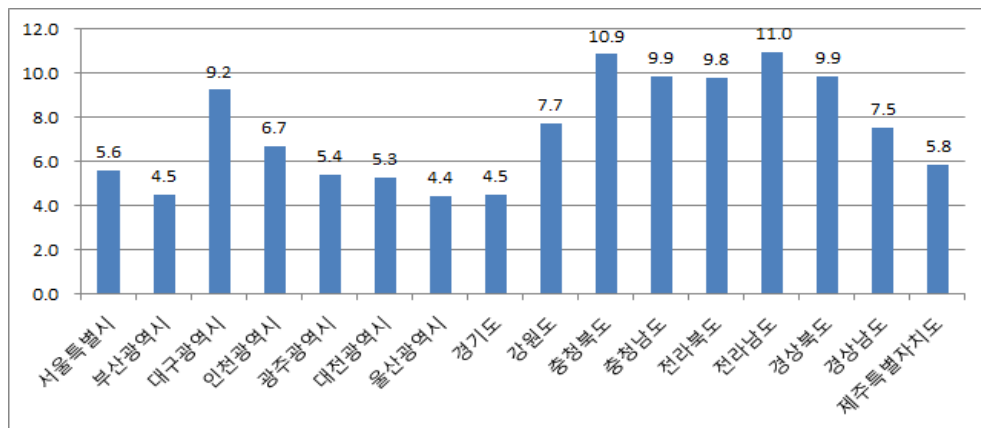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82.7만원, 경기도는 79.2만원으로 낮은 편이었고, 서울특별시 100.9만원을 보였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주민 1인당 약 110만원 수준의 복지예산을 보였음.

## □ 건강

○ 사회복지 노력의 건강 분야는 지역 주민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예산과 인구 당 보건소 인력을 이용함.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항목은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의 두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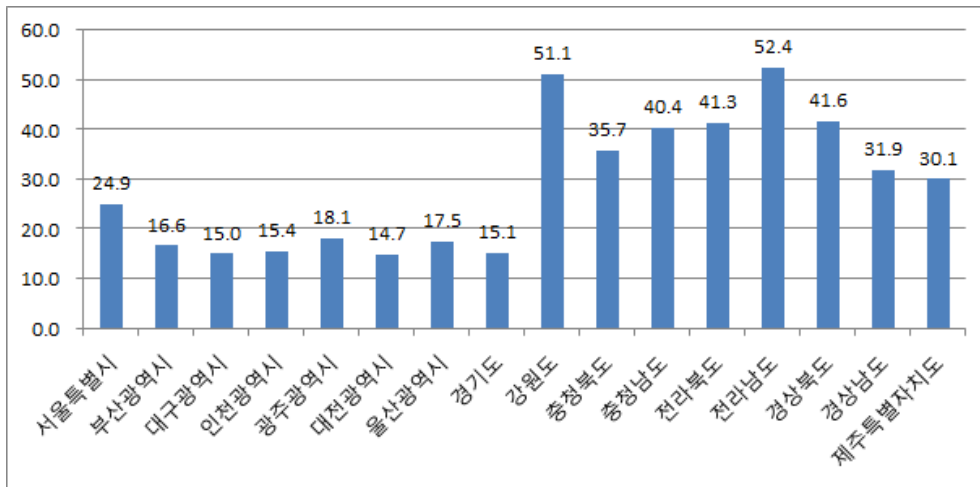
- 보건의료 예산은 지역의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이 경우에는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 운영 등에 비용이 지출됨.
- 식품의약품안전 분야는 해당 분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편임.
- 따라서 보건 분야 예산은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건강 분야에서는 인구당 보건예산과, 예산을 지출하는 보건소 인력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그림 3-2] 인구 당 보건예산



- 인구 당 보건예산은 전라남도가 11.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가 10.9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9.8~9.9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 보건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같은 도 지역이지만 강원도는 7.7만원, 경상남도는 7.5만원으로 적은 편이며, 경기도는 4.5만원으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적음.
- 특·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9.2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가 6.7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1인당 4.5만원, 울산광역시는 1인당 4.4만원으로 적은 편임.

[그림 3-3]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인력



- 보건소 인력은 인구 10만명 당 보건소 인력 지표를 사용하였고, 보건소 인력은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및 행정 지원직이 모두 포함됨.
- 의료 인력에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도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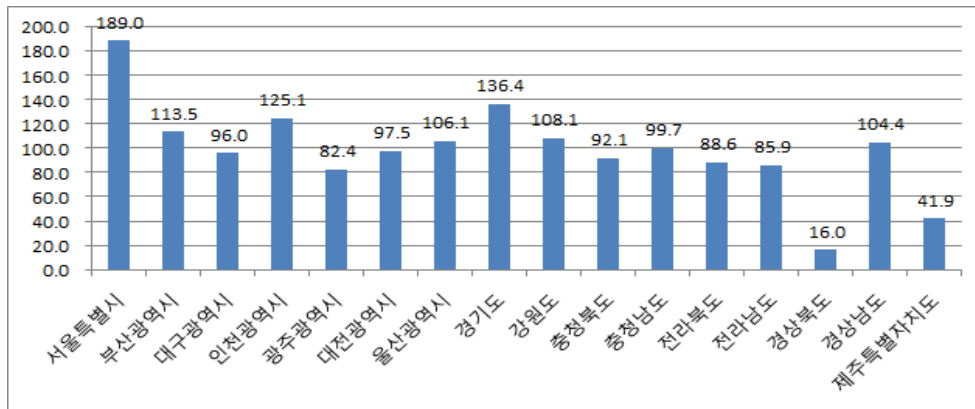
많이 배치되어 있음.

- 10만명 당 보건소 인력은 전라남도가 52.4명, 강원도가 51.1명으로 많은 편이고, 충청남도 40.4명, 전라북도 41.3명, 경상북도 41.6명으로 많은 편이었고, 경상남도는 31.9명, 제주특별자치도는 30.1명으로 도 지역 중에서는 적은 편이었음.
-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보건소 인력이 적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대전광역시 14.7명, 대구광역시는 15.0명 등이다. 서울특별시는 24.9명으로 시 지역 중에서는 높은 편이었음.
- 보건소는 시, 군 및 자치구 단위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역 당 인구가 적은 곳이 인력수가 많았으며, 병의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지소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배치가 많을 수 있음.
- 그러므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환경을 적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외에도 공공병원 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또한 민간 병원의 의료인력 배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 교육

- 사회복지노력의 교육 분야는 교육예산과 학생당 교원 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교육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음.
- 교육예산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에 한정하였음.
- 이 때문에 학습권의 질보다는 교육에 필요한 환경 여건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합함.
- 학습권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당 교원 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인력의 규모를 설명함.

[그림 3-4] 학생 1인당 교육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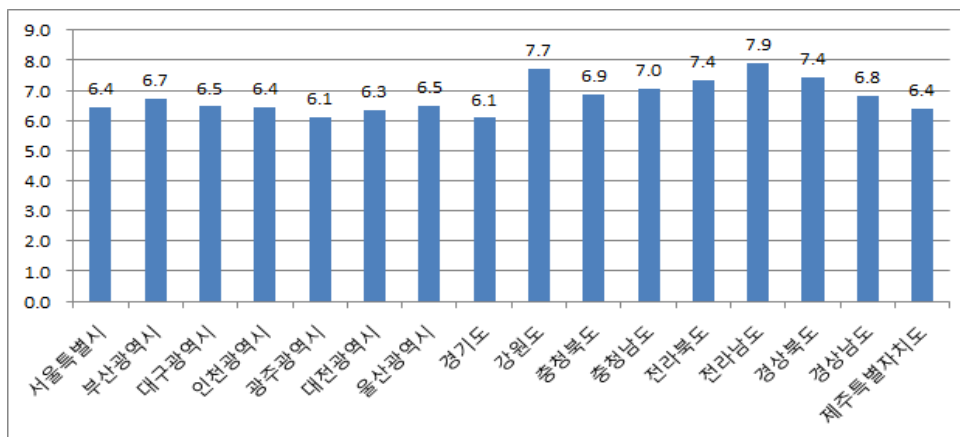


○ 교육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며, 학생은 해당 지역 학령기 아동의 수를 이용하였음.

- 교육예산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음.

- 서울특별시는 학생 1인당 189만원을, 경기도는 1인당 136.4만원이었음.
- 인천광역시가 125.1만원, 부산광역시가 113.5만원, 울산광역시가 106.1만원, 경상남도가 104.4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41.9만원, 경상북도는 16만원으로 적은 편이었음.

[그림 3-5] 학생 100명당 교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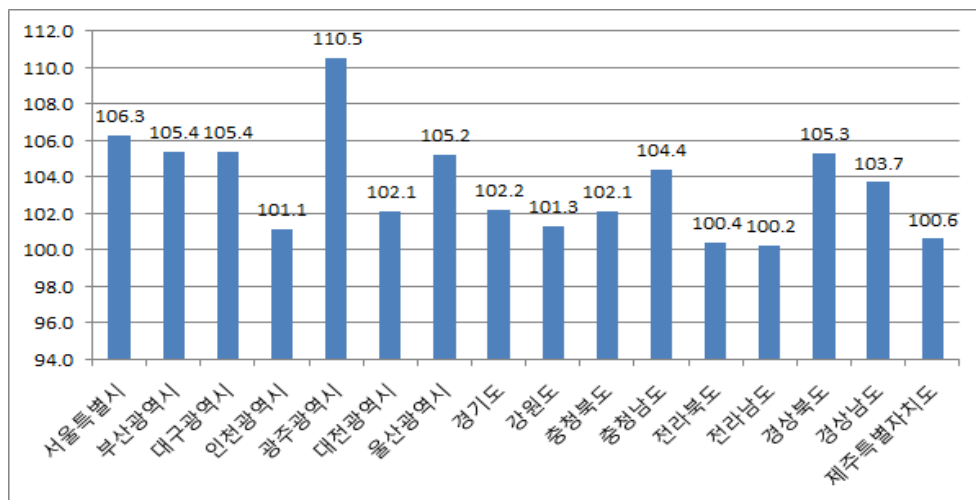


- 교원수는 초, 중, 고등학교 각급의 학생수와 교원수를 이용하여 학생 100명당 교원수를 추출하였음.
- 학생 100명당 교원수는 전라남도가 7.9명, 강원도가 7.7명, 경상북도가 7.4명, 전라북도가 7.4명으로 높았음.
- 이는 서울 6.4명, 경기도 6.1명으로 대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학생당 교원수가 적은 편이었음.

#### □ 주거

- 사회복지노력의 주거 분야는 주거 환경의 적절성에 주목하여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예산과 주택전세가격의 상승을 고려함.
- 주택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12년 11월 대비 2013년 11월의 주택전세가 격임.
- 광주광역시 110.5로 주택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적었음.

[그림 3-6] 주택전세가격 지수



〈표 3-4〉 사회복지노력-소득, 건강, 교육, 주거

	복지예산 (2013)	보건예산 (2013)	보건소 인력 (기간 평균)	교육예산 (2013)	교원수 (2012)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
서울특별시	100.9	5.6	24.9	189.0	6.4	106.3
부산광역시	117.3	4.5	16.6	113.5	10.6	105.4
대구광역시	111.2	9.2	15.0	96.0	6.5	105.4
인천광역시	101.3	6.7	15.4	125.1	6.4	101.1
광주광역시	125.3	5.4	18.1	82.4	6.1	110.5
대전광역시	113.3	5.3	14.7	97.5	6.3	102.1
울산광역시	82.7	4.4	17.5	106.1	6.5	105.2
경기도	79.2	4.5	15.1	136.4	6.1	102.2
강원도	140.5	7.7	51.1	108.1	7.7	101.3
충청북도	132.0	10.9	35.7	92.1	6.9	102.1
충청남도	123.0	9.9	40.4	99.7	7.0	104.4
전라북도	161.0	9.8	41.3	88.6	7.4	100.4
전라남도	166.6	11.0	52.4	85.9	7.9	100.2
경상북도	144.0	9.9	41.6	16.0	7.4	105.3
경상남도	117.9	7.5	31.9	104.4	6.8	103.7
제주특별자치도	109.1	5.8	30.1	41.9	6.4	100.6

### 3. 사회복지 성과

#### □ 소득

○ 사회복지 성과의 소득 분야는 빈곤 또는 차상위 계층의 규모에 주목함.

- 전체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이용한 빈곤율, 차상위 계층 비중을 이용하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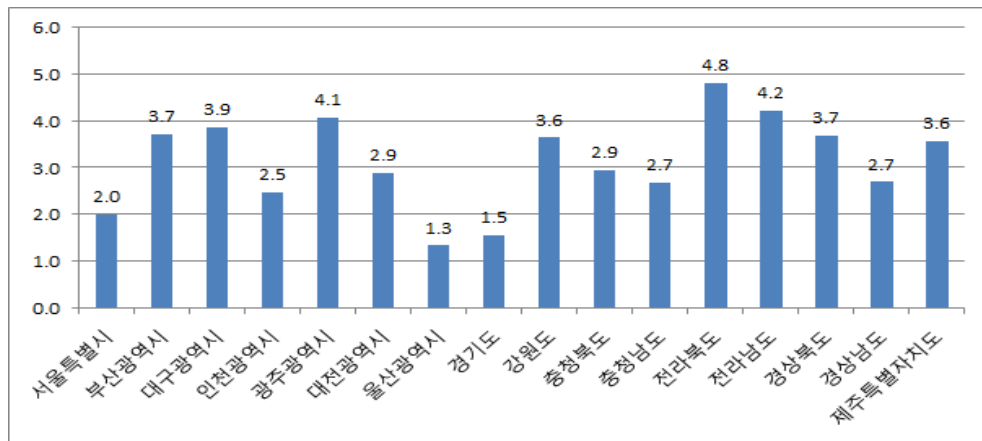
○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 성과와 사회복지 현황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여기서는 사회복지의 성과 측면에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실제 빈곤계층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4.8%이며, 전라남도가 4.2%, 광주광역시가 4.1%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부산광역시 3.7%, 대구광역시 3.9%, 경상북도 3.7%, 제주도 3.6%, 강원

도 3.6% 등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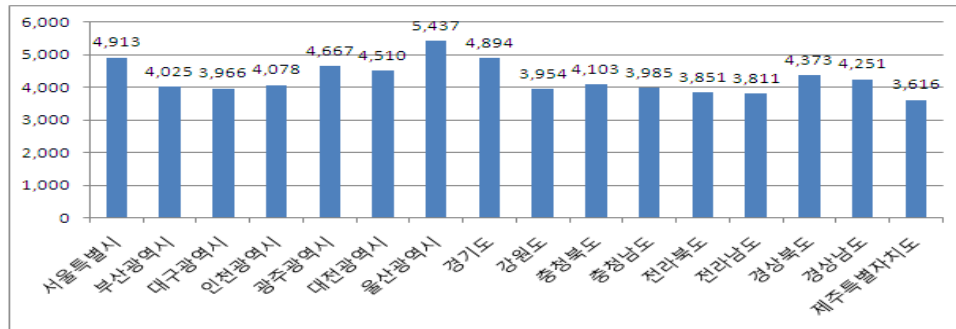
- 그 외에 서울 2.0%, 울산광역시 1.3%, 경기도 1.5%, 인천광역시 2.5%, 경상남도 2.75, 충청남도는 2.7%로 낮은 편임.

[그림 3-7]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는 시·도별 가구소득 규모를 통해서 지역의 소득수준을 대리하여 파악
- 울산광역시가 가구소득이 5,4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4,913만원, 경기도 4,894만원 등이었음.
- 제주도가 3,616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의 가구평균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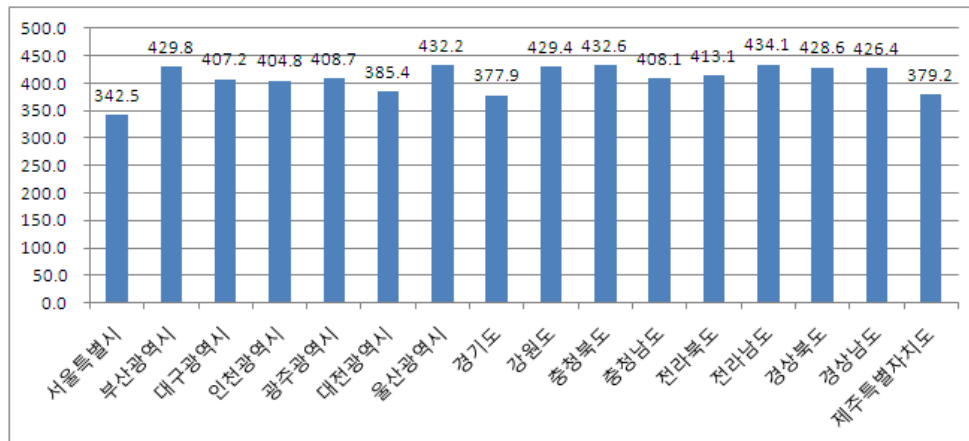
[그림 3-8] 시도별 평균 가구소득



## □ 건강

- 지역의 사회복지 성과 중 건강 분야는 사망률과 주관적 건강 수준으로 파악함.
  - 사망률은 주요 질병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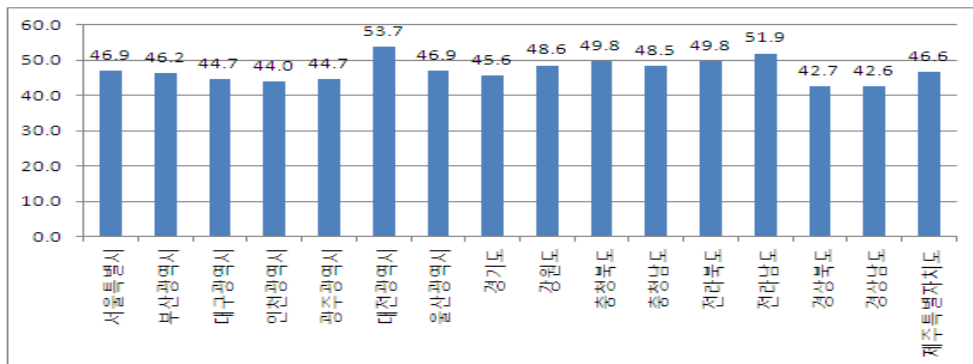
[그림 3-9] 연령표준화 사망률



- 후자를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하며,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0~2013년 기간 중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 기간 중 전라남도가 434.1명, 충청북도가 432.6명, 울산광역시 432.2명, 부산광역시 429.8명, 강원도 429.4명, 경상북도 428.6명, 경상남도 426.4명으로 나타남.
- 사망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342.5명, 경기도 377.9명, 제주특별자치도 379.2명, 경기도 377.9명, 대전광역시 385.4명으로 낮은 편임.
- 주관적 건강수준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백분율인데, 주관적 건강수준은 2010~2013년 기간 중에 점차로 줄어들고 있음.
-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대전이 53.7%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51.9%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49.8%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강원도 48.6%, 충청남도 48.5% 등임.
- 경상남도가 42.6%로 가장 낮으며, 경상북도 42.7%, 인천광역시 44.0%,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44.7%로 나타남.

[그림 3-10] 주관적 건강수준의 '좋음'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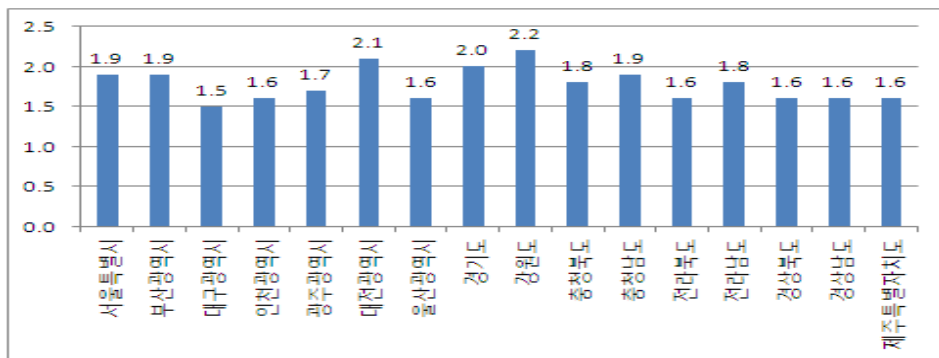
#### □ 교육

○ 사회복지의 교육분야 성과는 학업중단율과 교육만족도를 이용함.

- 학업중단율은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이 90%를 넘게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보통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은 질병, 가사,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을 유예 또는 면제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고등학교 학업중단율과 차이가 있음.
  -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2.2%이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2.0%,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1.9% 등임.
  - 반면에 학업중단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1.5%이며, 그 외에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1.6%로 나타남.

[그림 3-11] 지역별 고등학교 학업중단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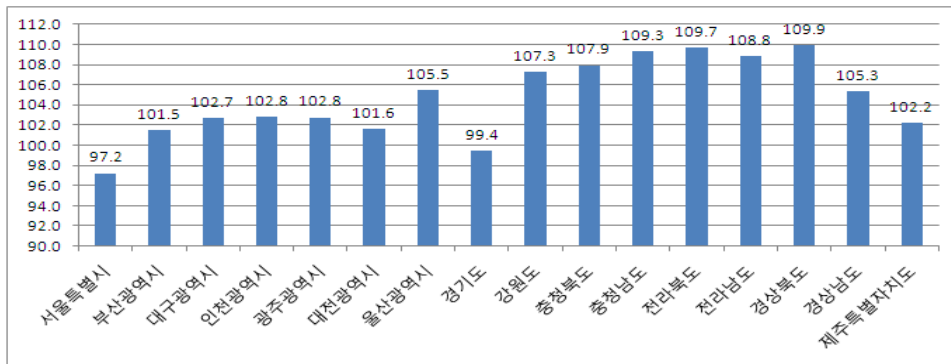
## □ 주거

○ 사회복지성과의 주거 분야는 주택보급률과 주거만족도로 측정함.

-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임.
  - 여기서 일반가구수는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이며,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함.
- 따라서 주택보급률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재고가 거주가구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줌.

- 이 지표는 주택재고 확대라는 주택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택의 배분상태를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이나 거주하는 주거의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2010~2013년 기간 중에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기간 평균으로 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109.9%, 전라북도 109.7%이었음.
- 제주특별자치시는 2010년 97.4%에서 2013년 108.3%까지 상승하였음.
- 상대적으로 특·광역시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낮은 편인데, 서울특별시 97.2%이며, 경기도는 99.4%로 낮은 편임.

[그림 3-12]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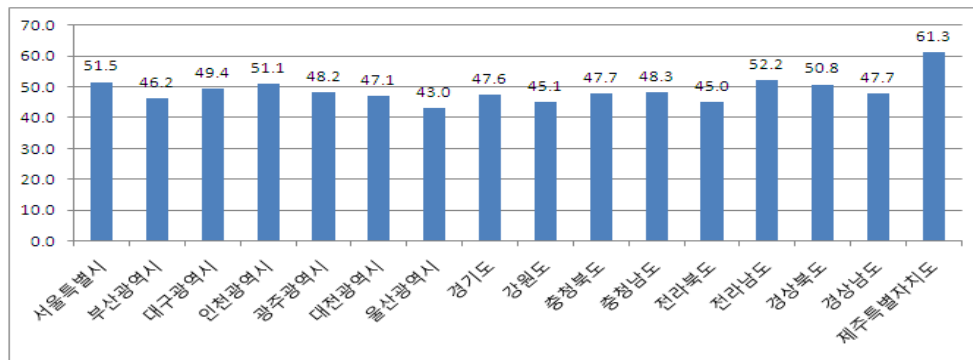
## □ 고용

- 사회복지 성과의 고용 분야는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공률 등 고용활성화 성과로 측정하였고, 이 외에 여성고용률도 고려함.
- 여성의 취업률은 여성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각종 돌봄 부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로도 간주될 수 있음.
- 여성고용률의 변화는 지역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울산은 2010년 46.2%에서 2013년에는 40.0%로 하락하였고, 전라북도는 42.6%에서 48.8%로 증

가하였음.

- 기간 중 평균값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고용률이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 52.2%, 서울특별시 51.5%, 인천광역시 51.1%, 경상북도 50.8%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여성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43.0%, 전라북도 45.0% 등임.

[그림 3-13] 여성고용률



〈표 3-5〉 사회복지성과-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

	사·도별 가구소득 (2013)	연령표준화 사망률 (기간평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기간평균)	학업중단율 (2012)	주택보급률 (기간평균)	여성고용률 (기간평균)
서울특별시	4,913	342.5	46.9	1.9	97.2	51.5
부산광역시	4,025	429.8	46.2	1.9	101.5	46.2
대구광역시	3,966	407.2	44.7	1.5	102.7	49.4
인천광역시	4,078	404.8	44.0	1.6	102.8	51.1
광주광역시	4,667	408.7	44.7	1.7	102.8	48.2
대전광역시	4,510	385.4	53.7	2.1	101.6	47.1
울산광역시	5,437	432.2	46.9	1.6	105.5	43.0
경기도	4,894	377.9	45.6	2.0	99.4	47.6
강원도	3,954	429.4	48.6	2.2	107.3	45.1
충청북도	4,103	432.6	49.8	1.8	107.9	47.7
충청남도	3,985	408.1	48.5	1.9	109.3	48.3
전라북도	3,851	413.1	49.8	1.6	109.7	45.0
전라남도	3,811	434.1	51.9	1.8	108.8	52.2
경상북도	4,373	428.6	42.7	1.6	109.9	50.8
경상남도	4,251	426.4	42.6	1.6	105.3	47.7
제주특별자치도	3,616	379.2	46.6	1.6	102.2	61.3



## 4. 지역복지

### □ 지역복지의 질

○ 지역복지의 질적인 측면을 대리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거주 이전이 비교적 용이하다면 인구의 증가는 지역복지의 질적인 측면을 대리함. 물론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일자리 양 측면에 영향을 받음.

- 지역복지의 질적 측면을 대리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출산율과 자살률이 있음.

○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인데,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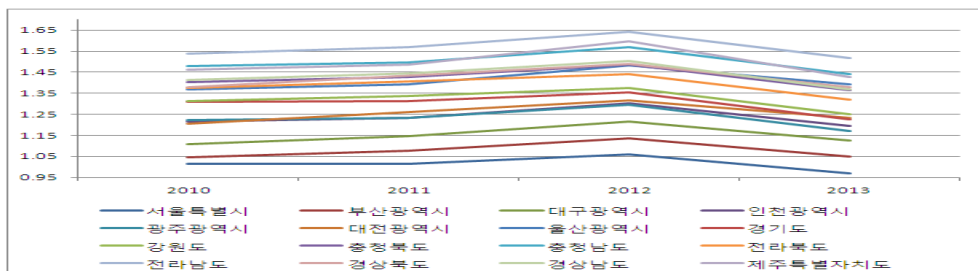
- 개별가구로 보면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 낳은 아이들의 양육 부담이 해결되어야 하는 등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함.

- [그림 3-14]는 2010~2013년 기간 중 각 지역의 출산율 변화를 보여주는 데, 대부분 지역의 출산율은 2012년 개선되었다가 2013년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기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변화한 지역은 별로 없으며, 기간 평균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57명으로 가장 높고, 충청남도 1.50명, 제주특별자치도 1.4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경기도(1.30명)를 제외한 도 지역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산(1.41명)을 제외한 특·광역시 지역의 출산율은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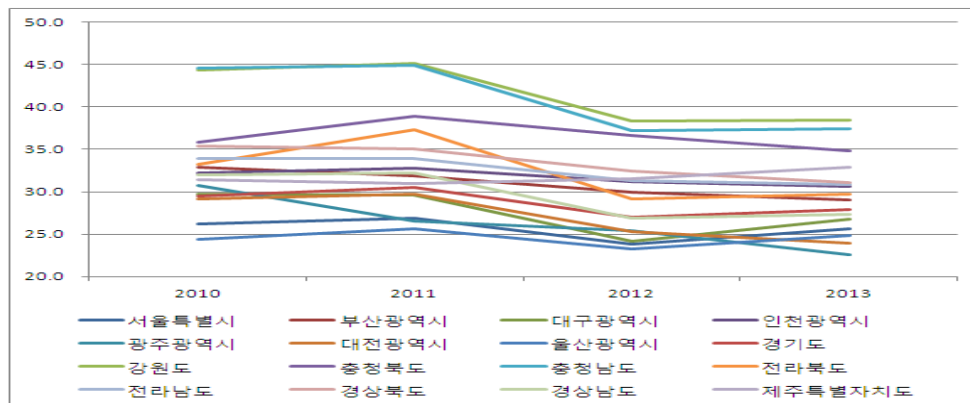
[그림 3-14] 출산율



○ 자살률은 1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앙인구로 나눈 값인데, 10만명당 자살자수를 계산함.

- 자살은 개인적 현상이지만, 특정한 지역의 자살자 수는 그 해당 지역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의 질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살은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경제적 이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의 질을 대리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자살률 역시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순위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자살률이 매우 높았으나 이 두 지역은 2012년과 2013년에 들어서 자살률의 상당한 하락을 보였음.

[그림 3-15]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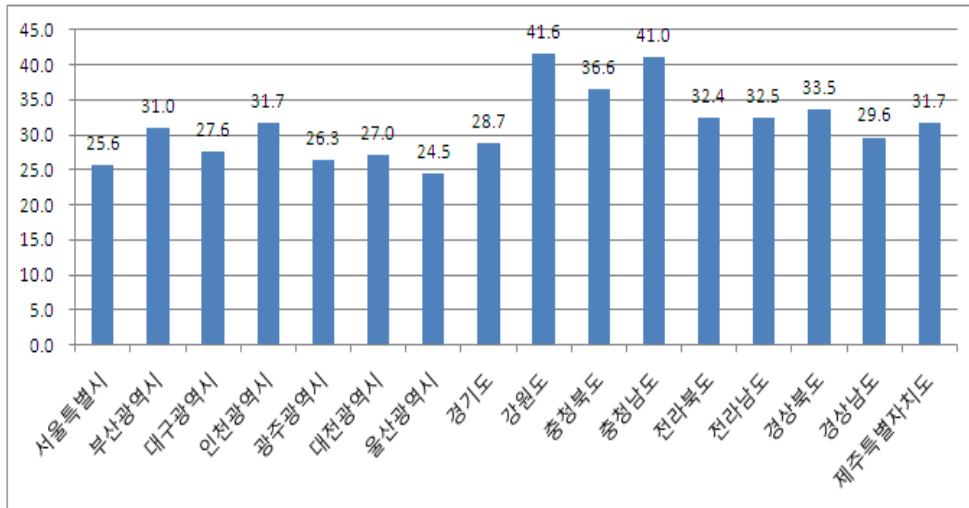


○ 2010~2013년 기간 중 지역의 평균 자살률은 [그림 3-16]과 같음.

- 강원도의 10만명당 자살자수가 41.6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가 41.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충청북도가 36.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경상북도 33.5명, 전라남도 32.5명, 전라북도 32.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자살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24.5명이었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25.6명으로 낮았음.

[그림 3-16] 2010~13년 기간 평균 지역별 자살률



###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수와 지표체계

#### 1.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의미

- 지수(index)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수준 또는 그 수준의 추세를 살피거나, 복수의 현상에 대한 추세를 서로 대비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수량의 변동을 기준 시점의 값에 대한 상대치로 표현한 값임.
- 지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제성별격차지수(The Global Gender Gap Index)(World Economic Forum, 2013),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UNDP, 2014) 등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수는 통계치의 종합(composite statistics) 또는 다수 지표(multiple indicators)를 통합한 복합척도(compound measure)로 정의된다(Babbie,

2013)는 점에서, 개별지표 또는 통계량을 통합하는 방법이 핵심임.

-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지표를 통합하는 방법은 지표값을 평균하는 것이고, 평균 계산에 있어서도 단순평균, 수정평균, 가중평균 등이 있음.
- 지표를 통합한 지수를 산출에서 각 지표의 가중치(weight)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가중치의 활용과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라스파이레스 산식, 파쉐산식, 피셔산식 등이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준을 척도화 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표현하는 지표(indicator)를 종합하여 수치로 환산한 결과임.
- 지역이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지칭함.
- 그러나 사회보장의 맥락에서 지역이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서 주민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문화와 일체감의 형성이 가능한 단위로 지역사회(communitiy)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보장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활동인 공공정책과 제도의 산물이자 궁극적 성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또는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entity)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지수는 시·도 또는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정책 및 제도를 둘러싼 환경(맥락), 사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성과, 그리고 지역주민과 사회의 질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수치임.
- 지수의 값은 기준 시점 또는 준거가 되는 집단의 수준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 또는 비율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지수는 특정시점에서 준거집단 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횡단적 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기준 시

점과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체계

□ 지수는 개별지표를 통합한 결과치라는 점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보장 지표를 수집·분류하고, 지수 산출을 위해 활용할 지표의 종류를 결정하는 지표 체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함.

○ 선행연구<sup>7)</sup>의 검토·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지표체계<sup>8)</sup> 구축과 사회보장영역의 지수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수 산출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지수 산출을 위한 상·하위 지표의 선정, 상대적 수치 비교를 위한 기준 설정과 계산 방법에 대한 논의들<sup>9)</sup>을 정리

7) 사회보장 영역의 지표와 지수 산출에 대표적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안상훈 외, 2010)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OECD의 4가지 정책목표(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통합)와 EU가 제시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OECD와 EU가 함께 제시한 국가행복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와 이를 국내에 적용한 윤강재·김계연(2010)의 연구가 있다. 사회보장 영역 중 특정한 분야에 집중한 국외사례로는 글로벌고령화 준비지수(GAP,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Jackson 외, 2010), 미국 연방정부의 고령화관련 통계포럼(federal interagency of ageing-related statistics, 2012)의 노인인구 행복지표,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적극적고령화지수(positive ageing indicators, 2007)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노인인구실태 조사와 노인복지지표 개발(정경희 외, 2002)과 고령화대응지수(정홍원 외, 2012) 등이 있다.

8) 최근 사회보장통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OECD가 제안한 PSR(Pressure-State-Response)모형이다. PSR 모형은 'Society at a glance'(OECD) 등의 사회지표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며,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 분석틀은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사회 및 사회정책 비교를 위해서 발전되었지만, 지역 단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장 지표체계와 지수 산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SR모형은 국가 또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P)을 보여주고, 각 지역의 복지현황/복지성과(S)를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R)이 필요한지 보여줄 수 있다. P-S-R이 엄밀한 인과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들을 통해서 특정한 맥락 하에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상황이 어떠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9) 지수개발과 산출과정에서 종합지수와 산출 기준(하위 영역 지표들의 총합산의 정당성), 지수 분류의 방법(상·하위 차원의 분류, 대상별, 유형별, 또는 시간별 분류), 가중치 부여의 상대성(전문가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 원인-결과 논리에 따른 지표의 1:1 분류 등의 이슈들이 존재한다. 종합지수와 산출과 관련해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안상수·변화순·문미경 외, 2009)의 아동·여성 안전지표 구축 및 개발 연구에서도 안전지표 체계의 각 영역 및 세부 관심 영역별로 관련 지표의 검증 후 관련지표들에 대한 통합지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대상 및 안전성과 관련된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지수의 산출에 있어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지표의 생산 기간 및 방식 등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하고 비교적 공통점이 있는 지표들을 하위 분야별로 묶고 여러 형태의 지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지표 체계를 위험요인과 대응요인과 관련한 지표들로 모아 각각 위험지수, 대응지수로 묶고 정책적으로 위험지수의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 정책 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수 계산 과정에서는 각 영역별 지표들을 단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최대치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수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보건복지부, 2013: 정  
홍원 외 2013)에 근거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지수를 산출하  
고자 함.

□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관  
련 통계지표를 분류함.

- 지표체계는 ‘사회보장 환경(맥락)’, ‘사회보장 노력(대응)’, 그리고 ‘사회보장  
성과(상황)’의 3개 영역에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보장 결과’ 영역의 지표를 추  
가하여 4개 영역으로 구성함.

- 결과지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역의 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관적 지표, 그리고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중  
합적 성격의 결과지표인 출산율과 자살율을 포함함.

- 이렇게 제시된 지표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  
역단위 사회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는 기초가 됨.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표 또한 맥락지표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통계들을 중심으로 구성됨.

- 인구학적인 정보, 지역 경제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에 관한 정보, 일반 사회적 요인들이 환경지표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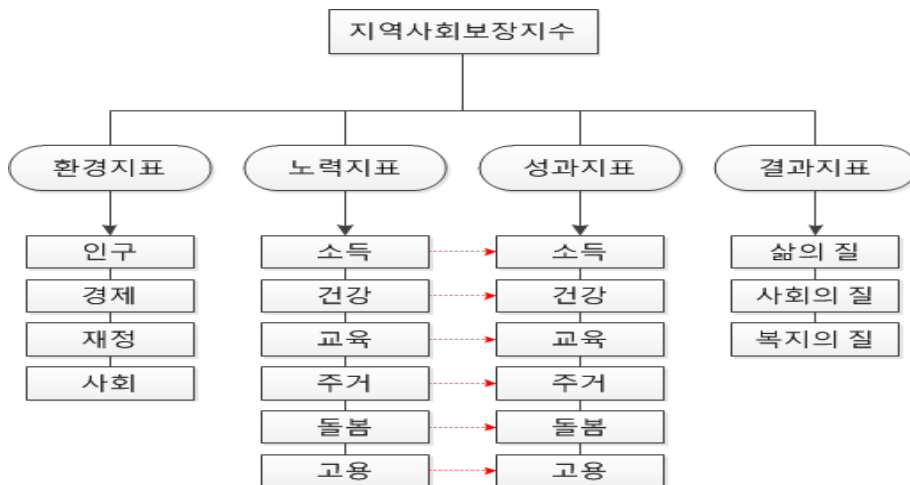
- 환경지표들은 지역단위 사회보장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함.

---

와 최소치를 고려해 0에서 1사이의 값(지표의 비율 값을 log로 취한 값)을 갖도록 한 후 지수를 산출하였  
으며, 안전지표의 경험지수를 모두 다 산출하거나 하나의 종합 지수로 생산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자료  
접근성의 문제와 연구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슈는 다음으로 미뤘다. 이와 같이 종합지수화 가능성  
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별, 나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 방법 및 기준 또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개발에 있어 종합지수화 방법은 한국이민학회(설동훈·김명아, 2008)의 이민자 사  
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서 제시한대로 지표의 측정 단위들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변수의 분포를 고  
려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료를 변환(100점 점수로 환산)하여, 주관적(AHP) 또는 객관적(요인  
분석)인 통계분석을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해 여러 하위 차원에 따른 부문별 지수화, 그리고 각 부문별 지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종합 지수화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에 압력을 경감하는 환경인지 또는 압력을 가중시키는 환경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임.

[그림 3-17] 지역사회 복지수준 지수의 지표체계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표는 지역주민의 복지 또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임.
- OECD(2014)의 사회지표 분석틀과 같이 사회정책의 목표로 설정했을 경우에 정책목표 사이의 상호배타성에 관한 이슈가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을 세분화하는 경우에 사회보장 노력과 성과간의 연계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 노력과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서 정책 영역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영역은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의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노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하고자 함.
- 이러한 영역은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등과 같은 전통적 영역과 새롭게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과 고용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 등의 영역은 사회 보장과 관련하여 아직은 명확한 정의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향후 정책의 변화 추세와 추가적 논의를 통해 문화, 환경 등의 영역을 추가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표는 지역사회보장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지역의 사회보장 ‘현황’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나 주거 상태는 지역단위의 관련 정책과 제도의 산출이며, 또한 사회보장 노력을 견인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임.

- 사회보장 노력과 대비해서 성과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정리하고자 함.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표는 다른 지표 영역에 비해서 가장 발전이 더딘 영역임.
  - 즉,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생산되는 통계지표의 종류가 적고, 작성되는 통계지표의 대부분이 개별 사업의 직접적 산출이라는 점에서 지표 생산의 표준화가 미흡한 상태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성과지표는 각 지자체 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교가능한 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표는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최종적 산물로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임.

- 지역사회보장의 맥락, 노력, 성과 등의 영역을 통합하여 결과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각 영역의 합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또는 지역사회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사회의 안녕(well-being)과 사회보장 정도는 보다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됨.
  -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정책의 각 영역을 넘어서 지역단위 사회보장의



종합적 결과지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임.

○ 결과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가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주관지표라 하더라도 지역 간 그리고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의 공통질문에서 도출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것임.
- 또한 결과지표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총괄적 성격의 지표로서 자살율과 출산율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결합하여 지역복지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3-6〉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구분	중분류	지표	포함여부
사회 보장 환경	인구	유년부양비 : $[(15\sim64\text{세 인구} \div 0\sim1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부양비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독거노인 비중	
		등록장애인 비중	
	경제	사업체수 증가율	●
		고용률	
	재정	재정자립도	●
		복지예산 비중	
	사회	범죄율(인구 천명당)	●
		외국인 거주 비율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사회 보장 노력	소득	1인당 지자체 자체 복지예산	●
		빈곤/차상위 가구 당 지자체 자체 관련 복지예산	
	건강	1인당 지자체 자체 보건 관련 예산	●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	
	교육	학생 1인당 교육예산	●
		교원 1인당 학생 수	
	주거	1인당 주거복지예산	●
		주택전세가격지수 (특정년도 대비)	
	돌봄	노인/장애인 1인당 돌봄예산	●
		영유아 1인당 돌봄예산	
	고용	노인일자리 비율 (노인인구 대비)	●
		사회적 기업 고용율 (고용인구 대비)	
사회	소득	전체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비중	●

구분	중분류	지표	포함여부
보장 성과		전체 주민 중 차상위 계층 비중	
		빈곤률 (4년 마다)	●
	건강	연령별사망률	●
		건강 만족도 (4년 마다)	●
	교육	학업중단율	●
		교육 만족도 (4년 마다)	●
	주거	주택보급율	●
		주거 만족도 (4년 마다)	●
	돌봄	돌봄관련 서비스 대상자 비중	●
		여성고용률	
		보육/성인돌봄 만족도 (4년 마다)	●
지역 복지	고용	자활성공률+취업성공패키지 성공률	●
		고용 만족도 (4년 마다)	●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4년 마다)	●
	사회의 질	주관적 사회의 질(사회적 신뢰, 지역사회 만족도 등) (4년 마다)	●
	지역복지의 질	출산율 (최근 2년 평균)	●
		자살율 (최근 2년 평균)	●

자료: 보건복지부(20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연구, p.251.

□ 지역사회보장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환경, 노력, 성과, 결과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지수 계산에 활용할 지표는 <표 3-6>과 같음.

○ 사회보장 환경지표로는 인구 지표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경제지표는 고용률, 재정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회지표는 범죄율을 포함함.

- 노년부양비와 범죄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반대로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요인임.

○ 사회보장 노력지표는 소득영역의 복지예산, 건강영역의 보건예산과 보건소 의료인력, 교육영역의 교육예산과 교원 수, 주거영역의 주거복지예산과 주택가격 변동, 돌봄영역의 돌봄예산, 그리고 고용영역의 재정투입에 의해서 공급되는 일자리 등임.

- 노력지표의 내용은 해당 영역의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투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예산 또는 인력임.

- 예산과 인력은 대상자 규모, 해당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변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보장 성과지표로는 소득영역의 절대빈곤(최저생계비 이하) 및 상대빈곤 계층의 규모, 건강영역의 연령별 사망률과 만족도, 교육영역의 학업중단율과 만족도, 주거영역의 주택보급율과 만족도, 돌봄영역의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와 만족도, 고용영역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 등을 활용함.
  - 만족도는 특정 복지사업이 아닌 특정영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공통항목에서 결과를 추출하였음.
- 사회보장 결과지표는 객관적 지표로 출산율과 자살률을, 그리고 주관적 지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임.
  - 출산율은 현 시점에서 현재 및 미래사회에 대한 경제활동세대의 전망이며, 자살률은 과거 및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지표임.
  -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질에 대한 항목은 성과지표의 만족도와 동일하게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공통항목에서 추출하였음.

## 제4절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유형과 산출 방법

### 1. 산출 지수의 유형과 지표의 활용

- 지역단위 사회보장 통계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관한 지수를 산출함.
  - 지수는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로 구성됨.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표에 의해서 산출됨.
  - 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지표는 지역단위의 노년부양비(인구), 고용률(경제), 범죄율(사회)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재정) 등 4개의 지표임.

- 즉, 사회보장 수요가 높은 인구계층의 비중이 높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불안이 높거나, 지역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면 환경지수가 낮고, 반면에 사회보장 수요가 높은 인구의 비중이 적고, 사회불안이 적고, 경제상황이 좋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을 경우에 환경지수가 높아지도록 설계함.
- 환경지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에 압력을 경감하는 환경인지 아니면 압력을 가중시키는 환경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는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토대로 산출됨.
  - 지수 산출을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영역을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의 6개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작성함.
  - 6개의 영역은 소득, 건강, 주거, 돌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과 새롭게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 고용을 포괄함.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 등 일부 제외한 분야가 존재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의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정책의 발전과 함께 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력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지표는 소득 영역의 주민 1인당 지자체 자체 복지예산, 건강 영역의 주민 1인당 지자체 자체 보건예산과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 교육 영역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과 교원 1인당 학생수, 주거 영역의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예산과 주택전세 가격지수 등임.
    - 그런데 지자체의 투입 예산 중에서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예산의 비중’의 경우에 지자체가 작성한 통계의 결측치가 너무 많고, 작성된 경우에도 기준이 상이하여 지표값의 신뢰성이 낮아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예산의 비중은 지수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함.

- 돌봄 영역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 ‘노인·장애인 1인당 돌봄예산’과 ‘영유당 1인당 돌봄예산’은 지자체가 작성하여 보고한 통계치가 신뢰성이 낮고, 결측치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 따라서 기존의 조사통계 중에서 지자체 사회복지예산현황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예산현황 자료에서 돌봄예산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노인·장애인과 영유아를 구분하지 않음.
  - 따라서 돌봄예산 현황과 해당 지자체의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인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함.
- 고용 영역의 지표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노인일자리 비율과 사회적기업 고용률의 경우 통계의 결측치가 너무 많고, 신뢰성이 없어서 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활용가능한 통계치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경제활동인구 1인당 지자체의 고용지원 예산’으로 지표를 변경하기로 함.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는 사회보장정책의 지역단위 산출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현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나 주거 상태는 사회보장 노력의 산출이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노력을 견인하는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됨.

- 성과지수의 계산에 활용되는 지표는 노력지수와 동일하게 성과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으로 나누어 구성함.
- 성과지수와 노력지수를 동일한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향후 통계지표의 신뢰성과 지수의 대표성이 확보된다면, 세부 정책의 영역별로 노력지수와 성과지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임.
- 소득 영역의 성과지표 중에서 ‘전체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비중’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빈곤층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실제 통계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절대빈곤층의 규모가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 지표를 지수 산출에 활용할 수 없음.

- 또한 빈곤율이 성과지표로서 적절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산출과 연계하기 어려워 지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 영역은 지역단위 '가구 균등화 소득'과 빈곤층 중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로 지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함.
- 성과지수 산출에 있어서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영역은 지표체계에서 설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객관지표와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표현하는 주관지표로 구성함.
- 주관지표인 만족도는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데이터에서 산출하며, 따라서 1년이 아닌 4년 마다 산출되는 결과 값임. 객관지표의 경우 연평균표준화 사망률, 학업 중단율, 주택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통계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
  - 반면에 돌봄 관련 서비스 대상자 비중과 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자활 및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공률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작성한 통계에 결측치가 많아서 지수 산출에 활용하기 곤란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2개의 지표는 성과지수 산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다만 향후 통계 작성의 안정화와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 노력과 성과의 최종 결과물로서, 지수 산출을 위해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를 동시에 활용함.
- 주관지표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만족도 결과를 활용함.
- 객관지표로는 총괄지표로서 자살율과 출산율을 활용하며, 다만 당초에는 최근 2년(2012~2013)에서 최근 3년(2011~2013)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였음.
- 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수 계산과정에서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들을 가중치를 통해서 결합하여 지역복지지수를 산출하였음.

〈표 3-7〉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

구분	중분류	지표	
환경지표	인구	노년부양비	
	경제	고용률	
	재정	재정자립도	
	사회	범죄율(인구 천명당)	
노력지표	소득	주민 1인당 복지 예산	
	건강	주민 1인당 보건 예산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	
	교육	학생 1인당 교육예산	
		교원 1인당 학생 수	
	주거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예산	지표제외
		주택전세가격지수	
	돌봄	대상인구 1인당 (돌봄)서비스 예산	지표 통합
성과지표	소득	경제활동인구당 지자체 고용(지원) 예산	지표 변경
		가구당 소득 수준(균등화 소득)	지표내용 변경
		상대빈곤층 중 비수급 비율(4년 마다)	지표내용 변경
	건강	연령 표준화 사망률	
		건강 만족도 (4년 마다)	
	교육	학업 중단율	
		교육 만족도 (4년 마다)	
	주거	주택보급률	
		주거 만족도 (4년 마다)	
	돌봄	돌봄관련 서비스 대상자 비중	지표 제외
		돌봄 서비스 만족도(4년 마다)	
	고용	자활 및 취업성공패키지 성공률	지표 제외
		고용 만족도 (4년 마다)	
수준지표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4년 마다)	
	사회의 질	주관적 사회의 질(지역사회 만족도) (4년 마다)	
	지역복지의 질	출산율 (최근 3년 평균)	지표내용 변경
		자살율 (최근 3년 평균)	지표내용 변경

## 2.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값의 처리와 가중치 설정

□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의 첫 번째 단계는 영역별로 분류된 지표의 값을 동일한 척도로 일치시키고, 척도에 따라 표준화된 값으로 전환하는 것임.

○ 예를 들어, 환경지수의 산출에 활용되는 4개의 지표 중에서 노년부양비, 고용률, 재정자주도 등은 단위가 %로 최대값이 100인 척도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범죄율은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최대값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는 척도로 작성되어 있음.

○ 또한 노년부양비, 고용률, 재정자주도의 경우에 동일한 척도로 되어 있지만, 사·도 단위의 실제 값은 노년부양비는 9.6~28.4, 고용률은 55~65.7,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66.2~90.1 등 분포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척도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분포를 표준화하여 각 지표의 값을 표준화된 상대값으로 전환시켜야 함. 표준화된 상대값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계치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Z-score임.

- 그러나 분석 대상의 사·도는 17개로 정규분포로 간주하기에는 표본 수가 적음. 따라서 Z-score 대신에 값의 분포 범위(range)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한 표준화된 상대 값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함.
-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분포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시·군·구 단위 통계지표의 값을 활용하며, 시·군·구 단위 통계값이 없는 경우에는 사·도 단위 통계값을 활용함.
- 표준화된 상대 값의 계산은 각 지표별로 이루어지며, 각 지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포괄하는 범위를 척도의 범위로 전환하도록 함.
- 다만, 최대값 또는 최소값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분포에도 불구하고, 근거 값으로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설정함.
  -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의 경우 실제 분포는 1.0~1.5명인 반면에 적정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혹은 2명으로 최대값을 설정하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지수는 다양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중요도가 상이하므로 각 영역 및 개별지표들의 중요성을 비교하는 분석이 필요함.

- 즉, 영역 및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중치를 사용하여 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보장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과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분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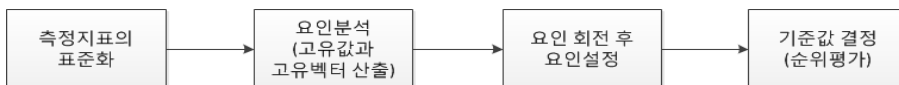
○ 개별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항목이나 지표간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임의로 부과하는 주관적 방식과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수리적 방식으로 나누어짐.

- 먼저 각 영역이나 개별지표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임의로 부과하는 주관적 방식으로는 델파이의 유형으로 AHP 기법(Aczel & Satty, 1983)이 있음.
  - AHP 기법은 문제를 작은 요소들(문제들)로 나누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나누어진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함으로써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를 분석하는 기법임.
  - 특히, 정책연구의 경우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판단 결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됨.
- 수리적 방식 중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한 가중치 설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임.
  - 요인분석의 기본 원리는 여러 가지 개념, 혹은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관관계를 통하여 측정 지표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을 비교하는 데 있음.
  - 특히, 요인분석은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요인들을 관찰이 가능한 변수들에 대하여 그 근거를 밝혀내는데 있음.
  - 요인분석은 관찰변수와 요인들 간에 인과관계의 일차방정식으로 연결되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다수의 관찰변수들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으로 공통요인이 있고, 이 공통 요인은 바로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실제로 다수의 변수의 변량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변수가 됨.

- 공통 요인 외에도 그 관찰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고유요인과 요인 부하량이 있는데, 이것은 공통요인이 각 관찰변수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정도를 나타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 간에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음.
- 요인분석을 이용한 중요도 분석 과정은 우선 각 측정지표들이 실제 관찰값의 단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경우 이들 지표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화 점수로 변환을 한 후 이를 활용하게 됨.
- 다음으로 측정지표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점수계수를 도출하고 각 측정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됨.

[그림 3-18] 요인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도출 과정



- 이러한 요인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부여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수리적 통계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가중치 부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즉,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추상적 개념변수 값, 예를 들어 만족도와 같은 값을 측정하게 됨.
- 이는 평가모형 체계에서 요인점수계수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모형 체계와 요인구조는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인구조를 규명하는 요인분석의 요인점수계수를 평가모형의 가중치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활용하는 수리적 방식으로 가중치를 설정하고자 함.

- 수리적 방식의 가중치 설정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사회보장지

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주관적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각 영역별로 주관적 지표 외에도 객관적 지표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출된 지수 값의 신뢰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또한 시도 단위 통계지표 값이 아닌 시·군·구 단위 지표 값과 3~4년의 시계열을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보장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각 지표의 표준화 점수 계산식과 유형별 지수산출을 위한 영역내 지표별 가중치의 결과는 <표 3-8>과 같음.

<표 3-8>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값의 처리 및 가중치 계산 결과

영역	지표명	지표값 처리(표준화 점수 계산식)	가중치
환경	노년부양비	$= (40 - \text{해당값}) * 100 / 35$	0.212
	고용률	$= (\text{해당값} - 50) * 100 / 20$	0.321
	재정자립도	$= (\text{해당값} - 50) * 100 / 50$	0.329
	범죄율	$= (50 - \text{해당값}) * 100 / 20$	0.158
노력	주민 1인당 복지 예산	$= (\text{해당값} - 70) * 100 / 100$	0.131
	주민 1인당 보건 예산	$= (\text{해당값} - 0) * 100 / 20$	0.167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	$= (60 - \text{해당값}) * 100 / 50$	0.100
	학생 1인당 교육예산	$= (\text{해당값} - 10) * 100 / 190$	0.141
	교원 1인당 학생 수	$= (10 - \text{해당값}) * 100 / 5$	0.095
	주택전세가격지수	$= (120 - \text{해당값}) * 100 / 25$	0.090
	대상인구 1인당 돌봄서비스 예산	$= (\text{해당값} - 200) * 100 / 150$	0.138
	경제활동인구당 고용지원 예산	$= (\text{해당값} - 1) * 100 / 5$	0.138
성과	가구당 균등화 소득	$= (\text{해당값} - 3000) * 100 / 3000$	0.119
	상대빈곤층 중 비수급 비율	$= (40 - \text{해당값}) * 100 / 40$	0.099
	연령 표준화 사망률	$= (500 - \text{해당값}) * 100 / 200$	0.113
	건강 만족도	$= (\text{해당값} - 0) * 100 / 5$	0.106
	학업 중단율	$= (4 - \text{해당값}) * 100 / 4$	0.092
	교육 만족도	$= (\text{해당값} - 0) * 100 / 5$	0.098
	주택보급률	$= (\text{해당값} - 95) * 100 / 15$	0.074
	주거 만족도	$= (\text{해당값} - 0) * 100 / 5$	0.119
	돌봄 서비스 만족도	$= (\text{해당값} - 0) * 100 / 5$	0.085
	고용 만족도	$= (\text{해당값} - 0) * 100 / 5$	0.095
결과	주관적 삶의 질	$= (\text{해당값} - 0) * 100 / 5$	0.246
	주관적 사회의 질	$= (\text{해당값} - 0) * 100 / 5$	0.266
	출산율	$= (\text{해당값} - 0) * 100 / 2$	0.189
	자살율	$= (50 - \text{해당값}) * 100 / 40$	0.299

## 제5절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결과

### 1.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는 노년부양비, 고용률, 재정자립도, 범죄율 등 4개의 지표에 의해서 계산되었음.

○ 각 지표를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경지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9>와 같음.

<표 3-9>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산출 결과

사·도	지표별 표준화 점수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노년부양비	고용률	재정자립도	범죄율	
서울특별시	74.7	47.5	80.2	77.0	68.0
부산광역시	67.9	25.0	48.4	69.5	48.4
대구광역시	73.1	37.0	49.0	57.0	51.5
인천광역시	79.4	52.5	58.8	96.5	67.1
광주광역시	76.6	33.5	38.4	30.0	43.6
대전광역시	78.8	37.0	49.2	94.0	58.7
울산광역시	86.8	44.0	60.4	80.5	63.9
경기도	78.7	47.0	63.2	94.5	66.2
강원도	51.2	31.5	46.6	64.0	45.5
충청북도	59.3	47.0	44.8	86.5	55.2
충청남도	51.5	57.0	42.8	90.5	56.8
전라북도	48.3	38.5	37.6	87.5	48.1
전라남도	33.1	60.5	32.4	77.5	48.7
경상북도	48.7	60.5	46.4	75.5	56.0
경상남도	65.2	48.5	47.8	68.0	54.9
제주특별자치도	62.0	78.5	32.4	29.5	53.0

○ 환경지수의 산출에 활용된 4개 지표의 표준화 점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노년부양비는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 표준화 점수가 낮아지도록 설계하였음.
- 노년부양비 점수는 울산이 86.8로 가장 높고, 전남이 33.1로 가장 낮음.
- 고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 점수 값이 커짐.

-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의 점수 값이 78.5로 가장 높고, 부산이 25로 가장 낮음.
  - 재정자립도는 지표 값이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점수 값이 커져야 함.
  - 재정자립도 지수는 서울이 80.2로 가장 높고, 전남이 32.4로 가장 낮음.
  - 범죄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하므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지수 값이 커짐.
  - 범죄율은 인천이 96.5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9.5로 가장 낮음.
-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는 지역사회보장의 맥락 또는 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산 결과 인천이 67.1로 가장 높고, 제주가 5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지수 값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지수는 절대값 또는 비율척도가 아니며, 서열척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 즉 인천이 제주에 비해 지역사회보장 환경(여건)이 약 1.3배가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오히려 인천이 제주에 비해 지역사회보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정도의 해석이 타당할 것임.
  -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전북 등은 지역사회보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으며, 제주, 광주, 대구, 강원, 경남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보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는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구와 비교하여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됨.
- 예산 투입 규모는 사회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노력지수는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투입 규모를 지자체의 정책의지로 등치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예산 투입 규모는 기본적으로 지역단위 사회보장정책의 수요에 비례하게 됨.

- 예를 들어, 빈곤층이 많으면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커지며,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노인복지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사회보장 예산투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 여력이 미흡할 경우에 지자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정투입 규모가 적고, 이로 인하여 노력지수가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사회보장 대상인구 1인당 복지예산 규모의 지표와 관련하여, 대상인구와 예산규모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 노인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고 해서 노인복지예산이 2배로 증가하지 않아 이른바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 과소지역 또는 과밀지역의 경우에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지수의 산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표 3-10〉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산출 결과

사·도	지표별 표준화 점수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서울특별시	30.9	43.6	85.0	54.8	29.8	27.4	48.5
부산광역시	47.3	46.5	58.9	58.4	16.7	34.6	44.8
대구광역시	41.2	62.6	55.5	58.4	41.3	44.0	52.2
인천광역시	31.3	54.3	64.8	75.6	58.8	24.4	52.1
광주광역시	55.3	48.2	54.1	38.0	67.2	69.2	55.1
대전광역시	43.3	50.3	57.0	71.6	66.7	20.1	50.9
울산광역시	12.7	45.6	58.5	59.2	57.7	38.0	46.2
경기도	9.2	47.7	71.2	71.2	36.5	19.0	44.8
강원도	70.5	30.8	49.1	74.8	47.8	86.9	54.4
충청북도	62.0	52.1	51.1	71.6	61.2	43.8	55.0
충청남도	53.0	45.5	52.0	62.4	31.3	57.0	49.2
전라북도	91.0	44.6	46.0	78.4	46.1	97.7	61.6
전라남도	96.6	40.0	40.8	79.2	53.2	16.6	49.7
경상북도	74.0	44.7	22.5	58.8	52.8	86.6	51.5
경상남도	47.9	44.6	55.3	65.2	49.3	37.7	49.1
제주특별자치도	39.1	40.7	39.2	77.6	47.5	59.2	46.9

○ 노력지수는 6개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영역별 표준화 점수와 노력지수는 계산 결과는 〈표 3-10〉과 같음.

- 소득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전남(96.6)과 전북(91.0)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반면에 경기(9.2)와 울산(12.7)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6개 영역 중 시·도별 편차가 가장 적은(sd=6.9)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62.6), 인천(54.3), 충북(52.1), 대전(50.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강원(30.8), 전남(40), 제주(40.7), 서울(43.6) 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교육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서울(85)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기(71.2), 인천(64.8) 등이 높은 수준에 속함.
  - 반면에 경북(22.5)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주(39.2), 전남(40.8), 전북(4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광주(38), 서울(54.8), 대구(58.4), 부산(58.4)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남(79.2), 전북(78.4), 제주(77.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일부 예외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이 주거영역의 표준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면에 농어촌지역과 인구과소지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돌봄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노인·장애인의 돌봄예산과 영유아의 보육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지수 계산에 활용한 통계지표에서 돌봄예산을 노인·장애인과 영유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대상자별로 시·도간의 편차를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향후에 대상별로 구분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돌봄영역의 표준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69.2), 대전(66.7), 충북(61.2), 인천(58.8) 등이며, 반면에 부산(16.7), 서울(29.8), 충남(31.3), 경기(36.5) 등은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용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6개의 영역 중에서 시·도간 편차가 가장 크고(sd=26), 다른 영역에 비해 지자체의 의지가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고용영역에 할당하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예산의 편차가 크기 때문임.
  - 전북(97.7), 강원(86.9), 경북(86.6) 등 3개 사·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광주(69.2), 제주(59.2), 충남(57.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반면에 전남(16.6), 경기(19.0), 대전(20.1), 인천(24.4), 서울(27.4) 등이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등 6개 영역으로 표준화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의 산출 결과 전북이 6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55.1), 충북(55.0), 강원(54.4), 대구(52.2), 인천(52.1) 등이었음.
- 반면에 경기와 부산이 44.8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46.2), 제주(46.2), 서울(48.5)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3.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는 지역단위에서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집행에 따른 직접적인 산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표 값에 의해서 산출됨.
- 성과지수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통계가 필요하나 현재 시점에서 보고통계의 신뢰성이 미흡하여 시·군·구 단위로 집계된 결과를 사·도 단위로 합산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돌봄, 고용, 교육, 주거 영역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 통계지표가 미흡함.
- 따라서 추후에 조사통계 지표의 확충과 보고통계 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성과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표 3-11>과 같음.



〈표 3-11〉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산출 결과

사도	영역별 표준화 점수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서울특별시	63.6	65.9	52.9	31.0	59.6	53.4	54.4
부산광역시	47.3	43.2	54.2	40.1	58.8	51.6	47.7
대구광역시	42.4	48.5	56.5	41.9	59.0	52.0	48.7
인천광역시	47.8	47.9	57.0	44.0	60.0	53.8	50.5
광주광역시	42.7	48.2	50.9	44.1	55.6	46.6	47.2
대전광역시	52.6	53.9	46.3	42.4	57.6	60.8	50.9
울산광역시	75.1	42.0	57.5	54.5	58.6	54.4	57.2
경기도	59.9	55.0	51.3	37.1	60.6	53.8	52.3
강원도	34.2	39.5	50.4	58.8	61.2	56.0	47.6
충청북도	34.9	40.0	55.9	60.0	62.0	58.4	49.4
충청남도	36.4	47.5	56.3	67.4	63.0	59.4	53.1
전라북도	34.3	44.4	54.8	64.5	52.2	49.6	49.2
전라남도	34.4	40.7	54.2	63.0	58.8	54.6	49.1
경상북도	41.2	40.7	57.2	66.2	59.4	56.2	52.0
경상남도	55.3	41.8	55.8	53.6	55.0	48.6	51.5
제주특별자치도	49.2	55.1	52.1	46.3	59.0	54.0	51.8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영역 중 소득영역의 표준화 점수를 보면, 울산이 75.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3.6, 경기 59.9, 경남 55.3, 대전 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강원이 34.2로 가장 낮으며 전북 34.3, 전남 34.4, 충북 34.9, 충남 36.4의 순으로 점수 값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소득영역의 표준점수는 가구소득 수준에 비례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이 비수급 빈곤층의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연령표준화사망률이라는 객관지표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는 주관지표가 결합되어 있으며, 제도의 직접적 산출이기

보다는 최종산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지역단위 사회보장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건강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서울이 65.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제주 55.1, 경기 55.0, 대전 53.9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강원 39.5, 충북 40.0, 전남과 경북 40.7, 경남 41.8, 그리고 울산 42.0의 순으로 점수 값이 낮았음.

○ 교육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6개의 영역 중 시·도간 편차가 가장 적음.

- 그러나 교육영역의 지역간 편차가 적은 이유는 학업중단률 지표의 값이 차이가 적기 때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교육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울산이 57.5로 가장 높으며 경북 57.2, 인천 57.0, 대구 56.5, 충남 56.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에 대전 46.3, 강원 50.4, 광주 50.9, 그리고 경기 51.3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주거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충남(67.4), 경북(66.2), 전북(64.5), 전남(63.0)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에 서울(31.0), 경기(37.1), 부산(40.1), 대구(41.9), 인천(44.0), 광주(44.1)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거영역의 표준화 점수의 경우에 성과지수 뿐 아니라 노력지수 분야에서 대도시 또는 인구밀집지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농어촌 또는 인구과소지역이 상대적으로 점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추후에 보다 세부적인 통계치와 추가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돌봄영역과 고용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해당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고통계 없이, 지역주민의 만족도만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관련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만족도의 경우에 지역간 편차가 작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돌봄영역과 고용영역의 표준화 점수 값의 편차가 작음.

- 돌봄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충남(63.0), 충북(62.0), 강원(61.2), 경기도(60.6), 인천(60.0) 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북(52.2), 경남(55.0), 광주(55.6), 대전(57.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용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대전(60.8), 충남(59.4), 충북(58.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46.6), 경남(48.6), 전북(49.6) 부산(51.6)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 등 6개 분야의 표준화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는 울산이 5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반면에 광주가 4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을 포함하여 서울(54.4), 충남(53.1), 경기(52.3) 등이며,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낮은 지역은 광주를 포함하여 강원(47.6), 부산(47.7), 대구(48.7) 등임.

#### 4.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제도로 환원할 수 없는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질을 표현하는 지수임.
- 결과지수는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지표, 그리고 출산율과 자살률과 같은 객관지표의 표준화 점수로 구성됨.
- 주관지표는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관련 문항의 만족도 결과이며, 문항이 5점 척도라는 점에서 지표 값의 시·도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음.
  - 객관지표로서 출산율은 경제활동세대(출산가능세대)가 현재 및 미래 시점의 우리사회에 대한 전망을 표현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또한 자살률은 고령층 및 노인계층이 노인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세대가 과거 및 현재 시점의 우리사회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지표임.
-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의 표준화 점수는 충남이 59.9로 가장 높으며, 충북 59.5, 울산 59.4, 강원과 경북이 57.7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광주가 51.1로 가장 낮으며, 경남 51.7, 대전 54.4, 대구 54.6 등의 순으로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사회 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표준화 점수 값은 충남(57.3), 제주(55.8), 서울(55.2), 경남(53.5) 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울산(48.0), 광주(50.1), 대구·대전·인천(51.1)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3-12〉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의 산출 결과

사·도	지표별 표준화 점수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역사회)	출산율	자살률	
서울특별시	55.4	55.2	50.5	61.0	56.1
부산광역시	55.3	52.3	54.0	47.5	51.9
대구광역시	54.6	51.1	57.5	56.0	54.6
인천광역시	55.8	51.1	62.0	45.8	52.7
광주광역시	51.1	50.1	61.5	59.3	55.2
대전광역시	54.4	51.1	62.5	57.5	56.0
울산광역시	59.4	48.0	70.5	63.8	59.7
경기도	56.6	51.8	65.0	53.3	55.9
강원도	57.7	51.9	66.0	21.0	46.8
충청북도	59.5	52.3	71.0	33.5	52.0
충청남도	59.9	57.3	75.0	22.5	50.9
전라북도	54.9	52.1	69.0	44.0	53.6
전라남도	57.4	53.1	78.5	43.8	56.2
경상북도	57.7	53.1	71.0	41.3	54.1
경상남도	51.7	53.5	71.5	51.0	55.7
제주특별자치도	55.1	55.8	74.5	45.8	56.2

- 출산율에 대한 표준화 점수는 사·도별 합계출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78.5), 충남(75.0), 제주(74.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서울이 50.5로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54.0, 대구 57.5 등의 순으로 점수 값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단위 출산율은 전형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낮고, 농어촌 지역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자살률에 대한 표준화 점수는 출산율의 표준화 점수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음.

- 울산(63.8), 서울(61.0), 광주(59.3), 대전(57.5), 대구(56.0) 등의 지역이 점수 값이 높으며, 반면에 강원(21.0), 충남(22.5), 충북(33.5), 경북(41.3) 등의 지역이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는 성과지수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성과가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준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결과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9.7)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46.8)임.
  - 울산 외에 결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56.2), 서울(56.1), 대전(56.0) 등임.
  - 강원 외에 결과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충남(50.9), 부산(51.9), 충북(52.0) 등임.

## 5. 지역사회보장지수 비교

□ 지역사회보장지수는 4개의 영역지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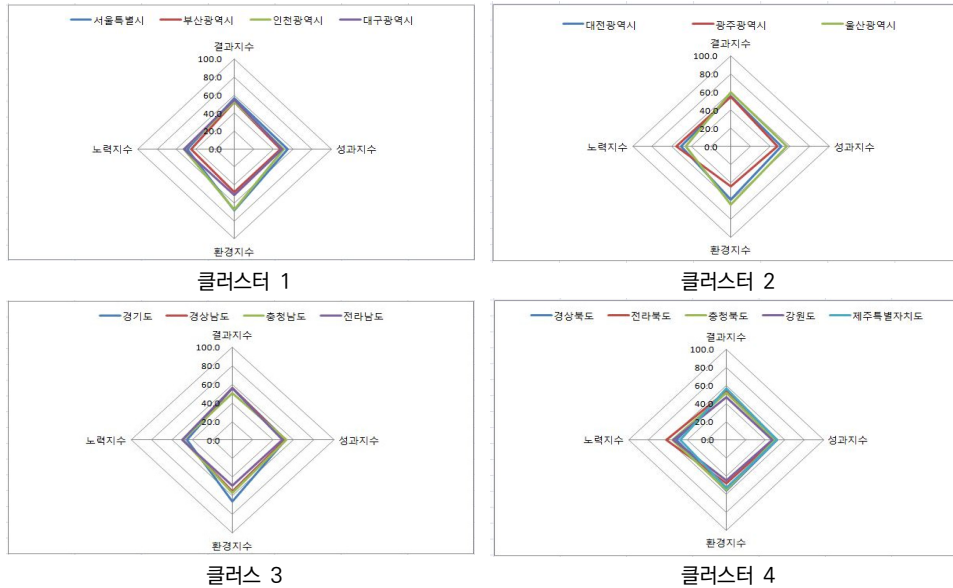
- 이는 지역사회의 환경,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투입한 노력, 그러한 노력에 따른 지역사회의 복지성과, 이를 통해서 제시된 결과로 구성함.
- 즉 지역사회보장지수는 환경-노력-산출-결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다만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수는 지표간의 위계나 관계 등은 제시하지 않는 병렬구조임.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지수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를 분석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표별 순위나 평균을 중심으로 한 비교로 한정됨.

□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4개의 영역지표를 축으로 하는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시·도간 개별 지표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음<sup>10)</sup>.

10) 지역사회보장지수의 4개 영역지표에 대한 설명과 결과값은 본 장의 5절의 앞부분에서 이미 지표별로 제

- 그러나 16개 사·도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므로 인구 규모와 지방정부 유형을 기준으로 4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음.
  - 지방정부 유형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도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또한 인구규모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현황 인구수(2013년)를 기준으로 하였음.
    - 주민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593,806명)이고,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2,234,630명)임.
- 첫 번째 클러스터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이다. 여기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해당됨.
- 두 번째 클러스터는 광역시이면서 인구규모는 상당히 적은 지방자치단체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해당됨.
- 세 번째 클러스터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 아니지만 인구규모가 상당히 큰 광역자치단체임. 여기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해당됨.
- 마지막 클러스터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규모가 상당히 적은 곳으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됨.
- 또한 서로 다른 4개의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 지표의 축은 최소값 0.0에서 최대값 100.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이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지수의 4개 영역지표를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4(도지역, 적은 인구)는 4개의 지표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나타난 반면, 클러스터 1~3은 공통적으로 환경지표가 타 지표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음.
  - 이는 환경지수가 노년부양비, 고용률, 재정자립도, 범죄율로 구성된다고 할 때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규모가 큰 도 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됨.

[그림 3-19] 클러스터별 사회보장지수 분석결과



○ 인구가 많은 클러스터 1(서울, 부산, 인천, 대구)과 클러스터 3(경기도, 경남, 충남, 전남)은 노력지수에 비해 성과지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가 적은 클러스터 2(대전, 광주, 울산)는 노력지수와 성과지수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클러스터 4(경북, 전북, 충북, 강원, 제주)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상당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줌으로써 성과제고를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도서산간지역이나 공급 자체가 부족한 지역인지, 충분한 수준의 투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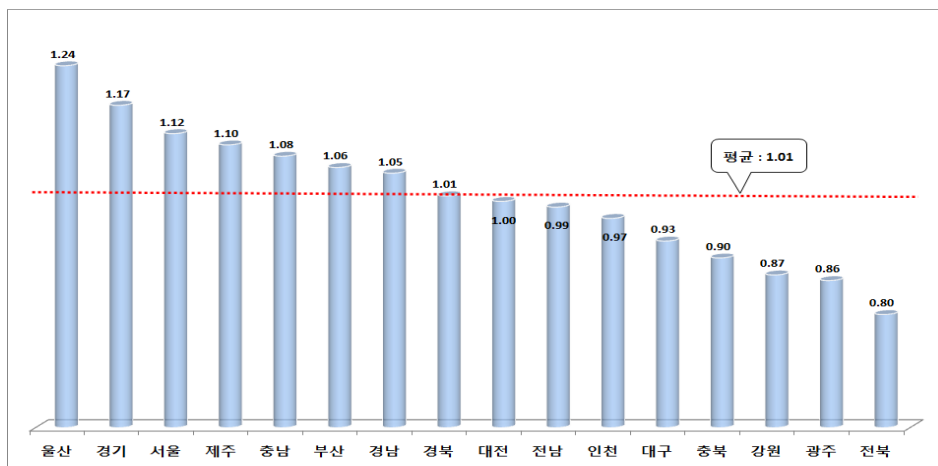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노력지표와 성과지표간의 비율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력지표와 성과지표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고용이라는 하위 6개의 동일한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사·도의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의 비율을 살펴보았음.

[그림 3-20] 사·도별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의 비율



-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 비율을 사·도별로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0]과 같음.

-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1.24)이며, 경기(1.17), 서울(1.12), 제주(1.10), 충남(1.08), 부산(1.06), 경남(1.05) 지역이 16개 사·도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경북은 비율이 1.01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전북(0.8)이며, 광주



(0.86), 강원(0.87), 충북(0.9), 대구(0.93), 인천(0.97), 전남(0.99), 대전(1.0) 지역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앞서 살펴본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수준 등이 유사한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의 비율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클러스터 1에서 서울과 부산에 비해 인천과 대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의 복지예산 편성 내역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즉, 노력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 투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반면에 클러스터 2에서 대전과 광주에 비해 울산이 과다하게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보장지수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지수의 구축이 반복될 경우 그 활용성은 매우 큼.

-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를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동일하게 구축하고 측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복지정책의 방향성이나 동향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임.

- 둘째,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많음.

•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성과가 높거나 전국적인 표준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경우, 혹은 중앙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을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셋째, 사회서비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와 공급 격차를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간 비교를 통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넷째,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예산의 증대가 과도한 부채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일본의 유바리시 사례에서 보았기 때문임.<sup>11)</sup>

○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4년마다 동일하게 반복 측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수준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11)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2007) 이후 각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중국의 둥관시(2012)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자치주(2012)가 채무상환 불이행 등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중앙정부가 조기 진화한 사례가 있다(중국은 서울경제, 2012/9/28; 이탈리아는 문화일보, 2012/7/18).



## 제4장

### 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제1절 복지계획 내용의 주요 특성

제2절 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제3절 복지계획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4

## 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

### 제1절 복지계획 내용의 주요 특성

#### 1. 복지계획의 구조적 특성

□ 사·도의 복지계획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비전은 전체 사·도가 1개 설정
- 전략목표는 전체 60개가 설정되었으며, 사·도당 평균 3.8개 설정
  - 전략목표는 최저 2개(울산), 최고 5개(광주, 세종, 전북) 설정
- 핵심과제는 전체 151개가 설정되었으며, 사·도당 평균 9.4개 설정
  - 핵심과제는 최저 4개(울산), 최고 16개(대구) 설정
- 세부사업은 전체 540개가 설정되었으며, 사·도당 평균 33.8개 설정
  - 세부사업은 최저 14개(경남), 최고 56개(대전) 설정

〈표 4-1〉 사·도 복지계획의 구조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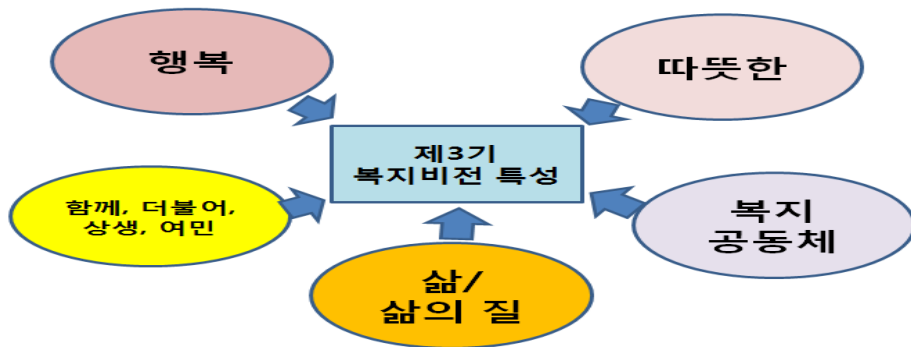
사·도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계	16	60	151	540
평균	1	3.8	9.4	33.8
서울특별시	1	4	7	26
부산광역시	1	3	6	31
대구광역시	1	4	16	33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1	5	15	45
대전광역시	1	3	7	56
울산광역시	1	2	4	18
세종특별자치시	1	5	10	38
경기도	1	3	9	27

사·도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강원도	1	4	12	37
충청북도	1	4	11	39
충청남도	1	3	6	35
전라북도	1	5	13	52
전라남도	1	3	9	26
경상북도	1	4	9	36
경상남도	1	4	4	14
제주특별자치시	1	4	13	27

## 2. 비전의 특성

□ 제3기 광역지자체의 복지계획 비전의 특성은 ‘행복’, ‘따뜻한’, ‘함께, 더불어, 상생, 여민(與民)’, ‘삶/삶의 질’을 강조하였다는 점임.

[그림 4-1] 제3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전 특성



### ○ ‘행복’을 강조한 비전

- 함께하는 서울, 따뜻한 행복도시(서울특별시)
-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부산광역시)
- 상생하는 복지, 행복도시 대구(대구광역시)
- 체감하는 복지, 행복한 대전(대전광역시)

-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울산 구현(울산광역시)
- 스마트 복지, 행복한 세종(세종특별자치시)
-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충청북도)
-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충청남도)

○ ‘따뜻한’을 강조한 비전

- 함께하는 서울, 따뜻한 행복도시(서울특별시)
-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부산광역시)
-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광주광역시)
-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울산 구현(울산광역시)
-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경기도)
-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충청남도)

○ ‘함께, 더불어, 상생, 여민(與民)’을 강조한 비전

- 함께하는 서울, 따뜻한 행복도시(서울특별시)
- 상생하는 복지, 행복도시 대구(대구광역시)
-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광주광역시)
- 함께 누리고 만드는 복지2배 강원도(강원도)
- 사람중심, 함께 만드는 복지경북(경상북도)
- 도민이 더불어 즐거운 여민(與民) 복지(경상남도)

○ ‘복지공동체’를 강조한 비전

-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경기도)
-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전라북도)
-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제주특별자치도)

○ ‘삶/삶의 질’을 강조한 비전

- 온정가득, 희망가득, 살고 싶은 복지전남(전라남도)

-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제주특별자치도)

### 3. 전략목표의 특성

#### □ ‘전달체계’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복지전달체계 강화(서울)
- 전달체계 역량강화(대구)
- 시민친화형 사회복지전달체계(광주)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대전)
-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강원)
- 민관 협력형 전달체계 구축(충북)
- 고용복지통합 전달체계 구축 및 근로빈곤층 자립기반 마련(전북)
- 도민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제주)

#### □ ‘고용복지(일자리)’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복지와 고용의 통합실현(부산)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대구)
-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광주)
- 사회적 일자리 강화(경기)
-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아실현(충북)
- 자립지향적 고용복지(전남)
- 고용과 복지연계로 자립환경 조성(제주)

#### □ ‘복지공동체 및 민관협력’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서울)



- 복지공동체 구현(경기)
  -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조성(강원)
  - 사각지대 없는 지역공동체 실현(경북)
-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사회양극화 완화(서울)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대구)
  - 빈틈없고 튼튼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대전)
  - 복지사각지대 해소(강원)
  -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수립(전북)
  -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경북)
- ‘생애주기 맞춤형’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광주)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강원)
  -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충북)
  -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충전(전남)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주)
- ‘지역 맞춤형’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부산형 맞춤형 복지 실현(부산)
  -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농 복지불균형 해소(전북)
  -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남)
- ‘안전’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광주)
- 안전친화적 복지환경 구축(충북)
- 건강하고 안심하는 제주사회(제주)

□ ‘복지권(리)’에 초점을 둔 전략목표

- 시민존중의 광주형 복지권리(광주)
- 복지권 증진(충남)
- 도민 복지권 보장 및 강화(경북)

□ 기타 전략목표

- 보편적 복지 강화(서울),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부산),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대구), 가족역량 강화 및 미래세대의 밝고 건강한 육성(대전)
- 시민중심의 체감적 복지도시 구축(울산),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축(울산), 지속가능한 복지(세종), 찾아가는 복지(세종), 접근용이한 복지(세종), 계획적인 복지(세종), 함께하는 복지(세종)
- 복지서비스 강화(경기), 복지서비스 향상(충남), 복지기반 확대(충남)
- 아동친화 양육 및 발달환경 조성(전북), 노인돌봄 안전망 수립 및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전북)
-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경북), 사업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경남)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경남),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업 내실화(경남),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지원(경남)

#### 4. 핵심과제의 특성

□ ‘전달체계’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대구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대구)

- 스마트 복지망 구축 운영(대구)
  - 공적 복지전달체계 혁신과 전문화(광주)
  -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대전)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울산)
  - 강원도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강원)
  - 지역맞춤형 민간복지전달체계 개편(전북)
  - 농촌적합형 복지지원연계체계 수립(전북)
  - 복지전달체계 개편(제주)
- ‘고용복지(일자리)’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서울)
  -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부산)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부산)
  - 고용-복지연계 지원 강화(대구)
  -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구)
  - 복지+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대구)
  - 청소년 직업체험 지원(대구)
  - 공공영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광주)
  -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도시 실현(대전)
  -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경기)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경기)
  - 일을 통한 자립지원(강원)
  -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충북)

- 권역별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전북)
- 사회서비스 시장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전북)
-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전남)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경북)
- 일자리 지원 역량강화(경북)
- 여성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제주)
-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제주)

□ ‘복지공동체 및 민관협력’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서울)
- 민관 협력의 복지거버넌스 정착(광주)
-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마을 만들기(광주)
-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세종)
- 주민자치역량 강화(세종)
-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경기)
- 나눔문화 확산(강원, 부산)
- 민관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충북)
- 공동체의식 향상(충남)
- 연계협력증진(충남)
-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경북)
- 공공과 민간협력 확대(제주)

□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지원확대(대구)

- 취약청소년 지원(대구)
  -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광주)
  - 사각지대 해소(세종)
  - 위기대응 복지인프라 구축(세종)
  - 자립지원 강화(세종)
  - 복지사각지대 해소(경기)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강원)
  - 사각지대 없는 충북형 복지안전망 실현(충북)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충남)
  - 자립지원(충남)
  -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강화(전남)
  - 장애인 편의증진 및 권익 보호(전남)
  - 자활을 통한 탈수급 유도(전남)
  - 위기가구 조기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경북)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제주)
  - 저소득 근로자 생활임금의 보장(광주)
- ‘지역 맞춤형복지’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서울)
  - 부산복지기준선 마련(부산)
  - 광주시민복지기준선 마련과 이행(광주)
  -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경기)
- ‘안전’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자살예방(대구)
- 아동의 안정성 강화(대구)
- 자살·폭력·학대 방지 및 피해자 구제(광주)
- 안전한 지역돌봄 및 보호체계 구축(강원)
-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충북)
- 안전한 지역돌봄 및 보호체계 구축(전북)
- 노인안전 및 돌봄체계 구축(전남)
-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제주)
- 노후 건강과 생활안전 제고(제주)
- ‘복지권(리)’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복지권리 옹호 및 예방복지 실현(경북)
  - 장애인 권리증진 (대구)
  - 5대 사회보험의 권리성 강화(광주)
  -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광주)
  - 장애인 인권강화 및 편의증진(강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제주)
-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대구)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대구)
  - 사회복지인력의 역량강화(경기)
  - 사회복지인력 보강 및 역량강화(강원)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충북)

- 서비스 역량강화 지원(충남)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전남)
- ‘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강화(대구)
  -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강원)
  - 보육공공성 강화 및 농촌 보육 접근성 확대(전북)
  -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전북)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제주)
  -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서울)
  - 부산형 돌봄서비스 보장(부산)
  - 1인 가구 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대구)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충북)
  - 마을형 노인돌봄 안전망 구축(전북)
- ‘노인 및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인생2모작 행복지원(대구)
  - 활력 있는 노년의 삶 보장(광주)
  - 기운찬 노후생활 보장(대전)
  -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 지원(울산)
  -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경기)
  -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강원)
  -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 제공(전북)
  -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제주)

○ 사회참여 활성화 및 베이비붐 노후지원 강화(전북)

□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환경 조성(광주)
-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대전)
-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울산)
- 아동·청소년 균형적 성장환경 지원(강원)
-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충북)
-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전북)
- 아동·청소년 참여 및 체험 활동 강화(전북)
-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구축(제주)

□ '여성 및 가족'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여성가족복지서비스 지원(서울)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대전)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강원)
- 일·가정 양립 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충북)
-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역량 강화(전남)
-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전남)
- 가족공동체성 회복 및 가족기능강화(경북)
- 다양한 가족지원(제주)

□ '보건의료 및 건강'에 초점을 둔 핵심과제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서울)



-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 확대(광주)
- 의료공공성 확보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대전)
- 정신건강서비스 강화(경기)
- 생명존중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 실현(충북)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제주)

#### □ 기타 핵심과제

- 복지인프라 확대(서울), 복지인프라 강화(부산), 복지인프라 확대(충남)
-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광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전남), 쾌적하고 장벽 없는 주거 및 생활환경(광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 동행(대전),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만들기(울산), 장애인 접근성 향상 및 평생돌봄체계 구축(전북),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 지원시스템 구축(경북)
- 지역기반 서비스 강화(세종), 연계협력 강화(세종), 이용자 중심 서비스(세종)
- 생활복지인프라 확충(세종), 복지자원 개발(세종)
-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경기), 시설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강원)
-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편의성 향상(충북), 균형 잡힌 문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충북)
- 복지서비스 질 관리 및 선택권 강화(경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경북)
- 사업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경남),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업 내실화(경남),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지원(경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경남)

## 제2절 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 1. 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의 틀

□ 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은 다음의 7가지 기준에 의함.

- 복지욕구조사 결과 및 지역통계와의 정합성
-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
-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
-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

### 2. 복지욕구조사 결과 및 지역통계와의 정합성

#### ① 서울특별시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사회복지인력·방문간호사 2배 확충, 복지플래너 운영, 동마을복지센터 재편
  - 판단근거
    - 어르신 서비스 필요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노인복지욕구 필요서비스에서 가사지원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은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 판단근거

- 경제적 생활지원 필요가구율이 전체 시·도중 2번째로 높음.
- 장애인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가구 필요율이 전체 시·도중 2번째로 높음.

#### ○ 나우스타트

- 판단근거
  - 초등생, 중고생 지원 필요가구율이 전체 시·도중 2번째로 높음.

#### ○ 마을공동체 사업

- 판단근거
  - 빈부격차 심각 및 차별문제 심각, 이웃과의 관계 심각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음.

#### ○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지원, 50+ 재단 설립, 50+ 인프라 구축

- 판단근거
  - 저소득 과다지출 어려움 및 부채상환 어려움, 실직, 재취업, 퇴직 어려움이 전국평균보다 높음.

####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두배통장

- 판단근거
  - 취업지원 필요가구가 전체 시·도 중 첫 번째로 높음.

#### ○ 금융상담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취약계층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판단근거
  - 경제적 생활지원, 부채상환 지원 필요가구가 전체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음.
  - 주택, 주거, 환경열악 재개발 문제 심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데이케어센터 확충,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 지원,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이불빨래방 운영, 발달장애인가족 부담 완화 : 긴급돌봄/최중증시설, 어르신·장애인돌봄자 휴가제 운영, 권역별 장애인거점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어르신일자리 지원, 서울형인증제 확대로 요양서비스 질 제고

- 판단근거

- 보건의료지원 및 어르신 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저소득층 지원 필요가 전체 사·도 중 두 번째로 높음.

○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노숙인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1만개 지원, 뉴딜 일자리 추진

- 판단근거

- 취업지원 및 필요가구 비율이 서울시가 첫 번째로 높음.

○ 청소년주말활동센터 운영, 아동·청소년돌봄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판단근거

- 취학전 아동, 초등생, 청소년 지원가구 비율이 전체 사·도 중 두 번째로 높음.
- 취학전 아동 서비스 필요비율이 서울시가 평균보다 높음.

○ 폭력피해여성 체계적 지원 강화

- 판단근거

- 여성지원 필요 비율이 전체 사·도 중 두 번째로 높음.

○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상 운영,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시행,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 강화, 병원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사업 강화

- 판단근거

- 보건의료지원 필요 비율이 전체 사·도 중 두 번째로 높음.

○ 마음을 잇는 자살예방 치유도시 조성

- 판단근거

- 심리 및 정서적 지원 필요가구 비율이 전체 사·도 중 첫 번째로 높음.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서울가족 톡톡스쿨 운영, 한부모가족 위기지원사업

- 판단근거

-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판단) 근거가 부족함.

## ② 부산광역시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노후소득보장, 노인의료보장,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주거수당, 고령친화도시 조성,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서부산권 추가 설치

- 판단근거

- 어르신 서비스 필요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노인복지욕구 필요서비스에서 가사지원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은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어르신 지원 가구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아동학습권 보장, 보육권 보장,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판단근거

- 초등생 서비스 필요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 자녀양육 필요서비스에서는 체험 및 학습활동이 높게 나타났음.

○ 동복지 기능강화사업

- 판단근거

- 주택, 주거, 환경열악, 재개발 문제 심각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과의 관계 심각비율도 낮지 않게 나타남.

○ 중증장애인 치료지원사업, 통합적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사회공헌자 발굴 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활성화

- 판단근거

- 보건의료지원 필요가구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 자활역량강화, 부산형 자립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확충, 취약계층 자활근로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인프라 구축,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판단근거

- 장애인 서비스 필요비율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 인프라 조성

- 판단근거

- 범죄, 학교폭력 치안 심각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판단근거

- 여성필요서비스 중 문화·여가 활동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여가환경 인프라 조성

- 판단근거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여가환경 인프라 조성
-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욕구조사 결과 및 지원(판단) 근거가 부족함.

### ③ 대구광역시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대구형 복지기준 마련 및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확대 설치, 통합무로진료소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대구형 하자센터 설치, 복지기동대 운영지원, 복지서비스 알림 웹/앱 개발 및 보급(복지방송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개편 및 기준 수립, 독거노인 고독사제로 프로젝트,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기능 재편 및 확대

##### - 판단근거

- 저소득 과다지출로 어려움이 많고 부채청산 어려움이 많으며, 의료 및 건강영역 결핍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음.
- 빈부격차 심각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으며, 의료 및 건강영역 결핍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및 자립지원 시설,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 설치, 장애인전동휠체어 충전기 확대 설치, 장애인 콜택시 확대도입 (특장차 및 개인택시), 애인보조기지원금 증액

##### - 판단근거

- 장애인서비스 필요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가구 비율도 높게 나타남.

○ 광역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1인 가구 자료 구축 및 돌봄체계 구축

##### - 판단근거

-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 필요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지원 가구 필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정신건강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고용복지종합지원센터, 5060일자리 인턴제, 50+ 지원센터(이모작 지원센터), 의무고용비율 확대, 주민씨앗 동아리 구성, 사회적 경제 협의체 구성, 사회적

경제 생산품 판매장 설치

- 판단근거

- 가구균등화소득이 전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수급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실직 및 재취업, 퇴직으로 어려움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음.

○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시간제(혹은 연장형) 보육 확대, 공동육아나눔터(현재 1개소), 보육 고충상담센터인력배치, 구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품질관리전담기구 설립

- 판단근거

- 취학전 아동 서비스, 초등생, 중고생 서비스, 저소득층 서비스 필요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학자녀 양육이 자녀교육비 지원 등 보육에 대한 높은 서비스를 반영함.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⑤ 광주광역시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 운영, 문화복지권 확대, 파견직 생활임금 보장, 단시간(계약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공적사업 입찰시 정규직 비율 평가점수 포함,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직화로 관측은 임금보장,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원 정착,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사회보험 활용, 시민을 위한 사회보험교육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동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 및 통장단 중심 복지지원단 운영, 공공부문 적정 수급과 관리모형개발, 시청복지인력 확충과 전문화, 광주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자치구 우수사례 상호교류 사업 추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마을형 복지사업, 경로당 주민의 집(마을 복지문화센터)전환

- 판단근거

- 상용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청산의 어려움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소득, 의료, 교육, 직업, 주거, 이동 등에 대한 통합적서비스

- 판단근거

- 장애인 가구 비율은 낮으나 국민기초수급가구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서비스 지원필요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지원, 도시재생전문가 마스터제도와 공동체주택건설, 노랑호루라기 긴급주거지원사업과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리모델링, 아파트 생활복지사업,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등대 프로젝트 사업, 안전마을디자인사업

- 판단근거

- 정부보조금이 전체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결핍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긴급복지 지원 및 자원연계활성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시상담체계 구축, 노인 건강검진, 증진, 치매예방 내실화, 공공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보건소 기능강화, 전문주치의제 확대, 광주정신보건시험사업 안정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서비스 사업, 찾아가는 폭력 및 자살예방서비스

- 판단근거

-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대체인력뱅크 운영, 임신부 가정에 대한 Mother Box 지원 사업

- 판단근거

- 여성에 대한 필요서비스가 문화 및 여가 활동관련 서비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아동청소년 아침문화체육지원 활성화, 청소년상담, 문화, 체험공간 확충과 사회참여 확대

- 판단근거

-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의 필요서비스는 방과후 학습지도,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필요서비스로는 진로상담이 높게 나타났음.

○ 자존감 살리는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과 장애인의 직주형 일자리 발굴과 확대

- 판단근거

- 취업지원 필요가구가 높게 나타남.

○ 아동과 보호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 실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 구제, 상시적 위기가정조기발굴체계 구축,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 가족복지 사업 강화

- 판단근거

- 가정내 불화 및 단절로의 어려움이 전체 시·도보다 높게 나타남.

## ⑥ 대전광역시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운영, 대전시민복지기준선 평가보고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희망T(tree)움 확대, 희망T(tree)움 자치구별 성과비교, 희망T(tree)움 플러스:민관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희망T(tree)움 치유프로그램 운영, 취약1인 가구조사, 복지만두레 총 점검 및 도약, 복지만두레 보라미 통합사례관리 지원, 복지만두레와 함께 마을 만들기, 마을과 함께하는 복지관, 대전의료원 착공, 권역재활병원 내 공공 재

### 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 판단근거

- 평균자산과 주택 및 주거환경 결핍비율, 사회적지지 결핍비율, 사회복지 시설 정보제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실버재능나눔센터 운영, 1·2·3세대 통합 프로그램, 효문화 진흥 및 사업 지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증설, 노인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확대, 희망무료진료소 운영지원 확대, 치매발견 및 예방관리사업 확대

#### - 판단근거

- 노인복지욕구 필요서비스가 보호서비스(주간보호/단기보호)가 높게 차지하고 있음.

○ 여성적합 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 판단근거

- 여성필요서비스 중 직업 훈련 및 알선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함.

○ 대전시민 정신건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 - 판단근거

- 정신건강 어려움 정도 및 심리 및 정서적 지원 필요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화된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검진사업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인공관절시술 지원 사업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심리상담 사업 단계적 확대,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홀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 강화

#### - 판단근거

- 장애인 필요서비스에 고용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고위험/고령 임신부 지원 강화, 미숙아 집중치료 지원 확대, 난임부부 의료지원
  - 판단근거
    - 의료시설 부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을 위한 서비스 필요율도 전국적인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지속적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친환경 아토피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동양육 마더센터 확대 설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확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 아동돌봄체계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근거중심 아동청소년 사업을 위한 실태 조사, 맞춤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판단근거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학전 아동 서비스 필요율, 초등생 서비스 필요율도 높게 나타남.
    - 또한 취학전 아동 자녀양육 필요 서비스로 시간연장형 교육이 높게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다양한 가정지원센터 주민참여 모니터링, 다양한 가정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쉼어하우스 운영, 한맘 공유플랫폼 운영
  - 판단근거
    - 다양한 가정지원센터 주민참여 모니터링, 다양한 가정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쉼어하우스 운영, 한맘 공유플랫폼 운영
    -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판단) 근거가 부족함.

## ⑦ 울산광역시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 판단근거

- 성인, 환자, 장애인 돌봄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행정의 불편이 높게 나타남.

#### ○ 고령자 맞춤형 지원기관 설립, 고령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노인복지관 건립, 퇴직자 맞춤형 지원프로젝트

##### - 판단근거

- 연간 소득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직, 재취업, 퇴직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청소년 다목적 문화공간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기능강화, 청소년 관련행사 활성화,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 - 판단근거

- 초등학생 및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가장 불편한 점으로 체험 및 학습활동 부족과 정보제공 부족으로 나타남.
- 취학전 아동 서비스 필요율, 초등학생서비스 필요비율, 중고등 서비스 필요비율이 높게 나타남.

#### ○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제2장애인체육관 활성화,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 - 판단근거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어려운점으로 일이 바빠 시간내기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외국인지원시스템 구축,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 판단근거

-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일등도시 추진,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판단) 근거가 부족함.

⑧ 세종특별자치시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세종형 사례관리센터 설치

- 판단근거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6%이며, 세종은 2.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분포함.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가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 6.7%인데 반해 세종시는 12.1%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러한 수치는 광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 및 사별인 가구의 비중이 전국 23.9%인 반면 세종시는 27.1%로 높은 편임.

○ 지역기반 자살예방사업

- 판단근거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자살자 수는 2012년 41.6명으로 타 사·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 19.7명으로 감소됨.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0~2013년 기간 평균 지역별 자살률은 강원도(41.6%), 충남(41.0%)으로 가장 높으나 동기간 세종시의 자료는 없음. 그러나 세종시가 충남에서 일부 편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암시함.

## ○ 세종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 - 판단근거

- 세종시의 노인인구 비중은 14.7%로 전국 평균 12.22%보다 높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련 시설 이용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34.5%).
- 세종시는 2014년 기준 391개 경로당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장군면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지원할 계획임.

## ○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사업

## - 판단근거

-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욕구분석 결과 청소년 진로선택, 학습지원 등의 욕구와 함께 부모교육, 상담지원 등의 종합적인 복지욕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 행복안심콜서비스 사업

## - 판단근거

- 세종시는 신도심 건설 과정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

## ○ 이동복지관사업

## - 판단근거

- 세종시의 구도심지역인 조치원읍과 면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음.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인프라를 건립하기 보다는 이동복지관을 통해 대상별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 장애인콜택시 확대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차별, 경제활동의 어려움 다음으로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함 (특히 읍면 지역).
- 세종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과 지역총괄계획’ 도입으로 2015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수를 현행 4대에서 6대로 확대할 계획임.

####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 판단근거

- 세종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확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TFT 회의와 연석회의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프로그램 도입 운영 제안함.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가구주 취업상태의 비율은 63.8%로 전국 평균(73.2%)에 비해 낮은 편임.
- 민관 연석회의는 복지와 고용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제기
- 세종시 100대 시정사업 중 하나로 선정함.

#### ○ 저상버스 운영

##### - 판단근거

- 장애인 편의시설 중 불편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4.6%).
- 민관연석회의 결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상버스의 도입을 주장함.
- 여성과 노인 역시 대중교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음(각각 24.2%).



##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확충

## - 판단근거

- 욕구조사 결과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욕구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1위로 나타남(읍면지역).

##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 사회복지위원회 활성화사업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며, 전문가 FGI 등을 통해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세종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다만, 사회복지장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세종시의 특성상 향후 결정해야 할 복지사업이 많아 그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노인, 장애인 교통바우처 운영

## - 판단근거

- 세종시 면적 중 신도심 면적은 15.6%에 불과, 70% 이상이 임야지역으로 도로 확장과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세종시 지역적, 인구학적 특성과 복지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읍면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세대에 대한 교통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다만,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나 전문가 회의 등에서 의견이 수렴된 근거는 없음.
-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시설 이용 지원이 있는데 교통바우처까지 제공하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있음. 또한 노인에 대해서만 근거가 제시되어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교통 바우처 지원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 시니어클럽 설립

- 판단근거

- 노후생활 준비는 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비중이 37.2%로 높은 편이며, 노인 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 빈곤이 45.5%로 높게 나타남.
- 노인이 있는 가구의 10.3%는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노인복지관 건립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2년 이내 확충해야 할 복지시설로 노인 복지관련 시설(19.4%)로 나타남.
- 세종시 노인관련 시설은 총 430개소이나 경로당이 가장 많고(91.1%), 노인복지관은 없음.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신도심지역에서는 노인을 위한 여가, 문화, 교양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확대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1.2%).
-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의사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고, 노인 복지 관련 시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체육관 건립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읍면 지역에서 12.4%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동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낮은 것(3.4%)으로 나타남.
- 향후 2년 내 확충해야 할 복지시설로 읍면 지역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남.
- 민관연석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됨.
- 장애인체육관은 복지부의 지자체 자원지표에도 포함되나 세종시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장애인구(7245명)를 고려하면 시급성은 떨어지나 2018년 착공 및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함.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 판단근거

- 세종시 가구주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높은데(26.5%), 이는 신도시 형성에 따른 이주민이 많기 때문임.
- 가구의 생활 여건 조사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51.0%).
-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복지욕구로는 휴일보육(9.2%), 보육교사처우 개선(9.2%)이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3.6%로 매우 낮음.
- 그러나 세종시의 가구주 연령이 젊고, 3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 - 판단근거

-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복지욕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
- 현재 1개소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부족함.

#### ○ 치매상담센터 확충

##### - 판단근거

-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치매나 외상노인을 위한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의 설치확대(14.5%)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읍면 지역의 욕구가 동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 - 판단근거

- 세종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8.5%로 낮은 편임.

-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에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욕구는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의 근거가 없음.
- 민관 연석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간기 보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

####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사회보장통계 등의 근거는 없고, 구도심지역에 1개소가 있으므로 신도시지역에 1개소 추가 확대하자는 내용임.
- 신도시 편입인구가 많지 않고, 장애인 인구 비중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비례를 생각하여 무작정 개소를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도 될 것으로 사료됨.

##### ○ 청소년쉼터 설립

###### - 판단근거

- 청소년쉼터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 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규모가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서 조사되지 않음.

##### ○ 여성쉼터 설립

###### - 판단근거

- 여성쉼터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규모가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서 여성쉼터의 필요성은 2.9%로

문항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세종시 복지재단 설립

- 판단근거

- 지역 욕구의 필요정보다는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등 복지재단의 운영에 비추어볼 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취약계층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판단근거

- 학업중단률에 관한 세종시의 자료가 없으며, 지역욕구조사에서도 특별히 제시된 바 없음.
- 서울시와 광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중이며, 청소년 쉼터 혹은 상담소 등에서 센터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법 통과로 인해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전국 200개소 설치 계획임.

○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지원 사업

- 판단근거

-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과 고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만 제시되어 있음.
-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성평등정책추진 기반 조성 사업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는 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문항이 제시되지 않음.
- 민관 연석회의나 전문가 FGI에서 그러한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부재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도 부재하다는 것이 근거임.

○ 세종형 복지기준 개발

- 판단근거

- 전국적인 복지기준선에서 탈락한 빈곤층 규모 등 세종시 복지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⑨ 경기도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 판단근거

- 5세미만 인구 비율은 화성시(7.2%), 김포시(6.0%)에서부터 가평군(3.5%), 양평군(3.6%)까지 다양함.
- 취학전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0.5%, 방문아이 돌보미는 0.06%에 불과함.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민관통합 사례관리 강화

- 판단근거

-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국 수급자 대비 13.6%, 도내 인구 대비 1.5% 수준(2013년 기준)임.
- 도내 수급률은 가평군(5.86%)에서 용인시(0.60%) 까지 다양함.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 판단근거

- 경기도의 이혼자율은 동두천시(8.4%), 파주시(7.6%), 하남시(7.2%)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권에 한부모가족이 집중화되는 경향은 주택문제와 일자리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됨.
- 독거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함(24만명).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 중도 입국자녀 지원 사업

##### - 판단근거

-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 대규모 산업단지, 군부대 등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가 많음.
- 다문화가정 중 이혼가정, 장애인 등 다문화 사업 내 복지욕구 증가함.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 판단근거

- 경기도의 5~15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화성시 15.3%에서 연천군 9.0%까지 다양함.
-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를 위한 서비스는 0.03%에 불과함.
- 경제난, 가정 붕괴, 과열 경쟁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 발생함(28.1%).
- 민간기관의 집중도 분석에서 청소년에 대한 기관의 확대가 필요함이 제시됨.

#### ○ 중증 정신질환 관리

##### - 판단근거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전국 대비 20.1%, 도내 인구 대비 4.2%임.
- 등급별로는 6급, 5급, 3급 순으로 나타나는데, 중증장애인(1~3급)의 비중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38.8% 차지함.

#### ○ 자살 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 - 판단근거

- 전국 평균 자살률은 28.10명, 경기도 평균 자살률은 27명이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가평군(47.20명), 여주시(45.20명), 양평군(43.00명) 등 높게 나타남.
- 독거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함(24만명).

○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 판단근거

- 고령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12.1%), 서울(11.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천군(21.03%), 가평군(20.52%)에서 고양시(10.0%), 용인시(9.89%)까지 지역내 격차 큼.
- 경기도의 노인고용률은 27.3%로 안산시(14.3%), 의정부시(12.7%)에서부터 가평군(48%), 안성시(45.4%)까지 다양함.
- 민간기관의 집중도 분석에서 일자리 관련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이 제시됨.

○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 기반 구축

- 판단근거

- 민간기관의 집중도 분석에서 자활사업에 머물기보다는 일자리 관련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이 제시됨.

○ 노인 일자리 확대

- 판단근거

- 고령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12.1%), 서울(11.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천군(21.03%), 가평군(20.52%)에서 고양시(10.0%), 용인시(9.89%)까지 지역내 격차 큼.
- 민간기관의 집중도 분석에서 일자리 관련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이 제시됨.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판단근거



- 경기도 장애인인구비율은 북부 가평군(8.5%), 연천군(7.4%)와 남부 양평군(6.9%), 여주시(6.2%)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북부지역의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군(郡)지역이 시(市)에 비해 인구는 적은 반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 민간기관의 집중도 분석에서 일자리 관련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이 제시됨.

####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 청소년 자살 관리체계 구축

###### - 판단근거

- 전국 평균 자살률은 28.10명, 경기도 평균 자살률은 27명이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가평군(47.20명), 여주시(45.20명), 양평군(43.00명) 등 높게 나타남.
- 민간기관의 집중도 분석에서 청소년에 대한 기관의 확대가 필요함이 제시됨.

##### ○ 노인자살예방사업

###### - 판단근거

- 고령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12.1%), 서울(11.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천군(21.03%), 가평군(20.52%)에서 고양시(10.0%), 용인시(9.89%)까지 지역내 격차 큼.

#####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에서 서비스 질 제고라고 언급됨.

#####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협의 기구 구성 및 운영

######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 어르신 문화즐김 센터 운영

- 판단근거

- 고령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12.1%), 서울(11.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천군(21.03%), 가평군(20.52%)에서 고양시(10.0%), 용인시(9.89%)까지 지역내 격차가 큼.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58.35%), 노인복지회관(33.32%) 등 이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그러나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이용방법을 잘 모름(23.12%), 교통이 불편(19.48%), 거동이 불편(17.25%) 등으로 나타남.

○ 어르신 문화의 거리 조성

- 판단근거

- 고령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12.1%), 서울(11.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천군(21.03%), 가평군(20.52%)에서 고양시(10.0%), 용인시(9.89%)까지 지역내 격차가 큼.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58.35%), 노인복지회관(33.32%) 등 이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그러나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이용방법을 잘 모름(23.12%), 교통이 불편(19.48%), 거동이 불편(17.25%) 등으로 나타남.

○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 판단근거

- 고령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평균(12.1%), 서울(11.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천군(21.03%), 가평군(20.52%)에서 고양시(10.0%), 용인시(9.89%)까지 지역내 격차가 큼.

○ 복지공동체 육성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복지공동체 리더 교육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복지공동체 육성으로만 언급됨.

○ 분야별 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민간기관의 집중도에서 시군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과천과 의왕이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장애특성을 감안한 지원 강화

- 판단근거

- 경기도 장애인인구비율은 북부 가평군(8.5%), 연천군(7.4%)와 남부 양평군(6.9%), 여주시(6.2%)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북부지역의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군(郡)지역이 시(市)에 비해 인구는 적은 반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질 관리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제시됨.

○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 확대

- 판단근거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에서 서비스 질 제고라고 언급됨.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아동학대 예방사업

- 판단근거

- 경기도의 5~15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화성시 15.3%에서 연천군 9.0%까지 다양함.
- 취학아동이 있는 자녀에 대한 필요 서비스로 조사되지 않았음.

○ 복지업무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음.

⑩ 강원도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시간제 보육 확대

- 판단근거

- 지역 영유아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시간제 보육이 2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육아종합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 판단근거

- 지역 영유아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39.9%)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 판단근거

- 강원도의 아동 청소년 인구는 전체 주민의 18.8% 수준임.
-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체험학습활동 26.1%, 자녀 교육비 지원(22.7%, 방과후 학습지도 19.5%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진로상담 27.7%,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25.2%, 문화, 취미활동 22.8% 순으로 나타남.

○ 직업체험특화시설 건립

- 판단근거

-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진로상담 27.7%, 아르바이트 연계 프로그램 1.8% 등이 나타남.

○ 위기가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 판단근거

- 강원도 내 요보호아동은 총 239명이며,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으로는 빈곤, 실직,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총 62세대로 삼척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밖 아동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강화

- 판단근거

- 강원도 내 요보호아동은 총 239명이며,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으로는 빈곤, 실직,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총 62세대로 삼척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판단근거

- 2014년 기준 강원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41,6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임.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방문간호서비스 19.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지원서비스 14.7%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 판단근거

- 2012년 기준 강원도 전체 등록 장애인은 십만명 수준으로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이 3.1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노인복지관 설치

##### - 판단근거

- 2014년 기준 강원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41,6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임.
-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29.2%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18.6%) 여성을 위한 서비스(17.7%) 순으로 나타남.

#### ○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 - 판단근거

- 강원도의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시의 어려움으로는 대중교통, 접근 등 불편하다는 응답이 24.0%, 정보 제공 부족이 17.7%임.
- 춘천시, 원주와 같이 대도시 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수가 인구 대비 적은 반면, 오히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수의 대규모 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 - 판단근거

- 강원도의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주민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골고루 갖고 있어 인구 대비 면적이 넓어 복지서비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 - 판단근거

- 강원도 내에 종합병원 15개소, 병원 37개소 등 총 1,416개소의 의료시설이 있음.

- 보건과 복지의 자원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함. 서비스 주체가 다원화되고 욕구의 다양성 및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단편화, 단절, 중복, 비연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비스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 지역자활센터 확충

##### - 판단근거

- 지역자활센터는 도내 17개소로 철원과 양구를 제외한 지역에 1개소씩 있음.

####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 판단근거

- 2012년 기준 강원도 전체 등록 장애인은 십만명 수준으로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됨.
- 2014년 기준 전국 장애인 취업률은 54.7%이며, 강원도는 57.1%로 다소 높은 편임.
-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은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3.57점,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3.37점 순으로 나타남.

#### ○ 경력단절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

##### - 판단근거

- 강원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32.6%), 건강 및 의료서비스(29.1%), 직업훈련 및 알선서비스(23.2%) 순으로 나타남.

#### ○ 노인일자리 창출

##### - 판단근거

- 2014년 기준 강원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41,6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임.
-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사를 확인한 결과 근로의사가 있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비율은 34.2%로 나타남.

○ 아동·여성지역안전망 구축 및 권익시설 확충

- 판단근거

- 강원도 내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위기청소년 쉼터 및 임시보호 기능강화

- 판단근거

- 전국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당 28.5명인데 강원도는 38.5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

○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판단근거

- 2012년 기준 강원도 전체 등록 장애인은 십만명 수준으로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지원 16.6%, 고용 지원서비스 16.3%, 개인별 맞춤상담지원 15.0% 순으로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

- 판단근거

- 강원도 노인 중 15.5%는 독거노인임. 특히 춘천시와 강릉시, 원주시의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편임.
-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없음.

○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 판단근거

- 2014년 기준 강원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41,6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임.
-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 ○ 국민기초생활지원

## - 판단근거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국 130만명의 4.1%를 차지하는 56천명임.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지원에 대해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 ○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 - 판단근거

- 2012년 기준 강원도 전체 등록 장애인은 십만명 수준으로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이를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 - 판단근거

- 2012년 기준 강원도 전체 등록 장애인 중 1~3급 40.6%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

##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 판단근거

- 강원도내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도민의 2.2%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됨.
- 강원도 전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약 95%를 차지함.

## ○ 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자립역량 강화

## - 판단근거

- 강원도내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도민의 2.2%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됨.
- 강원도 전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약 95%를 차지함.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 판단근거

- 강원도내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기화자는 도민의 2.2%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됨.
- 강원도 전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약 95% 차지함.

○ 인적자원봉사확산

- 판단근거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적절한 동원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정비가 시급함.

○ 기업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유치

- 판단근거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적절한 동원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정비가 시급함.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판단근거

- 강원도의 0~5세 아동 비율은 총 주민의 3.9%에 불과하고 출생율은 인구 천면당 7.3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없음.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여가시설 운영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 및 차상위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기부금품제공사업 활성화

- 판단근거

-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함.

## ⑪ 충청북도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 자활사업지원 활성화

##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복지(15.9%) 세 번째로 높은 순위임.

## ○ 시니어클럽 확대실시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 - 판단근거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4.1%이며, 전년 대비 2.9% 증가함.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노인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

##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복지(9.0%)로 나타남.

## ○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운영

##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아동청소년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 응급의료관리체계 구축

##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보건복지(7.8%)로 나타남.

##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보건복지(7.8%)로 나타남.

- 충북도민은 건강관리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식사 등 조절(38.9%)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함.

○ 취약노인 안전 확인 및 서비스연계 사업

- 판단근거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4.1%이며, 전년 대비 2.9% 증가함.

○ 중증 신장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복지(9.0%)로 나타남.

○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복지(15.9%) 세 번째로 높은 순위임.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판단근거

- 충북의 유소년부양비는 21.1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은 편임.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8.4%)으로 나타남.

○ 충북 어린이 인성교육 인프라 확대

- 판단근거

- 충북의 유소년부양비는 21.1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은 편임.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아동청소년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저소득 간병서비스 확대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노인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글로벌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

- 판단근거

- 충북 다문화가족 현황은 7,652가구로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아동청소년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광역아동통합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 판단근거

- 충북의 유소년부양비는 21.1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은 편임.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노인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농촌마을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공동급식 시설 설치

- 판단근거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4.1%이며, 전년 대비 2.9% 증가됨.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노인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이동권 증진사업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복지(9.0%)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 판단근거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4,739명으로 나타나며, 이 중 57.7%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임.
-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제외하면 전체 종사자의 82.5%가 사회복지사임.

○ 사회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 복지 관련 정보의 획득 매체로는 주로 인터넷(35.1%)과 신문/방송/뉴스 기사(28.0%)를 이용하고 있음.

○ 민관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 강화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복지(15.9%) 세 번째로 높은 순위임.

○ 취약계층노인을 위한 여가, 문화, 건강증진 사업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노인복지(23.2%)가 첫 번째로 높은 순위임.

○ 지역주민 복지선진화 의식교육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주민의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욕구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에 직접 알리는 방법(44.3%), 위원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여 자문 혹은 의견제출(14.8%) 등으로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복지(9.0%)로 나타남.
-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비중이나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할

근거는 없음.

○ 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판단근거

- 충북의 유소년부양비는 21.1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은 편임.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8.4%)로 나타남.
- 그러나 보육시설의 욕구 대비 공급 등 서비스 확대에 대해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야간보육 확대

- 판단근거

- 충북의 유소년부양비는 21.1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은 편임.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8.4%)로 나타남.
- 야간보육에 대한 욕구를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 판단근거

- 충북의 성비는 1.02로 전국 평균 1.00보다 높은 편임.
- 여성의 고용율이 낮다던가, 실업률이 높다든지 여성고용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보건복지(7.8%)로 나타남.
- 그러나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서비스의 강화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보건복지(7.8%)로 나타남.
- 그러나 중독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사각지대 없는 충북형 안전망 구축

- 판단근거

- 충청북도에서 힘써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복지(15.9%) 세 번째로 높은 순위임.
- 그러나 중복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법인 회계청렴교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 민간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정비, 가족지원기관 인프라 확대,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판단근거

-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함.

⑫ 충청남도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 판단근거

- 충남의 수급자가 20%가 축소되어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탈락자들 중 상당수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저소득층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 판단근거

-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장애등급별로는 6급과 5급이 가장 높아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자립증진 필요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고용지원서비스(12.6%)는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판단근거
  -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1~3급 중증 장애인 비율은 39.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고용지원서비스(12.6%)는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 판단근거
  -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장애등급별로는 6급과 5급이 가장 높아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자립증진 필요함.

○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운영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로 전국 12.2%보다 높은 편임.

○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 문화 조성 강화

- 판단근거
  - 충남의 여성 인구 비율은 49.3%로 전국 평균 50.0%보다 낮은 편임.

○ 지역별 안전취약지대의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

- 판단근거
  - 충남의 여성 인구 비율은 49.3%로 전국 평균 50.0%보다 낮은 편임.
  -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범죄, 치안문제(3.34점)가 환경오염문제(3.37) 다음으로 높음.

○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 판단근거

- 충남 사회복지 수급자 중 장애인은 12.7% 수준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 판단근거

-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2009년 이후 증가추세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가 5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44.3% 수준임.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로 전국 12.2%보다 높은 편임.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41.2%)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 충남에 경로당은 5,513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1일 이용인원은 16.9명에 불과

○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로 전국 12.2%보다 높은 편임.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41.2%)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인근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 이용이 각각 4.6%, 4.5% 수준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 판단근거

-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범죄, 치안문제(3.34점)가 환경오염문제(3.37) 다음으로 높음.
- 여성이 있는 가구의 필요 서비스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대한 응답이 1.8%로 나타남.

○ 어르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로 전국 12.2%보다 높은 편임.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41.2%)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

- 판단근거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진로상담(25.4%)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 판단근거

- 청소년 문화공간은 총 6개소가 있으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태안군에 각 1개소, 당진시 2개소 등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설치되지 않은 시·군 구도 있음.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취미활동(25.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확산

- 판단근거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용 경험은 13.8%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이용 의사는 33.1%로 높은 편임.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판단근거

- 1~10세 미만 장애아동은 0.9%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조기 재활치료의

필요성은 있음.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이며, 이 중 독거노인 비중은 27.7%임.
- 사회복지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2.3% 차지함.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41.2%)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로 전국 12.2%보다 높은 편임.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 판단근거

- 충남의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5.8%로 전국 평균 5.4%에 비해 높은 편임.

○ 직장 어린이집 설치

- 판단근거

- 충남의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5.8%로 전국 평균 5.4%에 비해 높은 편임.

○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

- 판단근거

- 충남 사회복지 수급자 중 청소년은 15.9% 차지함.

○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

- 판단근거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용경험은 18.3%에 불과하나 향후 이용 의향은 42.6%로 가장 높음.
- 충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17개소가 있으며, 이중 5개소가 아산시에 집중됨.

## ○ 노인회관 건립

## - 판단근거

-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5.6%로 전국 12.2%보다 높은 편임.
- 충남의 노인복지관은 13개소가 설립운영 중이며,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에는 설치되지 않음.

## ○ 보훈·애국공원 건립

## - 판단근거

- 충남의 보훈대상자 수는 30,581명이며, 특히 천안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됨.

## ○ 교육복지활성화 사업 및 조례제정

## - 판단근거

- 충남 수급자 중 영유아 12.2%, 취학아동 14.4%, 청소년 15.9% 등 42.5% 차지함.

##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시·군별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지정·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 배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역량개발 지원, 복지·보건 자체성과관리 체계 구축, 사례관리 지원체계 활성화,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충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 - 판단근거

-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함.

## ⑬ 전라북도

## □ 정합성이 있는 세부사업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농촌형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국공립 보

육시설 확충, 육아지원전달체계 구축(권역별 거점화), 임시 아동돌봄센터 지정 운영, 방과 후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 판단근거

- 영유아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공보육 수용율은 10.48%로 충청남도, 광주, 대구와 함께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항목에서는 ‘시간 연장형 교육(21.5)’, ‘휴일보육(13.9)’ 등 보육 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영유아 문화예술 체험학교 운영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44.1%로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한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를 보임.

○ 농촌형 마을학교 지원사업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을 조사한 항목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이용 불편’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 상 농촌 지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도시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욕구에 기반한 세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진로 및 직업체험교육프로그램 구축 사업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중 청소년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 조사에서 ‘진로상담’이 26.8%로 8개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음. 따라서 전라북도의 이에 비추어 진로 및 직업체험교육프로그램은 강한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사업

## - 판단근거

-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서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을 관련 지표로 보았을 때 12.9%의 수치를 보여 상위 욕구로 볼 수 있음.

## ○ 권역별 고용복지통합 인프라 조성, 중추도시권 베이비붐 고용복지 통합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고용복지사례관리 정보망 구축, 고용복지사례관리 전담부서 설치

## - 판단근거

- 가구의 생활여건상 어려운 정도를 조사한 항목에서 전라북도는 ‘실직, 재취업, 퇴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응답 항목 상위 그룹을 형성함.

## ○ 도농 노인적합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직업훈련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노인 협동조합 운영

## - 판단근거

-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7개 시·도 중 강원,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또한 전라북도가 시행해온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목표사업량을 초과달성하여 노인의 일자리 관련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사회통합형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

## - 판단근거

-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조사한 항목에서 ‘이용방법을 잘 모름’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이 각각 19.0%, 29.9%의 응답률을 보여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장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7.7%로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음.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평생교육기반 구축

## - 판단근거

-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 정책분야 선호도 분석 결과를 보면 5개 분야 중 장애인 활동지원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매우 강한 욕구에 기반한 세부 사업으로 판단.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판단근거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항목에서 ‘고용지원’에 대한 욕구는 11.5%로 12개의 서비스 항목 중 네 번째로 높음.

□ 일부 정합성이 있는 세부사업

○ 청소년 종합센터 건립, 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청소년의제 운영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 아동청소년 단체 민간협력네트워크 지원

- 판단근거

-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분야가 6.1%로 다른 대상을 위한 서비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욕구를 나타내지는 않음.
- 그러나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을 조사한 항목에서 ‘정보제공부족’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센터 건립 및 민간협력네트워크 지원 등 전달체계 개선 사항이 청소년 관련 욕구에 일부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망 사회서비스 발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직업교육 활성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직접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님.
-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저소득빈곤계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의 적극적 수요계층이 타지역에 비하여 많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체 및 인력 역시 인구 대비 비율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 경증치매노인 돌봄센터 설치운영

## - 판단근거

- 전라북도의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으며 고령화 순위는 두 번째로 높음.
-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비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에 따른 욕구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에서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직접 조사 항목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판단

## ○ 경로당 공동거주시설 전환, 거점 경로당 조성, 경로당 특성화 및 전문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지원, 노인 사회참여활성화 기반 조성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사회보장 통계에서 경로당 관련 직접적인 통계는 없으나 농어촌지역에서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 생활 및 보호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즉,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로 간주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고령화 순위는 전국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높아 노인 관련 욕구 및 수요가 많다고 판단됨.

## ○ 베이비붐 세대 노후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 - 판단근거

- 전라 북도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노인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특정하여 다른 세대 노인과 차별화된 특징이나 서비스 내용 등의 근거다 추가로 필요함.

## ○ 민간 복지전달체계 효율적 재정배분체계 수립, 광역복지 연계망 구축, 권역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농촌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생활권 중심 광역복지관 운영, 농촌형 통합복지관 조성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일부 요구에 기반하였다고 판단됨.

○ 장애아동 통합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욕구를 별도로 조사한 항목은 없으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묻는 항목에서 ‘재활훈련’이 15.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전반적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합성이 없는 세부사업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요보호·위기청소년 관련 항목이 없어 욕구에 기반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유해환경 규제 및 건전한 대체환경 조성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의 불포함 내용으로 판단 근거 부재.

○ 전북형 자활기업 육성,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 특성화, 영농분야 자활기업 협동조합 운영, 농촌자활유통매장 설치운영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는 자활과 관련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욕구에 근거한 사업 내용인지 판단할 수 없음.

## ⑭ 전라남도

## □ 정합성이 있는 세부사업

##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영역별 결핍수준 중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의 결핍도가 23.0%로 총 7개 영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한 욕구가 있다고 판단됨.

## ○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 판단근거

- 노인관련 욕구 조사에서 ‘보호서비스(10.9%)’, ‘가사지원 서비스(21.2%)’, ‘방문간호 서비스(19.0%)’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지표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 - 판단근거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에서 ‘고용지원’ 영역은 12.9%로 총 12개의 영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 판단근거

-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확보율이 32.5%로 저조한 수준임.

## ○ 여성 경제활동 지원

## - 판단근거

-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26.1%로 8개의 항목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 일부 정합성이 있는 세부사업

○ 출산 및 양육비용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내실화,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판단근거

-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서비스(19%)’,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5.4%)’,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11.8%)’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생활여건상의 어려운 정도에서는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이 18%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의 결과에 따른 사업 근거는 약한 편이지만 전라남도의 특성 상 농어촌지역에 지역에 보육기반 시설이 취약한 등 보육과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보육 관련 사업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폭력피해 관련시설 운영지원

- 판단근거

- 여성의 복지 욕구 부분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대한 욕구가 3.4%로 다른 욕구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응답항목들과 대상 범위가 달라 이를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보아 일부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저소득층 아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수준에서 저소득층 아동, 한부모 가족을 구분하여 욕구 파악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전국 조사에서 한부모가족 가정의 월수입이 120만원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강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음.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사회보장 통계에서 경로당 관련 직접적인 통계

는 없으나 농어촌지역에서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 생활 및 보호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 역시 매우 많은 편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일부 욕구에 기반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추진,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추진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일부 욕구에 기반 하였다고 판단됨.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 판단근거

- 전라남도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살펴보면 ‘고용 지원 서비스’가 5.5%로 8개 항목 중 낮은 수준으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만 기반하였을 때는 노인복지 관련 욕구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합성이 없는 세부사업

○ 장애인 권리보호센터 및 쉼터 설치·운영

- 판단근거

- 장애인 인권 및 쉼터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없는 내용임.

○ 다문화가족 종합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결혼이민자 관련 항목이 없어 욕구에 기반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자활근로사업 확대추진, 자활센터 운영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는 자활과 관련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욕구에 근거한 사업 내용인지 판단할 수 없음.

## ⑮ 경상북도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충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여성 관련 욕구 중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21.7%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발달장애인자립지원시스템 구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스템 기능 강화, 장애인자립체험홈 확대

- 판단근거

- 경상북도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고용지원’이 12.7%로 재활훈련, 일상생활 지원 등과 함께 욕구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여성일자리 지원역량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여성 관련 욕구 중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21.7%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행복지도 시스템 운영

- 판단근거

- 시각화된 사회복지시설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임.

-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정보 제공 부족'을 20.9%로 꼽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욕구를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판단근거

- 경상북도의 경우 생활여건 상 어려운 점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을 꼽은 비율이 16.3%로 여타 다른 어려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욕구에 속함.

○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지원

- 판단근거

- 이동권 관련 조사 내용은 없으나 경북의 특별교육수단 도입률은 29.4%로 전국 15위, 저상버스 도입도 4.0%(15위)이므로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욕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형 보육운영 확대

- 판단근거

-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판단근거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항목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는 5.8%로 매우 낮은 수준의 욕구로 나타났음.
- 반면,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없는 가구소득의 절반 정도로 나타나 노인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는 노인빈곤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이 사업은 일부 욕구에 기반 한 것으로 판단함.

○ 제공기관 운영 컨설팅 및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지역특화 신규사업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중 이와 관련된 직접적 조사 내용은 없으나 지역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조사에 비추어 프로그램부족, 행정의 불편, 정보 제공 부족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므로 일부 욕구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경북 할매·할배의 날 활성화

- 판단근거

-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5.1%로 다른 대상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문화행사 및 캠페인 성격이 강한 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못하나 노인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장난감도서관 설치 확대

- 판단근거

-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한 필요 서비스 문항에서 영유아도서관 확대와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 수준에 비추어 일부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한부모가정 가족기능 강화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수준에서 한부모 가족을 구분하여 욕구 파악을 할 수 없으나 전국 조사에서 한부모가족 가장의 월수입이 120만원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강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음.

○ 광역지원협의기구 조직·운영 활성화, 지역복지전문가 양성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지원, 통합사례관리 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평가인증센터 지정·운영, 시·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효율화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일부 요구에 기반하였다고 판단함.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경북형 장기자원봉사 프로그램 [다빈드레] 운영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자원봉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저소득층 자활특성화사업 활성화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자활센터 다기능화 사업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는 자활과 관련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욕구에 근거한 사업 내용인지 판단할 수 없음.

○ 대학졸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확대,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부모역량 강화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결혼이민자 관련 항목이 없어 욕구에 기반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요보호·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요보호·위기청소년 관련 항목이 없어 욕구에 기반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

○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지원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독거노인과 관련한 욕구를 조사하지 않았음.

따라서 통계에 기반한 근거는 없음.

○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활성화, 아동인권증진 및 권리옹호 체계 강화, 노인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체적 욕구의 증거를 찾기 어려움.

## ⑩ 경상남도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관련 지표는 없으나 경남도에 속한 18개 시군의 세부사업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욕구에 근거한 세부 사업으로 판단함.

○ 위기발굴 시스템 구축사업

- 판단근거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25.0%로 전국평균 16.2%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

- 판단근거

- 노인의 '시력'관련한 구체적 욕구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사회보장 통계에서 찾기 어려움.
- 그러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시행하는 기실행 제도이지만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경상남도의 수혜자가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경남의 욕

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연계 경로당 활성화 모델 사업

- 판단근거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항목 중 ‘고용지원서비스’가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노인일자리연계 사업은 욕구를 반영한 세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의 지역문제 심각도 영역을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총 8개의 지역문제 중 ‘의료시설 부족(31.7%)’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음.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경남도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12.0%,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꼽은 비율은 4.1%로 다른 복지 욕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지는 않음.
- 그러나 취학전 자녀양육과 관련한 필요 서비스 항목에서는 시간 연장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높게 나타나 아동 돌봄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함.

○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

- 판단근거

- 시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인식 통계를 보면 경상남도는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를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비율이 10.2%로 전국 평균 19.1%보다 낮음.

- 그러나 총 8개의 문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여성의 복지 욕구 부분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대한 욕구가 3.1%로 다른 욕구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응답항목들과 대상 범위가 달라 이를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음.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활성화 방안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독거노인과 관련한 욕구를 조사하지 않았음. 따라서 통계에 기반한 근거는 없으나 경상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1인가구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욕구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공동거주제’가 욕구에 기반한 것인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검정고시반 지원사업

- 판단근거

- 다문화가족이 있는 가구는 복지욕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
- 그러나 일반적인 검정고시의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력의 문제가 직업 및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시설 설치

- 판단근거

- 다문화가족이 있는 가구는 복지욕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나 ‘다문화가족 검정고시반 지원사업’과 같은 이유로 일부 욕구에 기반 한다고 판단함.

○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님.

- 그러나 현 경상남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광역 단위의 역할이 아닌 기초단위의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함.

#### □ 정합성 없는 세부사업

##### ○ 드림스타트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 - 판단근거

- 아동빈곤과 관련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이를 근거로 욕구에 기반한 세부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연계 및 내실화

###### - 판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항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통계 등의 근거 자료가 필요함.

##### ○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내실화

###### - 판단근거

- 여성지도자 관련 항목은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 따라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⑪ 제주특별자치도

#### □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제주도내 발달장애인은 인구의 10%이며 이 중 56%가 신체능력과 달리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적 보호 체계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지역사회복지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 판단근거

- 제주도는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5~10% 정도 높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용요금 개편등의 계획은 욕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 - 판단근거

- 지역사회욕구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생활여건 중 어려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이 전체 생활여건 중 두 번째로 어렵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 외에 지역사회욕구조사 및 사회보장통계에서 한부모·조손가족의 가구 상황에 관한 구체적 통계를 참고하기 어렵지만 최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한부모·조손가족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부계획은 일반적 욕구에 기반한 것으로 봄.

#### ○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서비스 확대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사회보장통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를 참고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이를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역량 강화를 세부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욕구에 기반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청소년 맞춤형 활동 지원 강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청소년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 8개 항목 중 '문화·취미활동'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 판단근거

-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15.6%)'와 '사회교육 서비스(5.7%)'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47.1%)'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욕구가 낮은 항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 여성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욕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새일센터 인턴지원 확대

- 판단근거

- 출산·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사업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함.

○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 판단근거

- 제주도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경우 12.0%로 노인 대상 서비스, 여성 대상 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민간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서비스 욕구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고용지원'이 23.4%로 다른 서비스 욕구와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고용 확대 지원 사업은 강력한 욕구에 기반한 세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 판단근거

- ‘민간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사업과 같은 이유로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봄.

○ 출산친환경조성

- 판단근거

-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 그러나 서귀포 지역은 24시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으로 출산율과는 별개로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보육수요를 반영한 돌봄 유형별 어린이집 확대

- 판단근거

- 제주도의 생활여건 통계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따른 어려움이 27.0%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임.
- 또한 미취학 자녀 관련 필요 서비스 항목에서 ‘시간연장형 교육’에 대한 욕구가 33.7%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노인 안전단말기 지원 사업

- 판단근거

-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사회보장통계에서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표를 참고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제주도의 치매유병율은 10.87%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주간 및 단기보호 등 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14.1%로 노인 관련 필요 서비스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돌봄 및 보호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여 노인 안전단말기 지원 사업이 일부 욕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치매예방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 판단근거

- 제주도의 치매유병율은 10.87%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8%로 지역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의료원 요양병상 증설 및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시설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은 제주도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 판단근거

-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제주도의 지역사회복지관련 욕구를 보았을 때 '정보제공부족(28.8%)'과 관련된 전달체계와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는 9.3%로 전국 평균 13.3%에 비하면 4%p 낮음.
- 그러나 조사표에 기초한 총 11개의 필요 서비스 중 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장애 관련 서비스 욕구 중 최우선 과제는 아니나 활동지원사업의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짐.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 판단근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나 사회보장통계에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주도 청소년의 ‘학습’ 및 ‘문화 취미활동’에 관한 욕구는 각 24.1%, 27.2%도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일부 적절한 것으로 봄.

####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아동 건강과 관련된 지표는 없으나 시·도별 지역문제 심각도 통계를 참고하였을 때 제주도는 총 8개의 지역문제 중 ‘의료시설 부족(28.8)’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음.
- 따라서 제주도에 아동의 비만을 관리를 위한 위 세부사업은 의료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넓은 의미의 건강 및 의료 분야 욕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적절하다고 판단함.

#### ○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확대

##### - 판단근거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임.
- 제주도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항목 중 ‘주거개선 환경’은 2.5%로 기타를 제외하면 최하위 욕구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소득 구분 없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치로 저소득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욕구가 낮다고 볼 수는 없음.

#### ○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며, 전문가 FGI 등을 통해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강화

##### - 판단근거

-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강화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관련 지표는 없으나 지역 내 복지 자원에 대한 관리 및 중복방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일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 사회보장통계 등의 근거는 없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짐.

#### □ 정합성이 없는 세부사업

#### ○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고용지원 서비스’는 4.3%로 총 8개의 필요 서비스 항목 중 6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임.
-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이 필요 사업이기는 하나 제주도내 노인 욕구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높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인식하는 지역문제 중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에 대한 심각도는 16.7%로 ‘이웃과의 관계 문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이 외에 사회보장통계와 제주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에서도 관련한 구체적 통계를 찾을 수 없어 욕구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추가로 요구됨.

#### ○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확대

#####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사회보장통계, 제주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자료가 없음.

○ 노인학대 및 방임방지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 판단근거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사회보장통계, 제주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지표가 없음.

### 3.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

#### ① 서울특별시

□ 함께하는 서울, 따뜻한 행복도시의 비전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 강화, 사회 양극화 완화,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복지전달체계 강화의 전략목표가 설정되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이 연계됨.

○ 비전 도출을 위해 서울시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담은 향후 시정의 구심계획인 서울시정플랜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주요방향을 도출함.

○ 복지 및 보건, 일자리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선6기 공약의 핵심과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분석과정을 통해 서울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도출함.

□ 중앙정부의 계획과 큰 이견은 없으면서 서울시 특성을 적절히 고려함.

○ 다만,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서울시 SWOT 분석에서 나타난 위협 요인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근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 ② 부산광역시

□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의 비전을 위하여 부산형 맞춤복지 실현, 복지와 고용의 통합실현,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의 전략목표를 갖추므로

서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이 연계됨.

- 권역별 격차 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일자리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높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와 고용의 통합 실현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의 지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함.

### ③ 대구광역시

- 상생하는 복지, 행정도시 대구의 비전을 위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 전달체계 역량강화의 전략목표를 갖추므로서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이 연계됨.
-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지표의 변화, 재정여력의 감소 등 대구시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반영이 높음.

###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 ⑤ 광주광역시

- 더불어 사는 시민,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의 비전을 위하여 시민존중의 광주형 복지권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시민친화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략목표가 제시됨.
- 광주광역시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략목표 사이에 괴리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는 여성의 경우 ‘문화 및 여가활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직업훈련 및 알선서비스’가 제시됨.
  - 그러나 복지수요와 공급자원의 격차 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 알선서비스 지원, 양육과 보육, 건강과 의료서비스 등 프로그램 필요를 제시함.

- 이와 유사하게 법적 복지기준선과 광주광역시민의 주관적 복지기준 사이의 괴리 등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비전에서만 제시하고 있음.

## ⑥ 대전광역시

- 체감하는 복지, 행복한 대전의 비전을 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일하는 시민 건강한 사회,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구석구석 보살핌의 전략목표를 갖춤으로써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이 연계됨.
-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 특성 및 민선 6기 공약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함.
- 평균이상의 거주만족도를 보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이주의향이 늘어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인구규모는 감소하고 노인의 인구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인복지를 주목해야 함.
-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여성·가족의 행복을 위한 도시조성, 건강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복지전략으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 노인인구의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

## ⑦ 울산광역시

-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울산 구현의 비전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체감적 복지도시 구축,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축의 2개의 전략을 구축하였음.
- 이는 민선6기 공약 중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일등도시 추진의 목표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추진 및 가족친화기업 참여유도의 사업분야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연계됨.

## ⑧ 세종특별자치시

- 스마트 복지, 행복한 세종의 비전아래 지속가능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접근 용이한 복지, 개혁적 복지, 함께하는 복지로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함.
- 창조적인 계획도시에 맞게 스스로 세종공동체의 복지발전을 실현하는 똑똑한 복지로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 복지모습을 소망하는 비전을 제시함.
- 지역주민밀착서비스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의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속가능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찾아가는 복지를 설정함.
-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의 접근성 확보의 접근 용이한 복지, 세종시의 도시발전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새로운 계층이 증가하고 동시에 기초적인 욕구충족의 수준을 넘어서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의 개혁적 복지,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 참여와 협력의 함께하는 복지로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은 연계됨.

## ⑨ 경기도

-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의 비전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 일자리 강화의 전략목표를 갖추므로서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이 연계됨.
- 경기도의 욕구조사결과 및 집중도와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주요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과 서비스가 여전히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의 기관과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일자리 관련되어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프로그램 모두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욕구가 증대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관련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복지기관 반경 3km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 서울 외곽지역은 여러 기관들이 서로 반경 3km내에 서로 서로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기관 반경 3km에 포괄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여전히 경기도의 경우 전반적인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의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 일자리 강화의 3가지 복지전략을 수립함.
- ‘복지서비스 강화’ 전략목표는 대응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중앙에서 기획하여 실시되는 대다수의 복지정책들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틈새와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이를 적극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강화함.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이 정책아젠다로 형성되어 각기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음. 이에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 것임.
- 지역복지계획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기도의 역할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공동체형성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였음.
- 경기도 내 지역적 격차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를 시·군이 가지는 환경적 한계점으로만 여겨왔을 뿐 전체적으로 복지부분에서 지역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지역복지 인프라의 균형적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이런 노력들은 도내 복



지수준의 지역격차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여 복지수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수적 요인이 됨.

- 민선 6기의 정책방향 중 일자리 70만개, 사회적 경제활성화가 포함되었듯이 사회적일자리는 고용과 복지를 융합하는 정책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⑩ 강원도

- 함께 누리고 만드는 복지2배 강원도의 비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조성의 전략목표를 수립함.
- 강원도 복지를 둘러싼 환경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위험 속에서 2009년 이미 노인인구가 15.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임.
- 저출산·고령화의 급물살은 생산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짐. 더욱이 보편주의적 복지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빈곤계층 등 복지대상 인구는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그러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이 “복지2배 강원도”인 반면 그 핵심 키워드는 지역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어 괴리감이 존재함.

## ⑪ 충청북도

-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의 비전아래 고용부문(복지연계를 통한 자아실현), 안전(망)부문(안전친화적 복지환경 구축), 사회서비스부문(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달체계(민관협력형 전달체계 구축)의 4개 영역의 전략목표를 설정함.
- 2013년 현재 충북의 경제활동인구는 792천명으로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0.2% 높음. 취업자는 776천명으로 전국 평균인 1.6%보

다 0.2%p 높은 1.8%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경제활동 참가율 0.2%로 전국 평균보다 0.1%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고용률 (15~64세 기준)은 65.2%로 전국 고용률 64.4%보다는 0.8% 높으나 평균증감률에서는 0.4% 낮음.

○ 2009년 총인구의 13.0%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14.1%까지 차지함. 이렇듯 고령사회 진입은 2009~2012년 13%대로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1%를 돌파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함.

□ 전반적으로 취약한 고용부문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안전부문, 맞춤형 통합 지원 부문, 민관협력 전달체계 부문 등 지역특성에 맞게 비전과 전략이 연계됨.

## ⑫ 충청남도

□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의 비전을 위하여 도민의 복지권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사회복지기반 확대의 전략목표를 갖추어서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이 연계됨.

○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은 충청남도 도민들이 사람의 품격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 상황을 지향함.

○ 도민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삶의 활력이 넘치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복지권리 증진, 복지서비스 향상, 복지기반 확대의 3개 전략목표를 제시함.

○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욕구조사 및 상위계획 등 검토를 통하여 우선순위 5가지(복지인프라 확대, 연계 협력,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자립지원, 공동체 의식 함양)를 우선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함.

## ⑬ 전라북도

□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현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높은 현

안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설정함.

- 전라북도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아동친화 양육 및 발달환경조성,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및 자활정책 활성화, 노인돌봄안전망 수립 및 노후 생활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농 복지 불균형 해소 등 5가지로 제시하였음.
-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도시와 농촌별로 복지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복지수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여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은 연계됨.

#### ⑭ 전라남도

- 온정가득, 희망가득, 살고싶은 복지전남의 비전아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충전, 도민중심의 맞춤형복지, 자립지향적 고용복지로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함.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10.6%에서 2014년 9월 12.6%로 증가하였으며, 전라남도의 경우는 2009년 18.0%에서 2014년 9월 20.1%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전라남도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가속화 경향을 보임.
- 전라남도는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으로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전라남도 합계출산율 평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음.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 2013년 1.18명이고,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57명, 2012년 1.64명, 2013년 1.52명임.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2012년, 2013년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2013년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0.3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청신호로 해석됨.
- 이는 22개 시군에서 신생아 1명 당 평균 160여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의

시행결과로 분석됨.

- 전라남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구유인정책도 중요하나, 합계출산율로 인해 확보된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육 및 양육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전라남도는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출생아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발생함.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률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4.2%로 전라북도에 이어 2번째로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전라남도의 특성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충전(출산 및 노인안전 및 돌봄),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취약계층 보호), 자립지향적 고용복지(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 방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은 연계됨.

## ⑮ 경상북도

□ 사람중심, 함께 만드는 복지행복의 비전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지역공동체 실현, 도민 복지권 보장 및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4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은 연계됨.

- 경상북도는 2014. 6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7.1%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유년인구 비중은 14.9%에서 13.2%로 낮아진 반면, 노년인구 비중은 15.6%에서 17.1%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시 지역과 군 지역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 지역은 이미 오래전 노인인구 비중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빈부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의 순이라 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마련, 충분한 정보제공, 이용자의 생활 사이클을 고려한 이용

시간대 조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개선과제라 할 수 있음.

-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대체로 10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군위를 비롯한 11개 군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관이 없고, 의성·청송·영양·울릉 등 4개 군은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2013년 말 현재 노인인구 대비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지역별 시설분포는 권역별로는 남동부권역에, 그리고 시·군별로는 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청소년 수련과 문화의 집은 각각 2개소 늘어났지만, 청소년 공부방은 58개소에서 27개소 줄어들었음.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이와 관련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음.
  - 독립형(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만 수행) : 2개소(포항, 안동)
  - 병합형(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병행) : 2개소(청도, 칠곡)
  - 다기능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병행) : 5개소(김천, 구미, 영주, 상주, 의성)

□ 경상북도 시·군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을 보면 정원의 수가 가장 많은 시는 포항시 22,986명으로 경상북도 전체 정원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구미시가 19,896명으로 20.3%를 차지함.

- 수요자들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7,062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7.2%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23개 시·군 욕구조사 분석결과, 저소득·과다지출이 생활상 어려움 1순위로 나타났고, 부채청산(2순위), 실직·퇴직·재취업(4순위)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시·군 계획 분석결과 역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계획됨.

○ 일자리 관련 시·군 복지계획 분석 결과, 노인시니어클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와 관련된 시설·서비스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력·재정 등의 한계로 인해 공공복지전달체계 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 위기주민의 발굴과 지원이 어려움.

○ 이에 정부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시·군 단위의 지역복지 협의체를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연계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⑩ 경상남도

□ 도민이 더불어 즐거운 여민(與民) 복지의 비전으로 사업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업 내실화,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지원의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은 연계됨.

○ 경상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440,693명으로 경남 전체인구(3,343,878명)의 약 13.2%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창원시가 104,225명(23.7%)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군9,357명(2.1%)으로 가장 적었음.

-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388,657명에서 2014년 440,693명으로 13.4% 증가했음.

○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에 대응하는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복지분야별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가운데 정부의 분권교부세 신장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노령연금지급, 장애연금 지급 등 이전적 급여에 대한 지방비 부담문제로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또한, 복지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열악한 실정으로 복지시설은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보건의료 등의 복지 욕구가 많은 군지역의 주민들은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종래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극히 미약한 현 시점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문제는 해결해야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됨.

#### ⑪ 제주특별자치도

-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의 비전을 위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고용과 복지연계로 자립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심하는 제주 사회, 도민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전략목표를 설정함.
- 욕구조사결과 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에서 정보제공의 부족과 시간부족, 접근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등이 다각화되어야 함.
- 여성과 관련 시설 확대,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며, 여가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야 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보제공의 부족이 가장 큰 불편한 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재가 서비스 희망 욕구가 높은 것을 반영 향후 요양 및 건강관련 서비스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고용지원인 반면, 현실 여건에서 고용지원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장애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의 인구 유입의 증가, 3차 서비스 산업 비중, 시별 격차 존재, 도서지역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4.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

##### ①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타 사·도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더딘 편이나 전체 26개 세부사업 중 6개 사업(23.1%)이 어르신과 관련이 있음.
- 어르신돌봄인프라 확충,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이불빨래방 운영, 어르신·장애인 돌봄자 휴가제 운영, 어르신일자리 지원,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베이비부모 인생이모작지원 등임.
- 대부분의 사업이 공급 확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자원분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새로운 전달체계의 도입(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추가설치, 데이케어센터 확충, 50+재단 설립,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이불빨래방 운영, 권역별 장애인 거점복지관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품질지원센터 등임).

##### ② 부산광역시

- 부산시 노인인구는 14%로 나타나 고령사회에서 노인과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함.
-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여건이 일반가구보다 경제적 여건 및 생활여건 전반에



취약함이 드러났고,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생활여건이나 지역 만족도 등에서도 권역별 격차가 확인되었음.

○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저(무)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가구의 경우 일자리 지원정책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여건 전반에 있어 서부권의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권역별 생활여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이에 근거하여 노인분야의 노인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의료보장, 고령친화도시 등의 세부사업이 선정되었고, 고용분야의 취약계층 자활역량강화 및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의 세부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복지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및 서부산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옹구종합센터(복지옹구 상담·대여)를 추진함에 따라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은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복지기준선의 마련은 복지의 최저선을 마련한다는 점과 부산의 복지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부산광역시가 별도의 기준선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점이 있음.

○ 핵심과제 중 복지기준선의 마련은 부산시민 복지의 최소 기준의 마련인 점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상충되는 부문이 있다고 판단됨.

### ③ 대구광역시

□ 대구시는 패션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전면적인 혁신과 도시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은 적절한 전략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복지정보의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스마트 복지망 구축 운영 역시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 ⑤ 광주광역시

-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핵심사업의 제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보험의 권리성 강화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 할 업무와 민간부문에서 할 업무간 배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지방정부의 세입 등을 고려하여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자리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측면에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⑥ 대전광역시

- 총 7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전시민의 복지기준선 마련,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ree)움 확립, 마을복지공동체 강화를 설정함.
- 두 번째는 일자리로 여성 및 노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었음.
- 의료공공성 확보 및 노후생활보장, 장애인·비장애인, 여성의 행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대전시의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⑦ 울산광역시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 지원,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의 4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함.
- 욕구조사에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정보부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용방법을 몰라 이용한 경험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원화된 복지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적합한 세부사업을 추진함.
- 울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3년 7.3%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약 9%의 고령화율을 보이게 됨에 따라 향후 베이비붐 세대 노령인구 편입과 고용 및 직업관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함.
- 보육비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공립 시설의 확충에 대한 욕구,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 시간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종일제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취약가정의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기존 보육시설 설치지역과 설치예정지역을 제외한 동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의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동에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예정임.
-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급변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와 다양한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고 서비스 개입계획과 개입, 연계, 사후관리의 일원화된 복지 시스템 운용의 중요성을 우선순위로 함.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⑧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기반서비스강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세종형 사례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 사례관리제공과 지역기반 자살예방 기관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세종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지역기반 서비스강화의 핵심사업과 세부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 중심서비스를 위한 행복안심 콜서비스사업(복지프로 그램 연계 24시간 서비스 제공) 및 이동복지관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생활복지 및 위기대응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용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복지공동체 기반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세종시 복지재단 설립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주민자치역량 및 복지자원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평생학습진흥원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⑨ 경기도

- 경기도의 욕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관 및 서비스 확대, 여성과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일자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를 핵심으로 하여 핵심과제는 9개를 선정하였음.
- 복지사각지대 해소,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사회복지인력의 역량 강화,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문화 회복,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선정함.
- 복지서비스 강화는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사업,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중증정신질환, 청소년, 노인 대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복지공동체 구현은 어르신의 행복공간 조성, 복지공동체 구성 등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사회적 일자리 강화는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자활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⑩ 강원도

- 복지수요 및 공급 현황분석의 결과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간 격차가 존재함.
  - 수요 및 공급 분석에서는 한부모가족,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핵심과제는 노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설 확충이 제시되어 있음.

#### ⑪ 충청북도

- 충북에서 앞으로 가장 힘써야 할 복지 분야에 관한 질의에서는 높은 편차와 분산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및 보육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분야,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향후 힘써야 할 분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순위 6위(14.9%)로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4.8명, 경제활동참가율 34.2%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복지정책 방향이어야 함.
  - 노년부양비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이 16.7, 충북은 20.6이며, 노령화지수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이 41.7인데 비하여 충북은 97.3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은 편임.
  - 11개의 핵심사업과 39개 세부사업을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부문 2개영역, 안전(망) 부문 3개영역, 사회서비스 부문 3개영역, 전달체계부문 3개영역으로 구분됨.
-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일자리, 보육부문의 확대, 안전(망) 부문의 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지원, 민관협력 전달체계 확대 및 강화로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⑫ 충청남도

□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3대 전략목표, 6대 핵심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장애인·독거노인·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강점으로는 높은 1인당 총생산량과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비정규직비율, 높은 직업교육경험률이 장점임.

○ 또한 낮은 범죄율과 높은 교육수준과 적은 교육비, 충청남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선 5기에서 6기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장점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연령의 인구비율, 높은 노인인구비율, 낮은 가구소득, 만혼 현상과 첫째아 출산 연령의 상승,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높은 이혼율과 이혼가정의 자녀들,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과 높은 등록장애인,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지수는 약점이 되고 있음.

□ 자립지원, 공동체의식 향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복지인프라 확대, 연계협력 증진 6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자활센터 활성화 분야,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 분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경로당 등 노인 분야, 보육교사 역량강화 분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분야, 청소년 분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⑬ 전라북도

□ 전라북도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는 아동친화 양육

및 발달환경조성,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및 자활정책 활성화, 노인돌봄안전망 수립 및 노후생활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농복지불균형 해소 등 5가지로 제시됨.

-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24시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의 세부사업, 안전한 지역돌봄 및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청소년 종합센터 확대 설치, 민간 협력네트워크 지원으로의 세부사업을 설정함.
- 전달체계 구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권역별 고용복지종합 인프라 조성, 사례관리 정보망 구축,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의 세부사업, 노인돌봄 및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거점 경로당 조성, 노인일자리 직업훈련체계 구축, 노인 사회참여활성화 기반 조성으로의 세부사업을 설정함.
-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권역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증진 및 평생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아동 통합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의 세부사업을 설정함.

□ 이러한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을 통하여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⑭ 전라남도

- 합계출산율 1위의 전라남도가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선정함.
- 저소득층의 아동지원과 폭력피해 여성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역량 강화를 두 번째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노인의 돌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세 번째 핵심과제가 노인돌봄 및 돌봄체계 구축으로 선정됨.

-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자활을 통한 탈수급 유도가 각각 전라남도의 욕구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⑮ 경상북도

- 23개 시·군 복지욕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가장 시급하고 일차적인 욕구로 나타남.
- 민관협력·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이 주요한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로 계획되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지역 복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이 2~3순위의 이유로 나타남.
- 노인이 가장 우선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인구동향분석에서도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유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인복지가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임.
- 노인·장애인·저소득·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이 핵심적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개발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함.
-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략목표를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함에 따라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⑩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4개의 핵심과제(사업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업 내실화,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지원) 아래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함.
- SWOT분석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기회(공공 사회복지주체의 강화,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 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가능)와 강점(행정과 교통의 편리, 문화공간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세부사업을 수립함.
- 위협(높은 고령화율, 신 빈곤층 증가, 출산율 저조 및 노동인구 감소, 가족형태의 다양화)과 약점(복지서비스 자원 및 인프라 불균형, 복지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문화 부족, 도시와 농어촌 지역 지속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간 연계 활성화와 취약계층 삶의 질 문제, 노인·여성·다문화가족 대상의 사업내실화, 불균형되어 있는 인프라시설의 균형적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함.
- 이와 같이 핵심과제별 특성에 맞는 세부사업을 수립함에 따라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⑪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여성의 고용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근거로 한 핵심사업과 세부사업의 선정이 필요한데 현재의 핵심 사업은 평이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함.
- 예)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여성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등
- 그러나 핵심 사업 하위 세부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다수 존재함.
- 예: 노인 안전단말기 지원사업,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 등

## 5.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

### ① 서울특별시

□ 핵심과제와 전략목표간 체계 부적절함.

○ 핵심과제 1.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과 전략목표 III.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간의 위계 설정의 체계가 부적절함.

□ 유사한 서비스를 대상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적·포괄적 서비스라는 장점을 상쇄함.

○ 핵심과제 6. 여성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은 핵심과제 4.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대상자의 특성으로 구분함.

※ 일본 동경도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한 건물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세대 간 통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함.

○ 핵심과제 5. 사회적일자리 활성화의 세부과제 內의 사업들을 대상별로, 부문(사회적 경제, 민간)으로 구분 불필요함.

### ② 부산광역시

□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실현 등 부산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

○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복지와 고용의 통합실현, 지속가능 복지환경조성의 목표아래 복지기준선, 고용지원, 복지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노후소득 및 노인의료보장,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여성의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종합센터 및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일관적이고 체계적

인 비전과 3개의 전략목표, 6개의 핵심과제, 31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음.

### ③ 대구광역시

- 전략목표별 핵심과제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간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전략목표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의 핵심과제로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 1인 가구 돌봄지원 사업 활성화, 자살예방 등 적절
- 전략목표 2.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의 핵심과제로 보육, 아동 및 청소년, 취약 청소년 지원을 포함한 것도 적절함.
- 하나의 전략목표당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한 것은 다소 많은 경향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세부과제의 수는 적은 편임.

###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 ⑤ 광주광역시

- 전략목표별 핵심과제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간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전략목표 3(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핵심과제 ‘5대 사회보험 권리성 강화’의 세부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회보험교육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둔다면, 동 사업은 전략목표 1(시민존중의 광주형 복지권리)의 핵심과제와 연계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⑥ 대전광역시

-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 과제, 세부사업에 대하여 큰 틀에서는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다음의 점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됨.
- 대전 복지수준이 한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함에 대한 타당성이 의문시됨.
-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을복지공동체 강화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민간중심의 마을복지사업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추진계획을 마련함.
- 노인 및 장애인 위주의 복지인프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 영유아·아동·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한지가 의문시됨.

## ⑦ 울산광역시

-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육아종합센터의 2015년 중구 1개, 2016년 울주군에 각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울산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32개소, 사회복지법인 13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462개소, 가정 398개소 등 총 933개소가 있는 만큼 새로이 2개소의 설치에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국공립을 통폐합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시의 경우처럼 울산형 어린이집을 지정·확대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전국 최고의 베이비부머세대 비율로 향후 몇 년 간 많은 수의 퇴직자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육구조사결과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많이 희망하는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함.
- 복지도시 및 가족친화도시 구축을 통하여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및 외국인 지원, 독거노인의 사회관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⑧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하여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으나 타 자치단체와 경쟁우위를 갖기 위하여 창조적 계획도시에 맞는 비전과 전략목표를 구축하였음.
- 또한 지난 2년간의 사업의 수행에서 오류로 나타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성애 초점을 둔 핵심과제별 세부사업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⑨ 경기도

- 경기도는 복지지출의 지속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 일자리에 대한 공급확대가 필요함.
- 외국인 증가 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장애인 등 사회통합의 이슈가 확산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의 비전과 대응성, 연대성, 지속성의 핵심가치를 각각 반영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일자리 강화의 전략목표를 반영하여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경기도 복지욕구조사결과와 접근성 및 집중도 분석을 통하여 세부사업은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⑩ 강원도

- 전략목표별 핵심과제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생애주기적 욕구와 전생애적 욕구가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어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략목표 4(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조성) 하위 11. 안전한 지역돌봄 및 보호체계 구축과 전략목표 1(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하위에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위계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⑪ 충청북도

□ 세종시의 본격 출범과 더불어 신수도권의 관문역할과 배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충북은 기업 및 혁신도시 추진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에 직면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충북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의 비전으로 노인 복지 및 보육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분야,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향후 힘써야 할 분야로 나타나 고용복지연계 전략목표를 위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자활사업 활성화, 보육 및 아동돌봄서비스확대, 야간교육 확대를 설정하였고, 안전(망) 전략목표를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분야의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사업의 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전략목표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확대,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등이고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 전략목표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 등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⑫ 충청남도

□ 「2014년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는 첫째,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여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가 각각 14.7%이었음.

○ 위와 같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의 비전과 어르신과 여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권 증진, 서비스 향상, 기반확대를 전략목표로 삼았고, 자립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역량강화, 인프라 확대, 연계협력증진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필요한 대상별로의 세부사업이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⑬ 전라북도

□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현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높은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설정함.

○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의 비전 아래 5가지의 전략목표(아동친화 양육 및 발달환경조성,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및 자활정책 활성화, 노인돌봄안전망 수립 및 노후 생활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농 복지 불균형 해소)를 설정하여 아동친화 부문의 2개 핵심과제, 사회안전망 부문의 3개 핵심과제, 고용복지통합 및 자립기반 조성에 3개 핵심과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부문의 3개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이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⑭ 전라남도

□ 경제여건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 홀로 사는 단독가구 증가, 다문화사회·여성 및 가족에 대한 수요 증가,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의 현안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과제를 추진함.

○ 전라남도 종합계획의 기회와 번영의 땅 녹색 전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정가득, 희망가득, 살고 싶은 복지전남을 비전으로 내세워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충전,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자립지향적 고용복지 3가지를 전략목표로 삼았으며, 그에 따른 대상별(출산, 노인안전 및 돌봄,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종사자, 일자리 창출, 자활을 통한 탈수급 유도) 9개 핵심과제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고, 그 대상에 따른 26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이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⑮ 경상북도

- 사람중심, 함께 만드는 복지경북의 비전으로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지역공동체 실현, 도민 복지권 보장 및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4개 전략목표를 통하여 9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음.
- 일자리 확충을 우선시하였으며 위기가구 조기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 복지권리 강화 및 예방적 복지 실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세부사업이 수립이 되어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⑯ 경상남도

- 군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노년부양비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지욕구의 다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서비스의 확충과 다양화가 필요함.
- 경상남도의 위협과 약점이 될 수 있는 높은 고령화율, 신 빈곤층 증가, 출산율 저조 및 노동인구 감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복지서비스 자원 및 인프라 불균형, 복지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문화 부족, 도시와 농어촌 지역 지속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민(與民)복지의 비전으로 사업간 연계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구성 등으로 민간복지를 강화시켰고,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아동·저소득층 대상을 지원하며, 노인·여성·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시설 설치 등으로 욕구조사결과 및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비전- 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⑰ 제주특별자치도

-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연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핵심과제는 매우 광범위한 수준에서 설정된 반면, 세부사업은 매우 미시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일관성이 미흡함.
- 예) 핵심과제 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세부사업으로 1.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의 사업은 분만센터 설치와 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임.

## 6.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① 서울특별시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핵심과제별 성과지표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가 제시됨.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관계로 성과(outcome)을 측정하기 보다는 공급의 양(quantity)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예) 핵심공동체 1.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의 성과지표는 동 복지인력 증원, 동마을복지센터 재편 참가동수, 공동체 지원, 공동체 참여자 수
- 세부사업들의 성과지표 달성을 통한 핵심과제의 성과가 측정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합계로 제시하고 있음.
- 예) 핵심공동체 1.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의 성과지표 '공동체 지원'은 세부사업 1-3.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지표(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800개소)와 동일함.

### ② 부산광역시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은 부산시의 사회복지환경 변화 및 전망, 16개 구군

비전 및 핵심과제, 민선6기 복지정책 비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 부산형 맞춤형복지 실현을 통한 복지정책 대상자 체감도 향상, 복지와 고용의 통합실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  
을 통한 지역공동체성 향상, 복지여건 향상을 성과지표로 제시하였고 그 설정  
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③ 대구광역시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시함.
- 예를 들어, 세부사업 1-1 ‘대구형 복지기준 마련 및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의  
성과목표는 연구용역 1회, 연1회 실태조사이며,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기준마  
련여부, 실시여부임.
- 서울특별시처럼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형 복지기준 마련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 ⑤ 광주광역시

- 전략목표 1(시민존중의 광주형 복지권리)과 전략목표 4(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  
활)는 타 사·도 계획에서 제시되지 않는 광주광역시의 전략목표임.
- 그러나 이러한 전략목표가 광주광역시의 지역여건과 복지수요 및 공급 격차 등의 객  
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가 존재함.
-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핵심과제와의 중첩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전략목표 3(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성과지표가 ‘공공영역 일자리’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핵심과제 일부임.

## ⑥ 대전광역시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 자료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함.

## ⑦ 울산광역시

- 복지도시를 갖추기 위하여 고령자 일자리 지원기관 내일설계지원센터의 설치, 시니어 클럽 3개소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중구, 울주군), 노인복지관의 기간 내 완공 진행률,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기간내 완공 진행률, 청소년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설치여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여부의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지원을 위하여 퇴직자 맞춤형 프로젝트의 만족도 및 재취업률, 사회참여율, 장애인취업증가율, 발굴일자리 수, 고령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인한 연간 1,000여명의 전문가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의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일등도시를 위한 사업진행률 및 참여율, 다자녀가정 지원확대에 따른 지원율과 만족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기능강화를 위한 진행률과 기간 내 확충 및 기능보강여부, 청소년 관련행사 활성화의 행사참여도 및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편의시설 확충의 진행률 및 기간내 완료, 제2 장애인체육관 활성화의 기간내 완공여부와 15,000여명의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외국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실시여부와

만족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의 자살 감소율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의 성과 지표는 최근 높아지는 독거노인 자살률의 감소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⑧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젊은층·고급인력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사회복지정책추진의지가 높으나 사회복지시설 부족 및 지역편중과 상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불균형 등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5개의 전략목표(지속가능, 찾아가는, 접근용이한, 개혁적인, 함께하는 복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부와 서비스 이용자 수 및 활동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동 지표의 설정은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⑨ 경기도

□ 경기도는 민선6기 도지사의 방향성이기도 하며 복지욕구는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 맞춤형 대응으로서 방향의 초점을 두었음.

○ 복지서비스를 강화 전략목표를 위하여 핵심가치를 대응성에 두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원가구 수, 교육인원, 서비스 제공율, 경기도 자살률, 자살상담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복지공동체 구현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특화프로그램 보급여부, 시범사업 참여경로당 수, 공동체 육성 실적, 리더육성 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여부, 운영매뉴얼 제작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 강화 전략목표를 위하여 컨설팅 횟수, 전담인력 수, 제공기관 평가, 컨설팅 홍보 횟수, 교육참여자 수, 자활기업 수 증가, 자산형성사업 가입가구 수, 시니어클럽 개소 수, 노인자원봉사 참여인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참여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⑩ 강원도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핵심과제별 성과지표만 제시함.
- 성과지표가 성과(outcome)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output)을 측정하는 개소수, 대상자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확대하는 것이 성과인지, 미충족보육율이 감소하거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한 것이 성과인지 구분이 필요함.

## ⑪ 충청북도

- 4개의 전략목표(고용, 안전(망),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성과지표는 현 자료로는 전략목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설정이 되어 있음.
- 전략목표의 큰 핵심은 지역사회 진단에서와 같이 참여자 수 및 조례개정 여부, 일자리 창출 여부,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용률, 월평균 이용시간, 만족도, 취업 및 창업자 수, 인프라 구축 여부 등으로 동 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⑫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장애인·독거노인·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권 증진, 복지서비스 향상, 복지기반 확대를 통하여 자립지원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사각지대해소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역량강화,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연계 협력 증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참여의 확대와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⑬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빈곤가구의 증가와 중산층 감소, 자영업 비중의 증가와 부족한 일자리, 고령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 가속화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양육 및 발달환경 조성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공보육 수용율, 보육시설 이용만족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아동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수립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율, 위기청소년비율, 아동청소년빈곤율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고용복지통합 전달체계 구축 및 근로빈곤층 자립기반 마련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자활참여자 탈수급율, 사회서비스 일반시장 매출액, 청장년 고용률을 성과지표로 삼았으며, 노인돌봄안전망 수립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노인빈곤율, 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경제활동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농복지불균형 해소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복지시설이용율, 농촌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장애인 취업율을 성과지표로 삼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⑭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충전,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자립지향적 고용복지 3가지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출산, 건강가정, 노인안전,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사회 복지종사자, 일자리 창출, 자활을 통한 탈수급으로 복지의 대상을 총 망라하였음.

○ 각각의 성과지표는 출산율, 어린이집 확충률, 수혜아동 수, 지원대상 경로당 개소 및 이용자 수, 서비스 수혜율 및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수혜자율, 피해구제건수, 직무만족도, 사업량 및 참여율, 탈수급률 등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⑮ 경상북도

□ 9개의 핵심과제 별로 일자리 참여율 및 노동시장 진입률 증가, 대상별 경제활동

참여율 및 취업률 증가,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지원 및 위험감소, 지역별 민관협력 참여기관 증가 및 활성화, 서비스 체계개선 및 성과향상, 영역별·대상별 인권 및 서비스 이용개선, 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이용률 향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 지역사회자립생활 촉진 및 탈시설 지원, 가족문제 노인문제 감소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 4개의 전략목표(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지역공동체 실현, 도민 복지권 보장 및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와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⑩ 경상남도

- 전략목표를 따로 정한 것이 아닌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민간협력 강화로 지역간 교류 건수, 협의체 활동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아동안전지도 제작율,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 매년 3,000명 지원의 성과지표 설정과 체계적 지원의 사업내 실화를 위하여 공동거주제 지원계획 대비 성과(실행률)과 일자리 창출건수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실시 횟수 및 실적,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시설 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전략목표(핵심과제)에 뒤따르는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⑪ 제주특별자치도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로만 제시됨.

- 제주도의 전략목표 중 건강하고 안심하는 제주 사회와 도민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전략목표임.

- 서귀포시의 고령화 증가,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노후건강과

생활안전제도를 통한 건강하고 안심하는 제주 사회 구현은 적절한 위계 체계를 갖추고 있음.

## 7.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 ① 서울특별시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의 근거가 없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② 부산광역시

□ 부산형 맞춤형복지 실현을 통한 복지정책 대상자 체감도 향상, 복지와 고용의 통합 실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성 향상, 복지여건 향상을 성과지표로 제시하였음.

○ 부산형 맞춤형복지 실현을 통한 복지정책 대상자 체감도 향상은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주관적인 개개인의 체감도의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기준의 체감도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역할을 함.

○ 복지와 고용의 통합실현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 및 행복지수가 높아지며 지역사회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높아지게 됨.

○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성 향상, 복지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취약한 지역인 서부산권에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건립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공동체가 향상되고,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건립 및 장애인인권센터



의 설치운영으로 복지여건은 향상됨.

### ③ 대구광역시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의 근거가 없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 ⑤ 광주광역시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현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광주형 복지기준’은 ‘광주형 복지기준 도입’으로 수정 제시되어야 함.

□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실현이 완료되었음.

○ 예를 들어 돌봄체계 구축, 공공영역 일자리 등은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는 실적과 성과가 혼용되고 있어 수정 보완이 요구됨.

○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성과지표가 연구용역 발주, 복지기준 마련,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수로 명시되어 있어 실적과 성과가 혼용되고 있음.

## ⑥ 대전광역시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의 근거가 없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⑦ 울산광역시

- 복지도시 구축 및 가족친화도시 구축의 전략목표를 위하여 만들어진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육아종합센터의 신규설치는 민간어린이집의 울산형 어린이집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⑧ 세종특별자치시

-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특징을 살려 젊고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소지하여 수행하면 세종시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역성을 갖추고 전문가 및 시민, 공무원의 적극성이 우선 주문된다고 판단됨.

## ⑨ 경기도

-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와 접근성 및 집중도 분석을 통하여 수립된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여성과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기관과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일자리 관련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주거관련 서비스와 권익보장서비스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⑩ 강원도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의 근거가 없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⑪ 충청북도

- 충청북도에서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분야는 노인복지 및 보육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분야, 저소득층 복지지원이 향후 힘써야 할 분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안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성과지표는 지역사회의 진단(복지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의 비전으로 노인복지 및 보육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분야,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향후 힘써야 할 분야를 선정하여 4개의 전략목표 아래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⑫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연령의 인구비율, 높은 노인인구비율, 낮은 가구소득, 만혼현상과 첫째아 출산 연령의 상승,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높은 이혼율과 이혼가정의 자녀들, 높은 학교폭력 발생률,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과 높은 등록장애인,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지수 등이 약점이 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성과지표 실현이 필요함.
- 복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확대,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많은 영역의 복지분야를 제공하여 전략목표 아래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⑬ 전라북도

-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도시와 농촌별로 복지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복지수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이러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대상별(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목표 아래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⑭ 전라남도

- 지속적 내수침체, 고용부진, 물가 불안정 등은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전체의 발전과정에서 소외계층의 발생과 확대를 유발함. 또한 일자리 사업, 1인 단독 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충전,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자립지향적 고용복지 3가지의 전략목표로 복지대상을 총 망라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맞는 전략목표 아래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⑮ 경상북도

- 민선6기 정책슬로건을 사람중심, 경북세상으로 설정하여 정부 3.0에 발맞춘 도민 중심의 정책 및 행정실현을 핵심가치로 천명하였으며 주민참여, 민관협력 등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로 설정함.
-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전략목표는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의 대상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우선 삼았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강화를 통하여 공공의 복지만이 아닌 민간협력 참여기관의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⑯ 경상남도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등 대상별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수요공급의 불균형, 개인의 정보부족 혹은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에 중점을 둔 생활형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경상남도의 현 실정임.

- SWOT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경상남도의 약점(인프라 불균형,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속적 불균형 등)과 위협(높은 고령화, 가족형태 다양화 등)요소, 복지욕구조사 결과와 도민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전략목표 아래 성과지표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⑰ 제주특별자치도

-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의 근거가 없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실현가능한 방안이나 예산의 투입이 전제되는 것임. 이에 반해 예산의 투입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8.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

#### ① 서울특별시

-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증원과 방문간호사 증원을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공공부문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1,092명인 사회복지사를 4,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함.
- 현재 320명인 방문간호사를 8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 정규직 채용함.
- 이러한 인력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달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 현재 서울시 재정의 30% 이상이 복지재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재원부담 증가가 예상됨.

## ② 부산광역시

-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 유관시설 및 관련자,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가족, 행·재정 분야 등 총 6대분야 74명과 분과별 TF추진단이 구성됨에 따라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복지건강국 배치인력을 확대(62명 → 82명(3개팀 20명 증원))하고 민간인력 확충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하며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서부산권에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1개소 설치,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복지자원 확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계획은 부산광역시 1년 총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은 2조 7,648억원으로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32.9%를 차지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예산은 2015년 1,168억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약 5%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국비는 701억원, 부산시비는 467억원).

## ③ 대구광역시

- 각 세부사업별로는 단계별 추진계획과 고려사항, 사업모니터링 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공공부문 인력 확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에 근거하면서 2011년 이후 증가한 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업무 부담분을 고려하여 6,000명의 추가 증원 계획됨.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는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임.
  - 2015년 기준, 73의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대구시 스마트 복지망 구축으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복지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함.
- 광역자살예방센터, 고용복지종합지원센터, 보육고충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구형 ‘하자’센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전담기구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은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음.

#### ④ 인천광역시

□ 미제출

#### ⑤ 광주광역시

□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적 전달체계의 외연 확대 및 민간 협력 강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 및 광역단위 협의기구 강화 등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광주『목민관 복지학교』를 통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특강은 전국적 모범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음.

○ 경로당을 주민의 집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의 정비는 효율적인 복지공급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광주형 마을 복지공동체와 광부 복지마을만들기사업 등은 민간부문을 주도적인 주체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들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음.

○ 핵심과제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제시한 반면, 실제로는 공공부문 인력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제목으로는 표시하였으나 내용은 미작성 상태임.

#### ⑥ 대전광역시

□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지역대표 등이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고, 계획수립 추진내용 의견수렴,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조사·분석,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계획 초안작성 및 검토 등의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복지담당공무원 6,000여명 증원을 추진하며 총 15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에 따라 복지자원 확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계획은 대전광역시 1년 총 예산중 사회복지와 보건의 2014년 예산은 1조 2,063억원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던 2010년에 비해 55.8% 증가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예산은 2015년 약 560억으로 나타났음.

## ⑦ 울산광역시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을 팀장으로 공무원, 위원회, 전문가 등의 참여로 한 추진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복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177명, 103)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직무능력 강화, 공공전달체계 개선 등 전달체계를 정비하며, 제2 장애인 체육관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여성가족개발원 건립 등으로 복지자원의 확보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3년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은 550,023백만원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예산의 25.8%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비중은 2014년 26.5%, 2015년 24.2%(621,690백만원), 2016년 26.0%(672,814백만원), 2017년 25.7%(673,123백만원), 2018년 25.7%(676,623백만원)로 전망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예산으로 약 6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5년도 사회복지 총 예산의 10% 미만으로 나타남.



## ⑧ 세종특별자치시

- 제2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는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계획의 수립이 되었다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시민과 전문전인 외 부전문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복지계획수립의 추진하였음.
- 복지자원의 확보는 새중형 사례관리요원의 확충 및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력수급, 이동복지관 사업,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노인복지관 설립, 장애인체육관 건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복지자원 통합관리 및 홍보시스템 구축 등 인력 및 자원의 확보를 추진함.
- 제3기 세종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한 추진사업은 총 329개 사업이고 이중 기존사업의 지속사업은 303개 사업,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임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기간 동안의 사회복지예산은 2014년 사회복지예산(보건의료 예산포함)은 전체예산의 25.5%인 약 1,360억원임.
  - 2014년 기준(전체예산), 2015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31.8%, 2016년도 33.7%, 2017년도 34.9%, 2018년도 37.1%임.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기간에 총 사업은 38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26개 사업, 확대사업 12개 사업이며 2015년도 예산은 52억으로 2014년 대비 157.8% 증가됨. 2016년도에는 93억원 2017년도에는 94억원 2018년도에는 148억으로 증가될 예정임.

## ⑨ 경기도

-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연구진 회의, 분야별 과제발굴 및 논의 회의, 비전수립 워크숍, 자문회의, 비전과 전략 검토회의, TF회의, 분야별 세부사업 논의 회의, 공청회, 도의회 보고, 세부사업 선정회의 등을 거쳐 수립되어 추진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실시함.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실태를 파악함.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함.
- 2014년 5월~8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 파악
- 조사대상 : 도내 1,268개소
- 응답률 : 47.5%(605개소, 종사자 6,753명)
- 조사방법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직능단체, 시군 지역복지협의체, 경기도청 및 시·군 등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함.

□ 내부핵심전략, 협업분담전략, 전달체계 혁신전략, 자원확보 전략

- 내부핵심전략은 정책대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내부적, 즉 경기도 내에서 지원하고 주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함.
  - 가령 종사자의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범위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수교육비 지원 등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협업분담전략은 민-관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과 이를 통해 합의된 처우개선의 이행사항을 시·군에 권고하고 이행률을 관리함을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각 종사자 직능단체와 합의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협업 전략임.
- 전달체계 혁신전략은 종사자 보수를 지불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혁신하는 것임.
  -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채 보수수준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처우개선의 실효현상(편차발생)을 유발함.
  - 최근 몇 년 동안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전달체계 상 혁신적 개선이 없고 보수의 인상률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직급별 호봉제’ 보수체계가 적용되는 시설은 처우개선의 효과가 있었으나 호봉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유형은 여전히 개선율이 낮음. 이러한 원인에는 보수체계 및 인사관리체계 등의 정비, 재정지원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함.

- 또한 필수인력과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간 차등적 처우로 인한 상실감을 최소화 필요함.

○ 자원확보 전략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합리적 도출에 대한 전략임.

□ 민간전달체계나 공공전달체계 모두 재정이나 조직, 인력측면에서 시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때문에 시군 자체적인 계획이 중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동시에 도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민간전달체계와 공공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12년 167,669억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예산은 42,719억원이며, 점유비는 2012년 25.5%임. 2013년의 보건복지예산의 점유비는 31.8%, 2014년 1회추경 40.5%로 점차 증가 추세임. 특히, 2012년 대비 2014년 도 전체 예산은 24,312억원 감소하였으나, 보건복지예산은 15,362억원 증가하였음.

○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은 335,985백만원으로 국비는 155,063백만원, 도비는 25,863백만원, 시군비는 155,058백만원으로 구성됨.

#### ⑩ 강원도

□ 각 세부사업별로는 단계별 추진계획과 고려사항, 사업모니터링 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그러나 복지예산의 확보나 시설 건립의 경비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이 없음.

#### ⑪ 충청북도

□ 1단계(기획 및 지역사회복지조사 단계), 2단계(계획수립 단계), 3단계(심의보고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쳐서 추진체계를 확보함,

- 복지자원의 확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주민센터 활성화, 1인의 전담인력(상근간사) 배치, 희망복지지원단 등 민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공사례관리 구축, 복지시설 균형적 확충 및 민간복지조직 재구조화를 통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함.
- 충청북도의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채의 감소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하며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인 투자를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비례한 재정 의존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충청북도 자체사업의 확장, 자립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였음.
  - 총 11개의 핵심과제들 중 “핵심과제 11. 균형 잡힌 문화·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사업이 2014~2018년 총예산 대비 37.0%(총 순수 도비 예산 대비 4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 순으로 “핵심과제 4. 생명존중·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실현”(총 예산 대비 13.8%, 총 순수 도비 예산 대비 4.9%), “핵심과제 8.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편의성 향상”(총 예산 대비 13.4%, 총 순수 도비 예산 대비 6.5%)로 나타남.
  - 2015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국비는 19,393백만원, 도비는 약 68억원, 시군비는 22,514백만원의 세부사업 예산계획을 수립함.
  -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국비는 45,192백만원, 도비는 30,154백만원, 시군비는 63,303백만원이 투입이 되어 총 138,649백만원이 투입이 될 예정임.
  - 연차적으로 국비의 투입 비율은 감소하고 도비의 투입 비율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시군비 투입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⑫ 충청남도

- 현황을 진단하고, 욕구조사 및 SWOT 분석, 시군, 연구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 도 및 시군 공무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우선순

위 5가지를 선정하였고 전략지도 작성과 전략목표 설정 등의 추진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내 사회복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프라 확충은 향후 4년간 충청남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과 같이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함.

-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Worker together center) 설치 및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의 다각화되는 시점에서 고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함.
- 시니어클럽 설치 : 노인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노인 소득 증대를 통해서 노인 인력 활용, 노인 사회참여 증진, 노인 자살 방지 등의 효과를 위한 시니어 클럽을 설치함.
- 노인주간보호 시설 설치 : 허약하거나 경증 치매 노인을 보호하여 부양자의 부양을 경감하고,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주간보호 설치함.
- 충남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 : 사회복지의 허브 역할, 도내 사회복지 정책 개발, 사회복지 시설의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한 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재단 설립함.
-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은퇴자의 인생설계와 노령기를 앞둔 예비 노인들의 인생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함.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보육 서비스 이용율을 높이며, 도내 보육 서비스의 균형있는 공급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함.
- 직장 어린이집 설치 : 부모에게는 근무 중 수시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의 만족을 높이고, 사업장에는 모성의 보호해 주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함.
-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 : 학교폭력, 학대, 학교부적응 등 문제로 인하여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권역별로 설치함.
- 청소년 진로 체험 센터 건립 :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에 청소년 진로 체험센터 건립함.

-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돕고, 청소년 일탈방지, 가정복귀,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집 설치함.
-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 : 충청남도 사회복지 기관의 업무 연계와 사회복지 정보의 집합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함.
- 노인회관 건립 : 노인여가활동 촉진, 노인 상호간 의사소통, 세대통합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노인을 사회의 한 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노인회관 건립함.
- 보훈애국 공원 건립 :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보훈애국 공원 건립함.
- 충청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 활성화 :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활성화함.
- 교육복지 활성화 및 조례 제정 :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가출 방지, 문제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한 교육복지 활성화 및 조례 제정함.

□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년 - 2018년)에 의거한 추진사업은 총 35개 사업이고, 이 중 신규사업은 6개 사업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및 조례 제정,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충청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 제공의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확산,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임.

○ 2015년에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에 필요한 예상 소요예산은 132,117백만원임. 그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보화가 필요한 예상 소요예산은 84백만원임.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에 필요한 예상 소요예산은 각각 144,767백만원, 154,403백만원, 159,143백만원이며, 각 해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보화가 필요한 예상 소요예산은 2016년 1,418백만원, 2017년 1,897백만원, 2018년 1,908백만원임.

- 2015~2018년까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인해 필요한 예상 총소요예산은 590,430백만원이며, 그 중 신규사업으로 추가적 재정보화가 필요한 예상 소요예산은 5,307백만원임.

### ⑬ 전라북도

- 사업분과별 TF팀 구성(6개 분과, 지역복지,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보육, 장애인, 빈곤분과)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사업방향 및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과제로 설정,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종사자가이드라인100%적용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 추진함.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은16개 시도중 11순위~13순위에 머물러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저하,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하락됨.
-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조사하였음.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관련 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수는 총 66개소이고, 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4개소 등 12개의 유형에 따른 66개소의 기관이 조사에 응하였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하는 과제의 1순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의 의무화가 48.9%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지급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의 전환이 42.6%로 이어서 나타났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92.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지방정부, 시설운영의 법인 순으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특성을 조정하여 대상별 특성화 센터로 조정하

고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을 작은노인복지관으로 조정, 아동양육시설을 지역아동복지센터 등으로 전환을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전환된 시설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함.

- 전라북도전체 총 예산 대비 복지예산으로는 전체 국비의 41.8%인 20,008.1억원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높은 비율이었고, 사·도비 예산은 총예산의 23.1%인 5,726.3억원으로 서울, 충북,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시·군·구비는 4,413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군·구비 예산의 9.9%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면 9번째로 많은 비중임.

- 사·도비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임.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쓰이는 예산은 2015년 23,424.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35,136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임.

#### ⑭ 전라남도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보고 및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토론 및 의견수렴, 전문가 및 직능단체 의견수렴, 도·시·군 간담회, 사회복지위원회 최종보고회 토론 및 의견수렴, 평가위원 자문, 심의 등으로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청회, 언론의 노출, 지역주민의견반영 부문을 다른 항목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보완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남.

- 복지자원의 확보에서 전라남도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현재 462개소 시설의 1,173명의 종사자가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시설(462개소 1,173명)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도비 분담률이 매년 10%씩 감소되고 있어 50%가 되는 시점인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2014년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총액은 1조 9,172억 원(국비 1조 4,268억 원, 도비 4,904억 원)으로 이는 도 전체예산(5조 8,032억 원)의 33%임.
  - 일반회계 : 도(5조 414억 원) 대비 국(1조 5,204억 원) 30.2%
  - 특별회계 : 도(7,618억 원) 대비 국(3,968억 원) 52.1%
  - '13년도 당초예산(1조 6,406억 원) 대비 16.9% 증가(도 전체 3.2% 증가)
- ※ 도비 부담액(4,904억 원)은 지방세수입(7,390억 원)의 66.4%임.
  - 2015년 투입예산액은 563,505백만원, 2016년에는 580,170백만원으로 연차별 약 200억씩 증가되어 2018년에는 615,746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 내실화 사업으로 매년 약 2,200억(매년 70억 증가)이 소요되는 것을 포함한 예산금액임.

#### ⑮ 경상북도

- 계획수립 TF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료수집 및 TF연석회의, 시군계획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권역별 간담회, 중간보고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등 추진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복지자원의 확보는 사회복지전문가 역량 강화 장기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경상북도 조례 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시설 인프라, 주민 욕구 및 지역복지문제 대응방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구축 및 개편 지원함.
- 이에 시·군의 재정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3기 계획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4년 간 모두 404,313백만 원임.

- 재원별로는 국비가 209,885백만 원(52.0%)이며, 도비 75,086백만 원(18.6%), 시·군비 119,341백만 원(29.5%)임.
- 3기 계획 추진을 위한 연차별 재정규모는 2015년 89,569백만 원(22.2%), 2016년 100,665백만 원(24.9%), 2017년 103,363백만 원(25.6%), 2018년 109,780백만 원(27.3%)로 계획기간 중 후반기로 갈수록 재정투입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함.
- 이는 제3기 계획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와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차 년도에 재정투자 규모를 전년 12.4%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2017년 대선 이후 재정투자 규모를 다시 늘리는 것으로 계획됨.

## ⑩ 경상남도

- 경남도내 18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 세부사업의 분석을 진행하여 경상남도과 시군의 일관성,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함.
- 경남도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점검 및 향후 도민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복지지원 매트릭스 실태 조사를 실시함.
-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 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체적 설문으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진행함.
-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등 기초자료 확보를 하기 위하여 복지 분야별 전문가집단 자문회의 및 경상남도 18개 시군 사회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를 통한 설문조사, 2014 창원복지박람회를 통하여 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함.
- 지역별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계획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및 지역 내 자체적인 보수교육, 신규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 등이 탄력적이고 연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한 경남지역 내 정보교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록 지역 내 교육 프로그램(지역별, 시설별 특성 반영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경상남도 각 지역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역할강화에 대한 핵심과제들이 18개 지역 중 절반인 9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거창, 합천)에서 도출되었음.
-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 내 자원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급에 대한 계획을 반영한 지역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사업 내용 및 예산확보계획, 자원활용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사업기반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으로 나타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 민간복지시설 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활용방안이 필요함.
- 복지예산의 급증과 함께 지자체별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 되어져야 하며, 필요시 보건복지부, 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함.
-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만의 조직구성,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화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도모하는 사업이필요함.
- 전국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33조 41억원으로 2010년 21조 2450억원에 비해 55.3% 증가했음.
  - 최근 5년간 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보면 전국의 경우 2010년 19.9%에서 2014년 26.1%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은 2조 4218억원으로 2010년 1조 6890억원에 비해 43.4% 증가했음.
  - 최근 5년간 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보면 경남의 경우 2010년 18.2%에서 2014년 23.7%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대비 2014년 사회복지예산 증감률은 28.6%이며, 식품의약품안전이 351.26%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육 가족 및 여성 (52.13%), 노인 청소년(45.50%), 보건의료(30.92%) 순으로 나타났다.
- 18개 시군별 사업계획에 있어 재정보호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다수 존재해 향후 연차별 계획수립에 있어 국도비가 투입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및 도와의 사전 업무협약이 필요함.
- 경남 시군별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 30%가 넘었으며 향후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자체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보여 지자체별로 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복지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임.

#### ⑪ 제주특별자치도

□ 각 세부사업별로는 단계별 추진계획과 고려사항, 사업모니터링 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는 제주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임. 공공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중심으로 7개 권역별 지역거점복지센터를 구축함.

- 제주도의 세입 여건을 고려하고 있으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예산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판단의 근거가 부족함.
- 사업별로는 예산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해서 투입되는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은 미비하며, 2014년과 2013년 예산액 비교만 제시함.

### 제3절 복지계획 분석결과와 요약 및 시사점

□ 17개 시도의 복지계획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적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6개 항목이 적절로 나타난 경기, 충남, 전북이었고, 보통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6개 항목이 보통으로 나타난 강원도이었음.

- 조사결과 및 지역통계와의 정합성은 적절이 10개, 보통이 6개
-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은 적절이 13개, 보통이 3개

〈표 4-2〉 복지계획 분석결과 요약

(○ 적절, △ 보통)

사도	조사결과 및 지역통계와의 정합성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	비고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경기도	○	○	○	○	○	○	△	
강원도	○	△	△	△	△	△	△	
충청북도	△	○	○	○	△	○	△	
충청남도	△	○	○	○	○	○	○	
전라북도	○	○	○	○	○	○	△	
전라남도	△	○	○	○	○	○	△	
경상북도	△	○	○	○	○	○	△	
경상남도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주: 정합성의 평가기준은 시도별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 및 일부 정합성 있는 세부사업을 총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80% 이상을 적절, 80% 이하를 보통으로 기준을 정함.

-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은 적절이 11개, 보통이 5개
-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은 적절이 11개, 보통이 5개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은 적절이 10개, 보통이 6개
-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은 적절이 7개, 보통이 9개

-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은 적절이 5개, 보통이 11개

□ 이와 같은 복지계획 분석결과에 기초한 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첫째,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주민욕구에 근거하지 않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제시된 사업이 있을 여지가 있음이 매 뉴얼에 반영되어야 함.
  - 이는 욕구조사에서 모든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든 복지자원을 모두 인식 또는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임.
- 둘째,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비전 및 전략, 지역특성의 연계성,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설정은 시·도마다 대체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에 있어서 시·도 및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여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자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셋째, 정부정책에 맞게 국가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사부터 계획수립까지 우수 시·도의 사례를 타 시·도에 전파하는 컨설팅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제5장

###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제1절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제2절 사·도 지원요구 사항과 복지계획 내용의 부합성 분석

제3절 부합성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5

##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 제1절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17개 사·도의 지원요구 사항을 각 사·도별로 제시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사·도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구분	지원요구 사항
서울	①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③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재정 지원
부산	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②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③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④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대구	①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②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③ 고용복지종합센터의 유치 지원
인천	미제출
광주	해당사항 없음
대전	① 우수 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② 대전의료원 건립 비용 국고 지원 요청 ③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④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국고 지원 요청
울산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② 노인복지관 건립 재정지원 ③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재정지원 ④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재정 지원 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재정 지원 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재정 지원 ⑦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검토 ⑧ 복지인프라의 중앙정부 책임과 프로그램의 재원 분담 ⑨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부담 ⑩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인건비 중앙정부 100%, 사업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세종	해당사항 없음
경기	해당사항 없음
강원	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재정 지원

구분	지원요구 사항
충북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②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 운영 ③ 음성 꽃동네 시설바우처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④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국비 지원
충남	①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② 당진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재정 지원 ③ 당진시 위기 여성 쉼터 설치 운영 재정 지원 ④ 당진시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재정 지원 ⑤ 당진시 아동청소년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정 지원 ⑥ 당진시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재정 지원 ⑦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 ⑧ 당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재정 지원 ⑨ 당진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재정 지원
전북	해당사항 없음
전남	①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 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기 조정 필요
경북	① 노인일자리아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③ 교통약자 저상버스 배치 확대 차량구입 국비지원(78대 추가배치) ④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국비지원 (46대 추가배치) ⑤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확대) ⑥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규모 확대 ⑦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⑧ 경산군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⑨ 신설 노인일자리아전담기관(미설치 지역 11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⑩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8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⑪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⑫ 중증장애인자립생활(5개소) 설치확대 ⑬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신규지정 ⑭ 청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⑮ 문경시·영덕군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⑯ 청도군·칠곡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⑰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⑱ 군위군 장애인이동재활차량 신규 차량구입 및 운영비 국비보조 ⑲ 영주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 행·재정지원 ⑳ 문경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21)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 (22) 상주시·영천시·예천군 키즈타운 등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23)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국비보조
경남	① 진주시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②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③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④ 함안군 복지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⑤ 고성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요구 ⑥ 고성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 지원 ⑦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지원
제주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②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1. 서울특별시

### 지원요구 ①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 서울시 현 재정여건 상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하므로,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함.
- 특히,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의 경우는 전 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 건의함.

〈표 5-2〉 타·사도와 차등지원 국고보조사업 및 서울시 추가부담 현황

(단위 : 억 원)

부문	사업명	기준보조율		추가부담
		서울	타 사·도	
<b>계</b>	총 98개 사업	-	-	1조 3,690
사회복지 (주요사업)	소계(81개 사업)	-	-	1조 3,067
	영유아보육료	35	65	3,315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50	80	2,373
	의료급여 사업	50	80	2,209
	가정양육수당지원	35	65	1,636
	기초연금 지급	69	78	869
	보육돌봄서비스	20	50	69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0	70	267
	중증장애인연금	50	70	197
	자활근로 사업	50	80	171
	어르신 일자리사업	30	50	166
	어린이집 지원	20	50	15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70	148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30	50	103
도로·교통 (주요사업)	소계(7개 사업)	-	-	601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40	60	525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0	40	26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40	60	25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4	18	11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0	50	8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2	18	5
문화·관광	소 계 (2개 사업)	-	-	5
기타	소 계 (8개 사업)	-	-	17

**지원요구 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 3년간 한시적 지원 대상인 466명과 향후 신규 채용예정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 복지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재부는 채용 당시 3년간 한시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지원 곤란하다는 입장에 우려
  -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업무량 급증과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협조하고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하였으나 재정 부담이 과다하므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청

**지원요구 ③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재정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비 국비 지원
- 연 250개 확충 기준
  - 공동주택(16%), 리모델링(30%), 신축(54%)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계	11,115	47,940	47,940

-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15년 7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	'15년 추가소요액
계	121,451	142,337	20,886
국 비	45,659	53,525	7,866
시 비	75,792	88,812	13,020

**2. 부산광역시****지원요구 ①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 부산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확충

-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명확화

**지원요구 ②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사회복지전달체계, 예산·회계 등 재정분야,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활용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지원요구 ③ :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특화된 소방, 건축 등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맞춤형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 배포

**지원요구 ④ :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간 효율적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3. 대구광역시**

**지원요구 ①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구시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유치를 위한 사전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어둔 상태임.
- 부지선정, 인력, 사업비의 추계까지를 마친 상태이지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1,510백만 원으로 대구광역시의 역량만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지원요구 ② :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

○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보조금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관할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분권교부세를 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두 가지임. 이들 중 중앙정부 관할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

- 생활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자립지원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일반지원, 청소년지원,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 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이용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비지원시설은 엄밀히 말해 지방정부의 지원 및 관할 밖에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5-3〉 분권교부시설(지자체 지원)과 국비지원시설의 직위별 평균 보수월액

(단위: 명, 천원)

직위	분권교부시설		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분권-국비)
	빈도	평균 보수총액	빈도	평균보수총액	
원장·관장(시설장)	163	48,331	146	22,771	25,560
사무국장·부장	106	42,990	19	40,635	2,355
과장·생활복지사	193	32,631	67	32,479	152
선임사회복지사·생활지도사	245	33,919	41	29,005	4,915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225	28,244	236	21,541	6,703
전체	1932	31,906	509	24,648	7,258

○ 정규직 사회복지직 가운데 분권교부시설 종사자는 1,932명,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는 509명으로 대략 80%가 분권교부시설에 근무하고 있어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들의 사회복지사처우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향후 4년 동안 개선하고자 하므로 이와 더불어 국비지원 시설의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함.

## ○ 연차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개편 및 기준 수립	예산	2015년 수립예정(별도 예산계획 無)			
	성과목표	기반조성 마련 평균 공무원의 85%	평균 공무원의 88%	평균 공무원의 92%	평균 공무원의 96%

**지원요구 ③ : 고용복지종합지원센터 유치 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2017년까지 70곳으로 센터를 늘리는 것이 중앙정부의 계획이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시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1개소 유치
- 2015년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거쳐서 2016년 1개소 설립
  - 예산: 1,000백만 원

**4. 대전광역시****지원요구 ① : 우수 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우수지자체 핵심과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국고지원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음.
- 국고지원의 경우 반드시 포괄지원이 바람직함.
-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비/지방비 매칭지원도 검토 가능

**지원요구 ② : 대전의료원 건립 비용 국고 지원 요청**

-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4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광역시의 재정자립 수준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대전의료원 착공	예산	-	100,000	5,617,000	30,690,000
	성과목표	승인 및 재정보호율	제도기반 마련	사전절차 이행	착공

**지원요구 ③ :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희망-T(Tree)움’은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모형으로서 대전시 중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 모형 중의 하나임.
-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정부 3.0우수선도과제로 선정(2014. 11)되었으며,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모형 도출을 위해 대전 5개 자치구 전역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나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음.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국비(70%)		539,000	1,225,000	1,295,000	1,309,000
시비(30%)		385,000	525,000	555,000	561,000

**지원요구 ④ :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국고 지원 요청**

- 대전광역시시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213,21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보다 약 6만명 정도 많고, 이들이 은퇴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는 물론 실업률의 증가, 예비노인층의 빈곤가구 전락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고령자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창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 신노년층의 고용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고용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직업적 경험은 풍부하나 직업역량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령자 적합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2015년 하반기에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을 통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국고지원이 필요함.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계	170,500	411,000	483,000	555,000
국비(50%)	85,250	205,500	241,500	277,500
시비(50%)	85,250	205,500	241,500	277,500

## 5. 울산광역시

### 지원요구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울산 중구 및 울주군에 각각 1개소씩 건립
  - 주요시설: 놀이시설, 체험실, 보육센터, 교육 세미나실 등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2015	2016	2017	2018
소계	11,565	5,065	6,500	-	-
국비	2,750	1,750	1,000	-	-
시비	1,000	500	500	-	-
구(군)비	7,815	2,815	5,000	-	-

- 총 건립비 11,565백만원 중 국비 2,750백만원 지원 요구

### 지원요구 ② : 노인복지관 건립 재정지원

- 울산 중구 및 동구에 각각 1개소 건립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기능회복실, 강당 등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2015	2016	2017	2018
소계	8,648	8,648	-	-	-
국비	3,856	3,856	-	-	-
시비	1,500	1,500	-	-	-
구비	3,292	3,292	-	-	-

- 총 건립비 8,648백만원 중 국비 3,856백만원 지원 요구

**지원요구 ③ :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재정지원**

- 울산 남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2015	2016	2017	2018
소계	2,874	1,437	1,437	-	-
국비	252	126	126	-	-
시비	126	63	63	-	-
구비	2,496	1,248	1,248	-	-

- 총 건립비 2,874백만원 중 국비 252백만원 지원 요구

**지원요구 ④ :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재정 지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업역량강화 및 재취업훈련 지원

- 장애인 일자리 발굴지원(행정도우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공공기관, 기업체 등 1% 이상 구매)
- 장애인 인권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각 1개소 설치 및 운영

##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2015	2016	2017	2018
소계	3,694	860	887	960	997
국비	1,236	284	297	321	334
시비	2,458	566	590	639	664

○ 총 사업비 3,694백만원 중 국비 1,236백만원 지원 요구

**지원요구 ⑤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재정 지원**

○ 이동편의 및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물리적, 정보적 접근권 확보

-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운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특별운송 버스, 신장장애인 병원이송,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에 차량을 증차 혹은 교체함.
- 공공기관 1,218개소의 시설전수조사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충

##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2015	2016	2017	2018
소계	1,330	306	319	346	359
국비	400	92	96	104	108
시비	930	214	223	242	251

○ 총 사업비 1,330백만원 중 국비 400백만원 지원 요구

**지원요구 ⑥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재정 지원**

○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건강 상담, 심리치료, 여가프로그램, 사회관계 복원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2015	2016	2017	2018
소계	480	120	120	120	120
국비	336	84	84	84	84
시비	72	18	18	18	18
구(군)비	72	18	18	18	18

○ 총 사업비 480백만원 중 국비 336백만원 지원 요구

**지원요구 ⑦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검토**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127개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총 5,959억원)을 지방이양하고 71개 사업(4조 3,409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함.
- 복지 분야의 이 규모는 정부전체 지방이양사업규모의 약 45%(금액은 약 62%)를 차지하여 지방분권은 사실상 복지재정의 분권이었다고도 할 수 있음.
- 하지만 중앙과 지방간에 이양사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과 적정 규모의 재정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직 극복해야 할 부분임.
- 우선 국가와 지방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균등한 국민최저선이 요구되거나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들은 국고환원이 필요함.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은 사업의 목표와 내용상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기초로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고 반드시 국고보조율의 차등보조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국고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무상보육사업 등은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기타 국가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원이나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지원요구 ⑧ : 복지인프라의 중앙정부 책임과 프로그램의 재원 분담

- 기본적으로 국가복지사업은 중앙재정으로, 지방복지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사업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수혜자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보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에 맞게 국가차원에서 책임이 있는 복지부문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지방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부문은 지방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나 기능보강과 같은 사회복지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지원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이양사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지원요구 ⑨ :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부담

-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에 관한 재정 분담을 재조정해야 하여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과 같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 수당, 연금 등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음.

### 지원요구 ⑩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인건비 중앙정부 100%, 사업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틀로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행하는 의미와 함께 모든 사업의 재원들이 국가와 지방간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종사자의 처우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장에서 의무로 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개선을 각 개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보수체계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차이가 나기에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6. 강원도

### 지원요구 ①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 핵심과제 5. 장애인 인권강화 및 편의증진 세부사업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을 계획하였으며, 법정 도입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청함
  - 강원도의 경우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의 제약이 크며 이에 따라 이동지원과 관련된 욕구가 매우 높음. 장애인콜택시는 도내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은 교통수단임.
  - 장애인택시의 법정 도입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 1대이며 법정 기준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154대를 확보해야 함
  - 현재 도내 장애인콜택시는 13년 말 기준 50대(법정 확보율 32.5%)로 법정 기준에 비해 104대가 부족함.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5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임(국토교통부, 2013년 사·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강원도 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은 장애인콜택시의 추가 도입이 절실하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청함

### 지원요구 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재정 지원

- 핵심과제 8. 현재 개별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강원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대체로 100%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임금수준은 생활시설이 약 73~93% 수준, 이용시설은 더 낮아 62~85%선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요구됨.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강원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임금인상률은 17.2%, 이용시설은 26.1%임. 시장화된 영역을 제외하면 각각 13.6%, 10.0%의 인상이 요구됨.

## 7. 충청북도

### 지원요구 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초단위의 근거만 있음.
- 컨트롤타워 기능의 광역협의체(시·도) 구성에 대한 행정 및 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지원요구 ② :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 운영

- 지역주민의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사업(콜센터 129)을 해당지역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긴급위기 상황 등의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고려

### 지원요구 ③ : 음성 꽃동네 시설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전국 단위의 광역 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 시설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전액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소요예산(연간) : 총 264억원(국비 126억, 교부세 40억, 지방비 98억)

**지원요구 ④ :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국비 지원**

- 다문화 가정 및 탈북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문화적 상호교류와 이해의 공간이 필요함
-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0억원 중 국비 14억원 지원 요구
- 설립개요 : 진천군/ 16,749㎡(부지), 968㎡(연면적) / 생활 및 언어 체험관 등 조성
- 소요예산 : 60억원(국비 14억, 도비 13.8억, 시군비 32.2억)

**8. 충청남도**

**지원요구 ① :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과제의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총사업비 507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연도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② : 당진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재정 지원**

-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국비 2,000백만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③ : 당진시 위기 여성 쉼터 설치 운영 재정 지원**

- 위기여성 쉼터 설치 지원비로 국비 120백만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④ : 당진시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재정 지원**

-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사업 이주여성 학력인증지원사업비로 국비 360백만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⑤ : 당진시 아동청소년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정 지원**

- 아동청소년 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국비 4,000백만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⑥ : 당진시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재정 지원**

- 치매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으로 국비 2,250백만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⑦ :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60백만원을 요청함

**지원요구 ⑧ : 당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재정 지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비로 국비 190.5백만원을 요청함.

**자. 지원요구 ⑨ 당진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재정 지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을 위한 국비 330백만원을 요청함.

**9. 전라남도**

**지원요구 ① :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 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 전남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시·군 계획 평가 단계에서 평가척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한계
  - 평가내용을 척도화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 대비 시행에 대한 평가의 경우 시행 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 예시 : 100% 시행 시 10점, 50% 미만 시행 시 0점, 시행률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참여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회의개최 횟수에 따른 점수 부여
- ※ 예시 : 10회 이상 10점, 7회~9회 8점

**지원요구 ② :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기 조정 필요**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 지자체 선거 시기가 맞물려 계획수립 단계에서 새로운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에 따라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혼선이 야기됨.

- 2018년에 T/F 팀을 구성해서 2019년 계획을 세우고, 4기 계획(2020~2023년)은 2019년에 수립하게 되면 2018년 선거결과에 따른 혼선 없이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10. 경상북도

- 경상북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교통약자 저상버스 배치 확대 차량구입 국비지원(78대 추가배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국비지원 (46대 추가배치)
  -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규모 확대
-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 요구 사항
  -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경산군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신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미설치 지역 11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8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5개소) 설치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신규지정 설치확대
  - 청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문경시·영덕군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청도군·칠곡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군위군 장애인이동재활차량 신규 차량구입 및 운영비 국비보조
- 영주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 행·재정지원
- 문경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
- 상주시·영천시·예천군 키즈타운 등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국비보조

## 11. 경상남도

### 지원요구 ① : 진주시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기숙형 기술학교는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지며, 진주시 요구사항임.

### 지원요구 ② :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 현재 밀양시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민원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타 시군으로 교육 및 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및 이동의 편의성 저하로 서비스 포기자가 발생함.

- 이에 분산된 장애인단체의 집중화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함.

○ 따라서 밀양시는 현재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계획에 있음.

-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2,000㎡의 사업규모를 계획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6,000백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500백만 원, 복권기금 2,000

백만 원, 도비 500백만 원, 시비 2,000백만 원의 예산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음.

- 이에 밀양시는 총 소요사업비 6,000백만 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1,500백만 원과 경상남도에 500백만원을 지원 요청

#### **지원요구 ③ :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 의령군은 현재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 및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임.
-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3,000㎡의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6,000백만 원이며 국비 1,500백만 원, 도비 2,500백만 원, 군비 2,000백만 원의 예산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음.
  - 도비 2,500백만 원에 대한 2016년도에 실시 설계 300백만 원, 2017년 건립비용 1,092백만원, 2018년 건립비용 882백만 원의 투자계획을 계획하고 있음.

#### **지원요구 ④ : 함안군 복지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 함안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복지분야 예산지원의 확대 필요
  -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 운영비를 향후에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함.

#### **지원요구 ⑤ : 고성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요구**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차량운영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함.

- 향후 차량운영비(국도비 보조사업) 부족에 따른 추가 교부가 필요함.

#### 지원요구 ⑥ : 고성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 지원

- 빈곤이 세대 전수 극복을 위한 저소득 아동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아동복지 시설 환경개선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 아동지원을 실시함
- 향후 아동적립률 증가에 따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

#### 지원요구 ⑦ :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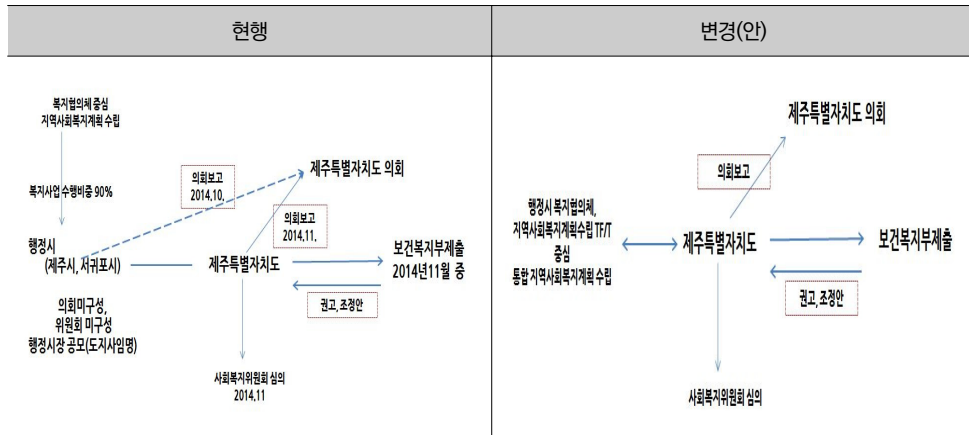
- 장애인 복합문화관은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문화, 체육, 동아리 활동 등의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효율적인 시설이 용을 위해 꼭 필요하며, 거창군은 현재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는 1,000㎡, 건축 990㎡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2,500백만원이며 국비 5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군비 1,300백만원, 민자 200백만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거창군은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비 각 500백만원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에 지원을 요청

## 12.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요구 ① :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행정체계 2개의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있는 실정임.
- 도 단위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행정시의 개별 협의체를 도 단위에서 연계 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및 변경(안) 도 단위 계획 통합(안)



## 지원요구 ② :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분권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분권시설의 경우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통일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분권시설과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처우 개선에 따라 분권대비 비분권 시설의 종사자 처우 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비분권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처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별 기준을 제시하여줄 필요가 있음.

## 제2절 사·도 지원요구 사항과 복지계획 내용의 부합성 분석

### 1. 부합성 분석의 기준

- 시·도의 지원요구 사항이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원 요구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함.

- 각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대략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비전과 전략목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분석 도구로 적절하지 않아 판단에서 제외함.
  - 예를 들면,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역맞춤형 선순환 복지공동체 구축’ 등
- 따라서 비전과 전략목표에 따른 핵심과제, 세부사업 내용이 시·도 지원요구 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거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
- 이 경우는 요구 내용이 세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지라도 부합성이 있음으로 간주
- 일부 시·도의 경우 시·군·구의 지원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시·도 요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이런 경우, 본 보고서의 부합성 분석은 시·도의 복지계획과 지원 요구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시·군·구의 지원 요구 역시 시·도 복지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함.

## 2. 부합성 분석 결과

### ① 서울특별시

#### 지원요구 ①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요구는 복지 계획의 내용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 개선이 서울시 복지 계획 세부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부합하다고 판단

#### **지원요구 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별 사업계획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행·재정 계획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하다고 판단

#### **지원요구 ③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서울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 6-1 보육지원 포함 사항

### **② 부산광역시**

#### **지원요구 ①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 판단 근거

- 부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행·재정 계획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원요구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처우개선과 관련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명확화’를 요구하였으나 복지계획에는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가 부족함.

**지원요구 ②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일부 부합

## □ 판단 근거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구 자체가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부합성 판단 기준인 세부 사업 계획 명시 여부는 충족하지 않으나 부산시의 구·군 지원요구 사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수교육은 복지부 소관 업무로 중앙정부 건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른 지원요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일부 부합한다고 판단.

**지원요구 ③ :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일부 부합.

## □ 판단 근거

- 부산시의 구·군 지원요구 사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특화된 매뉴얼 제작 배포를 복지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세부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매뉴얼 제작에 대한 복지부 건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원요구 ④ :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나눔문화확산'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6-3. 통합적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합

**③ 대구광역시**

**지원요구 ①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대구시의 복지계획 중 '전달체계 역량강화'라는 전략 목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핵심과제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형태 및 성격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의 과제와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지원요구 ② :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16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체계 개편 및 현실과’ 및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세부 사업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핵심과제 16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원요구 ③ : 고용복지종합지원센터 유치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5 고용-복지 연계 지원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부사업에서 ‘고용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④ 대전광역시

##### 지원요구 ① : 우수 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전술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별도의 요구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지원요구 ② : 대전의료원 건립 비용 국고 지원 요청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3 의료공공성 확보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대전의료원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요구와 계획이 부합함.

### 지원요구 ③ :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희망-T(Tree)움’ 대전시 복지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세부 목표로 5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 요구 사항은 계획과 부합함.

### 지원요구 ④ :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국고 지원 요청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이모작지원센터 설치의 세부과제 ‘경험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세부 사업 내용의 일부로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는 복지계획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⑤ 울산광역시

### 지원요구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 지원요구 ② : 노인복지관 건립 재정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 지원요구 ③ :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재정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지원요구 ④ :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지원’이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지원요구 ⑤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지원요구 ⑥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 **지원요구 ⑦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검토**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지만 부합성 분석의 장에서는 지원요구 사항이 해당 지자체의 복지계획에 근거한 것인지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요구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판단함.

#### **지원요구⑧ : 복지인프라의 중앙정부 책임과 프로그램의 재원 분담**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지만 부합성 분석의 장에서는 지원요구 사항이 해당 지자체의 복지계획에 근거한 것인지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요구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판단함.

**지원요구 ⑨ :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부담**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지만 부합성 분석의 장에서는 지원요구 사항이 해당 지자체의 복지계획에 근거한 것인지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요구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판단함.

**지원요구 ⑩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인건비 중앙정부 100%, 사업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의 하위 사업 계획으로 ‘사회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함.

**⑥ 강원도**

**지원요구 ①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5. 장애인 인권 강화 및 편의 증진에 따른 세부사업 목표인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에 해당하여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성과지표로 ‘장애인 콜택시 확충 수’를 제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7. 사회복지인력 보강 및 역량강화 및 행정·재정계획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 해당하는 사항임.

**⑦ 충청북도**

**지원요구 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4. 민관협력형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사업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② :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 운영**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에 ‘보건복지콜센터’ 운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정보접근성 강화’ 등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 보아 부합한 것으로 판단

**지원요구 ③ : 음성 꽃동네 시설바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충청북도의 복지계획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합하지 않음.

**지원요구 ④ :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국비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전략목표 3. 사회서비스 욕구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 학교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⑧ 충청남도**

**지원요구 ① :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 부합

## □ 판단 근거

- 공주시 지원 요구의 부합성 분석은 시·도의 복지계획과 지원 요구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시·군·구의 지원 요구도 시·도 복지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경우 각 시·군·구 복지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각 시·군·구 별 부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충청남도의 핵심과제 ‘자립지원’의 세부 사업 중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Work together center)설치 및 운영지원’과 관련이 있음.
- 도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와 공주시의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이 장애인 관련 포괄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함.

**지원요구 ② : 당진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재정 지원**

##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 판단 근거

- 위 지원요구 ①의 판단 근거와 같은 이유로 당진시 복지계획이 아닌 충청남도의 복지계획에 비추어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내용이 도의 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음.

**지원요구 ③ : 당진시 위기여성 쉼터 설치 운영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당진시의 위기여성 쉼터 설치하는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과 관련성이 높으나 도의 세부 사업 내용은 조례제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완전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관련성이 있음.

**지원요구 ④ : 당진시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 복지계획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합하지 않음.

**지원요구 ⑤ : 당진시 아동청소년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복지인프라 확대’의 세부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에 해당하므로 부합함.

**지원요구 ⑥ : 당진시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복지계획 중 세부 사업으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등 노인 관련 사업이 있으나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원요구 ⑦ :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중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합한다고 판단.

**지원요구 ⑧ : 당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목표의 측면에서는 관련이 있으나 세부 사업 내용이 ‘활동지원 및 활동보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원요구 ⑨ : 당진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복지계획의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합성을 충족한다고 판단.

**⑨ 전라남도**

**지원요구 ① :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 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중앙정부 요구 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복지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본 보고서에 다루는 부합성 분석의 범위를 벗어남.

**지원요구 ② :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기 조정 필요**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중앙정부 요구 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복지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부합성 분석의 범위를 벗어남.

⑩ 경상북도

**지원요구 ① :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규모 확대**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중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지원요구 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지원규모 확대**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및 해당 세부사업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부합한다고 판단.

**지원요구 ③ : 교통약자 저상버스 배치 확대 차량구입 국비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 지원시스템 구축’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지원’에 해당함.

**지원요구 ④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국비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 지원시스템 구축’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지원’에 해당함.

**지원요구 ⑤ :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국비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가족공동체성 회복 및 가족기능강화’의 ‘공공형 보육운영 확대’에 해당하여 부합성을 충족함.

**지원요구 ⑥ :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규모 확대**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 ‘가족공동체성 회복 및 가족기능강화’의 ‘공공형 보육운영 확대’의 주요 활동내용으로 시간제 돌봄 및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지원요구 ⑦ :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의성군의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의 경우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군지원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⑧ : 경산군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경산군의 지역자활센터 건립의 경우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군지원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⑨ : 신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미설치 지역 11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노인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업에 해당함.

**지원요구 ⑩ :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8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경우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중 세부사업 2-4. 요보호·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군지원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⑪ :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도민 복지권 보장 및 강화’ 중 세부사업 6-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군지원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⑫ : 중증장애인자립생활(5개소) 설치 확대**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시설 설치 확대는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 중 세부사업 8-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스템 기능 강화에 해당함.

**지원요구 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신규지정**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중 세부사업 2-3. 여성일자리 지원역량 강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군지원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지원요구 ⑭ : 청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⑮ : 문경시영덕군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⑯ : 청도군·칠곡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⑰ :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⑱ : 군위군 장애인이동재활차량 구입 및 운영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장애인이동재활차량 구입은 전략목표 ‘도민 복지권 보장 및 강화’의 세부사업 8-4.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합한다고 판단.

**지원요구 ⑲ : 영주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재정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장애인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⑳ : 문경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㉑ : 김천사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은 경상북도의 전략목표 핵심과제 9-2. 공공형 보육운영 확대에 해당하여 부합성을 충족한다고 판단.

**지원요구 ②② : 상주시영천사예천군 키즈타운 등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분적으로 부합

☐ 판단 근거

○ 키즈타운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복지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군 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계획'에 별도로 다루고 있음.

**지원요구 ②③ :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국비보조**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전략목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중 세부사업 2-4. 요보호·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에 해당하여 부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⑪ 경상남도**

**지원요구 ① : 진주시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다문화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항은 진주시

의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 **지원요구 ② :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 과제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의 세부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합한다고 판단.

#### **지원요구 ③ :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세부 사업 내용 중 ‘청소년 관련 시설운영 지원’과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 및 보호’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지원요구 ④ : 함안군 복지분야 예산 지원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요구 사항으로 계획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이지만 부합성 분석의 장에서는 지원요구 사항이 해당 지자체의 복지

계획에 근거한 것인지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요구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판단함.

**지원요구 ⑤ : 고성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요구**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 과제인 ‘건강한 보육 환경 강화’에 ‘차량운영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원 요구와 복지계획이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지원요구 ⑥ : 고성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핵심과제인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 내용은 저소득 아동의 자립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세부사업에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가난대물림 차단지원’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합한다고 판단.

**지원요구 ⑦ :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지원**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 지원’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의 일부로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음.

⑫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요구 ① :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과 같은 내용 관련 요구가 아닌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요구로 해당 사항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있어 도 단위 계획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성 제고에 수월하다고 여겨지므로 부합성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

**지원요구 ② :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부합

□ 판단 근거

- ‘공공과 민간협력 확대’의 세부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합성이 있다고 판단.

### 제3절 부합성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 분석 결과 요약

□ 73개 지원요구 사항 중에서 판단기준에 근거한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복지계획에 부합하는 지원요구 사항은 49개
- 복지계획에 일부만 부합하는 지원요구 사항은 10개
- 복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요구 사항은 14개

□ 사·도별 지원요구 사항 중에서 판단기준에 근거한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3개 지원요구 중 부합 3개
- 부산광역시 4개 지원요구 중 부합 2개, 일부부합 2개
- 대구광역시 3개 지원요구 중 부합 2개, 비부합 1개
- 대전광역시 4개 지원요구 중 부합 3개, 비부합 1개
- 울산광역시 10개 지원요구 중 부합 7개, 비부합 3개
- 강원도 2개 지원요구 중 부합 2개
- 충청북도 4개 지원요구 중 부합 3개, 비부합 1개
- 충청남도 9개 지원요구 중 부합 4개, 일부 부합 1개, 비부합 4개
- 전라남도 2개 지원요구 중 비부합 2개
- 경상북도 23개 지원요구 중 부합 16개, 일부 부합 7개
- 경상남도 7개 지원요구 중 부합 5개, 비부합 2개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원요구 중 부합 2개

〈표 5-5〉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의 부합성 분석결과 요약

구분	지원요구 사항	부합성 여부
서울	①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
	③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재정 지원	○
부산	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
	②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③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④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대구	①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
	②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③ 고용복지종합센터의 유치 지원	○
대전	① 우수 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
	② 대전의료원 건립 비용 국고 지원 요청	○
	③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④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국고 지원 요청	○
울산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② 노인복지관 건립 재정지원	○
	③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재정지원	○
	④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재정 지원	○
	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재정 지원	○
	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재정 지원	○
	⑦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검토	×
	⑧ 복지인프라의 중앙정부 책임과 프로그램의 재원 분담	×
	⑨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부담	×
	⑩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
강원	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재정 지원	○
충북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②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 운영	○
	③ 음성 꽃동네 시설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④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국비 지원	○
충남	①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
	② 당진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재정 지원	×
	③ 당진시 위기 여성 쉼터 설치 운영 재정 지원	△
	④ 당진시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재정 지원	×
	⑤ 당진시 아동청소년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정 지원	○
	⑥ 당진시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재정 지원	×
	⑦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	○
	⑧ 당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재정 지원	×
	⑨ 당진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재정 지원	○
전남	①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 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기 조정 필요	×
경북	① 노인일자리아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③ 교통약자 저상버스 배치 확대 차량구입 국비지원(78대 추가배치)	○
	④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국비지원 (46대 추가배치)	○
	⑤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확대)	○

구분	자원요구 사항	부합성 여부
	⑥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규모 확대	○
	⑦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⑧ 경산군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⑨ 신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미설치 지역 11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⑩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8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⑪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
	⑫ 중증장애인자립생활(5개소) 설치확대	○
	⑬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신규지정	○
	⑭ 청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⑮ 문경시·영덕군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⑯ 청도군·칠곡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⑰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⑱ 군위군 장애인이동재활차량 신규 차량구입 및 운영비 국비보조	○
	⑲ 영주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 행·재정지원	△
	⑳ 문경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21)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	○
	(22) 상주시·영천시·예천군 키즈타운 등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23)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국비보조	○
경남	① 진주시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②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
	③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
	④ 함안군 복지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
	⑤ 고성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요구	○
	⑥ 고성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 지원	○
	⑦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지원	○
제주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
	②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 2. 부합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부합성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사·도의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이 반드시 복지계획에 부합해야 함에도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약 20%에 해당하고 있어 향후 복지계획 수립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즉, 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이 정확히 작성되고, 매뉴얼에 따라 복지계획이 수립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복지계획 작성 기간에 단계별로 중앙정부 관계자와 사·도 관계자가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제6장

###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기준

제2절 타당성 분석

제3절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6

## 사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

###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기준

#### 1. 타당성 분석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 사업(business)분야에서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은 최종 투자 여부 결정 까지 발굴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가정을 전제로 관련된 모든 요소와 이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남영호·진현식 2014)”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성을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 등 소요 자금을 추정하며, 생산원가와 일반관리비 등을 분석 예측하여 추정 재무제표와 현금수지표를 작성한 후, 계획사업의 경제성, 수익성 및 차입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남영호·진현식 2014)”
- 공공부문은 사업 분야와 다른 특성이 있는 관계로 예비타당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설계→ 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하게 됨.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두산백과)”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임.
  -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실시됨.

- 경제성 분석은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 등
  - 정책성 분석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자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 등
- 타당성 조사는 ① 경제성: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시스템의 효과 및 이익의 평가, ② 기술성: 개발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과 일정 계획상의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③ 적법성: 개발 시스템의 책무와 위반 여부 조사, ④ 대안성: 개발 시스템에 대한 대안 연구 조사 등의 주된 관심사를 고려하여 시행됨.
- 본 연구에서 사도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성 분석에 근거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원요구사항이 인프라의 건립과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의 구축임.
- 일차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개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과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4가지 분석 기준에 근거한 기술적 분석만 실시함.
-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는 각 사업별로 보다 정교한 타당성 분석 혹은 각 사업별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사도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 기준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의 합리성 기준
-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일반행정사무)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사회복지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산업경제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지역개발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안정방위사무)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본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시·도의 지원요구가 부적절함.

-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이 기준은 사·도의 지원 요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만 활용됨.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고, 국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도의 지원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 기준

○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사·도는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 시·군·구가 사·도 및 중앙정부 요구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요구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그 책임을 이관한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시·군·구의 요구사항 중 그 책무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타당하지 않음.

#### □ 셋째, 지방자치단체 지원 적절성 기준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과 함께 재정 배분을 실시함.

-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
- 교부세의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표 6-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단위: 명, 원)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
2. 문화환경비	다. 보건비	인구수	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23,090
				도	6,500
				시	19,030
				군	61,390
3.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367,560
				도	707,840
				시	886,500
				군	1,022,480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75,540
				도	126,470
				시	578,020
				군	644,350
	다. 아동복지비	아동수	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823,130
				도	189,980
				시	640,460
				군	989,410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942,480
				도	145,340
				시	607,800
				군	623,110
	마.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47,050
				도	8,890
				시	34,310
				군	73,880

주: 보건복지분야 관련 내용만 제시함.

자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 2004년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편입되었음.<sup>12)</sup>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측정항목별

12)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자원 조정 방안』 발표(2013/9/24),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보육 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의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측정단위의 단위비용을 기본으로 함.

- 이는 대부분 복지수요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구수 혹은 대상인구수로 구성됨.
-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 이는 분권교부세의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던 경상수요 일부를 반영한 것임.

〈표 6-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반영 요소	비고
6. 보건비	인구수, 보건의설 면적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w):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시·군·구 차이가 있음.
7.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일반+시설)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w):시·도, 시·군·구 차이가 있음.
8.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경로당 수(신고)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w):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군·구 차이가 있음.
9. 아동복지비	아동 수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w):시·도, 시·군·구 차이가 있음.
10.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w):시·도, 시·군·구 차이가 있음.
11.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w):시·도, 시·군·구 차이가 있음.

주: 일반사회복지비의 사·도 산정식은  $\ln Y_i = (-1.06979 + 0.81037 \ln P) \times w$ , 시·군·구 산정식은  $Y_i = (2037.23315 + 0.02575P) \times w$   
 자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재구성

〈표 6-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지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측정항목	사회복지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50%는 사·도에, 50%는 시·군·구에 반영
	나. 노인복지비 ① 노인인구 비율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30%는 사·도에, 70%는 시·군·구에 반영 ②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요(사·도)
	다. 아동복지비 ① 아동인구 비율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30%는 사·도에, 70%는 시·군·구에 반영 ②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30%는 사·도에, 70%는 시·군·구에 반영
	라. 장애인복지비 장애인 비율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50%는 사·도에, 50%는 시·군·구에 반영
	마. 일반사회복지비 ① 다문화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50%는 사·도에, 50%는 시·군·구에 반영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시·군·구) - 수요 산정액의 50%는 사·도에, 50%는 시·군·구에 반영

자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재구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표 6-4〉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sup>1)</sup>	86.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 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sup>1)</sup>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70. 청소년시설 확충	서울: 30 지방: 70~88 <sup>2)</sup>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sup>3)</sup>	서울: 35 지방: 65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79. 방과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sup>3)</sup>	서울: 50 지방: 8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sup>3)</sup>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sup>3)</sup>	서울: 50 지방: 80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sup>4)</sup>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sup>3)</sup>	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 활동지원	서울: 50 지방: 70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sup>3)</sup>	서울: 50 지방: 80	99. 지역사회통합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주: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임.

1) 용지매입비 제외

2) 지방은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지원

3)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4)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서울특별시 등은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재구성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 있음.
- 2013년 12월 4일 개정된 별표 2의 내용은 당초 분권교부세에 경상수요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로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 보조금 사업에서는 제외하였음.
- 관계부처 합동(2013)으로 중앙 - 지방간 기능 및 자원 조정방안에 따라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계획임.
-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5년 4월까지 현행 보통교부세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파이낸셜 뉴스, 2015/1/26).

〈표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사업 예시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80. 장애인생활시설 차과유닛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81. 경로당 운영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18. 지역정보화 지원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21. 공공도서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23. 문화의 집 조성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92. 아동시설 운영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72.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9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54. 사회복지시설 운영	7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58. 지역봉사사업	7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77.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108. 사회복지무원 인건비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78.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주: 2013년 12월 4일 개정된 내용임.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재구성

- 시도에서 지원을 요구한 사업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이미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는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역시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원했던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편입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음.
  - 다만,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국고환원이 결정된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수요 대상 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절성을 살펴보아야 함.
- 이를 위해 정책 추진의지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함.
  - 시도 지원요구사항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대임.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상위계획의 검토는 법적 근거,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지침 등에 근거함.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근거법을 기준으로 검토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을 기준으로 검토함.
  - 시도의 지원요구사항 중 보건복지부 외 타부처의 소관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시도의 지원요구사항 중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기준

-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도 지원요구에 대한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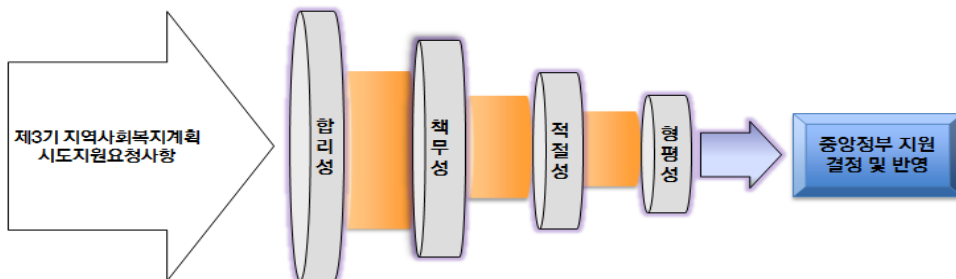
성을 평가함.

-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를 조정할 목적이 아니라 특정 사업의 수행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위의 세 기준을 통과한 사업 중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정 시·군·구에 시설이 편중되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도서벽지 및 취약지역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반해 타 시·도에서 자체사업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요구는 적절하지 않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4단계 분석기준을 설정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따라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책무성,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의 4단계를 거쳐 시·도 지원요구의 타당성을 분석함.
- 대부분의 지원요구사항은 1단계(지방자치단체 사무 합리성)와 2단계(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의 기준을 충족함. 3단계(지방자치단체 지원 적절성)와 4단계(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지원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스크리닝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6-1]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다음 <표 6-6>과 같음.

<표 6-6> 타당성 분석 기준

기준	분석요소	분석결과	근거
합리성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원이 적절함. -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충족함/ 일부 충족함/ 충족하지 않음	내용 기술
책무성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인 고유 사무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내용 기술
적절성	- 사무의 이양과 함께 재원이 배분되거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수요에 해당하던 사업 중 상위계획과 정부의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은 지원이 적절함. - 타부처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는 적절하지 않음.		내용 기술
형평성	-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광역시·도간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산간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절함. - 타지역은 자체적으로 혹은 민간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는 적절하지 않음.		내용 기술

## 제2절 타당성 분석

### ① 서울특별시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보조율)와 동법 시행령 제4조(기준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대상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 고시
- 기준보조율의 결정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이자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서울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어 타 시도와 재정 여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지자체 재정력 지수, 2014.10.01).
- 또한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타당함(이재정, 2011).
- 2015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행정자치부, 2015)되어 있어 보건복지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님.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 지방정부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①항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⑤항은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의 소관 업무임.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기존) 및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지원(신규)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서울 50%, 지방 70%)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
- 201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 채용 당시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3년간 한시 지원 약속(서울시, 제3기 복지계획, p. 22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책무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은 타당하지 않음. 그러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충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보건복지부의 지원 방향에서는 검토가 필요함(행정자치부, 2015).

####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개보수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분담하고 있음.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4조②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③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함.
  -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전체 보육 이용 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이용 아동 비율을 '13.6월 기준 26%에서 '17년 33%까지 확대할 예정

##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7년까지 총 780개소 확대시 지역별로 균형 배치의 기준을 설정함.
- 우선순위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음.
  - 육아정책연구소(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시·도별 국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의 공급비율은 서울이 17%로 10위임.
  - 그러나 시·군·구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율 하위 30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자치구는 해당되지 않음.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중앙부처의 계획에서도 서울시는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 ② 부산광역시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 지방정부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①항은 사·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⑤항은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2015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5).  
 • 보건복지부는 기능이양과 관련하여 향후 지방사무에 적합한 보조사업 선정시,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제시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므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임.
- 신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빠르게 전산화되고 있는 업무시스템과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지원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보수교육 개최횟수를 확대하여 가능한 일정을 선택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제시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Hansen병 요양시설 등은 반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항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지침 및 사업안내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 최근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 사건 등에서 보듯이 노인, 아동 등 재난에 취약한 복지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복지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보다 강화된 매뉴얼이 필요함.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의 제작 배포가 요구됨.

□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제시된 사·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
- 그러나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한 중복 검증,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 사·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임.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5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와 지역내 다양한 민간 복지시설 등에서 수급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역 내 수급자에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민간과 공공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집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시도에서 중복누락 등 조회 가능

○ 형평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부산광역시내 자체사업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 연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타당하지 않음.
- 그러나 타 시도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정보 교류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모든 시·도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대구광역시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주민 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이 있음.
- 그러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기획한 지역 개발형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가칭)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감독원을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품질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7개 지부를 설치할 예정임.
- 대구시 추계결과 향후 4년간('15~'18) 총 8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구시는 연도별로 시비 18~22억원 투자 계획 제시(실제로는 15억원 투입 계획)
- 대구시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제시된 7개 지부에 선정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 계획에 대한 재정 추계 및 재정 투입 계획은 지원 요구의 타당성을 높여줌.
- 그러나 시·도지부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지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리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의 서비스 품질기준 및 품질평가 규정
- 그동안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정몽준의원 대표 발의, 20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 발의, 2013) 등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본회의 상정은 되지 않음.

#### □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포함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최근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되고 그 외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편입됨.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책무가 강화될 예정임.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음.
- 국비 지원 시설과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통교부세에 포함된 산정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복지종합센터의 유치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①항에 따라 국가는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경력개발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동법 제6조②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

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가 일부 충족된다고 할 수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2014년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13.12월)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이 확정되어 2017년까지 전국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 남양주, 부산북부, 천안, 구미, 서산(14년 개소), 동두천, 칠곡, 해남, 순천, 춘천(15년 예정)
- ‘15년 고용복지+센터 설치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수요 조사를 통해 ‘17년까지 확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 신청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나 시·도에서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임차비·시설비(리모델링비)·운영비는 고용부에서 부담하나, 지자체에서 분담할 경우 지역 선정시 우대
  - 기타 물품비는 고용부 부담하나, 지자체에서 분담할 경우 지역 선정시 우대
- 고용복지종합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협업사업이나, 고용복지종합센터의 설치에 대한 신청 및 심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임. 따라서 타부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음.

#### ④ 대전광역시

□ 우수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우수핵심과제 모두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고유 책무를 중앙정부로 전가하는 것임.

## □ 대전의료원 건립 비용 국고 지원 요청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보건서비스의 제공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사무임.
- 그러나 대전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대전시 내 동구의 취약성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료원 건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함.
  -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운영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정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
- 충청도에 국립공주병원과 6개의 의료원(청주, 충주,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 의료원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
- 총 364억원의 예산 중 국비와 시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비 재원마련 계획 불명확

## □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서비

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과 함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대전시는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
- 행정자치부 정부 3.0 우수선도과제로 선정(2014.11)되었음.
- 대전시는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해 국비 70%, 시비 30%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지자체보조 지원과 동일한 수준임.
- 복지부는 인건비와 사례관리비만 지원하고 있어 자치구별 성과 비교, 민관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희망T움 치유센터 등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없음.
-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면 타 사·도 및 사·군·구와 동일한 산식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국고 지원 요청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가 아니므로 시·도로 배분된 사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시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고유 사무로 인식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지 않음.

## ⑤ 울산광역시

###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7조①항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현재 17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50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서울 20%, 지방 50%)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에서 '17년까지 단계별로 전국 시·군·구(227개소) 설치를 유도하고 있음.
  - 2014년 경북 김천시와 전남 순천시 2개소 설치
- 울산시는 중구 및 울주군에 각 1개소씩 건립 예정이며, 4년간 총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이 중 국비 27억원을 요청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개소당 국비 10억원 지원

○ 형평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건복지부의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국 시·군·구별 1개소 설치 예정임.
- 우선순위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 울산시의 경우 중구 보다는 울주군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 건립 재정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울산광역시에는 총 5개의 구군으로 이루어지며, 총 10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임.
  - 이 중 남구 4개소로 편중
- 울산시의 지원 요청은 중구 및 동구에 각 1개소 설립
  - 그러나 현재 울산시 중구와 동구에는 노인복지관이 각 1개소씩 운영 중에 있음.
- 현행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보다 공급 기준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재정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따라서 장애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사무임.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자체 보조 50% 지원 사업임.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뜻함.
-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아 전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의 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3.12.31)에 따르면 울산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8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확충은 2014년 기준 2개소에 대하여 1㎡당 1,270천원 지원되었으며, 매년 1~2개소 설치 예정임.
- 울산시는 남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나 규모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4년간 소요 예산 총 2,874백만원 중 국비 252백만원(8.7%) 지원 요청

## □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재정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짐.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인권센터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됨.
- 장애인 일자리 발굴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지원)은 서울 30%, 지방 50% 보조
  -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민간보조(한국장애인개발원 등)사업임.
- 중증 장애인의 생산품 우선 구매는 장애인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이 적절하지 않음.

- 장애인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법인 허가를 통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현재 지역사무소(경남, 대구, 강원, 제주, 인천)를 설립 승인함.
- 이에 반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전국 10개 지소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확보활동과 인권상담센터 등을 운영(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함.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예산은 1.5억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년 11월)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립 예정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도의 설립하여야 함.
-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의 하위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적용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울산시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특별운송서비스, 신장장애인 병원이송,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 증차 혹은 교체를 요청함.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임.

- 이는 과거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보통교부세에 포함됨.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72.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 등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울산시는 4년간 총 1,330백만원 중 국비 400백만원(30.0%) 지원 요청함.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사업은 적절성을 일부 충족함.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재정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사랑잇기 서비스 제공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보건복지부, 2014a)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구청 36개 지역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개소당 1억원, 보조율 70%)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검토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로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의 일부는 국고사업으로 환원되었음.
- 그 외 분권교부세 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편입됨.
- 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음.

-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고 일부 사업(정신보건·장애생활양로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됨(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2015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님(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 복지인프라의 중앙정부 책임과 프로그램의 자원 분담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로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복지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과거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의 일부는 국고사업으로 환원되었음.
- 그 외 분권교부세 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편입됨.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음.

## □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부담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로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 생존권 보장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이 서울 50%, 지방 80% 수준임.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포함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최근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되고, 그 외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편입됨.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책무가 강화될 예정임.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음.
  - 국비 지원 시설과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통교부세에 포함된 산정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⑥ 강원도

##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적용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제

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임.

- 이는 과거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보통교부세에 포함됨.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강원도는 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에 대한 재정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강원도의 장애인택시 법정 도입대수는 154대이나 '13년 기준 50대 운영 중임.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사업은 적절성을 일부 충족함.

####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포함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최근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되고 그 외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편입됨.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책무가 강화될 예정임.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음.
- 국비 지원 시설과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통교부세에 포함된 산정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⑦ 충청북도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해당함.

## □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 운영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로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지역 주민의 상담 및 서비스 안내, 긴급위기 상황 등의 대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전달체계(공공, 민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음성 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음성 꽃동네는 전국 단위의 광역 복지시설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로 한정할 수는 없음.
  -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 입소율은 89.6%임(관계부처 합동, 2013).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꽃동네는 종교(카톨릭)에 바탕을 둔 복지공동체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대상별 복지시설로 구성된 종합 사회복지시설임.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는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며,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음.
- 꽃동네의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분권교부세 일부로 운영되었음.
  - 2014년 기준 총 264억원 중 국비 126억원, 교부세 40억원, 지방비 98억원 분담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꽃동네의 아동시설(요셉의 집), 지적장애인시설(민음의 집) 등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양로 시설은 국고 환원됨.
  - 꽃동네에는 정신요양시설(환희의 집), 장애인 생활시설(희망의 집), 양로



### 시설(구원의 집) 등 운영 중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상보조는 서울 50%, 지방 70%, 자본보조는 50%.

#### ○ 형평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건복지부는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시설로 충북 음성 꽃동네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꽃동네와 유사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꽃동네에 대한 전액 국고보조는 꽃동네에서 운영 중인 세부 복지시설(예, 아동복지시설)과 타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존재함.

-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지방사무에 적합한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별도의 논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됨.
- 보건복지부는 아동시설도 국고환원 3개 사업과 동일하게 '생존권적 기본권', '지역간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국고 환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국비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가족과 관련한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문화와 관련한 사업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교육 문화사무)에 포함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다문화가족, 탈북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도내 취약한 가족의 소외감 해소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사무에 해당하므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본 사업이 분교를 활용하여 가족문화 체험관 등을 경험하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운영하는 지역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고, 탈북가정은 통일부 소관 사업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사업은 적절성을 충족하지 않음.

## ⑧ 충청남도

### □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짐.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의 제공은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
- 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충청남도는 공주시의 계획이 핵심과제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나, 핵심과제 중 이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존재하지 않음.
- 공주시에서 요청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의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인지, 인력의 확충에 대한 것인지 제시되지 않아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공주시는 총사업비 5억원 중 국비 1.8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27억원의 분담 요청

### □ 당진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여성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문화와 관련한 사업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에 포함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당진시에서 요구한 여성문화센터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건립된 여성회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임. 따라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당진시 위기여성 쉼터 설치 운영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여성 쉼터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 당진시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역량강화는 지자체 보조(국고 50~70%)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당진시 아동청소년 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정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①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그러나 동법 제11조②항에 따라 국가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현재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70~80%)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당진시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됨 (동법 제34조).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민간 공급자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주로 의존하여 사회서비스 질 관리에 소홀했음을 지적함.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한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제시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4)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 16,204개소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공요양시설은 122개소(0.7%)에 불과함.
-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비중이 30%가량 돼야 시장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음(한겨레, 2014/5/20).
-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 50%를 지원하고 있음.
  - 당진시는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4년간 총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 22.5억원을 요구함(충청남도과 당진시가 각각 11.25억원 분담)

##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대기인원이 높은 편이

며,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어 국민체감도가 높음.

- 공공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충청남도는 노인요양시설이 146개소, 당진시는 16개소(보건복지부, 2014)로 타사도에 비해서 열악한 수준이 아님.
-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이 1개소(보령시)에 있음 (2013년 기준).
- 공공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은 도서산간지역 등 시장성이 없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 우선순위가 있음.

#### □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포함됨(동법 제36조).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노인복지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시 노령인구수와 경로당 수가 적용되어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반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2014)에 따르면 전국 11,205개 경로당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음(지자체 50%)

#### □ 당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사업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
- 분권교부세에 경상적 수요사업이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 □ 당진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재정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설비기준 마련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
- 분권교부세에 경상적 수요사업이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별도의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 ⑨ 전라남도

□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통계,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FGI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성 평가임.
-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원요구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음.

□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기 조정 필요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 복지계획 또는 시·군·구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



치하도록 해야 함.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2018년임.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군·구 계획 수립, 시도 조정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등의 프로세스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조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 지자체 선거 시기가 맞물려 계획수립 단계에서 새로운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반영 등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혼선 야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환경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시·도지사의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수립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전라남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는 부적절함.

## ⑩ 경상북도

□ 노인일자리아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있음.
  -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서울 30%, 지방 50% 보조
  - 시장자립형 일자리와 재능활용형 일자리는 민간경상보조 10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지역의 수요와 욕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시·도가 포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
- 시·군·구는 사·도의 승인을 받아 내역사업간 기준소요액 대비 일정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기획재정부의 소관 업무임.
-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 지역 80%를 보조하고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 지역개발형,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 지자체의 자율적 운용을 강조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별도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교통약자 저상버스 배차 확대 및 차량구입 국비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적용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지역개발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임.
- 저상버스 구입 비용(대당 1억원)의 재원 분담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임.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 요청은 적절하지 않음.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국비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적용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지역개발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임.
-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용의 재원 분담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임.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 요청은 적절하지 않음.

□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4조②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③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 지자체를 40~60% 보조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제시함.

-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안전관련 문제로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받은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의문 제기
-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서비스 질 관리 기능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는 신중한 접근 필요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우선순위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음.
  - 2013년 기준 경상북도의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급비율은 5%로 전체 시도 중 5위임(육아정책연구소, 2014).
- 그러나 시·군·구별 수요율(필요율) 순위는 경북 군위군(2위), 경북 청송군(3위), 경북 김천시(10위), 경북 포항시(11위), 경북 고령군(23위), 경북 경주시(27위) 등 열악한 하위 30위 내에 대거 포진해 있음.
- 이들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규모 확대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따라 보장기관(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전체 247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서울 50%, 지방 70%를 재정지원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신청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고용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지역자활센터가 고용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의성군은 소요예산 8억원 중 국비 6억원, 지방비 2억원('15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함.

- 전국 247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분포하고 있으나, 경북 의성군에는 지역자활센터도 없고, 고용센터도 없어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의성군내 사회적기업도 전무한 상황에서(2014년 기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할 법인 및 단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산군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따라 보장기관(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전체 247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서울 50%, 지방 70%를 재정지원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고용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이 나 중소도시에서 지역자활센터가 고용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2014 선정, 2015 시범사업).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전국 247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중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건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위배됨.
-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신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경상북도 내 24개 시·군·구 중 11개소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이에 대한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 지원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 지정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있음.
  -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 지급

□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7조①항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현재 17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50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서울 20%, 지방 50%)하고 있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에서 '17년까지 단계별로 전국 시·군·구(227개소) 설치를 유도하고 있음.
  - 2014년 경북 김천시와 전남 순천시 2개소 설치
- 경상북도는 영천시와 김천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를 설치하였고, 예천군(2018)과 문경시(2015) 건립 예정임.
  - 2014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고보조(서울 20%, 지방 50%)를 지원하고 있음.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함.

- 보건복지부의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국 시·군·구별 1개소 설치 예정임.
- 우선순위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설치 확대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5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보건복지부(2014a)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으로 3,360백만원 책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지원 센터에 대한 자료(시설 수, 지역 등)는 제공되지 않음.

○ 형평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인천시는 국·시비 지원 4개소, 시 자체재원 4개소로 총 8개소 운영 중임.
- 경상북도는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하였고,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음.
- 타 사·도에 비해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시설 수가 적어 추가 설치의 필요함.
- 단, 특정 사·도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와 공급 분석과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지정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2014년 기준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120개소, 광역새로일하기지원본

부 지정운영(10개소), 산업단지형 새로일하기지원본부(5개소) 운영, 특화형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10개소) 중

- 국고보조 50~100% 지원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사업임.

□ 청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청도군 노인복지관이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노인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2014b)에 따르면 시·군·구별 노인복지관을 1개소씩 개설할 예정이나, 청도군 내 이미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정부 지원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청도군 노인복지회관 2005년 9월 27일 개관).

□ 문경시·영덕군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과 함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신규로 지원(시범사업 10개소)하고 있음.
- 그러나 문경시와 영덕군이 시범사업에 지원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지역종합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 형태의 민간전달체계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함.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시·군·구의 자체 전달체계인 지역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비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임.

□ 청도군·칠곡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편입되었음.
-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비경상적 수요로 광역자치단체만의 고유 사무라고 할 수 없음.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과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주거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만 이루어졌음.
- 현행 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이 필요함은 인정하나, 지역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다기능 소규모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칠곡군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운영 중이며, 군위군에 종합장애인복지관의 분원이 설치되어 있음.
  - 청도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청도분관이 설치되어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 계획 불명확
  -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청도군(3년간, 58억원)과 칠곡군(2년간, 70억원)은 유사한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의 차이가 크고, 2015년 기준 국고 지원 요청(6.5억원, 40억원)도 상이함.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지원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복지센터는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가 아니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포함됨.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센터의 건립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성격이 있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군위군 장애인이동재활차량 신규 차량구입 및 운영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적용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임.
- 장애인 이동재활차량의 구입은 국비보조사업임.
- 장애인이동재활차량 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 요청은 적절하지 않음.

□ 영주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 행·재정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학교의 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서 결정할 사항임.

#### □ 문경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님.
  - 유사한 형태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문화의 집 조성,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제4조②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③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개보수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분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함.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함.
  -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전체 보육 이용 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이용아동 비율을 '13.6월 기준 26%에서 '17년 33%까지 확대할 예정

○ 형평성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않음(김천시만 충족).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7년까지 총 780개소 확대시 지역별로 균형 배치의 기준 설정
- 우선순위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음.
- 시·군·구별 수요율(필요율)에서 경북 김천시(10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칠곡군과 경산시는 우선순위에서 고려되지 않음.

□ 상주시·영천시·예천군 키즈타운 등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영유아 및 아동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



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교육, 문화 및 체육과 관련된 사무는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상주·영천·예천에서 요구한 키즈타운의 형태에 대해 판단할 자료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보육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가 아닌 것으로 미루어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보임. 즉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고유 사업임.

□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국비보조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비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⑪ 경상남도

□ 진주시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학교의 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기술학교의 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서 결정할 사항임.

#### □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짐.
-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편입되었음.
-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비경상적 수요로 광역자치단체만의 고유 사무라고 할 수 없음.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과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전달체계 확보는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주거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만 이루어졌음.

- 현재 밀양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이 운영 중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없음.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융자 사업을 통해 설치하고 있음.

□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청소년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함.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 함안군 복지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요구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에 포함된 사업이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편입됨(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2015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정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의 지방 이양 등에 대한 검토가 예정되어 있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 고성군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추가 지원 요구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지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서울 10~30%, 지방 40~60%을 보조하고 있음.

#####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자체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기준 지원 대상은 4,117개소이며,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임.
- 보건복지부(2014a)에 따르면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대상임.
- 고성군의 지원 요구 사항이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

#### □ 고성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2014년 기준 서울 40%, 지방 70% 보조하고 있음.

## ○ 적절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희망키움통장 I, II와 내일키움통장만 제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예산서(2014a)에 따르면 전년 대비 수급자 수를 확대하고 있음.

## ○ 형평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 23,000원, 기초수급아동 29,300원으로 지원단가를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음.
- 고성군은 아동적립률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정액 지원이므로 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만 인정됨.

## □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지원

## ○ 합리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장애인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에 포함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

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짐.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과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체육관 운영 등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 ⑫ 제주특별자치시

□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책무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법 동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군·구 계획 수립, 시·도 조정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등의 프로세스는 법에 명시되어 있음.
-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조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함.

□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합리성 기준을 충족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사무에 포함됨.

○ 책무성 기준을 일부 충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최근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되고 그 외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편입됨.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책무가 강화될 예정임.

○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음.
- 국비 지원 시설과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통교부세에 포함된 산정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절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첫째, 중앙정부 요구사항을 사·도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고 종합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많은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이 사·도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제시되었으며, 일부 사·도는 시·군·구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둘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처음으로 매뉴얼을 통해 작성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조사표로 조사하였음에 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조사의 수행과 지역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제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
  -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조사와 지역사회보장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요구사항을 제안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사결과와 사회보장통계가 분리적으로 이루어짐
  - 향후 조사표 수정, 지역사회보장통계 제출양식 등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셋째,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특히 인프라 확충이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 지원요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시사함.
  - 73개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 중 약 20%만이 비재정지원이고, 대부분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도는 시·군·구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무차별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음.





## 제7장

###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과 결론

제1절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

제2절 결론



# 7

##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과 결론 <<

### 제1절 중앙정부의 사·도 지원 방향

#### 1. 부합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 요약

□ 제4장의 부합성 분석과 제장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7-1>과 같음.

○ 부합성이 ‘○’ 또는 ‘△’이고, 타당성의 형평성이 ‘○’ 또는 ‘△’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 이는 요구사항이 복지계획과 부합되면서 동시에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임.

○ 전체 73개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 중 10개만이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부 타당한 지원요구 사항은 5개로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의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경상북도의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확대)
-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경상북도의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 일부 타당한 지원요구 사항은 5개로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의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울산광역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충청북도의 음성 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경상북도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설치확대 지원(5개소)
-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 보조 지원(김천시만 해당)

〈표 7-1〉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결과 요약

구분	지원요구 사항	부합성	타당성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
서울	①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 개선	○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	×			
	③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재정 지원	○	○	○	○	×
부산	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개선	○	○	×		
	②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	○	○	○	○
	③ 복지시설 운영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	○	○	△	○
	④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	△	○	△
대구	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전담기구 대구시 유치 지원	×	○	△	×	
	② 국비 지원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	△	×	
	③ 고용복지종합센터의 유치 지원	○	○	△	×	
대전	① 우수 핵심과제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원 방식 요청	×	○	×		
	② 대전의료원 건립 비용 국고 지원 요청	○	○	△	×	
	③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모형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	△	△	×
	④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국고 지원 요청	○	○	×		
울산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정지원	○	○	○	△	△
	② 노인복지관 건립 재정지원	○	○	○	×	
	③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재정지원	○	○	△	×	
	④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울산 프로젝트 재정 지원	○	○	○	×	
	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재정 지원	○	○	△	×	
	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재정 지원	○	○	○	×	
	⑦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검토	×	×			
	⑧ 복지인프라의 중앙정부 책임과 프로그램의 재원 분담	×	×			
	⑨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부담	×	×			
	⑩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	○	△	×	
강원	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재정 지원	○	○	△	×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재정 지원	○	○	△	×	
충북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	×		
	②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 운영	○	×			
	③ 음성 꽃동네 시설비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	○	△	△
	④ 글로벌 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국비 지원	○	○	○	×	
충남	① 공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재정 지원	○	○	○	×	
	② 당진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재정 지원	×	○	×		

구분	지원요구 사항	부합성	타당성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
	③ 당진시 위기여성 쉼터 설치 운영 재정 지원	△	○	○	×	
	④ 당진시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재정 지원	×	○	○	×	
	⑤ 당진시 아동청소년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정 지원	○	○	△	×	
	⑥ 당진시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재정 지원	×	○	○	△	×
	⑦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	○	○	○	×	
	⑧ 당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재정 지원	×	○	×		
	⑨ 당진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재정 지원	○	○	×		
전남	①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분화 된 객관적 평가척도 제시 필요	×	△	○	×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기 조정 필요	×	○	○	×	
경북	①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	○	×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지원규모 확대	○	○	○	×	
	③ 교통약자 저상버스 배치 확대 차량구입 국비지원 (78대 추가배치)	○	△	△	×	
	④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국비지원 (46대 추가배치)	○	△	△	×	
	⑤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확대)	○	○	○	△	○
	⑥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규모 확대	○	○	○	×	
	⑦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	○	○	○
	⑧ 경산군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	○	×
	⑨ 신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미설치 지역 11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	○	×	
	⑩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8개소) 운영비 국비보조	○	○	○	×	
	⑪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	○	○	○	○
	⑫ 중증장애인자립생활(5개소) 설치확대	○	○	○	○	△
	⑬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신규지정	○	○	○	×	
	⑭ 청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	×	
	⑮ 문경시영덕군 지역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 보조	△	○	△	△	×
	⑯ 청도군칠곡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	×	
	⑰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	×	
	⑱ 군위군 장애인이동재활차량 신규 차량구입 및 운영 비 국비보조	○	○	△	×	
	⑲ 영주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 행·재정지원	△	×			
	⑳ 문경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	×	
	㉑ 김천시·칠곡군·경산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건축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	○	○	○	○	△ (감산)
	㉒ 상주시·영천시·예천군 키즈타운 등 건립 건축비 국비보조	△	○	×		
	㉓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국비보조	○	○	△	×	
경남	① 진주시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 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			
	②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	○	△	△	×
	③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	△	○	×	
	④ 함안군 복지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	×			

구분	지원요구 사항	부합성	타당성			
			합리성	책무성	적절성	형평성
	⑤ 고성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요구	○	○	○	×	
	⑥ 고성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의 추가 지원	○	○	○	△	×
	⑦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지원	○	○	○	×	
제주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도 단위 계획 통합	○	○	○	×	
	②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	△	×	

## 2.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

- 첫째,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검토 및 보완(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하므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특히,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 함.
- 둘째, 사회복지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중앙정부의 정기적 교육 실시
  - 현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실시횟수를 증가시켜야 함.
  - 복지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실시 필요
- 셋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지시설 운영 매뉴얼을 중앙정부에서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은 공통 매뉴얼과 시설유형별 매뉴얼을 구분하여 제작해야 함.
- 넷째, 복지인프라 확충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국비지원
  - 우선지원 대상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2개소)

- 경상북도 공공형 보육 지원대상 확대 및 국비지원(신규지원 14개소)
-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비 국비보조

○ 차선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국비지원(2개소)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설치 확대 지원(5개소)
- 김천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 건립 국비보조 지원
- 충청북도 음성 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다섯째,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고려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 여섯째,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행정체계 2개의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있는 실정임.
- 도 단위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행정시의 개별 협의체를 도 단위에서 연계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제2절 결론

- 본 연구에서 추진한 다양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두 측면에서 결론을 제시함.

- 하나는 제3기 복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결론으로서의 정책제언

- 다른 하나는 제4기 복지계획수립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결론으로서의 정책제언

## 1. 제3기 복지계획 실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제3기 복지계획은 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등 매우 광범위한 현황 파악과 요구도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사업은 근거중심이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3기 복지계획에 대한 욕구, 부합성 분석, 타당성 분석 등 제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제3기 복지계획 실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지역별 복지욕구가 상이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광주 및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취업 및 경제적 지원과 가족돌봄 및 자녀양육 등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가정내 불화로 인한 단절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서울, 대전, 광주에 대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지역사회만족도가 낮은 서울, 경남, 제주 지역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부족이 심각한 세종시에 대해 복지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우선 요구됨.
  - 학교폭력 및 치안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광주시민 대상으로 안전강화 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 주택·주거환경 및 재개발이 열악한 대구는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 대중교통 및 접근 이용상 불편하다고 지적한 8개 도지역(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을 대상으로 시설 접근성 제



고를 위한 복지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시설의 정보제공 부족을 응답한 5개 지역(서울, 광주, 대전, 경남, 제주)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 추진되어야 함.
-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 부족이 지적된 서울, 부산,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우선시됨.

○ 둘째, 대상별 복지욕구가 상이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복지기관의 접근성을 위한 관심과 이용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 여성의 욕구가 특히 높은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와 ‘건강(체육) 및 의료서비스’ 정책을 강화해야 함.
- 취학 전 아동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교육(종일제, 반일제 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충분성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교육비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
- 청소년 대상의 입시 및 진로상담서비스와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1:1 맞춤형 학습지도 등 학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 노인재가서비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건강 악화로 인한 수발 필요 노인에 대한 방문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 셋째, 복지계획의 부합성 및 타당성 분석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 요구됨,
  -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중앙 지방간 재원분담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전국적인 표준과 접근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임.
  -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가 많이 있으므로 관련 법,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제3기 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시·도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통계의 생산이 정기적·과학적·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이 상당히 많아진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초 통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라 복지분야 사업의 축소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정하여 개별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성과를 측정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음.

## 2. 제4기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복지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체 시·도 및 시·군·구에 배포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복지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음.
- 특히, 복지욕구조사와 복지계획의 체계를 표준화하였음은 큰 의미가 있음.
- 그렇지만 일부 매뉴얼의 오류, 특히 표준화된 '복지욕구조사'의 문항에 문제점이 있었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표준화된 복지욕구조사를 지키지 않았던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제4기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군·구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차원에서 표준화된 조사문항을 개발하며, 개발과정에는 전문가, 시·군·구 및 시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특히, 시도 및 시·군·구의 특성을 감안한 ‘부가조사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시·군·구 및 시·도의 대표성이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자료를 분석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여 분석토록 함.
    - 이는 시·군·구 간, 시도 간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측면에서 절감의 효과가 있음.
-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의 시·군·구 및 시도 복지계획 제출일자를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적으로 제시된 일정과 제3기에서 실제 제출토록 한 일정이 상이하지만 지방선거를 고려하고 선출된 단체장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조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정을 지키지 못하여 일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출일자를 협의, 확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군·구 및 시·도의 복지계획 수립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3기 복지계획은 표준화된 복지욕구조사표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였으며, 복지욕구조사표와 매뉴얼이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

어지지 못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점도 많았음.

- 그렇지만 지침대로 조사와 계획수립이 추진되지 못하여 복지계획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복지욕구조사와 복지계획 수립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복지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제4기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복지계획 작성 기간에 단계별로 중앙정부 관계자와 시·도 관계자가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그 책무가 있었음은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의미하는 것임.
- 반대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유사한 서비스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음.
-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욕구조사 등의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중앙정부 지원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음.
-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의 작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매뉴얼에 상세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이 국고보조사업인지, 지자체 자체사업인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서울특별시(2014). 제3기(2015~2018)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부산광역시(2014). 제3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대구광역시(2014). 제3기(2015~2018)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광주광역시(2014). 제3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2015~2018).
- 대전광역시(2014).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울산광역시(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세종특별자치시(2014). 제3기 세종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경기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강원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충청북도(2014). 제3기(2015~2018)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 충청남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전라북도(2014).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2015~2018).
- 전라남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경상북도(2014).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경상남도(2014). 제3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남영호·진현식(2014). 사업타당성 분석. 세명서관.
- 보건복지부(20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4c). 201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2013.12.31. 기준).
- 보건복지부(2014b).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 (II).
- 보건복지부(2014a).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도자료 참고자료(2013.9.26.). 중앙 - 지방간 기능 및 자원 조정 보도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3.9.24.). 합동브리핑 말씀자료-중앙-지방간 기능 및 자원 조정 방안.
- 안상수 외(2009).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훈 외(2010).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 방안.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윤강재·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호, pp. 86~98
- 정경희(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홍원 외(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홍원 외(20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파이낸셜 뉴스(2015.1.26). 정부, 4월까지 보통교부세 전면 개편안 마련-복지수요 감안 인센티브 확대 강구.
- Aczel, J., and T. L. Saaty(1983). Procedures for Synthesizing Ratio Judgment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27, pp.93~102.
- Earl Babbie(2012),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3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Older Americans 2012: Key Indicators of Well-Being*.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2012
- Jackson, R., N. Howe, K.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U.S.A.
- OECD(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Paris: OECD.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World Economic Forum(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Switzerland.

## 부록. 가구조사 분석 통계 <<

〈부표 1〉 시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8.1	14.7	29.8	21.3	10.5	5.5	100.0(20,456,588)	2.91
서울	20.2	18.9	24.5	22.4	10.8	3.3	100.0(4,142,988)	2.84
부산	16.2	15.9	29.6	22.9	10.2	5.1	100.0(1,373,131)	2.95
대구	14.9	12.6	32.0	24.7	11.0	4.8	100.0(948,211)	3.05
인천	19.5	14.5	27.7	21.7	12.7	3.8	100.0(1,116,930)	2.93
광주	12.3	7.8	31.5	26.6	15.7	6.0	100.0(560,086)	3.27
대전	14.0	19.6	29.0	23.6	13.2	0.6	100.0(584,877)	3.02
울산	23.5	8.8	24.3	11.8	7.5	24.1	100.0(343,469)	2.62
세종	16.1	12.2	32.5	21.2	11.8	6.3	100.0(49,850)	3.00
경기	18.6	12.8	30.7	20.0	12.0	5.9	100.0(4,689,956)	2.94
강원	17.5	13.6	32.5	21.9	8.8	5.8	100.0(652,293)	2.90
충북	22.4	11.4	30.5	18.1	8.0	9.6	100.0(629,303)	2.76
충남	18.4	22.2	27.1	21.2	7.3	3.8	100.0(848,067)	2.76
전북	15.2	11.7	28.7	23.7	13.8	6.9	100.0(761,409)	3.10
전남	17.8	12.9	34.0	20.5	8.4	6.5	100.0(807,942)	2.88
경북	20.4	11.3	30.8	20.2	9.3	8.0	100.0(1,124,448)	2.85
경남	13.4	15.3	41.9	19.8	4.2	5.4	100.0(1,264,658)	2.85
제주	17.3	10.1	34.5	17.0	8.8	12.3	100.0(237,004)	2.88

〈부표 2〉 사·도별 가구의 생활여건(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34.4	14.7	22.0	13.5	7.0	8.5	100.0(20,456,588)	2.91
서울	39.7	15.4	17.1	14.3	8.1	5.4	100.0(4133639)	2.84
부산	33.0	19.1	22.1	12.2	4.6	9.0	100.0(1,364,256)	2.95
대구	32.8	15.6	22.8	13.8	6.4	8.6	100.0(944,461)	3.05
인천	39.0	15.3	18.3	14.8	6.9	5.7	100.0(1,116,638)	2.93
광주	27.2	12.9	25.5	15.2	8.7	10.5	100.0(560,086)	3.27
대전	40.5	19.2	20.1	12.2	5.1	2.8	100.0(584,877)	3.02
울산	34.6	10.2	19.2	9.5	5.3	21.2	100.0(318,361)	2.62
세종	31.4	11.0	22.4	12.5	5.9	16.9	100.0(49,850)	3.00
경기	33.0	13.0	22.4	14.2	8.1	9.3	100.0(4,686,816)	2.94
강원	35.5	13.4	21.4	12.9	6.9	9.9	100.0(651,250)	2.90
충북	39.0	11.2	19.1	10.5	6.2	14.0	100.0(622,013)	2.76
충남	37.9	18.5	19.8	12.5	4.9	6.4	100.0(845,426)	2.76
전북	30.9	12.0	20.8	15.3	10.5	10.4	100.0(756,848)	3.10
전남	33.2	13.6	25.7	12.0	5.1	10.4	100.0(807,004)	2.88
경북	36.6	12.4	22.1	9.9	5.6	13.3	100.0(1,123,915)	2.85
경남	17.8	18.0	40.0	14.4	4.6	5.2	100.0(1,257,552)	2.85
제주	26.7	9.3	26.6	14.6	7.9	15.0	100.0(236,420)	2.88

〈부표 3〉 사·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34.7	15.6	20.8	11.9	6.2	10.7	100.0(20,456,588)	2.39
서울	37.0	18.2	16.8	13.8	7.8	6.4	100.0(4,127,242)	2.32
부산	29.7	18.6	22.8	12.7	6.4	9.9	100.0(1,354,446)	2.30
대구	33.1	132.5	22.6	13.3	6.5	11.1	100.0(941,247)	2.40
인천	36.4	17.1	19.1	14.4	5.8	7.1	100.0(1,116,638)	2.31
광주	25.0	12.0	25.2	17.0	8.2	12.6	100.0(560,086)	2.61
대전	48.9	18.0	15.7	8.8	3.9	4.6	100.0(561,686)	2.20
울산	41.1	7.6	19.6	11.5	7.8	12.4	100.0(391,423)	2.25
세종	31.4	11.4	21.2	10.6	7.8	17.6	100.0(49,849)	2.41
경기	34.5	15.0	19.8	10.9	6.7	13.1	100.0(4,677,399)	2.46
강원	36.9	14.7	21.6	9.9	4.4	12.4	100.0(648,309)	2.36
충북	41.6	10.9	17.7	9.4	4.0	16.4	100.0(617,922)	2.23
충남	42.2	20.7	15.6	9.0	3.7	8.8	100.0(843,872)	2.23
전북	30.2	11.6	22.4	13.2	8.7	13.9	100.0(754,658)	2.58
전남	34.5	13.1	22.3	10.7	4.6	14.7	100.0(799,908)	2.35
경북	37.1	12.7	19.1	9.8	4.6	16.7	100.0(1,122,313)	2.26
경남	20.8	16.4	41.2	10.2	3.9	7.6	100.0(1,244,765)	2.68
제주	33.7	11.9	20.1	11.3	5.2	17.7	100.0(235,543)	2.62



〈부표 4〉 사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직업포기, 스트레스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43.4	13.1	16.6	7.7	4.9	14.3	100.0(20,456,588)	2.04
서울	47.4	15.1	13.2	8.5	6.3	9.6	100.0(4,115,926)	2.02
부산	40.2	14.7	18.2	7.6	4.0	15.3	100.0(999,661)	2.06
대구	42.1	13.2	17.4	7.7	4.5	15.2	100.0(937,765)	2.05
인천	46.1	14.0	14.9	9.4	4.2	11.5	100.0(1,115,166)	2.00
광주	35.4	11.6	19.6	8.2	5.8	19.3	100.0(557,853)	2.22
대전	45.6	14.7	15.5	12.2	5.7	6.2	100.0(469,948)	2.12
울산	51.2	7.4	16.3	9.4	7.5	8.2	100.0(407,241)	2.07
세종	34.9	9.8	16.5	4.7	7.5	26.7	100.0(49,849)	2.18
경기	44.4	11.6	14.6	6.8	4.5	18.1	100.0(4,671,902)	1.97
강원	44.9	12.2	16.1	7.3	3.1	16.4	100.0(643,850)	1.94
충북	46.1	9.2	14.0	7.1	3.4	20.4	100.0(614,367)	1.90
충남	47.4	19.0	13.1	5.9	3.1	11.4	100.0(839,212)	1.85
전북	36.0	10.5	16.8	11.0	9.9	15.8	100.0(753,200)	2.39
전남	40.0	12.1	17.8	7.9	3.8	18.4	100.0(799,386)	2.06
경북	40.6	11.2	17.1	7.0	4.0	20.2	100.0(1,122,580)	2.03
경남	32.8	15.5	36.9	5.0	3.0	6.9	100.0(1,241,110)	2.25
제주	40.0	8.1	16.3	7.6	4.1	23.9	100.0(234,957)	2.05

〈부표 5〉 사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35.7	12.8	21.0	13.6	6.2	10.8	100.0(20,456,588)	2.32
서울	37.7	15.3	16.7	15.5	7.1	7.7	100.0(4,109,037)	2.33
부산	37.4	15.2	19.7	11.4	4.6	11.7	100.0(1,352,111)	2.42
대구	33.0	12.1	22.5	14.6	7.1	10.7	100.0(942,319)	2.40
인천	38.9	13.1	18.9	15.6	5.3	8.3	100.0(1,116,343)	2.31
광주	24.9	9.6	23.3	18.6	10.2	13.4	100.0(558,809)	2.67
대전	24.2	16.7	26.5	21.6	9.1	1.9	100.0(368,660)	1.96
울산	45.4	7.8	21.2	12.4	7.5	5.7	100.0(419,795)	2.28
세종	29.4	7.1	21.2	17.6	5.5	19.2	100.0(49,850)	2.42
경기	34.5	12.1	20.3	13.6	6.5	12.9	100.0(4,673,865)	2.31
강원	40.3	10.6	19.5	12.7	5.3	11.5	100.0(646,885)	2.20
충북	41.7	8.4	16.4	11.2	5.4	16.9	100.0(617,033)	2.08
충남	44.5	16.8	16.5	9.4	3.5	9.3	100.0(794,160)	2.03
전북	31.0	12.7	21.1	13.8	8.5	12.8	100.0(756,666)	2.52
전남	34.6	12.6	20.9	12.3	5.7	13.9	100.0(803,248)	2.27
경북	36.0	10.7	21.0	10.9	5.4	16.0	100.0(1,124,180)	2.19
경남	30.2	10.2	40.9	9.2	2.9	6.6	100.0(1,247,809)	2.57
제주	22.5	9.7	27.6	19.8	7.2	13.3	100.0(235,251)	2.30

〈부표 6〉 사·도별 가구의 생활여건(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혼·별거·사별 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47.5	15.6	16.1	6.0	3.2	11.5	100.0(20,456,588)	1.89
서울	46.9	19.9	12.8	7.6	5.4	7.4	100.0(4,120,354)	1.97
부산	45.0	17.5	17.2	6.1	2.6	11.6	100.0(1,343,469)	1.91
대구	44.9	13.5	20.3	6.3	3.2	11.7	100.0(941,783)	1.97
인천	48.3	19.3	14.6	7.1	2.4	8.4	100.0(1,115,756)	1.87
광주	43.1	11.1	19.4	8.4	3.8	14.2	100.0(558,490)	2.05
대전	46.5	28.6	17.4	3.5	1.3	2.6	100.0(584,878)	1.81
울산	63.0	6.4	12.5	4.9	5.1	8.0	100.0(413,769)	1.72
세종	43.5	9.4	19.6	6.3	3.1	18.0	100.0(49,849)	1.98
경기	49.5	13.2	14.8	4.9	2.6	15.0	100.0(4,674,258)	1.80
강원	52.2	13.1	15.1	4.5	2.2	12.9	100.0(646,697)	1.75
충북	53.5	9.1	14.4	4.2	2.5	16.4	100.0(618,634)	1.72
충남	51.3	19.1	14.0	4.5	2.5	8.7	100.0(843,251)	1.77
전북	45.2	12.8	17.3	7.3	3.6	13.8	100.0(678,775)	1.97
전남	47.7	12.5	15.9	4.7	2.2	16.9	100.0(802,622)	1.81
경북	48.2	11.9	15.4	4.9	2.7	16.9	100.0(1,122,447)	1.82
경남	37.2	15.1	31.0	7.9	2.5	6.3	100.0(1,248,417)	2.18
제주	43.9	9.7	17.7	5.9	3.2	19.6	100.0(234,373)	1.94

〈부표 7〉 사·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40.4	16.4	20.5	9.1	4.0	9.6	100.0(20,456,588)	2.11
서울	40.6	19.5	17.3	11.2	5.8	5.7	100.0(4,121,831)	2.17
부산	38.5	19.4	19.9	9.0	3.4	9.8	100.0(1,349,775)	2.11
대구	36.6	14.6	24.3	11.2	4.1	9.3	100.0(943,122)	2.25
인천	40.0	18.9	20.3	11.1	3.1	6.6	100.0(1,115,755)	2.13
광주	39.4	10.5	23.0	12.5	4.7	10.0	100.0(557,213)	2.25
대전	37.4	27.3	20.9	9.0	2.7	2.6	100.0(584,878)	2.10
울산	56.1	7.3	16.3	7.5	5.2	7.6	100.0(413,769)	1.90
세종	30.2	12.5	27.8	9.8	3.9	15.7	100.0(49,851)	2.34
경기	41.5	15.0	19.8	7.8	4.1	11.8	100.0(4,674,650)	2.07
강원	44.3	15.0	19.7	7.6	2.7	10.7	100.0(647,645)	1.99
충북	44.3	12.5	18.7	8.2	3.1	13.1	100.0(623,613)	2.00
충남	44.4	21.6	17.3	6.9	3.4	6.5	100.0(844,649)	1.97
전북	33.5	12.0	20.7	12.6	4.7	16.6	100.0(680,051)	2.32
전남	41.9	13.9	20.6	6.2	2.9	14.5	100.0(802,517)	2.00
경북	41.2	12.7	20.8	8.0	3.9	13.3	100.0(1,122,981)	2.08
경남	33.1	15.1	34.7	6.1	1.7	9.3	100.0(1,259,379)	2.21
제주	40.4	12.3	20.0	7.7	4.7	14.8	100.0(234,374)	2.11

〈부표 8〉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

(단위: %, 명)

구분	결핍	비결핍	(분석대상 수)
•세탁기	94.7	96.7	(20,456,588)
•전자레인지(가스,오븐포함)	76.9	89.0	(20,456,588)
•김치냉장고	76.8	81.6	(20,456,588)
•진공청소기	77.9	84.2	(20,456,588)
•휴대폰	89.3	94.3	(20,456,588)
•디지털카메라	32.6	50.2	(20,456,588)
•컴퓨터(노트북 포함)	63.5	69.8	(20,456,588)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74.6	90.3	(20,456,588)
•인터넷 연결(유,무선 포함)	65.2	71.7	(20,456,588)
•자동차	63.7	64.9	(20,456,588)

〈부표 9〉 시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세탁기)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94.7	96.7	(20,264,275)
서울	95.9	96.8	(4,166,606)
부산	92.8	97.0	(1,395,087)
대구	95.0	93.7	(950,354)
인천	96.4	98.2	(1,116,343)
광주	89.0	93.5	(563,280)
대전	94.4	98.7	(584,195)
울산	94.4	89.8	(384,393)
세종	95.3	97.6	(49,850)
경기	94.0	97.4	(4,695,057)
강원	92.6	97.5	(660,643)
충북	95.9	96.8	(623,613)
충남	96.2	97.9	(850,864)
전북	93.5	94.4	(765,970)
전남	94.5	96.3	(811,804)
경북	93.8	94.7	(1,132,984)
경남	97.8	99.3	(1,276,228)
제주	95.2	98.2	(237,004)

〈부표 10〉 사·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전자레인지(가스,오븐포함))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6.9	89.0	(20,136,234)
서울	79.2	90.3	(4,167,098)
부산	78.0	90.0	(1,391,817)
대구	77.9	86.4	(949,819)
인천	78.1	89.1	(1,117,813)
광주	69.7	80.9	(562,960)
대전	78.1	89.4	(584,195)
울산	80.8	90.1	(376,359)
세종	75.7	86.3	(49,849)
경기	74.5	91.2	(4,582,429)
강원	72.6	86.6	(660,643)
충북	78.5	85.4	(618,989)
충남	81.1	88.2	(850,708)
전북	74.0	83.1	(765,970)
전남	78.6	86.0	(811,700)
경북	74.6	83.8	(1,132,451)
경남	77.5	93.0	(1,276,431)
제주	80.0	93.0	(237,003)

〈부표 11〉 사·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김치냉장고)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6.8	81.6	(20,266,320)
서울	77.2	82.3	(4,168,082)
부산	68.5	76.2	(1,392,751)
대구	68.3	72.0	(950,622)
인천	80.7	86.9	(1,116,637)
광주	72.1	81.1	(562,960)
대전	81.2	87.7	(584,195)
울산	86.7	75.2	(430,088)
세종	75.7	82.4	(49,850)
경기	78.6	87.0	(4,662,485)
강원	77.5	84.4	(660,834)
충북	84.3	87.9	(616,145)
충남	87.0	90.4	(850,864)
전북	81.3	82.0	(765,604)
전남	85.4	86.1	(811,387)
경북	76.8	75.5	(1,132,451)
경남	63.8	64.4	(1,275,822)
제주	54.1	57.1	(235,543)

〈부표 12〉 시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진공청소기)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7.9	84.2	(20,228,537)
서울	80.3	85.9	(4,166,605)
부산	74.0	82.2	(1,392,517)
대구	75.0	79.9	(949,015)
인천	77.9	85.7	(1,116,931)
광주	71.9	76.5	(562,960)
대전	83.8	89.3	(584,195)
울산	79.7	84.4	(430,089)
세종	85.9	88.2	(49,850)
경기	78.6	87.6	(4,624,027)
강원	79.7	86.7	(660,548)
충북	81.2	82.0	(619,879)
충남	86.2	87.4	(850,553)
전북	68.9	75.4	(765,604)
전남	78.4	81.4	(811,178)
경북	72.6	78.6	(1,132,051)
경남	75.0	80.5	(1,275,823)
제주	80.5	87.2	(236,712)

〈부표 13〉 시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휴대폰)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9.3	94.3	(20,268,543)
서울	93.0	96.8	(4,166,605)
부산	88.5	94.7	(1,393,218)
대구	91.0	84.7	(950,890)
인천	92.4	95.6	(1,116,931)
광주	87.4	95.3	(562,960)
대전	90.5	96.8	(584,195)
울산	83.0	88.8	(430,089)
세종	86.3	85.9	(49,850)
경기	89.1	96.5	(4,660,916)
강원	88.4	95.0	(660,359)
충북	90.0	92.4	(619,701)
충남	89.5	92.5	(850,553)
전북	82.2	88.6	(765,604)
전남	88.6	91.2	(811,491)
경북	82.1	88.6	(1,132,851)
경남	88.7	95.4	(1,275,619)
제주	90.7	98.3	(236,711)

〈부표 14〉 사·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디지털카메라)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32.6	50.2	(20,192,340)
서울	36.4	56.3	(4,162,670)
부산	26.8	46.2	(1,390,882)
대구	29.9	51.1	(951,157)
인천	34.2	48.4	(1,117,812)
광주	24.6	43.9	(561,683)
대전	32.1	46.4	(584,195)
울산	67.6	78.5	(430,340)
세종	29.1	51.2	(49,654)
경기	31.0	56.3	(4,620,103)
강원	28.4	45.0	(660,833)
충북	33.0	41.5	(594,095)
충남	26.6	35.4	(848,689)
전북	26.4	35.0	(765,605)
전남	36.0	43.3	(811,490)
경북	34.6	45.9	(1,131,117)
경남	32.3	41.0	(1,275,011)
제주	25.9	57.1	(237,004)

〈부표 15〉 사·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컴퓨터(노트북 포함))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3.5	69.8	(20,258,167)
서울	71.9	77.2	(4,168,082)
부산	57.7	67.4	(1,392,284)
대구	64.4	72.4	(951,961)
인천	64.1	70.4	(1,118,106)
광주	64.3	70.7	(562,322)
대전	67.0	73.9	(584,195)
울산	68.3	81.3	(430,339)
세종	62.2	68.9	(49,654)
경기	66.4	74.7	(4,657,776)
강원	54.5	60.9	(661,307)
충북	55.6	56.3	(610,810)
충남	47.3	50.1	(849,466)
전북	46.4	51.0	(765,787)
전남	56.0	57.5	(811,804)
경북	54.4	59.1	(1,131,651)
경남	68.2	71.9	(1,275,619)
제주	71.1	84.1	(237,004)

〈부표 16〉 시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4.6	90.3	(20,231,050)
서울	76.7	91.3	(4,166,605)
부산	78.3	93.1	(1,392,984)
대구	74.2	88.1	(951,961)
인천	75.9	91.9	(1,118,400)
광주	70.1	90.1	(562,961)
대전	70.9	95.7	(584,195)
울산	74.2	84.8	(430,340)
세종	63.0	85.4	(49,654)
경기	70.9	89.8	(4,622,849)
강원	78.9	94.3	(661,308)
충북	83.2	90.8	(615,433)
충남	77.8	88.3	(850,709)
전북	70.7	84.3	(765,422)
전남	80.9	90.1	(812,012)
경북	77.1	85.7	(1,132,985)
경남	69.8	91.3	(1,276,228)
제주	71.4	93.1	(237,004)

〈부표 17〉 시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인터넷 연결(유,무선 포함))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5.2	71.7	(20,270,047)
서울	72.6	78.3	(4,166,606)
부산	60.8	70.5	(1,391,583)
대구	67.1	72.5	(951,694)
인천	65.8	71.6	(1,117,225)
광주	64.2	72.5	(562,322)
대전	69.3	74.8	(584,195)
울산	74.9	88.0	(430,591)
세종	65.7	70.9	(49,654)
경기	68.3	75.8	(4,672,688)
강원	57.7	64.6	(661,117)
충북	59.5	62.0	(610,809)
충남	51.5	52.8	(849,621)
전북	46.5	52.9	(765,057)
전남	58.8	60.4	(811,908)
경북	53.8	62.1	(1,131,250)
경남	68.7	73.7	(1,276,431)
제주	72.2	85.2	(237,296)

〈부표 18〉 사·도별 가구의 생활용품 필요도(자동차)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3.7	64.9	(20,096,383)
서울	57.8	61.0	(4,061,801)
부산	52.8	57.5	(1,391,817)
대구	63.8	64.8	(952,765)
인천	62.7	62.2	(1,118,106)
광주	59.5	56.9	(561,364)
대전	74.4	72.7	(583,172)
울산	76.9	84.5	(430,590)
세종	66.1	66.1	(49,654)
경기	64.5	68.7	(4,607,937)
강원	66.2	68.5	(661,117)
충북	65.5	61.1	(609,209)
충남	63.0	59.7	(849,154)
전북	55.2	54.4	(765,422)
전남	66.8	63.4	(811,074)
경북	62.4	63.2	(1,130,984)
경남	84.4	76.8	(1,275,213)
제주	79.3	82.2	(237,004)

〈부표 19〉 가구의 식생활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70.4	77.0	(20,284,229)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73.1	77.0	(20,297,220)
•기호식품(차,커피,과자류,아이스크림,음료등)을 사 먹는 것	61.8	78.3	(20,238,262)



〈부표 20〉 사도별 가구의 식생활 생활여건(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0.4	77.0	(20,284,229)
서울	75.6	81.3	(4,163,161)
부산	73.0	79.1	(1,396,255)
대구	70.3	74.3	(952,497)
인천	73.7	80.5	(1,117,813)
광주	62.3	66.9	(562,641)
대전	58.4	75.5	(571,576)
울산	78.2	81.3	(429,586)
세종	76.9	78.0	(49,850)
경기	67.0	77.8	(4,690,740)
강원	65.6	74.8	(659,980)
충북	64.3	66.7	(621,301)
충남	71.0	73.9	(853,038)
전북	57.8	61.2	(765,422)
전남	71.5	72.8	(808,465)
경북	65.7	67.8	(1,130,183)
경남	81.9	87.7	(1,275,010)
제주	71.7	83.2	(236,711)

〈부표 21〉 사도별 가구의 식생활 생활여건(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3.1	77.0	(20,297,220)
서울	78.8	82.9	(4,163,654)
부산	76.7	81.2	(1,396,488)
대구	72.9	74.8	(952,765)
인천	74.4	78.5	(1,118,400)
광주	65.6	66.4	(562,641)
대전	61.4	78.4	(576,352)
울산	81.1	79.4	(431,344)
세종	82.0	77.6	(49,849)
경기	71.9	78.8	(4,691,917)
강원	66.0	72.5	(660,549)
충북	66.4	65.5	(625,213)
충남	72.1	73.2	(852,883)
전북	58.2	59.1	(765,604)
전남	71.8	69.1	(808,569)
경북	66.0	66.2	(1,129,383)
경남	83.4	85.4	(1,274,605)
제주	74.6	77.4	(237,004)

〈부표 22〉 사·도별 가구의 식생활 생활여건(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등)을 사 먹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1.8	78.3	(20,238,262)
서울	64.9	80.2	(4,160,209)
부산	64.3	78.4	(1,395,320)
대구	62.2	78.6	(950,354)
인천	66.0	80.3	(1,117,813)
광주	53.4	67.7	(561,683)
대전	54.9	77.7	(544,294)
울산	77.1	80.7	(431,093)
세종	63.9	75.3	(49,850)
경기	58.1	79.7	(4,687,209)
강원	58.3	76.2	(659,884)
충북	62.3	73.6	(617,212)
충남	66.1	78.1	(853,038)
전북	53.3	68.8	(765,057)
전남	63.2	71.4	(807,213)
경북	59.1	70.0	(1,128,049)
경남	66.7	90.1	(1,272,980)
제주	58.3	80.0	(237,004)

〈부표 23〉 가구의 의생활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매우 추운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81.4	87.5	(20,290,630)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76.9	81.0	(20,278,839)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	77.1	81.8	(20,281,455)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61.4	64.1	(20,246,121)

〈부표 24〉 사도별 가구의 의생활 생활여건(매우 추운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1.4	87.5	(20,290,630)
서울	87.1	91.3	(4,165,621)
부산	80.6	87.6	(1,394,152)
대구	82.2	87.0	(950,354)
인천	82.6	88.5	(1,117,519)
광주	81.6	86.4	(562,961)
대전	75.0	85.9	(584,195)
울산	78.4	84.3	(426,323)
세종	78.4	81.6	(49,850)
경기	78.3	87.7	(4,681,322)
강원	75.5	85.3	(660,169)
충북	79.6	83.4	(634,815)
충남	86.6	87.8	(849,155)
전북	74.3	80.2	(765,240)
전남	78.9	81.8	(809,404)
경북	78.8	81.8	(1,129,249)
경남	86.4	92.5	(1,273,590)
제주	82.8	88.9	(236,711)

〈부표 25〉 사도별 가구의 의생활 생활여건(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6.9	81.0	(20,278,839)
서울	79.8	83.8	(4,161,686)
부산	76.1	82.4	(1,396,255)
대구	79.0	81.6	(952,765)
인천	77.7	81.3	(1,118,106)
광주	76.9	73.8	(562,322)
대전	70.2	86.7	(574,987)
울산	75.1	86.4	(430,590)
세종	76.1	78.8	(49,850)
경기	74.1	80.1	(4,686,816)
강원	75.7	82.4	(660,454)
충북	73.6	74.1	(628,059)
충남	80.9	81.0	(843,717)
전북	66.0	68.8	(765,239)
전남	79.6	79.0	(808,569)
경북	74.8	75.7	(1,128,716)
경남	86.5	88.4	(1,273,996)
제주	80.4	80.3	(236,712)

〈부표 26〉 사·도별 가구의 의생활 생활여건(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7.1	81.8	(20,281,455)
서울	79.6	84.8	(4,165,622)
부산	74.8	82.1	(1,393,919)
대구	80.2	79.9	(949,550)
인천	77.9	81.0	(1,117,519)
광주	72.3	72.1	(563,280)
대전	70.0	87.4	(584,195)
울산	81.2	81.8	(425,821)
세종	78.8	77.3	(49,849)
경기	73.9	82.2	(4,677,005)
강원	75.3	82.7	(659,979)
충북	74.1	78.2	(631,970)
충남	80.6	81.7	(848,533)
전북	66.8	71.1	(765,240)
전남	79.3	79.8	(809,195)
경북	76.0	77.9	(1,128,982)
경남	88.3	87.6	(1,273,792)
제주	82.0	82.1	(237,004)

〈부표 27〉 사·도별 가구의 의생활 생활여건(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1.4	64.1	(20,246,121)
서울	62.7	68.1	(4,158,733)
부산	59.0	63.1	(1,394,619)
대구	60.5	67.9	(951,961)
인천	63.8	63.1	(1,117,813)
광주	62.7	61.4	(562,003)
대전	59.4	66.1	(551,115)
울산	76.8	80.5	(430,088)
세종	69.8	70.6	(49,850)
경기	55.6	62.3	(4,693,095)
강원	56.0	60.5	(660,359)
충북	60.8	55.4	(621,478)
충남	65.7	63.4	(844,339)
전북	48.1	45.3	(764,875)
전남	67.8	60.7	(808,256)
경북	59.6	55.8	(1,128,316)
경남	79.6	78.8	(1,273,386)
제주	61.1	65.1	(235,835)

〈부표 28〉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91.5	93.8	(20,284,646)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79.8	84.2	(20,232,12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78.6	85.3	(20,266,757)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며,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86.1	89.5	(20,216,654)

〈부표 29〉 시도별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생활여건(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91.5	93.8	(20,284,646)
서울	95.6	97.0	(4,159,225)
부산	89.0	92.7	(1,394,854)
대구	92.0	92.1	(951,961)
인천	93.4	96.4	(1,118,106)
광주	92.4	92.0	(562,322)
대전	90.9	97.8	(582,831)
울산	82.1	85.5	(430,591)
세종	88.6	89.8	(49,849)
경기	89.4	94.4	(4,681,714)
강원	87.9	90.1	(659,790)
충북	91.5	91.1	(628,591)
충남	93.1	93.3	(851,330)
전북	89.3	92.9	(765,240)
전남	91.8	92.6	(807,213)
경북	88.9	88.2	(1,128,316)
경남	94.7	92.8	(1,275,416)
제주	88.8	92.5	(237,297)

〈부표 30〉 사·도별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생활여건(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9.8	84.2	(20,232,128)
서울	82.8	87.0	(4,157,257)
부산	77.8	83.4	(1,389,715)
대구	78.7	83.0	(950,354)
인천	80.0	87.5	(1,112,523)
광주	75.2	80.3	(561,683)
대전	78.3	92.7	(579,420)
울산	80.9	82.5	(430,340)
세종	79.6	76.5	(49,849)
경기	78.1	84.7	(4,674,258)
강원	74.8	81.5	(658,746)
충북	81.2	80.2	(631,793)
충남	87.0	87.1	(850,242)
전북	70.8	79.0	(764,692)
전남	80.4	76.5	(804,082)
경북	76.5	78.4	(1,127,782)
경남	86.7	86.9	(1,252,681)
제주	78.0	77.4	(236,711)

〈부표 31〉 사·도별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생활여건(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 역이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8.6	85.3	(20,266,757)
서울	78.0	91.5	(4,158,241)
부산	75.3	86.2	(1,392,751)
대구	83.5	90.9	(950,890)
인천	77.7	86.7	(1,115,756)
광주	77.8	88.4	(561,683)
대전	74.3	93.9	(576,692)
울산	85.3	86.8	(430,088)
세종	85.9	85.9	(49,850)
경기	76.5	84.8	(4,686,423)
강원	75.7	80.4	(658,935)
충북	82.4	78.4	(628,770)
충남	85.5	81.1	(850,863)
전북	76.9	78.5	(764,692)
전남	81.4	77.2	(802,831)
경북	78.6	76.1	(1,127,382)
경남	83.1	79.6	(1,274,198)
제주	79.3	89.1	(236,712)

〈부표 32〉 사도별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생활여건(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며,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6.1	89.5	(20,216,654)
서울	87.6	91.1	(4,152,828)
부산	83.3	88.7	(1,388,314)
대구	86.0	87.9	(947,676)
인천	86.7	90.8	(1,110,466)
광주	86.9	87.4	(560,405)
대전	81.9	92.6	(576,010)
울산	86.4	94.2	(428,833)
세종	90.2	84.7	(49,849)
경기	84.1	90.3	(4,666,410)
강원	82.4	86.8	(657,607)
충북	86.8	84.5	(631,970)
충남	90.8	90.2	(850,397)
전북	83.2	87.3	(761,227)
전남	87.1	86.1	(802,831)
경북	84.1	82.7	(1,125,248)
경남	93.2	93.5	(1,270,748)
제주	87.5	88.7	(235,835)

〈부표 33〉 가구의 의료 및 건강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88.5	78.2	(20,230,827)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90.2	81.0	(20,278,572)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57.0	57.2	(20,225,34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88.5	87.7	(20,255,903)

〈부표 34〉 사·도별 가구의 의료 및 건강 생활여건(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8.5	78.2	(20,230,827)
서울	92.0	82.1	(4,155,289)
부산	85.4	79.6	(1,388,080)
대구	84.5	79.2	(949,015)
인천	92.8	83.6	(1,116,637)
광주	83.6	72.7	(561,044)
대전	91.3	86.0	(575,328)
울산	87.7	80.1	(429,837)
세종	91.8	77.6	(49,849)
경기	87.2	74.2	(4,677,005)
강원	86.0	74.6	(659,505)
충북	86.9	76.3	(631,081)
충남	91.0	77.1	(849,620)
전북	86.8	74.3	(764,510)
전남	87.1	73.7	(805,752)
경북	84.4	72.3	(1,126,982)
경남	93.5	87.2	(1,256,335)
제주	80.5	63.6	(234,958)

〈부표 35〉 사·도별 가구의 의료 및 건강 생활여건(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90.2	81.0	(20,278,572)
서울	92.9	84.4	(4,158,241)
부산	87.7	80.6	(1,392,050)
대구	87.3	77.3	(950,622)
인천	91.6	81.3	(1,117,519)
광주	88.9	79.5	(561,683)
대전	91.9	90.7	(583,513)
울산	89.1	85.5	(431,093)
세종	91.0	76.1	(49,849)
경기	89.8	78.3	(4,684,069)
강원	89.0	78.4	(660,644)
충북	88.5	85.6	(631,614)
충남	92.8	74.9	(850,708)
전북	85.3	75.8	(765,057)
전남	90.6	80.2	(806,065)
경북	85.4	78.4	(1,128,183)
경남	94.0	87.5	(1,270,950)
제주	91.9	79.3	(236,712)



〈부표 36〉 사도별 가구의 의료 및 건강 생활여건(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57.0	57.2	(20,225,343)
서울	56.5	60.9	(4,159,717)
부산	59.7	60.7	(1,389,949)
대구	59.2	59.6	(951,426)
인천	56.4	54.2	(1,116,343)
광주	58.2	52.8	(561,364)
대전	52.5	60.4	(538,155)
울산	76.3	80.2	(430,591)
세종	65.9	63.1	(49,849)
경기	52.7	56.1	(4,687,208)
강원	56.1	52.4	(660,549)
충북	63.0	57.6	(621,657)
충남	65.8	57.8	(849,621)
전북	56.1	44.2	(764,145)
전남	69.3	58.6	(805,856)
경북	57.3	51.7	(1,128,182)
경남	51.0	55.0	(1,274,604)
제주	49.4	47.0	(236,127)

〈부표 37〉 사도별 가구의 의료 및 건강 생활여건(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약품 구입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8.5	87.7	(20,255,903)
서울	92.1	91.4	(4,154,797)
부산	86.0	87.3	(1,391,116)
대구	87.0	82.9	(949,283)
인천	90.3	88.1	(1,117,812)
광주	87.8	83.4	(561,683)
대전	88.0	95.3	(582,830)
울산	86.0	82.3	(430,842)
세종	88.2	83.1	(49,850)
경기	87.7	87.4	(4,680,144)
강원	88.0	85.4	(659,884)
충북	84.4	85.4	(622,724)
충남	93.0	88.8	(850,243)
전북	82.4	82.0	(764,692)
전남	87.2	84.4	(805,335)
경북	82.0	83.0	(1,126,982)
경남	93.6	93.9	(1,271,559)
제주	85.0	81.3	(236,127)

〈부표 38〉 가구의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1년에 한번 이상(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를) 다녀오는 것	54.2	48.8	(20,244,560)
•3개월에 한 번 이상(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58.2	62.3	(20,244,352)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52.5	46.4	(20,230,157)
•1년에 한 번 이상(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50.8	46.3	(20,181,324)

〈부표 39〉 사·도별 가구의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생활여건(1년에 한번 이상(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를) 다녀오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54.2	48.8	(20,244,560)
서울	55.6	51.9	(4,162,177)
부산	45.8	42.7	(1,391,817)
대구	53.6	49.9	(951,426)
인천	54.4	48.8	(1,117,519)
광주	51.1	41.6	(562,002)
대전	45.0	47.4	(551,455)
울산	74.1	76.6	(430,591)
세종	67.8	52.5	(49,849)
경기	53.1	51.8	(4,687,208)
강원	47.9	41.8	(660,264)
충북	58.4	46.6	(622,012)
충남	52.2	39.1	(850,086)
전북	45.7	36.4	(765,057)
전남	60.0	42.4	(807,734)
경북	50.2	41.6	(1,128,716)
경남	69.2	59.1	(1,269,935)
제주	52.0	39.1	(236,712)

〈부표 40〉 사도별 가구의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생활여건(3개월에 한 번 이상(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58.2	62.3	(20,244,352)
서울	58.2	65.5	(4,162,669)
부산	53.1	60.3	(1,391,116)
대구	60.3	64.2	(950,354)
인천	58.4	61.6	(1,117,519)
광주	55.7	53.8	(562,322)
대전	47.3	66.0	(561,345)
울산	75.3	77.8	(430,089)
세종	67.5	61.2	(49,850)
경기	56.7	65.0	(4,683,677)
강원	52.2	56.1	(659,695)
충북	62.7	58.0	(618,100)
충남	56.9	52.8	(850,708)
전북	47.6	44.8	(764,509)
전남	61.4	51.0	(807,526)
경북	54.7	50.2	(1,128,316)
경남	73.9	78.5	(1,270,138)
제주	69.0	69.9	(236,419)

〈부표 41〉 사도별 가구의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생활여건(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52.5	46.4	(20,230,157)
서울	54.2	49.7	(4,160,209)
부산	49.0	44.4	(1,392,050)
대구	55.5	50.7	(950,622)
인천	53.1	44.9	(1,117,225)
광주	55.2	44.1	(562,002)
대전	43.4	50.6	(551,114)
울산	72.2	73.7	(430,340)
세종	64.3	52.5	(49,849)
경기	53.2	50.7	(4,684,069)
강원	48.5	41.5	(660,074)
충북	56.4	47.6	(616,500)
충남	48.5	35.1	(850,553)
전북	39.7	29.6	(764,875)
전남	57.6	39.6	(806,900)
경북	49.6	39.1	(1,127,916)
경남	49.4	39.2	(1,269,732)
제주	63.2	52.5	(236,127)

〈부표 42〉 사·도별 가구의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생활여건(1년에 한 번 이상(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50.8	46.3	(20,181,324)
서울	51.5	52.7	(4,157,257)
부산	46.9	46.0	(1,390,182)
대구	52.8	57.1	(949,819)
인천	51.2	45.2	(1,117,225)
광주	53.9	47.6	(562,322)
대전	45.4	46.5	(514,283)
울산	71.7	68.3	(430,591)
세종	60.8	49.4	(49,850)
경기	50.2	50.6	(4,686,424)
강원	44.5	39.3	(659,600)
충북	51.3	40.3	(612,588)
충남	41.8	29.7	(850,087)
전북	36.8	28.4	(764,693)
전남	54.7	37.7	(805,961)
경북	46.0	35.7	(1,127,515)
경남	63.6	36.0	(1,267,093)
제주	62.1	55.3	(235,834)

〈부표 43〉 가구의 사회적 지지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80.2	79.7	(20,274,418)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66.2	62.0	(20,250,498)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62.5	54.8	(20,243,140)

〈부표 44〉 사도별 가구의 사회적 지지 생활여건(아이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0.2	79.7	(20,274,418)
서울	81.3	83.1	(4,160,209)
부산	73.9	76.0	(1,393,452)
대구	82.1	81.5	(951,426)
인천	77.8	75.7	(1,118,106)
광주	78.2	72.6	(562,322)
대전	70.1	86.3	(580,784)
울산	77.9	75.8	(430,591)
세종	82.4	76.5	(49,850)
경기	79.4	79.8	(4,684,854)
강원	77.3	78.5	(660,454)
충북	80.7	76.3	(620,235)
충남	84.3	78.9	(850,242)
전북	74.9	72.2	(764,874)
전남	82.9	76.0	(807,526)
경북	80.8	76.9	(1,128,583)
경남	91.6	87.0	(1,274,198)
제주	88.8	86.9	(236,712)

〈부표 45〉 사도별 가구의 사회적 지지 생활여건(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6.2	62.0	(20,250,498)
서울	67.0	63.2	(4,157,749)
부산	62.7	60.5	(1,393,219)
대구	69.1	64.2	(950,622)
인천	66.7	59.6	(1,117,518)
광주	66.9	57.3	(562,002)
대전	62.1	72.2	(563,733)
울산	75.4	79.3	(430,591)
세종	76.9	64.3	(49,850)
경기	65.1	62.5	(4,683,284)
강원	65.8	61.8	(660,075)
충북	71.1	66.8	(625,746)
충남	71.8	60.5	(849,776)
전북	63.2	56.9	(764,510)
전남	75.0	63.9	(806,795)
경북	67.7	63.0	(1,128,583)
경남	53.1	47.6	(1,269,733)
제주	78.1	74.9	(236,712)

〈부표 46〉 사·도별 가구의 사회적 지지 생활여건(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단: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2.5	54.8	(20,243,140)
서울	59.5	52.6	(4,159,718)
부산	59.1	53.4	(1,393,452)
대구	63.1	57.3	(950,355)
인천	66.4	52.1	(1,117,225)
광주	66.2	53.2	(560,406)
대전	58.1	62.4	(561,005)
울산	73.5	76.6	(429,335)
세종	70.2	59.6	(49,849)
경기	61.3	55.8	(4,686,031)
강원	62.4	57.3	(659,885)
충북	69.4	61.8	(618,456)
충남	66.2	55.3	(849,310)
전북	61.7	49.5	(763,781)
전남	74.3	58.4	(805,856)
경북	63.9	54.5	(1,128,582)
경남	57.6	44.7	(1,273,183)
제주	69.0	64.5	(236,711)

〈부표 47〉 가구의 저축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79.8	59.3	(20,269,331)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78.4	66.8	(20,258,869)
•노후를 위해(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75.7	60.3	(20,252,404)
•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의료보험,종신보험,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72.5	63.4	(20,245,099)

〈부표 48〉 사도별 가구의 저축 생활여건(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9.8	59.3	(20,269,331)
서울	81.8	63.2	(4,162,178)
부산	74.6	58.3	(1,393,919)
대구	74.7	61.0	(950,622)
인천	82.5	57.8	(1,117,812)
광주	83.2	49.9	(562,641)
대전	79.1	67.3	(578,739)
울산	71.4	72.7	(430,340)
세종	79.5	59.1	(49,654)
경기	77.4	57.2	(4,682,892)
강원	74.1	56.2	(660,454)
충북	80.7	60.9	(620,056)
충남	85.5	59.9	(849,465)
전북	76.5	51.1	(764,510)
전남	84.2	63.9	(807,630)
경북	78.4	57.7	(1,127,915)
경남	89.0	54.1	(1,273,792)
제주	86.5	68.1	(236,712)

〈부표 49〉 사도별 가구의 저축 생활여건(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8.4	66.8	(20,258,869)
서울	79.8	67.4	(4,157,748)
부산	73.8	64.4	(1,390,882)
대구	73.6	65.9	(950,622)
인천	79.5	64.1	(1,117,519)
광주	79.8	52.6	(561,683)
대전	77.7	72.6	(581,467)
울산	72.2	74.3	(430,340)
세종	79.1	64.2	(49,654)
경기	75.9	65.5	(4,682,499)
강원	73.7	64.8	(659,885)
충북	77.0	64.6	(620,234)
충남	82.4	65.7	(848,999)
전북	77.6	62.8	(764,510)
전남	82.0	68.5	(806,796)
경북	77.0	63.5	(1,126,315)
경남	90.6	82.9	(1,273,589)
제주	83.9	71.8	(236,127)

〈부표 50〉 사·도별 가구의 저축 생활여건(노후를 위해(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5.7	60.3	(20,252,404)
서울	77.4	62.2	(4,159,225)
부산	69.6	55.9	(1,392,284)
대구	72.8	62.7	(950,355)
인천	76.1	55.6	(1,117,813)
광주	76.8	51.0	(562,321)
대전	75.1	64.0	(573,282)
울산	75.7	69.9	(430,339)
세종	77.2	62.6	(49,654)
경기	74.1	61.0	(4,682,499)
강원	70.2	57.4	(659,884)
충북	75.1	57.6	(620,946)
충남	78.9	55.4	(848,844)
전북	69.6	49.7	(764,510)
전남	79.8	60.4	(806,586)
경북	71.8	55.0	(1,126,582)
경남	88.2	73.4	(1,271,153)
제주	81.6	71.1	(236,127)

〈부표 51〉 사·도별 가구의 저축 생활여건(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의료보험,종신보험,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72.5	63.4	(20,245,099)
서울	74.5	66.5	(4,158,733)
부산	69.6	60.5	(1,391,117)
대구	72.7	70.3	(949,015)
인천	74.2	61.1	(1,117,225)
광주	74.8	54.8	(560,725)
대전	75.3	72.5	(576,010)
울산	81.8	75.4	(430,089)
세종	77.2	61.8	(49,654)
경기	71.9	65.4	(4,680,145)
강원	69.2	61.5	(659,789)
충북	71.8	58.6	(620,056)
충남	73.6	55.7	(848,844)
전북	68.1	53.7	(764,328)
전남	79.7	63.6	(806,065)
경북	70.4	58.2	(1,126,048)
경남	63.9	58.4	(1,270,544)
제주	79.3	78.7	(236,712)



〈부표 52〉 가구의 자녀교육 생활여건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81.0	52.0	(19,664,945)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69.5	46.2	(19,613,68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81.5	53.4	(19,628,893)
•일년에 한 번 이상 자녀의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	67.9	43.6	(19,394,009)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사회적,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87.6	53.8	(19,434,427)

〈부표 53〉 시도별 가구의 자녀교육 생활여건(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1.0	52.0	(19,664,945)
서울	81.8	46.8	(4,128,226)
부산	82.3	38.0	(1,375,234)
대구	82.4	48.5	(852,854)
인천	81.8	87.9	(1,110,466)
광주	82.3	89.3	(556,894)
대전	71.9	27.0	(574,305)
울산	78.3	62.6	(430,088)
세종	81.1	34.1	(49,654)
경기	79.0	87.9	(4,367,376)
강원	80.4	85.9	(640,245)
충북	80.9	36.7	(598,718)
충남	84.4	25.5	(832,843)
전북	72.6	29.2	(744,626)
전남	85.4	83.4	(797,613)
경북	81.4	81.4	(1,099,504)
경남	86.1	24.9	(1,273,386)
제주	85.7	57.2	(232,913)

〈부표 54〉 사·도별 가구의 자녀교육 생활여건(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9.5	46.2	(19,613,683)
서울	72.1	41.8	(4,126,259)
부산	70.3	33.6	(1,375,000)
대구	67.9	44.3	(853,390)
인천	72.9	75.4	(1,110,172)
광주	65.3	66.6	(556,893)
대전	59.0	33.5	(561,345)
울산	76.2	46.3	(429,587)
세종	67.5	31.8	(49,850)
경기	66.2	76.7	(4,348,540)
강원	65.1	72.5	(639,011)
충북	68.3	33.3	(588,227)
충남	72.3	24.0	(830,979)
전북	59.0	25.2	(744,262)
전남	71.0	69.1	(796,570)
경북	70.2	71.5	(1,097,503)
경남	79.7	24.5	(1,273,183)
제주	64.9	47.3	(232,912)

〈부표 55〉 사·도별 가구의 자녀교육 생활여건(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1.5	53.4	(19,628,893)
서울	84.1	48.0	(4,124,290)
부산	81.7	39.0	(1,375,701)
대구	82.2	49.2	(853,926)
인천	83.8	89.0	(1,109,585)
광주	78.7	83.7	(556,574)
대전	75.6	38.5	(576,692)
울산	81.6	45.5	(429,586)
세종	85.1	40.8	(49,850)
경기	79.0	88.9	(4,347,363)
강원	78.0	87.9	(639,106)
충북	79.7	34.5	(591,606)
충남	84.8	29.1	(830,823)
전북	73.3	29.5	(744,261)
전남	81.3	84.0	(796,465)
경북	80.2	86.4	(1,096,970)
경남	88.6	28.1	(1,273,183)
제주	83.9	58.7	(232,912)

〈부표 56〉 시도별 가구의 자녀교육 생활여건(일년에 한 번 이상 자녀의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67.9	43.6	(19,394,009)
서울	71.4	39.9	(4,119,370)
부산	62.6	29.9	(1,375,001)
대구	65.7	42.9	(852,319)
인천	70.4	74.3	(1,108,997)
광주	66.7	64.3	(556,574)
대전	65.1	30.1	(550,773)
울산	76.9	42.7	(391,423)
세종	73.3	32.9	(49,849)
경기	64.2	74.0	(4,345,792)
강원	65.4	70.2	(638,821)
충북	64.6	27.9	(543,772)
충남	72.6	24.2	(830,512)
전북	63.8	25.0	(722,554)
전남	70.6	73.4	(782,379)
경북	68.9	73.1	(1,020,273)
경남	73.1	17.8	(1,272,980)
제주	65.3	41.2	(232,620)

〈부표 57〉 시도별 가구의 자녀교육 생활여건(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단위: %, 명)

구분	필요율	보유율	(분석대상 수)
전국	87.6	53.8	(19,434,427)
서울	91.1	48.5	(4,121,830)
부산	86.9	38.2	(1,373,365)
대구	88.1	44.4	(853,390)
인천	90.8	94.3	(1,108,703)
광주	85.0	87.9	(556,893)
대전	90.2	34.0	(576,692)
울산	83.9	46.4	(391,423)
세종	84.3	38.8	(49,850)
경기	85.4	91.8	(4,343,045)
강원	83.9	90.3	(638,821)
충북	84.6	33.3	(558,531)
충남	91.0	29.8	(831,289)
전북	81.8	31.0	(722,554)
전남	83.6	86.2	(782,587)
경북	83.8	88.7	(1,019,740)
경남	92.0	27.9	(1,273,386)
제주	91.7	61.5	(232,328)

〈부표 58〉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복지시설 부족)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0.1	15.8	35.1	19.9	7.0	12.2	100.0(20,268,262)	2.98
서울	10.3	23.1	32.3	18.7	3.3	12.3	100.0(4,172,509)	2.79
부산	9.4	15.9	37.0	17.2	7.4	13.0	100.0(1,384,576)	2.97
대구	9.2	12.5	40.3	20.2	5.1	12.8	100.0(950,890)	2.99
인천	6.8	13.8	33.7	25.1	8.9	11.6	100.0(1,118,694)	3.18
광주	10.6	8.0	32.8	19.4	7.8	21.4	100.0(563,280)	3.07
대전	5.5	19.8	34.8	23.8	3.4	12.5	100.0(584,536)	3.00
울산	18.3	8.6	44.6	14.9	5.0	8.7	100.0(430,842)	2.78
세종	4.7	6.3	19.2	40.8	20.0	9.0	100.0(49,850)	3.72
경기	11.2	14.1	32.8	20.5	9.1	12.3	100.0(4,686,030)	3.03
강원	7.8	9.8	29.5	28.8	14.2	9.8	100.0(660,831)	3.35
충북	13.5	11.4	34.1	18.3	8.1	14.6	100.0(618,277)	2.95
충남	12.9	19.0	30.3	19.9	8.0	9.9	100.0(854,437)	2.90
전북	8.9	11.4	36.4	22.3	7.2	13.8	100.0(751,739)	3.09
전남	11.1	14.2	35.7	20.2	6.4	12.5	100.0(809,822)	2.96
경북	9.1	11.2	32.9	22.8	10.6	13.4	100.0(1,133,919)	3.17
경남	8.4	17.6	52.5	10.9	4.3	6.4	100.0(1,261,612)	2.84
제주	8.5	11.7	40.4	18.3	6.3	14.7	100.0(236,418)	3.02

〈부표 59〉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의료시설 부족)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2.9	19.0	31.3	21.6	9.7	5.5	100.0(20,236,793)	2.96
서울	16.6	28.7	28.6	17.2	3.8	5.0	100.0(4,171,526)	2.61
부산	14.9	23.9	34.9	14.2	5.9	6.2	100.0(1,390,416)	2.70
대구	15.9	20.3	40.1	14.6	3.6	5.5	100.0(950,891)	2.68
인천	10.2	18.4	32.5	23.9	9.6	5.3	100.0(1,118,401)	3.04
광주	23.3	12.2	35.8	12.5	7.4	8.8	100.0(563,280)	2.65
대전	10.2	27.6	29.8	25.0	5.5	1.9	100.0(584,875)	2.88
울산	15.9	13.5	30.4	20.9	14.7	4.5	100.0(368,828)	3.05
세종	2.3	7.4	19.9	33.2	33.2	3.9	100.0(50,046)	3.91
경기	12.1	16.3	29.8	23.2	12.5	6.0	100.0(4,692,310)	3.08
강원	7.2	9.1	22.8	31.8	24.8	4.2	100.0(661,117)	3.61
충북	10.2	9.7	26.8	28.2	16.7	8.3	100.0(622,191)	3.34
충남	12.0	15.9	30.6	24.1	13.1	4.2	100.0(855,059)	3.11
전북	10.9	14.7	31.7	25.2	12.4	5.1	100.0(760,679)	3.14
전남	11.0	14.4	32.7	25.4	10.0	6.5	100.0(810,344)	3.10
경북	9.3	12.0	29.4	25.7	17.0	6.5	100.0(1,134,851)	3.31
경남	7.6	16.3	40.2	25.3	6.4	4.2	100.0(1,265,268)	3.07
제주	13.8	15.2	36.9	20.4	8.4	5.3	100.0(236,711)	2.94

〈부표 60〉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4.1	22.0	34.5	16.8	7.1	5.5	100.0(20,286,805)	2.80
서울	11.2	26.2	31.4	20.7	6.9	3.6	100.0(4,169,066)	2.85
부산	10.7	22.2	35.6	19.3	6.6	5.6	100.0(1,388,548)	2.88
대구	11.3	18.0	37.2	19.7	8.5	5.4	100.0(950,086)	2.96
인천	11.0	20.1	28.7	21.5	13.4	5.3	100.0(1,115,755)	3.06
광주	14.7	13.3	32.6	22.7	9.0	7.8	100.0(562,961)	2.98
대전	8.0	27.1	38.1	18.8	6.6	1.4	100.0(584,878)	2.89
울산	16.8	11.8	33.1	22.6	9.5	6.1	100.0(430,340)	2.96
세종	7.8	14.9	38.8	14.9	12.5	11.0	100.0(49,851)	3.11
경기	14.7	20.4	35.7	16.1	7.2	5.9	100.0(4,691,525)	2.79
강원	21.2	20.0	35.2	12.3	4.7	6.5	100.0(659,979)	2.56
충북	16.2	14.3	37.1	14.5	9.9	7.9	100.0(623,078)	2.86
충남	24.5	27.3	26.1	12.7	5.1	4.2	100.0(854,903)	2.44
전북	17.4	18.7	36.4	14.1	7.0	6.4	100.0(760,131)	2.73
전남	16.6	19.8	36.3	12.3	5.8	9.2	100.0(809,821)	2.68
경북	19.6	17.6	35.0	11.6	6.5	9.8	100.0(1,134,718)	2.64
경남	11.5	32.9	41.5	7.6	2.5	3.9	100.0(1,264,454)	2.55
제주	13.8	21.0	40.5	14.2	5.8	4.7	100.0(236,711)	2.76

〈부표 61〉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3.4	21.7	36.4	14.6	4.5	9.3	100.0(20,258,018)	2.73
서울	10.7	25.6	34.4	17.7	4.4	7.1	100.0(4,171,033)	2.78
부산	9.6	20.5	41.3	16.4	4.5	7.6	100.0(1,383,642)	2.84
대구	10.1	17.2	37.3	18.8	7.6	8.9	100.0(949,551)	2.96
인천	11.7	22.3	34.2	17.2	5.6	9.1	100.0(1,118,399)	2.81
광주	14.4	13.6	35.2	20.5	6.0	10.3	100.0(562,640)	2.89
대전	7.1	30.4	40.9	13.5	4.1	4.0	100.0(584,876)	2.76
울산	18.4	13.0	35.9	18.8	6.0	8.0	100.0(430,340)	2.79
세종	10.2	18.4	39.6	9.8	3.5	18.4	100.0(49,849)	2.73
경기	13.4	19.9	36.1	15.6	5.3	9.7	100.0(4,680,929)	2.77
강원	19.6	22.2	34.9	9.2	3.0	11.0	100.0(659,978)	2.48
충북	15.4	16.6	38.1	12.5	4.9	12.4	100.0(618,278)	2.71
충남	25.2	28.5	25.0	9.3	3.1	8.9	100.0(854,125)	2.30
전북	17.1	19.5	33.4	11.6	4.9	13.5	100.0(756,666)	2.63
전남	17.1	20.6	35.9	9.3	3.0	14.2	100.0(808,882)	2.54
경북	19.6	18.6	34.1	8.7	3.2	16.0	100.0(1,134,452)	2.49
경남	10.2	25.1	48.7	8.9	1.3	5.8	100.0(1,257,959)	2.64
제주	11.5	22.4	41.5	11.5	5.2	7.9	100.0(236,419)	2.74

〈부표 62〉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2.2	19.0	35.9	18.7	7.5	6.8	100.0(20,266,060)	2.90
서울	10.1	22.8	33.2	22.4	7.2	4.3	100.0(4,169,065)	2.94
부산	8.4	18.6	33.3	23.7	10.4	5.6	100.0(1,384,108)	3.10
대구	8.5	14.0	34.8	22.9	13.4	6.5	100.0(949,819)	3.20
인천	10.1	19.3	32.0	21.6	11.2	5.8	100.0(1,117,226)	3.05
광주	13.4	11.8	33.9	21.7	10.3	8.9	100.0(563,279)	3.04
대전	8.9	25.4	34.7	23.3	6.4	1.4	100.0(584,877)	2.93
울산	19.9	13.5	36.6	17.3	6.9	5.8	100.0(431,093)	2.76
세종	14.5	12.9	28.2	21.2	9.0	14.1	100.0(49,849)	2.97
경기	12.3	19.4	35.0	17.7	8.3	7.2	100.0(4,683,676)	2.90
강원	15.2	17.3	35.9	16.8	6.0	8.8	100.0(660,073)	2.79
충북	14.5	14.5	38.9	14.6	6.1	11.3	100.0(616,322)	2.81
충남	21.5	24.8	30.4	12.6	4.3	6.3	100.0(854,593)	2.50
전북	15.4	16.0	37.5	17.1	6.4	7.7	100.0(759,129)	2.82
전남	14.3	17.8	37.4	15.4	4.6	10.4	100.0(809,717)	2.76
경북	16.2	16.1	35.3	14.6	5.0	12.8	100.0(1,134,185)	2.73
경남	9.5	15.5	56.1	10.6	2.1	6.1	100.0(1,262,831)	2.79
제주	12.9	20.9	40.2	13.7	4.5	7.8	100.0(236,128)	2.74

〈부표 63〉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빈부격차 문제)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9.5	15.9	36.4	21.1	8.6	8.6	100.0(20,208,139)	3.04
서울	7.2	16.7	33.2	26.6	10.1	6.2	100.0(4,169,558)	3.17
부산	7.1	18.7	37.5	20.7	8.2	7.8	100.0(1,385,044)	3.05
대구	6.9	10.9	38.0	25.6	11.5	7.0	100.0(949,284)	3.26
인천	8.8	19.5	36.2	19.3	6.2	10.0	100.0(1,118,401)	2.94
광주	12.5	10.0	30.2	24.3	12.0	11.1	100.0(563,279)	3.15
대전	5.0	14.6	33.6	31.0	10.7	5.2	100.0(584,877)	3.29
울산	15.9	11.2	36.8	20.0	8.4	7.8	100.0(431,093)	2.93
세종	7.1	11.4	34.1	23.5	9.4	14.5	100.0(49,849)	3.20
경기	9.3	15.8	36.9	18.8	9.7	9.6	100.0(4,682,500)	3.04
강원	11.6	14.8	36.5	19.0	7.4	10.7	100.0(660,549)	2.95
충북	11.0	12.4	38.4	19.2	8.9	10.1	100.0(621,124)	3.03
충남	19.2	24.2	28.3	15.0	5.9	7.4	100.0(853,971)	2.61
전북	11.1	12.4	34.5	24.9	7.8	9.4	100.0(694,827)	3.06
전남	10.8	15.7	35.6	20.6	6.7	10.6	100.0(809,509)	2.96
경북	12.5	13.3	35.9	17.7	6.9	13.6	100.0(1,133,919)	2.92
경남	9.7	16.4	52.4	11.5	3.4	6.6	100.0(1,263,643)	2.81
제주	8.3	14.7	44.3	18.1	6.2	8.4	100.0(236,712)	2.99

〈부표 64〉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차별의 문제)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12.8	19.0	38.5	14.0	4.8	10.8	100.0(20,005,065)	2.77
서울	9.6	20.6	39.3	17.8	4.1	8.6	100.0(4,170,541)	2.85
부산	9.2	21.0	42.0	13.6	4.7	9.6	100.0(1,383,642)	2.82
대구	8.3	13.0	40.6	19.2	8.4	10.6	100.0(948,746)	3.07
인천	12.4	22.0	36.4	12.4	4.2	12.5	100.0(1,116,930)	2.70
광주	15.6	11.9	34.5	17.2	8.0	12.9	100.0(562,961)	2.89
대전	14.8	34.4	29.7	7.5	1.7	11.8	100.0(584,876)	2.40
울산	16.6	12.3	38.6	16.3	7.2	9.0	100.0(431,345)	2.84
세종	9.0	12.2	34.1	18.0	7.1	19.6	100.0(49,848)	3.02
경기	12.9	17.1	39.3	12.9	5.4	12.5	100.0(4,485,499)	2.78
강원	15.2	16.7	38.0	12.8	4.9	12.5	100.0(659,789)	2.72
충북	14.1	14.4	39.6	13.8	6.4	11.7	100.0(620,945)	2.82
충남	25.5	23.9	26.9	10.6	4.0	9.0	100.0(853,814)	2.38
전북	13.4	13.3	37.7	20.1	6.6	8.9	100.0(694,645)	2.92
전남	14.6	18.2	38.1	13.0	4.4	11.8	100.0(809,404)	2.71
경북	15.9	16.3	37.2	11.8	4.2	14.6	100.0(1,134,453)	2.67
경남	13.0	25.9	43.9	6.8	2.1	8.3	100.0(1,261,207)	2.55
제주	11.4	15.7	44.5	13.7	3.5	11.2	100.0(236,420)	2.80

〈부표 65〉 사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국	20.7	25.0	36.4	8.5	2.8	6.6	100.0(15,718,798)	2.44
서울	15.2	26.5	40.1	10.3	2.7	5.2	100.0(4,116,114)	2.57
부산	15.0	24.7	42.3	8.0	2.8	7.2	100.0(1,384,342)	2.56
대구	15.0	20.6	42.9	11.2	4.0	6.3	100.0(950,086)	2.66
인천	19.2	27.0	35.9	8.9	2.5	6.4	100.0(1,116,638)	2.45
광주	22.5	13.6	37.9	11.4	5.7	9.0	100.0(562,641)	2.61
대전	22.2	36.4	31.5	4.3	0.9	4.8	100.0(584,879)	2.21
울산	25.5	13.3	37.9	11.8	3.6	8.0	100.0(431,094)	2.51
세종	15.3	17.3	43.9	10.6	4.3	8.6	100.0(49,849)	2.69
경기	7.0	8.9	34.6	20.8	6.0	22.7	100.0(202,103)	3.13
강원	26.0	24.1	35.5	6.0	2.4	6.1	100.0(659,694)	2.30
충북	29.4	15.8	36.8	6.9	2.4	8.7	100.0(622,189)	2.31
충남	37.1	22.4	25.4	7.5	2.6	5.1	100.0(853,504)	2.12
전북	25.2	18.5	33.5	10.2	7.0	5.7	100.0(694,644)	2.53
전남	28.7	21.8	34.9	5.0	1.7	7.9	100.0(809,300)	2.23
경북	27.7	19.8	34.6	6.6	2.2	8.9	100.0(1,134,451)	2.30
경남	18.6	46.3	24.8	4.0	0.8	5.5	100.0(1,262,019)	2.18
제주	17.1	20.7	44.2	8.2	2.0	7.7	100.0(235,251)	2.54